

2004 북한 및 통일관련

신진연구 논문집 1

전산필



통 일 부

본 논문집은 2004년도 북한 및 통일문제 신진연구학자 연구지원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3권의 책으로 편집 발간한 것입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공식 의견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1. 북한이탈주민들의 남북한 관계 및 통일에 대한 시각과 전망 1
 길 병 옥(충남대 전임강사)
2. 비무장지대(DMZ)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특성 변화 분석 69
 김 상 옥(한국토지공사 책임연구원)
3. 부시행정부期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117
 서 보 혁(고려대 평화연구소)
4. 남북한 아동의 복지환경에 관한 연구 183
 오 미 희(영동대학교 전임강사)
5. 북한 서사시에 나타난 지배담론 형성 연구 233
 이 지 순(한국방송대 강사)
6. 종교를 통한 남북대화의 접촉점 연구 295
 최 병 학(경성대 강사)

북한이탈주민들의 남북한 관계 및 통일에 대한 시각과 전망

- 평화통일의 접근논리와 정책과제 -



길 병 옥

(충남대 전임강사)

목 차

【 요약 문 】	3
1. 서론	7
2. 연구방법론	10
3. 이론적 배경	16
4. 결과분석	28
5. 정책과제	48
6. 결론	54
【 참고문헌 】	63

【 요약 문 】

최근 북한이탈주민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외교역할이 “미온적이거나 미흡하다”, “조용한 외교를 펴고 있다”,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는 등 정책적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동북아의 주변국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 장관급회담에 대한 북한의 대화거부 등 남북협력 활성화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대북정책을 위시한 정부의 대탈북자 정책에 있어 논란의 근거는 남한내의 남남갈등이라는 사회적 합의 결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는 남한내의 국민적 통합뿐만 아니라 점차 그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남북한간의 사회적 시각차이다. 하지만 남북한간의 사회적 합의에 대한 논의가 많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고 점차 탈북자들이 증가됨에 따라 남한사회내의 부정적 시각이 문제시되어 왔다.

본 연구는 남북한 주민들간의 체제적 차이 또는 가치체계의 차이에서 오는 대북 및 대남관의 견해차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의 주목적은 최근 변화되고 있는 동북아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앞으로의 남북한관계, 통일관련 주변환경 변화,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는 남북한 관계 및 통일에 대한 그들의 고유한 자주성이 있는 인식, 즉 “자결적 주관성”(operant subjectivity, 自決的 主觀性)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있다. 본 조사는 Q 방법론을 통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과 평가를 토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참조적 가치관”(self-referential values, 自我參照的 價值觀), 즉 자결적 주관성을 도출해내어 보다 더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대체적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치적 주관성 또는 가치체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부로 드러난, 다시 말하면 이론적으로나 분석학적으로 개인의 특정한 가치유형이 규명된 표층구조(表層構造, layer structure)와 개개인의 의식에 잠재하고 있는 심층구조(深層構造, in-depth structure)를 포괄하는 정치적 상징성 및 의미를 가진 개인의 의식체계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론적 분석 틀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는 정치적 주관성에 대한 정치문화 이론이고, 둘째는 남북 및 통일관계에 대한 국제정치 이론이며, 셋째는 가치체계 이론의 문제제기에 대한 이론적·분석학적 재고찰이다. 정치문화이론 및 국제정치 이론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바라보는 남북한 및 통일관계에 대한 견해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분석기조를 제공해준다. 또한 이론적 배경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해석학적 분석 틀로 활용하였다.

Q 방법론에 의한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시각은 현실적 외교주의, 협력을 통한 체제전환주의, 실용적 민족주의, 전통적 현실주의, 외세간섭수동주의, 경제협력우선주의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북한정부의 그동안의 대남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 북한이 199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주목할만한 개방개혁의 변화를 시도하여왔고, 비록 북한의 대남인식이 보수적, 냉전적 그리고 경쟁적 인식이라는 형식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상당히 제한적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탈냉전이후 북한지도부의 대남인식이 공격적 성향에서부터 탈피하여 점차 방어적 성향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성향은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대량으로 탈북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적어도 세 가지 민족적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한다. 첫째는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인권상황이고, 둘째는 중국이나 러시아 및 인접지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국제적 지위와 인권실태요, 셋째는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 및 적응문제이다. 그동안 참여정부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의 탈북자 정책만으로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이 추정하는 10만여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의 세 가지 현안에 대한 포괄적이고 범민족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지역에서의 다자 또는 양자협력과 공조, 국제적·국내적 민간차원의 시민단체 및 비정부기구의 적극적 지원, 그리고 남한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역량강화 및 종합적 대책마련을 제기하였다.

더불어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한 현안과제에 대한 국내외 논의는 주로 대북 및 통일정책의 추진방향, 원칙, 속도, 방법 및 범위 등에 한정되어 왔다.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의 전개상황에 대해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가? 과연 북한은 변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변화되고 있는가? 한미간의 불협화음을 포함한 동북아 주변국과의 이해관계가 너무 침체하고 대립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등 다양한 질의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정책적 또는 이념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냉전적 대결과 갈등이 아닌 평화와 공존이라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선포화후통일의 논리가 국내통일문화의 주도권을 잡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통일이라는 변화가 가져오는 위기의식, 현상유지 경향 및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지적하면서 통일의 이상과 현실에 대한 균형된 감각을 강

조하여왔다. 대부분의 통일논의는 남북한의 사회적 시각차 및 문화적 이질성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그 동질성 회복을 강조한다. 특히 민족고유의 가치와 전통을 중시하고 남북간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켜 통합기반을 마련하여 동일역사의 공유와 동일언어의 사용을 바탕으로 민족동질성의 확보 및 문화적 변용을 통한 동질화를 추구하는 것이 곧 문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문화적 통합(cultural integration)에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능력의 배양이 기본적인 전제이다. 즉, 다양한 하위문화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면서 전체로서의 하나의 문화체계를 이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 가치체계에 대한 인식은 구조적이거나 역사적 요인에서 파생된 것이 많은 관계로 단순히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달성될 수 없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남북한이 가지는 가치체계는 일정한 지속성과 가변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또한 다양한 가치체계가 이질적이지만 동태적으로 형성된 혼합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다양화된 사회적 가치와 개인주의의 성향 또한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를 요구한다. 새로운 가치와 삶의 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과정과 공정한 산출물은 선진화된 미래 통일한국을 약속하는 새로운 정치문화의 토양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원활한 문화적 통합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내외 정책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모델의 동북아 평화변영 로드맵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문화통합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새로운 남한문화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자신이 몸담고 있던 문화와 비교하면서 비판과 수용을 통해 두 문화를 통합하는 새로운 안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1. 서론

최근 북한이탈주민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외교역할이 “미온적이거나 미흡하다,” “조용한 외교를 펴고 있다,”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는 등 정책적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2002년 이후 해마다 1,000명 이상 입국하는 탈북자로 인한 정부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¹⁾ 정부가 그동안 탈북자들에 대한 외교적 대응부분에 있어서 “조용하지만 적극적인 외교”를 펴온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에서는 보다 더 효과적인 외교역량의 발휘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동북아 대주변국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 장관급회담에 대한 북한의 대화거부 등 남북협력 활성화에 미칠 과장이 우려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더불어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하는 국내외적 문제점들도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관련 주요 국제적 문제점은 탈북이후 생존권, 신변안전 및 인권, 국제난민지위부여문제 등이다.²⁾ 북한이탈주민들의 주요 탈북루트는 군사분계선을 통하는 경우, 1987년 김만철씨 일가처럼 선박을 통해 제3국을 통해 탈북하는 경우, 그리고 2000년대 들어 나타난바와 같이 중국국경과 동남아를 통해 탈북하는 경우로 바뀌고 있다.³⁾ 또한 탈북유형도 개인에서 가족단위로, 생계형에서 자발적 이주유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탈북자의 구성과 탈북동기가 이념적인 면에서 귀순이나, 입에 풀칠하기 위한 생계형 탈북을 지나 이제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대량이주형으로 바뀌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내부의 사회

1)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입국 현황을 보면, 1991년 9명, 1993년 8명, 1994년 52명, 1997년 86명, 1999년 148명,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 2002년 1,139명, 2003년 1,281명, 2004년 6월말 현재 760명에 달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근거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기본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내란의 죄, 외환의 죄, 공무상 비밀누설의 죄,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탈북자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탈북자에 대한 호칭은 과거 월남귀순자(1962년 이후), 월남귀순용사(1978년), 귀순북한동포(1993년), 북한이탈주민 또는 탈북자(1997년) 등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호칭은 변절자라는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자유이주민” 또는 “탈북정착민” 그리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탈북난민”으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앙일보■■■, 2004년 7월 24일, 4면 및 서재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년 여름, p. 263.

2) 이금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정책과제,” ■■■한반도군비통제■■■, 군비통제 자료 35, 2004년 6월, pp. 151-183.

3) ■■■동아일보■■■, 2004년 7월 28일, A3면.

적, 정치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밀어내는”(pushing) 요인과 이미 탈북한 가족들이 남은 가족들은 데리고오는 “끌어당기는”(pulling) 요인 두 가지가 있다. 탈북이후 한국행도 과거 6개월 정도 걸리던 것이 최근에는 1개월 정도로 시간상 단축되었고, 탈북에서 입국까지 불과 8일밖에 걸리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정착지원금으로 최소 3,500만원에서 최대 6,400만원까지 제공할 방침이나 이들의 국내정착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 특히 남한 사회내의 편견, 탈북자 수용능력의 한계 및 제도적 미비, 사회적응에 있어서의 어려움 등이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⁵⁾ 따라서 통일부는 지난해 말 입국탈북자 1,281명을 기준으로 올해 필요한 정착지원예산 300억원을 확보했으나 대규모 입국으로 초기 정착지원금도 부족한 실정인 관계로 예비비 신청을 통해 정착지원비용을 확보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⁶⁾ 지난해 통일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탈북자 780명중 취업률은 39.8%, 월평균 소득은 74만원에 이르는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범 죄율 또한 1998년 이전의 5년보다 그 이후의 5년간 그 비율 면에서 5배 이상 늘어났고, 한국에 적응하기 어려워 재입북했다가 다시 재탈북하는 극단적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문제점들로 인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대탈북자 정책상 외교적 대응은 사실상 원활한 대중국외교 및 대북한관계 유지와 더불어 탈북자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 현재 중국내 탈북자 규모가 약 10만명정도에 이른다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은 추정하고 있고 탈북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은 그 규모가 약 30만-50만명에 이른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탈북자의 한국행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국내외적으로 조용할 수 없는 대탈북자 정책은 새로운 상황변화에 따르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탈북자들의 안전한 한국행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외교협력과 동의 그리고 원만한 한국정착을 위해서는 탈북자를 바라보는 편견을 일소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가 절실히 요구된다.

대북정책을 위시한 정부의 대탈북자 정책에 있어 논란의 근거는 남한내의

4) 통일부 웹사이트 <http://www.unikorea.go.kr>(검색일: 2004년 8월 21일) 및 통일부, ■■■통일백서■■■(서울: 통일부, 2004), pp. 248-258 참조.

5) 최근 정부가 경기도 이천시에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였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경우도 있다. ■■■동아일보■■■, 2004년 7월 28일, A1면 및 서재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pp. 233-264.

6) *Ibid.*

7) ■■■중앙일보■■■, 2004년 7월 28일, 5면.

남남갈등이라는 사회적 합의 결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는 남한내의 국민적 통합뿐만 아니라 점차 그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남북한간의 사회적 시각차이다. 하지만 남북한간의 사회적 합의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고 점차 탈북자들이 증가됨에 따라 남한사회내의 부정적 시각이 문제시되어 왔다. 주된 원인은 남북한간의 사회체제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화 과정 및 가치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탈북자들의 한국내 적응장애현상은 인성 및 가치관의 차이문제, 사회문화적 이질성에서 오는 사회적응문제, 자아상실감과 정체성의 혼란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정, 정치 및 경제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경제적 불안정 및 실업 등 문제가 여러 방면에 걸쳐있다.⁸⁾

대부분의 통일논의는 남북한의 사회적 시각차 및 문화적 이질성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그 동질성 회복을 강조한다. 특히 민족고유의 가치와 전통을 중시하고 남북간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켜 통합기반을 마련하여 동일역사의 공유와 동일 언어의 사용을 바탕으로 민족동질성의 확보 및 문화적 변용을 통한 동질화를 추구하는 것이 곧 문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것으로 본다.⁹⁾ 이러한 문화적 통합(cultural integration)에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능력의 배양이 기본적인 전제이다. 즉, 다양한 하위문화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면서 전체로서의 하나의 문화체계를 이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기술한다면, 실제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견해차를 그들이 바라보는 남북한 관계 및 정부의 대북정책 등에 대한 가치유형을 파악하여 그 시각차를 줄이는 것이 문화적 통합의 한 방향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제까지의 문화적 통합방법이 다양한 차원에서 지적 교류와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여 이질적인 문화와 사상, 철학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을 확대하는 것이 주된 것이었다면 본 연구에서의 논의는 탈북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그리고 심리적 정치학을 파악하여 민족동질성의 확보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주민들간의 체제적 차이 또는 가치체계의 차이에서 오는 대북 및 대남관의 견해차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¹⁰⁾ 연구의 주목적은 최근 변화되고 있는 동북아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앞으로의 남북한관계, 통일관련 주변환경

8) 서재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pp. 240-255.

9) 배성인, “남북한 민족문화 건설과 문화통합 모색,”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년 여름, p. 220.

10) 문화적 통합 또는 동질화 등의 용어사용에 대한 견해차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통합의 한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변화,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는 남북한 관계 및 통일에 대한 그들의 고유한 자주성이 있는 인식, 즉 “자결적 주관성”(operant subjectivity, 自決的 主觀性)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있다. 본 조사는 Q 방법론을 통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과 평가를 토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참조적 가치관”(self-referential values, 自我參照的 價値觀), 즉 자결적 주관성을 도출해내어 보다 더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대체적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북한 및 통일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적 및 방법론적인 해석에서 미비한 점이나 부족한 점을 찾아내고 더욱 발전시킨다는 데에도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의제가 다루어졌다. 첫째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바라보는 남북한관계 및 통일의 전망에 대한 시각의 다양성이고, 둘째는 Q 방법론을 사용하여 도출해낸 요인이나 유형의 서로 다른 자결적 주관성의 시각이며, 셋째는 가치체계 논리에 근거한 이론적·분석학적 재고찰이다. 그 결과로서 남북한관계 및 통일에 대한 기존의 이론이 어떠한 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유형의 자결적 주관성을 설명하는데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부분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시각에 부흥하여 우리의 평화통일의 접근논리, 정책적 과제 및 동북아 평화번영 참여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치적 주관성에 대한 자결적 범주가 정부의 대북정책 및 통일에 대한 정책운영의 폭을 넓혀주게 되기를 희망한다. Q 방법론을 통해 연구된 북한이탈주민들의 견해는 정책입안자가 어떻게 남북한 관계를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이 크다고 본다.

2. 연구방법론

2.1. 연구범위

본 연구의 조사대상(응답자, p-set) 범위 면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앞서 정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탈북자들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동북아의 국제질서가 변하기 시작하는 시점인 1990년 이후 남한에 이주한 북한이탈

주민들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주지할 사항은 Q 방법론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에서와 같이 통계학적 일반화는 시도하지 않고 응답자가 분류한 결과 자료(Q-sort)에 대해 상관관계를 설정하기 때문에 다수의 표본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Q 방법론에서 조사대상자들의 구성은 비록 표본이 작을지라도 윌리엄 스티븐슨(William Stephenson)이 여러 저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개인들의 자결적 주관성 또는 사회적 콘코스(social concourse)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면 Q 요인분석이 가능하다는 논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¹¹⁾ 하지만 학계에서는 Q 방법론상 연구대상의 구성은 아무리 적어도 3-4명, 평균적으로는 30여명의 응답자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통설이다.¹²⁾ 본 연구에서는 100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조사대상으로 구성되었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74명의 자결적 주관성 유형이 결과로 도출되었다.¹³⁾

연구조사의 기본설계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중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로 하고, 표본의 크기는 100명으로 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일대일 개별면접법으로 하고 표본추출방법(p-set)은 연구대상의 대표성을 최대한 고려 다음의 항목들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남녀성비는 남성 50명, 여성 50명으로 동등하게 하고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교육정도는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 직업은 농민, 노동자, 관료 및 전문인, 학생, 기타 등 개인특성이 가능한 범위에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본을 선정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응답자는 74명이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응답자에 대한 진술문의 응답지침은 각각의 Q 진술문(Q statement)에 대해 “내 개인의 생각으로 ...” 또는 “내 시각에서는 ...,” “나는 ... 라고 생각한다”이고, 응답자들에게는 진술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한다는 점을 Q 분류도(-4---+4)에 맞게 순위적으로 분류하게끔 요청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진술문에 대한 당위성, 도덕성, 정당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시각에 따라 Q 분류한 가치관(즉, 개인의 주관적 견해로 표출된 유형)에 대한 연구조사를 하는 것이다. 자료처리는 Q 분류 및 자료입력 등의 과정을 거

11) William Stephenson, *The Study of Behavior: Q-Technique and Its Methodolog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3); “Concourse Theory of Communication,” *Communication*, 3(1978), pp. 21-40; and “Principles for the Study of Subjectivity,” *Operant Subjectivity*, 4(1981), pp. 37-53.

12) Q 방법론적 논의와 기법에 대한 설명은 Steve R. Brown, *Political Subjectivity: Applications of Q Methodology in Political Science*(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80) and “A Primer on Q Methodology,” *Operant Subjectivity*, 16(1993), 91-138 참조.

13) 나머지 26명의 분석결과는 Q 분류를 잘못하였거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이었다.

쳐 Q METHOD를 이용 처리하였다.¹⁴⁾

2.2. 연구방법: Q 방법론

본 연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결적(self-determinant or operant) 또는 자아 참조적 주관성(self-referential subjectivity)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Q 방법론을 사용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남북한관계 및 통일에 대한 시각과 앞으로의 전망을 조사한다. 여기서 자결적 주관성 또는 개인의 가치체계는 “주관적인 영역으로서 특정한 정치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강조하기 위한 신념체계”라고 볼 수 있다.¹⁵⁾ 특정적 개인의 주관적 시각이나 견해는 곧 가치관의 정치적 주관성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필요로 한다. Q 방법론을 사용하는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치이념, 정치의식 및 신념체계에 대한 구체적 유형을 찾아내고자 하는데 있다.

간단히 말하면 Q 방법론은 연구에 참여하는 응답자들에게 Q 진술문을 평가하여 순위적으로 분류하게 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유형을 분석하는 방법론이다. 일반 연구조사방법의 설문에 해당하는 진술문의 구성은 분석학적으로 콘코스(concourse) 이론에 근거하였다.¹⁶⁾ 콘코스 이론은 특정개념의 의미에 대한 모든 가능한 표현을 총체적으로 분류하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진술문은 기존의 남북한 관계 및 통일에 대한 이론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대한 일반적 견해를 범주로 하여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 진술문은 남북한 관계 및 통일에 대한 이론과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의 두 범주가 포함되도록 구성되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 사용된 Q 진술문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차원과 군사, 경제, 외교 및 민족주의를 나타내는 차원으로 하여 각각 3가지의 서로 다른 진술문을 산출해 내고, 이를 조합하여 $3 \times 4 \times 3 = 36$ 개의 Q 진술문을 도출해 내었다(<표 1>참조). Q 방법론의 분석적 기법에 의하면, 진술문의 수는 12개, 24개, 36개, 48개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응답자인 북한이탈주민들에게 36개의 진술문을 그들의 느낌에 가장 부합하는 것(+4)으로부터 부합하지 않는 것(-4)까지 강제적 정규분포(forced normal distribution)에 따라 순위적으로 분류하게끔 요청되었다(<표 2> 및 <표 3>참조).¹⁷⁾ 여기서 0은 북한이탈주

14) Q 방법론에 대한 과학적 기법은 Steve R. Brown, *Political Subjectivity: Applications of Q Methodology in Political Science*, Ch. 1 및 Q 방법론 홈페이지, <http://www.rz.unibw-muenchen.de/~p41bsmk/qmethod> 참조.

15) Lucian W. Pye,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al Development*(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Chs. 1-2.

16) William Stephenson, *The Study of Behavior: Q-Technique and its Methodology*, Ch. 1.

민들의 시각에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별 의미가 없는 것을 나타낸다.

<표 1> Q 진술문의 구성방법 [N(진술문)이 36개인 경우]

구분/차원	군사	경제	외교	민족주의
과거	1 2 3	10 11 12	19 20 21	28 29 30
현재	4 5 6	13 14 15	22 23 24	31 32 33
미래	7 8 9	16 17 18	25 26 27	34 35 36

<표 2> Q 분류 분포도 [N(진술문)이 36개인 경우]

측정치	-4	-3	-2	-1	0	+1	+2	+3	+4
빈도수	3	3	4	5	6	5	4	3	3

<표 3> Q 분류 강제적 정규분포도 [N(진술문)이 36개인 경우]

-4	-3	-2	-1	0	1	2	3	4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통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북한 관계 및 통일에 대한 시각과 전망을 살펴보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Q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Q 진술문의 구성은 필수적이고 이론적 근거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윌리엄 스티븐슨(William Stephenson)과 스티브 브라운(Steve Brown)이 제시한 Q 방법론의 분석학적 기법과 콘코스 이론을 근거로 본 연구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차원과 군사, 경제, 외교 및 민족주의를 나타내는 차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36개의 진술문을 산출해 냈다.

1. 과거 남북관계는 외부세력의 간섭에 의한 대립관계 속에 있었다.
2. 남북 불가침 선언은 실질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허상에 불과하다.

17) 진술문의 분류도는 Q 기법에 따라 진술문이 응답자의 견해에 일치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 등으로 순위적으로 분류하게 함으로서 개인의 주관적 시각이 Q 분류도에 정규 분포가 되게끔 설계되어야 한다. *Ibid.*

3.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힘의 균형이 냉전상태를 유지해왔다.
4. 군사력 부분에 있어서 아직 남한은 북한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5.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는 남북간 군사당국자 회담 결과이다.
6. 남북정상회담이후 남한국민들의 안보의식이 결여되고 있다.
7. 평화는 역사나 국제질서에서 볼 수 있듯이 힘을 가진 자 만이 지킬 수 있다.
8. 동북아의 지정학적 특성상 이 지역 국가 간의 세력경쟁은 지속될 것이다.
9. 상황에 따라 힘에 의한 무력통일은 가능하다고 본다.
10. 대북 경제협력은 주변국 관계 및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 반영되었다.
11.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동구권 국가들이나 중국이다.
12. 이제까지의 남북경제협력은 북한의 변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
13. 북한에 대한 무리한 경제협력 및 식량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14. 경제협력만이 북한의 점진적 변화 및 통일을 향한 유일한 돌파구이다.
15. 남북경제협력 유지는 앞으로 경쟁을 위한 준비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16. 북한은 앞으로 남한의 실질적인 경제적 협력자가 될 것이다.
17. 북한과 미국 및 일본을 비롯한 서방과의 경제관계 개선은 필수적이다.
18. 북한의 시장경제로서의 전환은 가능하다고 본다.
19. 국제적으로 남한은 북한에게 이용만 당해왔다.
20. 냉전시대 남북간 경쟁외교는 필수불가결 하였다.
21. 한미외교 및 안보동맹은 한반도 평화유지에 있어서 최우선시되는 사항이었다.
22. 남한은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23. 남북관계 개선은 국제기구를 통한 화해와 협력의 차원에서 발생한 것이다.
24.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한의 평화외교 및 공조는 그 성과가 괄목할 만하다.
25. 국제기구나 주변 강대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남북간 평화정착이 바람직하다.
26. 외교를 통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실질적인 평화를 이룩해내지 못한다.
27. 미군의 남한주둔은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28. 과거 통일론은 감성적이거나 민족적 이상론에 불과 했다.
29. 어떠한 상황에서도 민족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30. 정치적 이념에 의한 통일론은 실질적인 남북관계개선 및 민족통일을 방해해왔다.
31. 남한 내부에서의 이념적 갈등이 현재 심화되고 있다.
32.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는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33. 남북관계개선은 외부환경개선보다 민족의 동질성 회복노력에 의한 것이다.
34. 남북통일은 체제보다는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민족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35. 현실성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이 바람직하다.
36. 남북관계개선 및 통일은 남북 당사자들만이 해결해야 한다.

<표 3> Q분류 강제적 정규분포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자들은 각각의 진술문이 해당하는 측정치의 빈도수에 맞추어 각 칸에 진술문의 번호를 1개씩 기입함으로써 Q 분류가 된다. 응답자들의 견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Q-sort)는 응답이 함유하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는 연구방법(요인분석, factor analysis)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처리된다. Q 방법론의 기법에 따라 36개의 진술문에 대한 Q 분류가 끝나면 최대변수회전(varimax rotation)에 의하여 진술문의 상관관계 및 요인을 분석하게 되고 그 결과를 해석하게 된다. Q 분류 결과, 주관적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즉, 기본적으로 Q 진술문을 같은 순서로 분류한 사람들은)은 그들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룹에 속하게 된다. 각 그룹들은 자결적 또는 자아참조적 주관성의 범주를 의미한다.

Q 연구의 특징은 “집단 내에 분포하는 주관성의 유형과 각 유형의 상대적 강도만을 제시할 뿐 이들간의 비율이나 상관관계에 대한 일반화는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⁸⁾ Q 방법론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응답자 개인의 시각이나 가치관에 따른 자결적 반응(operant response)을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자에 의해 이해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Q 방법론은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단절을 극복했다는데 방법론적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행위자 스스로의 조작을 통해(Q-sorting) 자신의 견해를 Q 진술문과 비교하여 사유하고 그것을 객관적인 구조물(operant framework), 즉 Q 분류 분포도 안에 투영시킴으로서 그동안 조사방법론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되어온 설명(explanation)과 이해(understanding)의 구분을 희석시킨 데 있다.¹⁹⁾

2.3. 해석학적 분석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체계 및 의

18) 전홍찬·장덕준, “중앙-지방 관계에서 본 러시아 개혁의 제약요인: 모스크바와 극동지역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2(2000), p. 280 참조.

19) 김홍규, “Q 방법론의 유용성 연구,” ■■■주관성 연구■■■, 통권 제1호(1996), pp. 15-33 참조.

식은 전체 사회체제의 한 부분으로 해석된다. 여기에서 특정개인들의 가치체계가 표출하는 정치문화의 일반성을 비교·분석하는 동시에 개개인들의 정치적 주관성에서 나타나는 구체성을 띄는 가치체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 결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결적 주관성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분석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해석학적 분석은 특정개인들의 가치체제에 대한 연구는 총체적인 차원에서 밝혀내야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파악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회맥락적 논리를 기조로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Q 방법론, 해석학, 개별적 사례연구, 문헌연구 등을 병합한 방법론적 다원주의(methodological pluralism)를 활용한다.

개개인들의 가치체계를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빌헬름 딜타이(Wilhelm Dilthey)의 해석학을 활용하였다.²⁰⁾ 즉, 설명(explanation)은 인과적인 범주를 통한 인식방법이며 그 안에서 개체는 단지 일반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받아들여지나 인간의 내적 삶의 의미를 인식하는 방법인 이해의 영역에서 개체는 개체 그 자체로 평가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더불어 마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존재론적 비평을 수용하였다.²¹⁾ 다시 말하면, 모든 이해(understanding)는 그 상황의 지평(Situationshorizont)을 가지고 있고 현존재의 근본적인 유한성과 역사성에 따라 그 이해 역시 유한성과 역사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시각을 의미한다.²²⁾

Q 방법론에서 가치체계의 유형은 Q 분석결과 도출된 요인유형 값, 요인유형 간의 상관관계, 진술문 수치 및 Z 값을 바탕으로 해석된다. 요인유형의 해석은 각 요인별 응답자들의 느낌에 가장 부합하거나 가장 부합되지 않는 진술문에 대하여 기존에 이론적으로 검증된 가설이나 명제 또는 분석 틀을 기초로 한다. 하지만 특정 개개인들의 정치적 주관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론에 바탕을 둔 해석은 논리의 영역을 확대해준다는 면이 있지만 그 또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3. 이론적 배경

20) Wilhelm Dilthey, *Descriptive Psychology and Historical Understanding*(New York: Nijhoff, 1977) and *Das Wesen der Philosophie*(Bonn: F. Meiner, 1984).

21) Martin Heidegger, *The Basic Problem of Phenomenology*(Indianapolis, I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8) and *Being and Time*(San Francisco, CA: Harper Collins, 1962).

22) 김홍규, “Q 방법론의 유용성 연구,” pp. 15-17 참조.

본 연구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치적 주관성 또는 가치체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부로 드러난, 다시 말하면 이론적으로나 분석학적으로 개인의 특정한 가치유형이 규명된 표층구조(表層構造, layer structure)와 개개인의 의식에 잠재하고 있는 심층구조(深層構造, in-depth structure)를 포괄하는 정치적 상징성 및 의미를 가진 개인의 의식체계로 설명하고자 한다. 특정사회에 속한 개인들의 정치적 가치체계는 사회 전체의 정치적 구조와 운영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론적 분석 틀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는 정치적 주관성에 대한 정치문화 이론이고, 둘째는 남북 및 통일관계에 대한 국제정치 이론이며, 셋째는 가치체계 이론의 문제제기에 대한 이론적·분석학적 재고찰이다. 정치문화이론 및 국제정치 이론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바라보는 남북한 및 통일관계에 대한 견해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분석기조를 제공해준다. 또한 이 두 가지 이론적 배경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해석학적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3.1. 정치적 주관성에 대한 정치문화 이론

정치적 주관성의 일반적 유형은 가브리엘 아몬드와 시드니 버바(Gabriel Almond and Sydney Verba)가 분류한 인지적, 감정적 및 평가적 태도를 기준으로 하여 향리형(parochial), 신민형(subject) 그리고 참여형(participant)으로 분류하는 것이 있다.²³⁾ 첫째, 향리형은 개인이 속한 정치체제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무관심을 나타내는 유형으로 정치과정의 참여에는 미온적이다. 둘째, 신민형은 정치참여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복종주의 성향을 지니는 유형을 의미한다. 셋째, 참여형은 개인의 정체 및 역할에 대해 긍정적이고 사회전반에 대해 개혁적인 성향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다원주의 사회는 이러한 참여유형이 다양하게 얽혀있다.

또한 특정사회에 속한 개인들의 참여유형과 기본적 가치관에 대한 공유여부에 따라 다음 네 가지의 사회문화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²⁴⁾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 가치가 공유되고 그들의 참여가 적극적인 사회는 다원주의 문화(polyarchal culture),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 가치는 공유되지 않고 있지만 그들의 참여는 적극적인 분할된 문화(fragmented culture),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 가치가 공유

23) Gabriel Almond and Sydney Verba,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Boston, MA: Little, Brown, 1963).

24) Oliver Woshinsky, *Culture an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Mass and Elite Political Behavior*(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95).

되지만 그들의 참여는 소극적인 집단주의 문화(collectivist culture), 시민들의 기본적 가치가 공유되지 않고 참여 또한 소극적인 신민형 문화(parochial culture)가 그것이다(<표 4>참조).

<표 4>정치문화의 참여유형 구분

구 분		시민들의 기본가치에 대한 공유여부 예 아니오	
시민들의	예	다원주의 문화 polyarchal culture	분할된 문화 fragmented culture
참여여부	아니오	집단주의 문화 collectivist culture	신민형 문화 parochial culture

향리형, 신민형 및 참여형 정치문화와 관련하여 가브리엘 아몬드(Gabriel Almond)는 정치문화유형의 구조를 산업화된 민주국가, 과도기적 권위주의국가 및 산업화이전의 민주국가로 구분한다.²⁵⁾ <표 5>의 분포도가 나타내듯이 일반적으로 산업화 이전단계의 국가유형에서는 향리형과 신민형이 현저하고 참여형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과도기적 권위주의국가에서는 수동적인 신민형이 우세하고 그 다음이 향리형 및 참여형의 순이다. 산업화된 민주국가에서는 참여형이 우세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다양한 문화유형과 비교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치적 가치성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주민들의 가치체계는 수동적 신민형과 집단주의 문화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²⁶⁾

<표 5>정치문화유형의 구조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산업화된 민주국가											
과도기적 권위주의 국가		향리형		신민형				참여형			
산업화 이전의 민주국가		향리형				신민형				참여형	

25) Gabriel Almond, *Comparative Politics Today: A World View*(Boston: Little, Brown, 1974).

26)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서울: 통일부, 2004), pp. 239-256 및 박준영, “북한이해를 위한 기본적 요소,” 홍순호·박준영·함인희, ■■■북한인식과 한반도■■■(서울: 살림, 2000), pp. 29-71.

정치적 주관성 또는 가치체계에 대한 일반론적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정치문화를 정체성을 띠고 있는 자본가 또는 기득권세력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치문화는 특정사회의 물질적 상호작용의 부산물로서 노동자 계층과 자본가 계층의 생산 및 사회관계를 규정하는 의식체계라는 것이다.²⁷⁾ 최근 연구는 국가체제와 사회의 정치문화 전반과 자본주의 체제 및 계급구조와 연관지어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베버주의자들은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독립적이고 자생되는 시민의 정치문화 그리고 정치문화의 변화와 정치구조와의 연관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정치문화를 사회화 및 정치참여의 과정으로 그리고 사회적 토론과 담화의 통로로서 설명하고자 한다.²⁸⁾ 대부분의 베버주의자들은 정치문화와 국가정체의 연관성 그리고 산업화 및 민주화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

셋째,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정치문화의 보편성과 일반성을 부정하고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적인 생활양식이나 가치체계를 선호하는 주장을 피력한다.²⁹⁾ 가치체계의 다양성은 물론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다는 비평이 있을 수 있지만,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주장은 갈등보다 공존의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는 과거의 구습 내지는 권위적인 체제는 물론 기존의 정형화된 질서와의 단절과 타파를 추구하는 사회성향과 일치한다.

정치문화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 접근방법 및 방법론에 따라 개념, 대상 및 범위 등이 다양하다. 대체적으로 서구에서는 경험적,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행태주의적 접근에 비중을 두어 정치문화를 정치체제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능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반면, 동양에서는 정치문화를 정치체제의 산물로 여기는 경향이 짙다.³⁰⁾ 정치문화의 이론적, 방법론적 학풍이나

27) Thomas Ferguson, *Golden Rule: The Investment Theory of Party Competition and The Logic of Money-Driven Political Systems*(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and Claus Offe, *Contradictions of the Welfare State*(Cambridge, MA: The MIT Press, 1984).

28) Oliver Woshinsky, Oliver. 1995. *Culture an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Mass and Elite Political Behavior*(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95); Robert Putnam,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and Ronald Inglehart, "Value Change in Industrial Socie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1(1987), pp. 1288-1303.

29) Bridget Fowler, *Pierre Bourdier and Cultural Theory: Critical Investigations*(Thousand Oaks, CA: Sage, 1997); Jacques Derrida, *The Other Heading: Reflections on Today's Europe*, trans., Paul Patton(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2); and Jean-Francois Lyotard,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Trans., Geoff Bennington and Brian Massumi(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패러다임은 다양하지만, 정치문화연구에 있어서 주류는 정치문화를 사회화 및 정치참여의 한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경향에 대한 국내외 선행 연구를 정치이념, 문화의 변화양상, 그리고 정치행태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3.1.1. 정치이념에 대한 연구

정치이념에 연관된 연구는 일반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이 바라보는 세계관 내지는 의식 및 가치체계는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이는 곧 특정사회가 추구해야한다고 믿고있는 규범적 정치이념이 무엇인가라는 질의와 일맥상통한다. 여기서 정치이념은 좌우익의 연속선상에서 개혁과 전통, 자유와 보수 그리고 중도성향 등과 같은 이념을 의미한다. 정치이념은 구체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이 바라보는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신념이나 가치관, 정치적 또는 사회적 권리 즉 자유와 평등과 같은 천부적인 근본이념에 대한 신념체계를 포괄한다. 정치이념의 규범적인 측면과 더불어 사회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차원(삼권분립, 대의제도, 정당제도 등) 및 절차적 차원(선거양식 및 원칙, 소수의 권리, 타협과 토론 절차 등)의 인식과 평가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³¹⁾

3.1.2. 문화의 변화양상에 대한 연구

문화의 변화양상에 대한 연구는 특정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체제의 변화와 관련지어 정치문화가 특정정부의 정책결정 및 정책결과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례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정치문화는 유교적 윤리에 바탕을 둔 공동체의식 및 희생정신이었던 주장이다. 이러한 의견개진은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아시아 경제성장과 위기의 동인은 아시아의 가치(Asian values)에 있다고 보는 견해와 상통한다.³²⁾ 또한 학자들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물질주의적인 성향에서 탈물질적인 가

30) 전득주 외, ■■■정치문화와 민주시민교육■■■(서울: 유평출판사, 1999), p. 29.

31) 이현출·길병욱, “민주주의의 의미: Q 방법론을 통한 자아참조적 관점에서의 고찰,” ■■대한정치학회보■■■, 제8권 2호, 2000년, pp. 135-149; 김만홍, “민주화와 권력구조: 지역주의 적 군주권력에서 민주적 시민권력으로,” 국제평화전략연구원, ■■한국의 권력구조논쟁■■■(서울: 풀빛, 1997); Thomas Sowell, *A Conflict of Vision: Ideological Origin of Power Struggles*(New York: Basic Books, 2002); and John S. Dryzek, *Democracy in Capitalist Times: Ideas, Limits, and Strategies*(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32) Kyong-dong Kim, “The Culture of Capitalist Development in East Asia,” *Asian Perspective*, 24/3(2000), pp. 5-22 and Jonghoe Yang and Hyun-chin Lim, “Asian Values in Capitalist Development Revisited,” *Asian Perspective*, 24/3(2000), pp. 23-40.

치를 선호한다고 주장한다.³³⁾ 즉, 성장우선주의나 안보우선주의의 경향에서 환경보호주의로 전환하는 정치문화의 변화를 의미한다.

더불어 정보화, 세계화, 다양화 및 지방화는 서구문화와의 접변을 폭 넓은 분야에서 가능하게 하고, 특정 사회의 문화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가치와는 다른 성향으로 전개된다는 주장이 있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유교적 공동체주의(Confucian communitarianism)에서 개인의 사회적 성취나 능력을 중시하는 자아실현주의(self-actualizationism)로 전환되어 간다는 논리다. 또한 학자들은 후기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 및 탈현대사회(postmodern society)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과거의 체제나 문화의 권위적인 정체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율성 및 다양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지적한다.³⁴⁾ 과거사회와의 단절과 타파를 추구하는 사회성향은 획일적 권위주의체제보다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활양식이나 가치체계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전개되는 문화의식을 의미한다.³⁵⁾

3.1.3. 정치행태에 대한 연구

정치행태에 연관된 기존의 연구는 정치문화가 사회구성원들의 투표행태와 정계개편과 같은 정치권력구조 또는 정치기회구조(political power or opportunity structure)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정치기회구조의 변화는 주민들의 정치참여도, 집권당 및 야당의 정계개편 및 정치지도자들간의 알력이나 타협 등과 같은 정치환경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치문화는 정치적 태도, 정치적 신념체계, 정치적 정향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정치적 대상에 대한 정치적 인지, 감정, 평가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³⁶⁾ 이러한 연구는 정치문화와 정치발전과의 상호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했고, 그 내용은 특정 정부에 대한 지지도, 정치적 신뢰도, 정치적 성숙도, 정당지지도, 정치적 관심도, 지역정치현실과의 연계성 등이 있다.³⁷⁾

33) Ronald Inglehart,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34) Joel L. Nelson, *Post-Industrial Capitalism*(London: Sage, 1995).

35) Jacques Derrida, *Monolingualism of the Other or the Prosthesis of Origin*, trans., Patrick Mensah(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8); Jean Baudrillard, *Selected Writings*, ed., Mark Poster(Oxford: Polity, 1988); Michel Foucault,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Ed., Colin Gordon(New York: Random House, 1977); and Ronald Barthes, *Mythologies*, trans., Annette Lavers(New York: Noonday Press, 1973).

36) 신도철, 김광웅, 최명, 박찬욱, ■■■민주주의의 미래: 의식과 이념적 성향분석■■■(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37) 박상훈, “한국의 유권자는 지역주의에 의해 투표하나: 16대 총선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2호, 2001년, pp. 113-134; 양창운, “지역정치문화와 선거: 제주도 국

3.2. 남북 및 통일관계에 대한 국제정치 이론

본 연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첫째는 현존하는 이론적 틀 및 가설에 대한 검증이고 둘째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남북한 관계 및 통일에 대한 견해를 요인(factor)이나 유형(type)으로 분류하여 그들의 자결적 주관성에 대한 범주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이론적인 면에서 현존하는 남북한 관계 및 한반도 통일이론은 안정과 평화 그리고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전쟁의 재발방지와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명제에는 이론적 함의가 있지만,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서로 상이한 점이 많다. 국제정치 이론상 남북한관계 및 통일이론은 그 시각 및 연구방향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뉘어 질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음 세 가지로 간략하게 분류하였다.

3.2.1. 세력우위 및 균형이론

이 이론은 국제체제에서의 세력의 우열이나 세력의 균형(balance of power) 또는 위협의 균형(balance of threat)은 특정국가들의 행위에 제약을 준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있다.³⁸⁾ 과거 냉전시대에는 패권국 및 동북아 주변열강들의 국제역학관계가 남북한관계설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바 있지만, 대 북한 관계 및 통일을 위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채찍과 당근정책(stick and carrot) 및 다자간 안보체제구축이 주로 논의되어 왔다. 당근과 채찍정책은 경우나 상황에 따라 화해와 반목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냉전기 한국의 방어적 억지전략(defensive deterrence)하에 행해졌던 경쟁외교(competitive diplomacy)와 상호적 대주의(mutual antagonism)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정책의 일관성이나 정책의 조율 면에서는 부처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어느 상황이 당근이나 채찍에 적합한지에 대한 정책 결정자들간의 의견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동북아에서 다자간 안보체제의 구축은 주변 열강들의 이익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추구되어야 할 것이며, 냉전의 양극체제에서 탈냉전의 다자간 정치, 군사, 경

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3호, 2001년, pp. 173-196; R. Rhodes,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bility and Accountability*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1997); Samuel P. Huntington,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38) Kenneth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Reading, MA: Addison-Wesley, 1979) and Stephen Walt, “Why Alliances Endure or Collapse,” *Survival* 39(1997), pp. 156-179.

제 및 문화교류를 위한 협력체제로의 전환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본다.

3.2.2.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정착이론

탈냉전기의 국제질서는 군사력보다는 경제력이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주요 동인으로 적용한다는 견해이다. 세분한다면, 이 이론은 자유시장 및 민주화 확산을 통한 또는 다자적 국제기구를 통한 세계질서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 나라의 대외정책은 경제원조와 식량 및 물자지원을 통한 경제적 상호의존관계(economic interdependence)의 확산으로 그리고 시장경제로의 개혁과 개방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³⁹⁾ 대북한 정책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점진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연착륙(soft-landing)전략과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이 주로 활용되었다. 위의 정책은 북한사회의 개방과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간접적 지원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서방국가의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나 관계개선 협상 그리고 지역 정상들간의 정상외교(summit diplomacy)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큰 전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는 냉전기에 행해왔던 대북 압박 및 억지전략보다 북한이 스스로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북한이 현재 지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점진적인 개방과 개혁을 하고있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문제점은 서방 및 남한의 경제원조에 대한 북한의 호혜성의 원칙(principle of reciprocity)에 대한 준수여부에 있다.

3.2.3.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이론

위에서 설명한 이론들은 피상적인 면에서 정책의 방향설정이나 기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이념이나 정신적인 면에서는 그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민족주의 이론가들의 주장이다. 최근에는 한 나라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정치문화가 그 국가의 대외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⁴⁰⁾ 이러한 맥락에서 민족주의 이론은 “국가의 정책은 곧 문화의 유산이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방법론적인 측

39) David Baldwin,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The Contemporary Debate*(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and Charles Lips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conomic and Security Affairs,” *World Politics* 37(1984), pp. 1-23.

40) Peter Katzenstein,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and Alastair Johnston, “Thinking about the Strategic Culture,” *International Security* 19(1995), pp. 32-64.

면에서는 다양성의 세계에서 유동적인 가치관의 필요성을 그리고 그 기초에서는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3.1운동 정신의 재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서구정치이론에 대한 비판가들은 유교적 민족주의(Confucian nationalism)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민족위주의 정립된 패러다임과 분석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자들은 3.1 운동정신과 같은 민족자존, 민족자결, 그리고 민족주체의 사상과 천지인 사상의 결합을 주장한다.

한 국가가 행하는 대외정책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특정의 이론 및 방법론적 틀을 바탕으로 다양한 검증이나 해석을 하여왔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이론적 분석은 특정사회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관 즉 정치적 주관성에 근거하여 설명한 것이 아니라, 특정이론의 분석 틀을 바탕으로 연구자에 의해 이해된 조작적 정의/분석(operational definition/analysis)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Q 방법론을 통해 위에서 열거한 이론들과 대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 문화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결적 주관성 내지는 가치관적 구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한다.

3.3. 가치체계 이론의 문제제기에 대한 이론적 · 분석학적 재고찰

과연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북관은 무엇인가?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남북한 관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그들에게 있어서 남북한이 지향하는 방향은 무엇인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체성과 의식적 방향에 대한 질의이다. 급속한 탈북자들의 양적 증가와 한국사회에서의 적응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치체계를 살펴보고 남북한의 사회적 화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질의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제기부분에 대한 재고찰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논의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견해를 빌어 이해해보고자 한다.

미셸 후코(Michel Foucault)는 모든 지식과 권력과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역설한다.⁴¹⁾ 후코는 여러 형태의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천해 왔는가를 분석하고, 모든 지식은 니체(Nietzsche)가 말하는 ‘권력의지’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⁴²⁾ 현대의 지식이 기득권층을 대변하

41) Michel Foucault,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Ch. 1.

면서 변화나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실문제의 해결이라는 정적인 지식의 확보에 치중하여 왔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비평은 설득력이 있다. 연구경향에 있어서도 경우에 따라 취급하기 용이한 사회문제만을 다루어 왔고, 가치의 판단이나 방향을 필요로 하는 미래의 대안탐색이 미루어져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⁴³⁾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체제의 해체 및 ‘메타 내러티브’(meta-narratives)나 ‘그랜드 내러티브’(grand-narratives)의 일체화 및 총체화(totalization)에 대한 부정에서 시작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은 전통적인 형이상학이나 문학이론 그리고 언어이론 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가한다는 점에서 다다이즘(dadaism)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⁴⁴⁾ 다다이즘이 기존의 예술관을 타파하고 현대예술인들이 지향했던 보편성과 예측성을 부정하며, 그것을 해체하고자 한 면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주의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많다. 이는 곧 과거와의 단절, 현재의 체제적 요소와의 단절, 그리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내적인 구속과 외적인 구속과의 단절을 의미한다.⁴⁵⁾ 과거와의 단절은 곧 사실과 가치판단의 선택적 기준과의 단절을 뜻한다. 그 기준은 현대학문 특히 행태주의의 학풍에서 줄곧 행해왔던 정치적, 경제적, 물질적 효용성 추구 및 그 합리성의 객관화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런 지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식이 특권층의 이익이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포스트모더니스트의 질의는 과연 지식 또는 정치문화의식이 누구를 위해 정립되었고, 누가 기록한 사실이나 또는 누구의 가치기준에 의해 만들어지는가에 있다. 궁극적으로 정치문화의 정체나 방향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사실판단의 객관성은 의미가 없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내세우는 차연(差延, *differance*)과 보체(補替, *suppleer*)라는 개념에서 확연히 드러난다.⁴⁶⁾ 차연(差延, *differance*)은 공간적 개념의 차이(差異, *difference*)와 시간적 개념의 지연(遲延, *delay*)을, 그리고 보체(補替, *suppleer*)의 의미는 보충(補充, *supplement*)과 대체(代替, *alternation*)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현대인들이 추구하여온 보편적 진리를 바탕으로 한

42)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서울: 현암사, 1996), p. 27.

43) 정정길, ■■■정책학원론■■■(서울: 대명출판사, 2001) 및 박성복·이종렬, ■■■정책학 강의■■■(서울: 대영문화사, 2000).

44)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p. 26.

45) Jacques Derrida, *Monolingualism of the Other or the Prosthesis of Origin*, Ch. 2 and Jean Baudrillard, *Selected Writings*, Ch. 1 and passim.

46) Jacques Derrida, *Monolingualism of the Other or the Prosthesis of Origin*, Ch. 4 and *The Other Heading: Reflections on Today's Europe*, trans., Paul Patton(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2), Ch 1 and passim.

합리적, 이성적 인간상과 보편적 권력의 이념이나 민주주의는 차연되거나 보체 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기존 형식이나 질서의 파괴와 이념이나 가치관의 다원주의 및 상대주의(relativism)를 주창해왔다.

또한 비판이론가들은 현대의 가치기준이 로고중심주의(logo-centrism)에 의한 이원화된 시각으로 선 대 악(good vs. evil), 남성 대 여성(male vs. female), 부자 대 가난한자(rich vs. poor), 취업자 대 실업자(employed vs. unemployed) 등의 위계적 대립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고 본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가치의 권위적 배분과 창출”을 이끌어 내기 때문에, 수혜자와 희생자가 동반된다. 항상 승자와 패자의 구분이 확실하게 정해지는 경우, 현대사회가 추진하여 왔던 민주주의의 구현과 인간의 존엄성 실현은 승자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패자를 위한 것인가? 정치문화의 방향에 따라 그리고 가치판단의 결과에 따라 희생자나 패자들에 있어서 자아실현이나 존엄성의 구현은 구별되고 시간적으로는 지연되는 것이다. 결국, 포스트모더니스트들에게 있어 개별적인 주체(즉, 자아)의 실현 및 인간의 존엄성 구현은 ‘자아의 죽음’ 또는 ‘개인의 죽음’으로 표현된다.⁴⁷⁾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합리적 이성에 의한 개인의 자유로운 지적행위는 체제적으로 구속되어 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한 정치문화의 유형, 가치체계의 방향 및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원주의나 상대주의가 똑같이 적용된다. 현대의 이상으로 여겨왔던 민주주의는 누구를 위한 또는 누가 정의하는 민주주의인가? 과연 민주주의는 달성이 가능한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부정적이다. 그들은 역사의 진보주의(progressivism)를 철저히 부정하여 왔고, 마르크스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이나 헤겔의 목적론적 역사관을 신랄하게 비판하여 왔다. 비역사성, 비정치성으로 특징 지워지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역사에는 종점(ends or telos)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역설한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정치이론가들이 정의한 민주주의는 구현이 불가능하고, 만약 그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될지라도 그 또한 역사의 종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궁극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의미에는 차연과 보체의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스트가 주장하는 사회는 구조와의 단절은 구조가 없는, 체제가 없는 그러한 사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도 구조에 대한 깊은 회의와 불신을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무의식일망정 구조의 개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⁴⁸⁾ 즉, 해체주의는 웅덩이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수 없듯이 구조의 철저한 파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더라고 본다. 다시 말해

47) Michel Foucault,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Ch. 2.

48)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p. 35.

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사회의 체제를 부정하고 해체를 외치지만, 웅덩이의 물, 즉 사회 전체의 환경구조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치문화를 연구하는 학자에게 있어서도 사회전체의 구조를 벗어나 현실과의 단절상태에서 문화의식의 정체 및 가치체계의 방향에 대한 연구분석은 가능하지 않다.

만약 정치문화의 정체 및 방향이 차연되고 보체되었다면 그 지연되고 앞으로 대체되어질 그 무었은 어떤 것인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아직 그러한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적 목적론을 구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모든 개념과 의미가 불확정하고 유동적이라면, 과연 가치의 정립이나 판단은 어떤 논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가치 및 사실의 편협성 때문에 실질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은 가능한가? 또한 가치판단의 핵심소재는 어디에 있는가? 정치문화상 가치체계의 정체(what is the one)가 아닌 이체(what is the other) 즉, 소외되거나 희생된 계층 및 타자들을 위한 지식 및 가치판단의 원천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답은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점은, 가치판단 및 정치문화의 방향에 있어 부분적 시각이나, 사실 및 담론을 가지고 전체를 대변하려는 의도는 상당히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을 모더니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 연속 또는 동일성이라고 보는 논의보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내적인 사유인 변혁, 새로운, 그 다음의 시대(post)로서 전시대와 구분하여 새롭게 도전하려는 차별성 위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모더니즘에 기반하고 있는 전통적 사회정책에 대한 대안론(代案論) 내지는 치유론(治癒論)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⁴⁹⁾ 정치문화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상대적 가치관 및 자아 그리고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기존의 지식기반이나 가치기준에서 소외되거나 간과되었던 새로운 인식과 방법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학문적 기여도가 크다고 본다.

그러면 다양한 정치문화 및 의식체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국내상황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기존의 정치문화 연구에서 제기하지 못한 부분은 한국의 정치문화는 다양하지만 갈등적인 요소가 많이 내재하고 있고 더불어 그러한 다양성과 갈등이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의 정치문화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화의식은 적어도 선진사회에서 구분하는 것처럼 선한 것(what is good)과 악한 것(what is bad), 남과 북, 부자와 가난한 자 등과 같이 이분법적 논리에 의한 가치기준의 설정이 아니라 다양성과 변화를 인정하고 공유하는 흥익과 상생의 문화의식을 의미한다. 바로 여기에 남북한간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49) 한인숙, “포스트모더니즘, 복지정책 그리고 여성,” ■■■한국행정학보■■■, 34/4(2000), pp. 1-18.

대안이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북한이탈주민을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면 문화적 통합이라는 차원은 그 방향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차연되고 보체된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남북한 관계 및 통일에 대한 자결적 주관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4. 결과분석

4.1. Q 방법론에 의한 결과분석

본 연구에서 이론적 관점에서 이해되고 정의되는 남북한 관계 및 통일에 대한 이론이 Q 방법론이라는 실증적 방법론을 통해 얻어진 개개인의 고유한 자아 참조적인 시각과 대비하여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그러면 Q 방법론에 의한 결과분석을 요인유형과 각 개인의 특성, 요인유형별 진술문 수치, 요인 유형 해석 순으로 논의해 보기로 하자. 강조하자면, Q 결과유형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바라보는 고유한 자결적 가치체계의 유형을 뜻한다.

4.1.1. 요인유형과 각 개인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북한이탈주민은 남자 43명, 여자 31명으로 총 74명이었다. 연령대는 20대 12명, 30대 15명, 40대 21명, 50대 20명, 60대 6명이었다. 응답자의 출신직업을 보면 학생 9명, 관료 15명, 노동자 25명, 농민 12명, 기타 13명이었다. 교육정도는 초졸 4명, 중졸 13명, 고졸 36명, 대졸 16명, 무응답 5명이었다. 분석결과 두드러진 요인유형은 여섯 가지로 나타났고 요인유형간의 상관관계는 다음 <표 6>에 기술하였다. 각 요인유형간의 상관관계는 요인 C와 요인 F의 관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요인 A와 요인 B, 요인 A와 요인 E, 요인 A와 요인 D 순으로 나타났지만 그 숫치는 높지 않았고 각 요인유형의 시각이 서로 다른 시각과 구별되는 별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요인유형간의 상관관계

요인유형	A	B	C	D	E	F
A	1.0000	0.2787	0.0915	0.2005	0.2570	0.1307
B	0.2787	1.0000	-0.0080	0.0407	-0.0085	0.2351
C	0.0915	-0.0080	1.0000	-0.0365	-0.1343	-0.2969
D	0.2005	0.0407	-0.0365	1.0000	0.0094	0.1615
E	0.2570	-0.0085	-0.1343	0.0094	1.0000	0.1703
F	0.1307	0.2351	-0.2969	0.1615	0.1703	1.0000

요인유형과 개인의 특성을 요약한 <표 7-1> 및 <표 7-2>를 보면 74명의 응답자 중 A 요인유형은 44명, B 요인유형 31명, C 요인유형 25명, D 요인유형 26명, E 요인유형은 24명, F 요인유형은 31명으로 A 요인유형이 가장 많았다. 특히 요인유형중 2개 이상의 요인유형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개인은 63명, 3개 이상은 36명, 4개 이상은 11명이었고 5개 이상의 요인유형에 유의한 개인은 없었다. 요인유형에서 ± 40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는 진하게 표기하였다. Q 방법론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요인유형과 응답자 개인의 특성상 연관관계에서는 통계학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았다.

<표 7-1> 요인유형과 각 개인의 특성

개인	요인유형						개인특성			
	A	B	C	D	E	F	성별	연령	직업	교육
1	05	11	-15	59	08	87	남	20대	학생	고졸
2	09	02	-02	67	-01	08	여	30대	기타	중졸
3	41	49	-13	18	60	01	남	60대	노동자	초졸
4	88	06	02	-21	17	03	남	50대	노동자	초졸
5	64	56	19	-05	15	10	남	50대	관료	대졸
6	04	09	-03	-06	75	11	여	40대	관료	대졸
7	14	81	-09	10	06	10	여	30대	관료	고졸
8	07	01	87	25	-07	45	여	30대	농민	중졸
9	45	56	66	24	11	31	남	20대	학생	고졸
10	46	46	54	46	-19	13	남	40대	농민	중졸
11	67	48	52	18	30	12	남	40대	노동자	중졸
12	47	87	23	12	22	67	여	40대	노동자	고졸
13	23	12	21	31	45	44	여	30대	학생	고졸
14	54	13	-08	23	42	43	남	20대	학생	고졸
15	78	24	12	34	06	27	여	40대	관료	대졸
16	46	40	41	23	17	08	남	50대	농민	중졸
17	30	39	67	-16	32	57	남	50대	노동자	중졸
18	23	24	21	11	48	29	여	50대	노동자	고졸
19	21	17	-27	58	-19	67	남	40대	관료	대졸
20	08	-09	78	54	32	72	여	50대	관료	대졸
21	12	-11	32	24	51	76	남	20대	기타	중졸
22	56	76	-24	30	24	03	남	30대	기타	고졸
23	78	-25	67	12	28	28	남	40대	농민	초졸
24	34	56	27	33	10	08	여	60대	관료	중졸
25	23	45	47	18	28	23	여	30대	노동자	고졸
26	19	22	43	44	19	16	남	40대	노동자	고졸
27	13	78	05	91	-18	43	남	20대	기타	고졸
28	08	30	13	57	22	17	여	30대	기타	고졸
29	74	29	18	21	-12	42	여	30대	기타	고졸
30	48	27	32	26	58	04	남	30대	노동자	고졸
31	47	-12	56	78	22	76	남	50대	농민	고졸
32	54	-17	21	92	07	40	남	50대	농민	고졸
33	52	-25	09	32	11	66	남	40대	노동자	중졸
34	71	31	18	25	-17	41	여	40대	기타	대졸
35	24	78	33	12	45	16	여	60대	기타	대졸
36	45	42	49	24	10	55	남	60대	노동자	고졸
37	39	18	06	82	68	42	여	50대	노동자	고졸

* 주: 진하게 표기한 수치는 ± 40 이상에서 유의하고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생략함.

<표 7-2> 요인유형과 각 개인의 특성

개인	요인유형						개인특성			
	A	B	C	D	E	F	성별	연령	직업	교육
38	15	62	-35	29	-11	33	남	20대	학생	고졸
39	49	-23	21	74	23	81	여	40대	관료	대졸
40	21	-19	33	18	08	43	남	20대	학생	고졸
41	28	64	42	61	-27	02	남	30대	노동자	.
42	74	56	49	55	12	14	남	20대	노동자	.
43	44	39	23	36	67	80	여	40대	농민	초졸
44	73	11	19	21	44	02	여	50대	노동자	고졸
45	67	71	72	26	75	34	여	40대	노동자	.
46	45	-26	73	43	-21	20	남	30대	기타	초졸
47	66	31	34	16	68	30	남	30대	관료	대졸
48	10	85	72	81	44	22	남	40대	관료	대졸
49	27	26	14	-05	33	67	남	50대	관료	대졸
50	56	-11	19	32	22	21	여	50대	관료	대졸
51	74	31	81	77	47	01	남	50대	기타	고졸
52	81	45	-11	44	08	29	남	40대	농민	고졸
53	06	74	-07	30	47	88	여	50대	노동자	고졸
54	21	23	43	26	32	17	여	20대	노동자	고졸
55	63	26	30	71	-18	25	남	60대	기타	고졸
56	71	89	47	-28	09	24	여	50대	노동자	대졸
57	69	19	40	-24	59	44	남	50대	관료	대졸
58	51	-17	42	-12	15	82	여	30대	농민	중졸
59	67	54	14	70	26	21	남	40대	노동자	고졸
60	48	45	-16	32	47	09	남	30대	노동자	고졸
61	42	06	07	30	68	45	남	40대	농민	고졸
62	35	87	32	49	08	17	여	20대	학생	.
63	79	12	76	54	-09	61	남	20대	학생	대졸
64	63	23	15	27	58	26	남	40대	관료	.
65	09	08	32	77	29	04	남	60대	농민	중졸
66	24	72	83	35	32	12	여	50대	노동자	고졸
67	81	56	11	18	-25	74	여	50대	노동자	고졸
68	28	-12	27	42	65	19	남	40대	기타	고졸
69	54	28	29	10	77	50	남	30대	관료	대졸
70	51	16	19	21	44	13	남	40대	농민	고졸
71	79	29	82	48	23	17	여	50대	노동자	고졸
72	20	48	08	32	65	46	여	50대	노동자	고졸
73	47	09	34	09	07	58	남	40대	기타	중졸
74	29	48	26	66	11	43	여	20대	학생	고졸

* 주: 진하게 표기한 수치는 ± 40 이상에서 유의하고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생략함.

4.1.2. 각 요인유형별 진술문 수치

각 요인에 대한 진술문 수치를 <표 8>로 나타내었다. 36개의 진술문항은 74명 응답자에 의해 여섯 개의 A, B, C, D, E, F 요인으로 분류된다. 응답자가 가장 동의하는 것은 4, 가장 동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4로 표시된다. 여섯 개 요인은 문항에 대해 긍정하는 수치인 4와 부정하는 수치인 -4를 각각 3개씩 갖고 있다. 따라서 가장 긍정하는 또는 가장 부정하는 총36개의 4와 -4가 있다. 또한 순위적으로 긍정하는 또는 부정하는 총36개의 3과 -3, 총48개의 2와 -2, 총60개의 1과 -1을 각각 가지고 있다. 응답자의 견해에 별 의미가 없는 0은 총 36개가 있다. 이러한 수치는 앞서 기술한 <표 3> Q 분류 강제적 정규분포도에 의해 분류된 수와 일치한다.

요인 A에 가장 동의하는 4 진술문은 1번, 8번, 17번 진술문이고 가장 동의하지 않는 -4에 해당하는 진술문은 9번, 31번, 34번 진술문이다. 요인 B에 가장 동의하는 4 진술문은 17번, 18번, 29번 진술문이고 가장 동의하지 않는 -4에 해당하는 진술문은 7번, 9번, 26번 진술문이다. 요인 C에 가장 동의하는 4 진술문은 13번, 32번, 35번 진술문이고 가장 동의하지 않는 -4에 해당하는 진술문은 7번, 20번, 25번 진술문이다. 요인 D에 가장 동의하는 4 진술문은 11번, 24번, 27번 진술문이고 가장 동의하지 않는 -4에 해당하는 진술문은 21번, 22번, 25번 진술문이다. 요인 E에 가장 동의하는 4 진술문은 1번, 6번, 7번 진술문이고 가장 동의하지 않는 -4에 해당하는 진술문은 31번, 5번 14번 진술문이다. 요인 F에 가장 동의하는 4 진술문은 16번, 17번, 24번 진술문이고 가장 동의하지 않는 -4에 해당하는 진술문은 26번, 27번, 36번 진술문이다. Q 방법론의 요인유형 해석은 이들 두드러진 진술문과 측정치(Z-score)의 순위를 파악해 봄으로서 해석이 가능하다.

<표 8> 각 요인에 대한 진술문 수치

진술문	A	B	C	D	E	F
1. 과거 남북관계는 외부세력의 간섭에 의한 대립관계 속에 있었다.	4	2	0	-2	-4	-1
2. 남북 불가침 선언은 실질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허상에 불과하다.	0	2	0	0	1	0
3.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힘의 균형이 냉전상태를 유지해왔다.	2	2	3	-1	-4	-2
4. 군사력 부분에 있어서 아직 남한은 북한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1	-3	0	0	-2	2
5.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는 남북간 군사당국자 회담 결과이다.	-2	-2	-1	-3	-4	-1
6. 남북정상회담이후 남한국민들의 안보의식이 결여되고 있다.	0	-3	1	-1	4	2
7. 평화는 역사나 국제질서에서 볼 수 있듯이 힘을 가진 자만이 지킬 수 있다.	0	-4	-4	2	4	3
8. 동북아의 지정학적 특성상 이 지역 국가 간의 세력경쟁은 지속될 것이다.	4	3	-2	0	3	3
9. 상황에 따라 힘에 의한 무력 통일은 가능하다고 본다.	-4	-4	-1	-1	3	2
10. 대북 경제협력은 주변국 관계 및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 반영되었다.	-2	1	0	1	1	1
11.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동구권 국가들이나 중국이다.	1	-2	-1	4	-2	0
12. 이제까지의 남북경제협력은 북한의 변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	1	3	-1	1	2	1
13. 북한에 대한 무리한 경제협력 및 식량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1	-2	4	-2	3	-2
14. 경제협력만이 북한의 점진적 변화 및 통일을 향한 유일한 돌파구이다.	-1	3	-2	-1	-4	3
15. 남북경제협력 유지는 앞으로 경쟁을 위한 준비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0	-3	-3	0	-3	-2
16. 북한은 앞으로 남한의 실질적인 경제적 협력자가 될 것이다.	-3	1	-3	-3	-3	4
17. 북한과 미국 및 일본을 비롯한 서방과의 경제관계 개선은 필수적이다.	4	4	-2	2	2	4
18. 북한의 시장경제로서의 전환은 가능하다고 본다.	-1	4	1	-2	0	2
19. 국제적으로 남한은 북한에게 이용만 당해왔다.	-1	-1	0	0	-3	-3
20. 냉전시대 남북간 경쟁외교는 필수불가결 하였다.	0	1	-4	3	2	-3
21. 한미외교 및 안보동맹은 한반도 평화유지에 있어서 최우선시되는 사항이었다.	-1	2	-2	-4	2	-3
22. 남한은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2	0	-3	-4	1	1
23. 남북관계 개선은 국제기구를 통한 화해와 협력의 차원에서 발생한 것이다.	-2	0	1	1	-2	0
24.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한의 평화외교 및 공조는 그 성과가 괄목할 만하다.	1	1	2	4	-1	4
25. 국제기구나 주변 강대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남북간 평화정착이 바람직하다.	3	-1	-4	-4	1	1
26. 외교를 통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실질적인 평화를 이룩해내지 못한다.	-2	-4	2	-2	-1	-4
27. 미군의 남한주둔은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2	0	2	4	-2	-4
28. 과거 통일론은 감성적이거나 민족적 이상론에 불과 했다.	0	-1	3	3	1	0
29. 어떠한 상황에서도 민족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3	4	-1	2	-1	1
30. 정치적 이념에 의한 통일론은 실질적인 남북관계개선 및 민족통일을 방해해왔다.	-1	0	1	2	0	-2
31. 남한 내부에서의 이념적 갈등이 현재 심화되고 있다.	-4	-2	1	1	-1	-1
32.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는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3	1	4	1	-1	0
33. 남북관계개선은 외부환경개선보다 민족의 동질성 회복노력에 의한 것이다.	3	-1	3	0	0	-1
34. 남북통일은 체제보다는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민족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4	0	2	-1	0	0
35. 현실성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이 바람직하다.	2	0	4	-3	0	-1
36. 남북관계개선 및 통일은 남북 당사자들만이 해결해야 한다.	-3	-1	0	3	0	-4

4.1.3. 요인유형 해석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여섯 가지의 요인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공유하는 서로 다른 정치문화의 고유한 자결적 주관성을 의미한다. 요인 A는 현실적 외교주의의 시각을 표방한다. 요인유형 및 각 개인의 특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요인 A는 44명의 개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시각으로 성별, 연령, 학력, 직업출신 등 응답자들의 특성 면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즉, 남녀 성별, 세대별 차이, 사회계층차이 등은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정의하는 또는 이들 응답자들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 A의 시각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요인 A(현실적 외교주의)의 시각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세력경쟁 속에서 서방과의 관계개선은 필수적으로 본다. 또한 힘에 의한 무력통일은 불가능하고 현 체제를 뛰어넘는 범위에서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통일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다. 요인 A에 유의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냉전기 남북관계가 주변 강대국들간의 대립에 의한 갈등과 경쟁이 문제시되어 왔듯이 앞으로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세력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본다. 이는 동북아에서 세력균형의 변화가 지역내 국가들의 대외정책의 변화를 초래했다는 신현실주의 이론과 일맥상통한다. 다시 말하면, 동북아의 국제질서가 지정학(地境學)적인 상호의존관계의 질서보다는 지정학(地政學)적 요소를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요약하면, 요인 A의 시각은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서방과의 관계개선으로 현실적으로 실리를 극대화하는 실용외교를 선호하는 시각이다.

요인 A를 정의하는 개인들에 의해 분류된 ‘가장 동의하는’ 또는 응답자들의 느낌에 가장 부합하는 진술문(+4)은 다음과 같다:

17. 북한과 미국 및 일본을 비롯한 서방과의 경제관계 개선은 필수적이다.
(1.827)
1. 과거 남북관계는 외부세력의 간섭에 의한 대립관계 속에 있었다.(1.646)
8. 동북아의 지정학적 특성상 이 지역 국가 간의 세력경쟁은 지속될 것이다.
(1.507)

요인 A를 정의하는 개인들에 의해 분류된 ‘가장 동의하지 않는’ 또는 응답자들의 느낌에 가장 부합되지 않는 진술문(-4)은 다음과 같다:

9. 상황에 따라 힘에 의한 무력통일은 가능하다고 본다.(-1.966)
31. 남한 내부에서의 이념적 갈등이 현재 심화되고 있다.(-1.602)

34. 남북통일은 체제보다는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민족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1.400)

요인 B는 협력을 통한 체제전환주의의 시각이다. 요인유형 및 각 개인의 특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요인 B는 31명의 응답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시각으로 성별, 연령, 학력수준 등 응답자들의 특성 면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즉, 성별, 세대별 차이, 사회적 차이 등은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정의하는 또는 이들 응답자들의 견해와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 B의 시각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점이 없다.

요인 B(협력을 통한 체제전환주의)의 시각은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외교를 통한 평화정착을 선호한다. 이와 같은 시각은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체제유지를 기본 철학으로 하고 있고, 남북한이 상호화해 및 협력 그리고 평화체제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를 계속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요인 B의 시각은 신자유주의적 신제도주의의 시각과 일치하는 점이 있지만 요인 B에 유의한 개인들은 민족통일의 당위성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민족이익을 부각시키는 점이 특징을 가진다. 더불어 요인 B에 유의한 개인들은 힘에 의한 무력통일이나 체제전환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요인 B를 정의하는 개인들에 의해 분류된 ‘가장 동의하는’ 또는 응답자들의 느낌에 가장 부합하는 진술문(+4)은 다음과 같다:

18. 북한의 시장경제로서의 전환은 가능하다고 본다.(1.822)
17. 북한과 미국 및 일본을 비롯한 서방과의 경제관계 개선은 필수적이다.
(1.622)
29. 어떠한 상황에서도 민족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1.607)

요인 B를 정의하는 개인들에 의해 분류된 ‘가장 동의하지 않는’ 또는 응답자들의 느낌에 가장 부합되지 않는 진술문(-4)은 다음과 같다:

7. 평화는 역사나 국제질서에서 볼 수 있듯이 힘을 가진 자만이 지킬 수 있다.(-1.930)
26. 외교를 통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실질적인 평화를 이룩해내지 못한다.
(-1.845)
9. 상황에 따라 힘에 의한 무력통일은 가능하다고 본다.(-1.633)

요인 C는 실용적 민족주의의 시각이다. 요인유형 및 각 개인의 특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요인 C는 25명의 개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시각으로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등 응답자들의 특성 면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즉 성별, 세대별 차이, 사회적 차이 등은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정의하는 또는 이들 응답자들의 견해와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 C의 시각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점이 없다.

요인 C(실용적 민족주의)의 시각은 현실성과 실용주의를 통한 민족의 정체성 확보에 관심을 두고 있다. 남북간 화해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평화정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반면 국제기구나 주변 강대국, 즉 외세에 의한 평화유지는 반대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는 냉전의 요소가 아직 남아있는 한반도에서 급작스러운 북한의 붕괴를 예방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여건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또한 군사적 위협의 소멸, 남북한 당국의 정치적 분위기의 조성 및 신뢰회복 없이 무분별한 경제협력이나 원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탈냉전의 전환기적 상황이 새로운 형태의 경쟁이나 협력양상을 띄고 있으므로 대북한 정책에 있어서도 상호 적대주의의 체제경쟁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호혜적 협력관계의 폭을 넓혀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요인 C를 정의하는 개인들에 의해 분류된 ‘가장 동의하는’ 또는 응답자들의 느낌에 가장 부합하는 진술문(+4)은 다음과 같다:

13. 북한에 대한 무리한 경제협력 및 식량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1.708)
32.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는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1.706)
35. 현실성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이 바람직하다.(1.705)

요인 C를 정의하는 개인들에 의해 분류된 ‘가장 동의하지 않는’ 또는 응답자들의 느낌에 가장 부합되지 않는 진술문(-4)은 다음과 같다:

25. 국제기구나 주변 강대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남북간 평화정착이 바람직하다.(-1.781)
7. 평화는 역사나 국제질서에서 볼 수 있듯이 힘을 가진 자만이 지킬 수 있다.(-1.726)
20. 냉전시대 남북간 경쟁외교는 필수불가결 하였다.(-1.280)

요인 D는 전통적 현실주의의 시각을 대변한다. 요인유형 및 각 개인의 특성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인들에 의해 정의된다. 요인 D는

26명의 응답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시각으로 개인별 특성으로 볼 때 남녀구분, 학력, 직업 등으로 구별이 되는 점이 요인 D의 견해에 보이지 않고 있다.

요인 D(전통적 현실주의)의 시각은 실질적으로 북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동구권 국가들이나 중국으로 보고 있고 미국의 남한주둔을 남북관계 개선에 별반 도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북한이 서방이나 주변 강대국들간의 협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주의적 시각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남한의 협력에 대해 부정적이고 한미 동맹이 한반도 평화유지에 별반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평화정착을 위한 남한의 외교노력을 괄목할만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요인 D를 정의하는 개인들에 의해 분류된 ‘가장 동의하는’ 또는 응답자들의 느낌에 가장 부합하는 진술문(+4)은 다음과 같다:

11.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동구권 국가들이나 중국이다.(1.871)
24.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한의 평화외교 및 공조는 그 성과가 괄목할만하다.(1.780)
27. 미군의 남한주둔은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1.709)

요인 D를 정의하는 개인들에 의해 분류된 ‘가장 동의하지 않는’ 또는 응답자들의 느낌에 가장 부합되지 않는 진술문(-4)은 다음과 같다:

25. 국제기구나 주변 강대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남북간 평화정착이 바람직하다.(-1.788)
21. 한미외교 및 안보동맹은 한반도 평화유지에 있어서 최우선시되는 사항이었다.(-1.782)
22. 남한은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1.687)

요인 E의 시각은 국제협력관계수동주의의 시각을 나타낸다. 요인 E의 시각은 요인유형 및 각 개인의 특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26명의 개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시각이다. 요인 E의 시각 또한 개인별 특성으로 볼 때 특징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개별적 특징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즉 남녀, 연령, 직업적으로 구별되는 점이 요인 E의 견해에 보이지 않고 있다.

요인 E(국제협력관계수동주의)의 시각은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화해협력차원에서의 변화보다는 외세간섭에 의한 동북아 질서가 유지되었다는 시각을 대변

한다. 또한 국제질서상 힘에 의한 평화정착이 형성되어 왔다고 보고 냉전기 남북한간의 힘의 균형보다는 외세에 의한 대립유지였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더불어 요인 E의 견해를 공유하는 개인들은 북한의 변화를 경제협력과 화해협력을 통한 전환으로 보지 않고 외부환경 및 세력변화에 의한 수동적인 변화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한국민들의 주변정세 파악 및 안보의식이 최근에 결여되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요인 E를 정의하는 개인들에 의해 분류된 ‘가장 동의하는’ 또는 응답자들의 느낌에 가장 부합하는 진술문(+4)은 다음과 같다:

1. 과거 남북관계는 외부세력의 간섭에 의한 대립관계 속에 있었다.(1.778)
6. 남북정상회담이후 남한국민들의 안보의식이 결여되고 있다.(1.576)
7. 평화는 역사나 국제질서에서 볼 수 있듯이 힘을 가진 자 만이 지킬 수 있다.(1.332)

요인 E를 정의하는 개인들에 의해 분류된 ‘가장 동의하지 않는’ 또는 응답자들의 느낌에 가장 부합되지 않는 진술문(-4)은 다음과 같다:

5.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는 남북간 군사당국자 회담 결과이다.(-1.744)
3.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힘의 균형이 냉전상태를 유지해왔다.(-1.734)
14. 경제협력만이 북한의 점진적 변화 및 통일을 향한 유일한 돌파구이다. (-1.711)

요인 F는 경제협력우선주의의 시각을 대변한다. 요인유형 및 각 개인의 특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요인 E는 31명의 개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시각이다. 요인 F 또한 개인별 특성으로 볼 때 특징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개별적 특징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즉, 남녀, 연령, 직업적으로 구별되는 점이 요인 F의 견해에 보이지 않고 있다.

요인 F(경제협력우선주의)는 남북이 실질적인 경제적 협력 파트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는 신자유주의 이론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 및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경제원조와 협력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시각을 표방한다. 이러한 견해를 공유하는 개인들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궁극적 남북통일의 일환으로 서방의 대북경제 제재조치의 해제와 북한의 대서방 관계 개선을 용인하는 입장을 취한다. 또한 이러한 시각은 대북 흡수통일의 대안으로 우선적으로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여건을 조성하고 통일의 틀을 마련한다는 시각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요인 F를 공유하는 개인들은 국제협

력과 외교를 통한 안보유지와 주한미군의 남한 주둔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요인 F를 정의하는 개인들에 의해 분류된 ‘가장 동의하는’ 또는 응답자들의 느낌에 가장 부합하는 진술문(+4)은 다음과 같다:

16. 북한은 앞으로 남한의 실질적인 경제적 협력자가 될 것이다.(1.789)
17. 북한과 미국 및 일본을 비롯한 서방과의 경제관계 개선은 필수적이다.
(1.773)
24.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한의 평화외교 및 공조는 그 성과가 괄목할 만하다.(1.712)

요인 F를 정의하는 개인들에 의해 분류된 ‘가장 동의하지 않는’ 또는 응답자들의 느낌에 가장 부합되지 않는 진술문(-4)은 다음과 같다:

36. 남북관계개선 및 통일은 남북 당사자들만이 해결해야 한다.(-1.791)
26. 외교를 통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실질적인 평화를 이룩해내지 못한다.
(-1.781)
27. 미군의 남한주둔은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1.724)

Q 연구의 장점은 위에 열거한 다양한 견해에 대한 요인유형을 구성해 준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가지 특이한 점은 남북한이 공유할 것으로 판단되었던 당위론적 민족주의적 시각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진정한 민족애적인 입장을 갖고서 민족적 정체성을 구현하여 남북한의 평화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켜야한다는 통일의 당위론적 시각이 없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민족통일론적 시각은 그동안 상호억제전략의 일환으로 행해왔던 소모적인 체제의 경쟁을 지양하고, 현실 가능한 실용적인 통일 기반확충을 논리적 기초로 두고 의견을 개진해왔다. 이와 같은 견해는 한민족위주의 민족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사실상의 민족통일을 정치체제의 통일보다 우선시 하는 민족주의 통일론을 대변한다.

요약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시각은 현실적 외교주의, 협력을 통한 체제전환주의, 실용적 민족주의, 전통적 현실주의, 국제협력관계수동주의, 경제협력우선주의로 크게 대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북한정부의 그동안의 대남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 북한이 1990년대 이후부터 꾸준하게 주목할만한 개방개혁의 변화를 시도하여왔고, 비록 북한의 대남인식이 보수적, 냉전적 그리고 경쟁적 인식이라는 형식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상당히 제한적으로 점

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탈냉전이후 북한지도부의 대남인식이 공격적 성향에서부터 탈피하여 점차 방어적 성향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대두되어 왔다.⁵⁰⁾ 특히 북한의 대남정책면에 있어서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신축적이고 유동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인식은 이중전략적 인식, 분리주의적 차별화된 인식, 외재적 인식, 부정적 인식, 민족주의적 인식, 절충주의적 인식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⁵¹⁾ 이중전략적 인식은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구도가 생존을 위한 현실적 군사주의와 경제적 실용주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시각을 의미한다.⁵²⁾ 즉,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을 취하는 가운데 남한과의 체제경쟁을 유지하면서 경제협력확대를 통해 실리를 확보하는 전략이다. 분리주의적 차별화된 인식은 통미봉남의 전략과 남한정부와 민간을 분리시키려는 정경분리의 외교적 대응자세에서도 그 의도에서 엿볼 수 있다. 특히 남북협력을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도구나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잘 나타난다. 외재적 인식은 남한사회의 기본이념과 체제적 특성을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시도보다는 자신들이 신봉하는 가치체계나 이념에 의해 남한 사회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남한사회에 대한 인식이 냉전적 경쟁관계나 협력을 통한 공동이익의 창출보다는 영합게임(zero-sum game)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 최근 북한이 민족공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민족주의 공동체를 창출해내려는 것이 아니고 한국내의 반미를 부추기려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 더불어 북한의 정책결정 스타일은 정치적 선택을 내려야 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서로 상반되고 모순되는 듯한 요소를 함께 공존시키면서 경쟁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⁵³⁾ 그러면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결적 시각 및 북한의 대남인식과 대비하여 남한의 평화와 통일의 접근논리는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하자.

4.2. 평화와 통일의 접근논리 비교분석

앞서 여섯 가지의 견해가 북한이탈주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시각이라면 그들

50) 이시형, “김정일시대 북한의 대남인식,” ■■■한국동북아논총■■■, 제30집, 2004년, p. 266 및 허문영, ■■■북한지도부의 정세인식변화와 정책전망■■■(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83 참조.

51) 이시형, “김정일시대 북한의 대남인식,” pp. 266-271.

52) 이종석, “북한외교의 변화와 남북관계,” ■■■외교■■■, 제54호, 2000년 7월, p. 30 참조.

53) 이시형, “김정일시대 북한의 대남인식,” p. 271.

안 국내에서는 대북 및 통일과 관련하여 “인식우선의 논리”와 “실천우선의 논리” 등 다양한 견해를 표출하여 왔다. 전통적으로 선평화후통일의 논리가 국내 통일문화의 주도권을 잡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통일이라는 변화가 가져오는 위기의식, 현상유지 경향 및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지적하면서 통일의 이상과 현실에 대한 균형된 감각을 강조하여왔다. 하지만 인식우선의 논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그 목적과 당위성을 가진 통일보다는 평화유지 인식때문에 통일의 시기나 목적의식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반면 실천우선의 논리는 통일만이 민족의 가장 큰 선결과제라는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반세기 분단에서 오는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 이질감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대안에 대한 논의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분단 상황의 명확한 인식과 통일의 당위론적인 과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한 현안과제에 대한 국내외 논의는 주로 대북 및 통일정책의 추진방향, 원칙, 속도, 방법 및 범위 등에 산정되어 있다.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의 전개상황에 대해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가? 과연 북한은 변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변화되고 있는가? 한미간의 불협화음을 포함한 동북아 주변국과의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등 다양한 질의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정책적 또는 이념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냉전적 대결과 갈등이 아닌 평화와 공존이라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평화구축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접근논리를 남북한 체제적 접근논리, 평화와 통일의 상반논리에 관련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4.2.1. 평화와 통일의 접근논리

4.2.1.1. 남한의 체제적 특성

남한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각기 체제원리로 삼아 오면서 나름대로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에서 역기능과 갈등증폭의 체험을 수반해 왔다. 분단한국이라는 현실과 지정학적 상황조건에 기인한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 특징들이 남한체제를 특성화 및 유형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정치공동체의 형성 미흡과 국가권력의 평화적 교체에 대한 경험부족 등 적지 않은 특수한 국면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남한체제의 특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①정치적으로 많은 부분에

서 민주화되었지만, 아직도 산재해 있는 권위주의적 특성, ②경제적으로 자본우선의 논리에서 비롯되는 분배격차와 대외적으로 의존주의적 성향, ③사회적으로 국가권력의 비대화로 인한 시민사회의 자율성 결여와 다원주의 체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노출되는 아노미(정치사회적 혼란과 소외) 현상, ④문화적으로 전통성의 단절과 정당성의 시비에서 오는 주체적 신념체계의 불비(不備)를 각각 배태시켜 왔다고 보여지고 있다.⁵⁴⁾

4.2.1.2. 북한의 체제적 특성

오랫동안 전체주의적 체제특성을 일관적으로 고수해 온 북한체제의 경우에는 사회주의와 주체사상 사이의 사실상 기묘한 결합을 통해서 독특한 통치 구조를 형성·유지시켜 왔다. 특히 당이 절대 우위에 서는 통치 구조를 유지하여 왔으며, 사회주의적 혁명건설을 궁극목표로 삼고 주체사상을 그 실천이데올로기로서 북한체제 전반을 전체주의적 질서로 일원화하여 이를 강력히 통합시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체제의 특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될 수 있다. ①정치적으로는 세습통치의 권력구조를 바탕으로 한 전체주의와 군사적으로는 사회주의 혁명의 전위대로서의 군사결정론의 확증, ②경제적으로는 국가(중앙)계획제도에 의존하는 통제위주의 사회주의적 생산체제와 제한적인 자본주의 제도의 도입, ③사회적으로는 대내적 체제효율을 높이기 위한 일률적인 국가동원감시체제와 조직적인 집단행동체제, ④문화적으로는 수동적 생활양식의 내면화에서 오는 소외의식과 무모한 주체논리의 강요에서 오는 정치사회적 신념체계의 굴절을 각각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⁵⁵⁾

4.2.2. 평화와 통일의 상반논리

54) 최장집(편), ■■■한국자본주의와 국가■■■(서울: 도서출판 한울, 1985), pp. 27-90; 양성철, “한국정치학연구의 발전과 현황: 남북한 정치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1집 2호, 1987년, pp. 95-110; 한상진, ■■■한국사회와 관료적 권위주의■■■(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8), pp. 81-121; 송복,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서울: 현대문학, 1990), pp. 109-144; 이우영, “통일논의를 둘러싼 이념논쟁 비판: 실질적 통일논의를 위하여,” 권혁범 외, ■■■한반도와 통일문제: 한반도 문제의 재조명■■■(서울: 대왕사, 2002), pp. 199-225.

55) 이흥구 외, ■■■분단과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서울: 박영사, 1984), pp. 164-165; 양호민 외, ■■■북한 40년: “조선인민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성과 변천과정■■■(서울: 을유문화사, 1989), pp. 31-110;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서울: 청계연구소, 1989); 고상두, “분단구조와 북한 내부의 정치갈등,” 문정인 저, ■■■남북한 정치갈등과 통일■■■(서울: 오름, 2002), pp. 57-81; 통일부, ■■■통일백서■■■(서울: 통일부, 2002).

4.2.2.1. 평화우선의 논리

남북한의 체제적인 특성상 평화와 통일의 논리 또한 상반되어 전개되어 왔다.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된 상반논리 중의 하나가 바로 평화우선의 논리이며, 이는 주로 제도권의 공식표명이나 현상유지의 정책기조 내지는 인식우선의 논리와 긴밀히 관련되어 오랫동안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여기에서의 평화라는 것도 단순한 전쟁부재의 상태, 즉 무장 속의 평화(armed peace)를 말한다. 전쟁의 원인이나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소멸되어 있지 않은 소극적 측면에서의 평화인 것이다. 현존하는 전쟁부재의 한반도 상황의 현상유지라는 측면과 이를 위해서는 역시 세력균형에 의한 평화유지라는 전제조건이 사실상 깔려 있다. 따라서 한반도는 군사력에 의한 평화유지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이어지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군사화도 시대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정당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평화우선의 논리는 대체로 분단구조 속에서의 현실인정을 강조하면서, 특히 안보태세의 강화와 주한미군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 결과 적극적인 평화구축을 위해 요구되고 있는 군비통제나 군축실현도 국제적 역학구도에 적절히 편승, 치중하려는 성향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평화우선의 논리구조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는 현상유지의 정책기조가 논리구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체제비판론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대체로 집권계층이나 혹은 체제옹호세력들은 현 분단 상황의 영속화 및 고착화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부분 이들은 현재와도 같은 소극적 상태의 평화구조가 계속 한반도에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제옹호론자들은 이러한 분단 상황 속의 평화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 군사력 균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라면 대외의존적 군사동맹체제의 결속, 가동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 까닭에 현재와도 같은 남북한 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하여 회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남북한간 군비통제나 군축은 상호불가침협정 등 관계진전을 위한 일련의 정책처방에 있어서도 다분히 미온적이며 현상지속을 위한 성향이 있다고 비판되고 있다.

둘째로는 준비론적 사고의 강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통일이라는 체제변동에 대한 모종의 위기의식과 더불어 현 상태에 다분히 만족, 안주하고자 한다. 즉,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급진적이고 저돌적인 실천우선의 논리는 위험부담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박하면서, 통일운동과 같은 통일을 위한 모종의 행위에 앞서 올바른 현실인식만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는 준비론적 사고의 특징을 갖는다.

셋째로는 체제 또는 제도의 논리라고 부를 수 있는 일련의 특징들이다. 이것은 남북한간의 분단 상황을 안정, 지속시키기 위한 옹호논리의 대표적인 경우로서, 반체제적 그리고 반제도적 대항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통제장치와 국가라는 강압기제를 통해 현존하는 기존의 정치질서를 확대재생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물론 이 같은 이분법적 도식은 남북한 모두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남한의 체제와 제도의 논리와 같이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견해가 미온적이거나, 아예 북한의 민족적 무력통일론과 같이 극단적인 통일논리를 표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넷째로는 신뢰확증의 선결조건화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제시되었던 남한의 통일논의들은 하부구조(infrastructure)로부터 상호협력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통합하여 최종적으로는 상부구조(suprastructure)로의 통합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역대 정부가 채택해 온 통일정책이나 방안들이 대체로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⁵⁶⁾ 이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 단계가 바로 신뢰증진과 긴장완화라고 강조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전제조건인 필수적 요구는 남북한 관계개선에 있어서 일방의 안정기조만을 강조한 나머지 단계적 그리고 기능적 요구를 강화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동시다발적 노력을 통한 가속적 또는 확산적 요구가 오히려 더 큰 남북한의 상호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까지도 도외시하기 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2.2.2. 통일우선의 논리

통일우선의 논리는 앞의 평화우선의 논리와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다. 기존 정부당국의 방안이나 제도권의 주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인식 속에서 통일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통일운동이라는 관점에서 통일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분단현실을 보는 방식부터 당시 지배계층의 노선분화가 외세개입을 필연적으로 불러들인 귀결이라고 단정한다. 한반도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분단구조가 형성되었으며, 미국을 위시한 자본주의 세력이 한반도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모순구조를 타파하고 민중이 주도하는 새로운 통일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특히 민족주체의 논리를 통해서만이 자주적 통일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현 남한 당국의 안보논리나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는 극히 비판적이고 회의적이다. 그리고 군비통제나 군축논의에 있어서도 전면 수용 내지는 전면 해체와 같은 극단론을 표방하고 있다.

통일우선의 논리구조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는 현상혁

56) 통일부, ■■■통일백서■■■, pp. 18-23.

과의 노선과 관련된 기본적인 특성을 담고 있다. 이것은 앞서 제시한 평화우선의 논리와는 반대되는 입장으로, 통일은 남북체제의 동거형태가 아닌 새로운 제3의 체제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남북한간 통일문제란 어떠한 이유와 까닭을 통해서도 미루어질 수 없고, 분단현실은 현상변혁의 논리를 통해서만 사실상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논리에 있어서는 북한의 정권담당자와 권력구도의 변모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그리고 남북한의 통일에의 접근이 실질적으로 열리지 않는다면, 이러한 논리 또한 현실성이 없는 한낱 공론에 그칠 가능성이 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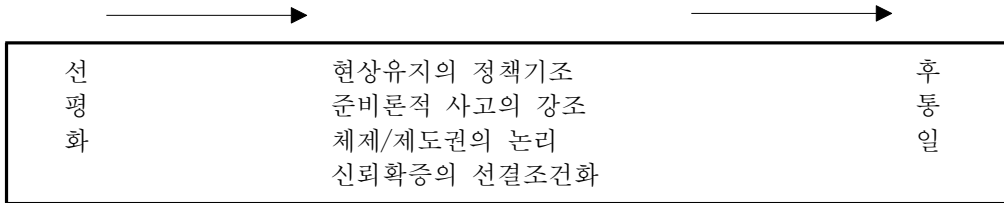
둘째로는 결정론적 실천의 강조에 따르는 일련의 특성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이른바 통일운동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기존의 정부당국이나 제도권의 통일논리는 더 이상 수용할 필요와 가치도 없다는 통일지상주의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정론적 실천우선의 논리는 오로지 자주적인 민족주체의 논리에 의해서만이 달성될 수 있고, 현상타파를 통해서만이 곧 민족모순(=분단갈등)과 더불어 계급모순(=체제갈등)을 변증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면서, 이에 따르는 확고한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대내적 요구(=민족자존의 논리)와 대외적 요구(=국제협력의 논리)가 유기적으로 상응할 수 있을 때 실로 가능하다는 현실인식을 저버리기 쉬운 근본적인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로는 반체제 또는 반제도의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것은 체제 또는 제도의 논리와 상반되는 논리로 대체로 민중통일론의 경우가 속한다고 보여 진다. 일반적으로 이 논리는 정치통합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천명하고, 민족을 체제나 이념보다도 절대 중요시한다. 이러한 논리구조는 남한 사회내의 총체적 변혁과정을 통해 민중민주주의의 정권이 출범하고 모종의 통일환경이 이룩되면, 남과 북은 연방제 통일방안으로 간다는 접근방법을 취한다. 이러한 통일논리에 있어서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구조의 해소는 일시적 또는 전면적으로 단행되어야 하며, 한반도내에 있는 핵무기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즉각 철수하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 결과 한반도의 현실인식에 있어서 군사적 대결상황과 부담의 문제를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것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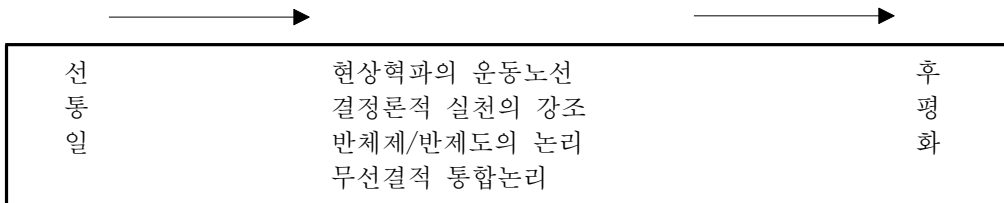
넷째로는 무선결적 통합논리를 강조하는 점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남북한 통일에의 접근단계나 수순절차를 전면 무시하고 아무런 선결조건 없이 그대로 실천으로 진입하자는 논리이다. 앞서 말한 신뢰확증의 선결조건화라는 대목과는 상치된다. 그렇지만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남북 피차가 과도하리만큼 선결조건을 꽤나 까다롭게 요구해 왔으며, 특히 정치군사적 측면에서의 북한핵문제의 해결

및 갈등해소를 위한 군비통제나 군축협상 등과 같은 산적한 현안의제가 현실적으로 남겨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비현실적인 면이 많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적으로 볼 때, 평화우선의 논리와 통일우선의 논리는 다음의 <그림 1>과 <그림 2>와 같이 요약하여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림 1> 평화우선의 논리



<그림 2> 통일우선의 논리

일반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방법과 절차를 구상하여 제시하는 경우에, 대부분 개별체제(남한의 민주화와 북한의 개방화) → 남북한 관련체제(관계개선 및 현안의제 타결) → 한반도지역체제(관계결속 및 교섭증진)의 수순을 정하여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순은 적실성이 사실상 결여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개별체제의 해결이란 일정한 한계(예컨대 북한의 개방화 및 북한핵 선결문제)가 있으며, 여기에 주변국들의 개입변수의 영향도 다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을 남북한간의 관계개선 자체를 독립변수로 보면서, 이것이 개별체제와 지역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주도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최근 일련의 변화는 남북간 개별체제 자체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사실상 관련체제의 변화에 따른 파장과 효과가 더 다대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앞에서 예시한대로, 평화우선의 논리나 통일우선의 논리 자체의 가능성보다는 한계성이 먼저 드러나고 있다. 결국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환경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 관련체제로부터 동북아지역 체제가 긴밀하게 모색되어야만 한다는 잠정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첫째로는 남북한 군사력의 상대적 균형이 적절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한반도 내 군사력의 격차가 심화되는 경우에는 과거지사에서 명백히 드러났듯이, 어느

일방으로 하여금 상대방에 대한 무력사용의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며, 더욱이 그것이 핵보유의 수준이라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한반도 내 본격적인 평화구조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 상호방어적 차원에서 상대적인 군사적 균형을 무리 없이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군비통제의 길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앞서 논의되었지만 양측의 군사정책 및 군사전략·전술의 수정입안과 실질적인 군사회담의 개최는 물론, 최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핵문제에 대한 타결이 시급히 종결되어야만 한다.

둘째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 및 세계체제의 차원에서 강대국들간의 관계개선과 긴장완화가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까닭에 향후 한반도의 군비통제와 평화구축에 대해서 주변 강대국간의 국제협력강화가 비록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필요조건으로 작용할 것을 예상치 않을 수 없으며, 기존의 국제기구의 활성화와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행동반경으로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탐색과정에서 개입될 수 있는 변수들은 상당히 많을 것이며, 이들을 어떻게 포함시켜 예측분석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하나의 변수만을 분석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으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전체적으로 진전될 수 있는 가능한 상황을 기본구도로 짜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탐색과정이 효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통일한국과 군비통제라는 차원에서 현안문제를 보다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책연구가 시급하다고 보면서, 이후 후속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구축과 통일접근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며 가장 안정적인 처방전이라는 책임 있는 현실인식을 일깨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평화적 통일논리의 적용범주를 명백하게 재설정하고, 결코 모순관계가 될 수 없는 평화와 통일을 효율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추진과제 해결모색에 박차를 가해야만 할 것이다. 추진과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먼저 남북한의 시각차를 줄일 수 있는 문화적 통합방안에 있고 둘째는 포괄적 범위에서 정부가 시행해야될 정책과제에 있으며 셋째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추진해야될 사안이다. 이러한 점에 대비하여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동북아 평화변영 참여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5. 정책과제

본 연구에서 정치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공유된 가치관과 신념, 규범과 관습 그리고 행동유형 등의 거시적 총체로 보고 민주주의 발전에 근본이 되는 요소로 분석하였다. 정치문화를 하나의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추상(abstract)으로 상징하고 존재론적인 실체(ontological reality)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견해를 반대한다. 정치문화는 지식, 예술, 법, 관습 및 인간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어떤 다른 능력과 습관들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이기 때문에 상징성과 존재론적 실체 모두를 가지고 있다. 즉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믿음과 신념, 이념과 관습 그리고 지식과 기술을 포함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으로서 사회구성원의 행태에 영향을 주는 가치체계로서 정치문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치문화의 소재지는 인간의 내적인 영역에 존재하는 개념, 가치, 신념, 감정 및 태도,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테두리 안에 있는 대상(사물, 건물 등)에 존재한다. 정치문화는 사회구성원들간 상호작용을 하는 유기체 내·외부 및 유기체들 사이에 위치하고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모두를 포괄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치문화는 변화하고, 작용하며 움직이는 것인 동시에 변화되고 작용되며 옮겨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한국사회의 정치문화가 한 가지 유형의 정치문화를 이루고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문화유형이 혼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북한 문화적 통합의 방향은 정치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보장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갈등과 투쟁보다는 화합과 조화를 이끌어내는 절차, 과정 및 방향을 공고히 하는데 있다.

요약한다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문화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지적한 바대로 다양성과 다차원의 변화양상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유형은 한국이 산업화된 선진국가와 다원주의 문화유형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기존의 정치문화 연구에서 제기하지 못한 부분은 한국의 정치문화는 다양하지만 갈등적인 요소가 많이 내재하고 있고 더불어 그러한 다양성과 갈등이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의 정치문화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화의식은 적어도 선진사회에서 구분하는 것처럼 선한 것(what is good)과 악한 것(what is bad)과 같이 이분법적 논리에 의한 가치기준의 설정이 아니라 다양성과 변화를 인정하고 공유하는 흥익과 상생의 문화의식을 의미한다.

남북한 가치체계에 대한 인식은 구조적이거나 역사적 요인에서 파생된 것이

많은 관계로 단순히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달성될 수 없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남북한이 가지는 가체체계는 일정한 지속성과 가변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또한 다양한 가치체계가 이질적이지만 동태적으로 형성된 혼합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다양화된 사회적 가치와 개인주의의 성향 또한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를 요구한다. 새로운 가치와 삶의 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과정과 공정한 산출물은 선진화된 미래 통일한국을 약속하는 새로운 정치문화의 토양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원활한 문화적 통합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내외 정책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모델의 동북아 평화변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서 문화통합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새로운 남한문화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자신이 몸담고 있던 문화와 비교하면서 비판과 수용을 통해 두 문화를 통합하는 새로운 안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⁵⁷⁾

현재 북한이탈주민관련 해결해야될 과제는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심리적 부적응문제를 포함하여 장기적 생활안정, 사회적응훈련, 정책지원제도개선, 가족간의 역할문제해결 등 다양하다. 따라서 정부는 대탈북자 정책집행의 원칙을 선정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방향을 개선해야할 것이다. 지원정책 원칙은 기회균등의 원칙, 이탈주민간 형평성 유지원칙, 자립정착지원 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⁵⁸⁾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방향은 대량탈북의 가능성에 대한 예측에 기초한 종합대책 수립, 탈북자들을 위한 취업알선의 활성화 및 직업교육의 내실화, 사회적응 교육의 과감한 민간 및 지자체 이양, 정착지원금 지급의 합리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원 확보, 효율적 지원체계 정립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있다.⁵⁹⁾

결론적으로 현재 대량으로 탈북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적어도 세 가지 민족적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한다. 첫째는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인권상황이고, 둘째는 중국이나 러시아 및 인접지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국제적 지위와 인권실태요, 셋째는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 및 적응문제이다. 그동안 참여정부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의 대탈북자 정책만으로는

57) 한국문화정책연구원,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적 갈등해소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7), pp. 22-25.

5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회복지분과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방안,” 1998년 7월.

59) 윤인진,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 제33집, 1999년 가을호, pp. 511-549; 한만길, “탈북이주자의 남한사회 적응문제와 재사회화 방안,” ■■■통일문제연구■■■, 제5권 2호, 1996년, pp. 215-23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회복지분과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방안,” 1998년 7월.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R)이 추정하는 10만여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위의 세 가지 현안에 대한 포괄적이고 범민족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국내외 민간차원의 적극적 지원, 그리고 남한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역량 강화 및 종합적 대책마련을 제기하고자 한다.

5.1. 북한의 인권상황

현재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문제는 인간의 기본권과 생존권의 보장문제로 귀결된다. 북한의 인권개념은 계급적이고 집단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개인의 천부적이며 절대적인 권리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하는 불평등한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전 주민을 출신성분과 충성심에 따라 핵심계층(약 25%), 동요계층(약 45%) 및 적대계층(약 30%)으로 분류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며, 여전히 전체주의적 고립주의를 고수하고 있다.⁶⁰⁾ 북한정부는 또한 주민들을 강제로 억류, 감금, 체포하여 감옥으로 보내는 등 반인류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관계로, 북한에는 사법적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형법제도만이 당의 명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인권단체의 한 관계자는 북한내부에는 인민재판과 공개처형이 자행되고 있고, 정치범수용소와 노동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는 생존을 포기한 인원이 약 20여만 명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단체의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 및 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등은 북한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잔혹한 인권유린국가로 지목하고 있고, 극심한 경제난과 생활난과 더불어 개인의 정치·경제·사회적 자유와 인권이 극도로 억압된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공산독재체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를 포함한 서방언론들은 북한에는 약 2백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기아상태에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⁶¹⁾ 지난해 식량수확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북한은 한해 약 100만 톤에서 15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형편이다. 이렇듯 북한의 인권상황은 극심한 지경이다. 남한 및 국제사회의 대북한 인도적 지원은 꺾박받는 북한주민들에게 직접 비추어진 따뜻한 온기가 되어야 한다.

60)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2000).

61) *Newsweek*, 2001년 12월 10일, p. 43.

5.2. 중국, 러시아 및 인접지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국제적 지위 및 인권실태

현재 중국 및 러시아 그리고 몽골을 포함한 인접국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규모는 정부측 통계와 민간단체의 추정치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제구호단체들중 중국 내에 체류중인 북한이탈주민들은 약1만명에서 3만명으로 추산하거나 한해 북한에서 중국이나 몽골지방으로 탈출하는 북한주민들이 약3천명에서 4천명에 이른다고 추정하는 경우도 있다.⁶²⁾ 반면, 국제사면위원회는 약 400,000명에 이르는 난민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몽골지역에서 공포에 떨며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⁶³⁾ 이들 대부분은 안정된 생활근거지가 없고 항상 중국 당국이나 북한비밀요원들의 단속을 피해 숨어살아야 하고,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국제연합 인권 소위원회는 기아와 궁핍, 그리고 박해를 피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탈출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1952 국제난민협약과 1967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의거해 국제난민지위 부여를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기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계층,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자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거나, 자국의 보호를 요청하지 못하고 국적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하지만 아직 이들에 대한 국제적 난민지위부여는 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중국정부는 중국 내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해 국내외 정치상황에 따라 집중단속이나 수색, 체포 및 강제송환정책과 묵인 및 완화정책을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왔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신변보호와 국제난민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5.3.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적응문제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불안한 신분조건과 생활의 불이익 그리고 생존의 위협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이들에게도 문제점은 많다. 남한으로 이주한 귀순자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탈북동기나 규모, 유형, 연령과 직업

62) 이우영 외,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0).

63) 북한인권시민연합, ■■생명파 인권■■(서울: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2004).

등도 다양해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3년을 기준으로 비정부기구 등의 지원을 통해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이주민은 1,281명이었고, 올해에도 1,000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정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남한 내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터전, 교육 및 사회문화시설, 안정적인 일자리 및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적절한 직업교육과 훈련을 거쳐 사회저변에서 훌륭한 일을 해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드렛일을 하거나 남한국민들이 회피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치이념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보다는 경제적, 심리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려움은 또한 남한사회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에서도 온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주요원인이 전반적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심리적인 적응장애라면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한 정서적 포용이 바람직할 것이다.

5.4. 포괄적, 범민족적 해결을 위한 제언

북한내부 및 중국 그리고 주변인접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은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1981년 9월 인권 B규약으로 통칭되고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도 가입한바, 국제사회에 이러한 규약들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인간의 기본권인 생존권, 사회보장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북한정부는 주민들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체, 사상, 양심, 표현, 종교, 직업선택, 여행의 자유 등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북한 내 인권문제의 해결은 북한정부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동반할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으리라 본다.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 국제난민문제 및 남한 내 북한이주민들의 정착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범민족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다음의 네 가지 차원에서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차원에서 대북 지원을 북한의 인권상황과 연계하여 상호주의를 펴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대북 지원 식량 및 물자의 분배에 대한 검증, 대북경제원조와 인권개선과의 조건부 연계추진, 중국, 러시아 및 인접지역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처벌금지 포함된다. 남한정부가 최근 5년 간 제공한 대북 인도적 지원규모는 약5억 달러이지만, 북한 자체적인 식량난, 에너지난 및 외화난의 해결 없이는 북한의 위기상황은 구조적으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⁶⁴⁾ 따라서

앞으로 긴급성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은 북한
의 책임 있는 인권상황 개선노력과 지속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비정부기구 및 시민사회단체의 협력과 공조를 통
한 국제사회의 압력 강화방안이다. 여기에는 정부차원의 대북직접협상방안이 그
동안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온 점도 상기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산발적인 경우가 많았고, 국제연합(UN)·국내외 비정부기구
(NGO) 및 개별국가 사이의 정보공유 및 역할분담에 대한 체계적인 협력과 공
조가 부족하였다. 북한 및 주변인접국지역에서 인권개선을 위한 대안으로는 유
엔을 통한 지속적인 인권상황 문제제기,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을 통한
국제난민지위보장, 국제기구와 국제시민단체 그리고 개별국가와의 연대체제 마
련 등이 있다. 더불어 민족적 차원에서 일명, “범민족 북한인권개선위원회”를
발족하여 민간차원에서의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설립된 미국북한인권위원회와 하원에서 통과
된 북한인권법안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셋째,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을 위한 “남북한 하나를 위한 마을” 일명,
“하나촌” 또는 “하나시”를 지정 또는 건설하여 북한이주민들이 남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 안성에 통일부 산하의
“하나원”이 있지만, 교육시설이나 채용 및 인력이 부족하다. 정부는 정착도시로
지정한 지역의 특성과 가용능력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기존에 갖추어진 교육 및
공공시설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안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 등을 실행하여야 하겠다. 혹, 북한이탈주민
들의 감시와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평이 있을 수 있지만, 더불어 살 수
있는 장소와 사회시설을 확충한다는 면에서 삶의 터전마련은 중요하다고 본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프로그램 마련과 교육인
력의 확충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적응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하나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전반적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제적 체제에 대
한 교육부분과 직업 및 취업훈련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교육인력과 채용 면에
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용마련의 방안으로 “통일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기금” 일명, “통일정착기금”의 설립이 있다. 탈북자들을 위한
1년 예산이 주민 1인당 약5천만원이라고 산정한다면, 주민 1,000명의 경우 1년
에 약500억 원이 필요하다. 정착기금의 조성은 통일비용을 확보하고 북한이주민
들의 남한정착을 원활하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64) 통일부, ■■■통일백서■■■(서울: 통일부, 2004).

위에 제시한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는 데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사회단체나 비정부기구 등의 국내외적 협력과 지원을 통하여 국외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국내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보다 짧은 기간 내에 남한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이러한 국제적 사안은 국제사회의 동참과 국제기구를 통한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범민족적·국민적 성원과 호응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문화적 통합을 위한 다양한 국내외 정책주체들이 참여하는 평화번영의 참여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금의 중국이 문호를 개방하고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되기까지는 근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북한이 체제의 개방과 개혁, 인권상황의 개선 및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따라서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북한 스스로의 변화를 유도해 내는 방편으로 남한정부와 국제사회 및 민간시민단체의 인도적 지원과 경제전반에 걸친 교류와 협력은 계속 추진되어야 하겠다.

6. 결론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한반도 문제해결 방법을 두고 우리사회 내에 두 가지 시각이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국가역량을 응집한 정책추진이 쉽지 않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경쟁하는 두 시각은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와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로 상징화될 수 있다.⁶⁵⁾ 전자는 한반도 문제를 남북한 중심의 민족간 해결에, 후자는 국제정세에 적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각각 관심의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분명히 인식하고 민족적 해결의 가능성을 동시에 모색하는 접근방식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본 절에서는 탈북자들의 정치적 주관성과 북한의 대남인식을 토대로 한 문화적 통합과 교류협력 강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의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한 제안이 바람직하다는 비평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앞서 논의한 평화와 통일의 접근논리와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를 위한 방향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그동안 국내외 변수들의 작용으로 인해 대북 및 통일정책결정에는 무수히

65) 길병욱, “한반도 평화번영정책과 국가안보,”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학술세미나 논문집(2004).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들 변수들은 크게 북한, 동북아 주변국, 정부의 타부서, 국회, 국제기구 및 환경, NGOs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이러한 변수들간의 협력체계를 통해 대북정책에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는 구조적인 문제와 행위자적인 문제가 모두 포함된다. 국내외 환경적인 변수들의 작용을 극복하고 참여정부의 동북아 평화번영을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한 앞으로의 방향을 동북아 평화번영 참여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과 이를 제도화하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6.1.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방향

6.1.1.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현재 정부는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및 비정부기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가 워크숍’과 ‘열린 통일포럼’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 외에 앞으로 국민적 합의기반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더욱 보완시켜 나가야 할 점으로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정책자문위원들의 역할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비정부기구를 정보수집창구 및 협의체로 활용하기 위한 협의기구가 필요하다. 셋째, 비정부기구와 정부와의 정기적인 대화채널이 필요하다. 넷째,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여야 정치인과 민간전문가, 비정부기구, 해외동포 등이 참여하는 범민족적 협의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북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정책 신뢰도 제고, 남남갈등 해소 등을 위해 협의기구 내지는 참여네트워크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기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확대·개편하여 대북 및 통일정책관련 정책자문 및 건의 활동 강화, 이에 따르는 법제도적 지원체계 확립,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 민주평통의 법정회의체,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재편성 및 확대운영 등이 필요하다.⁶⁶⁾ 민주평통의 법정회의체 및 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대상별, 세대별, 지역별, 직능별 등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여론수렴활동 강화하여 국내외 통일여론을 결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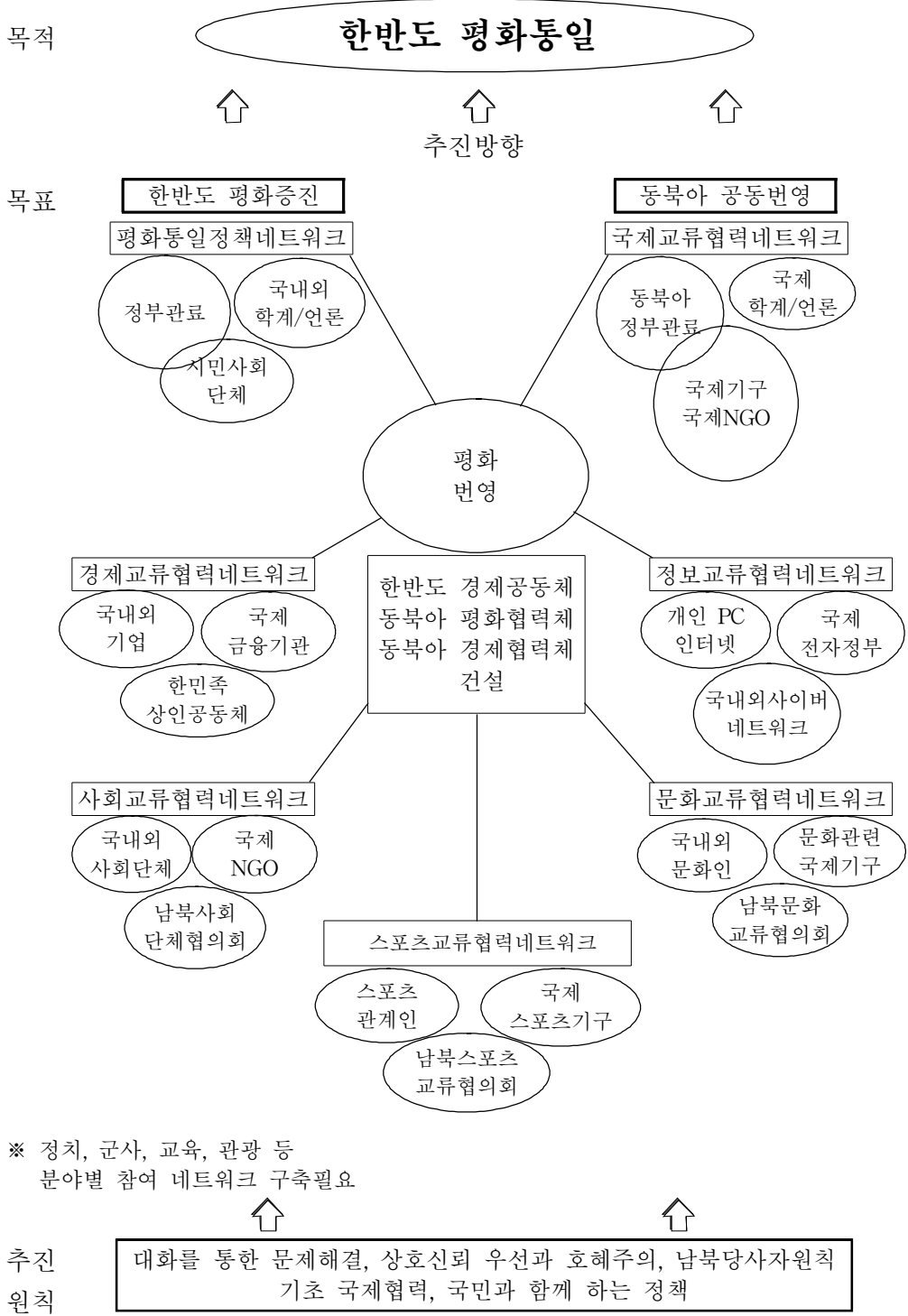
66) 길병욱, “한반도 평화번영정책과 국가안보,” pp. 1-37.

6.1.2.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는 먼저 대북 및 통일관련 정책적 현안이 있을 때마다 협의체를 만들기보다는 기존협의체간의 교통정리와 협의체간의 기능부터 복원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간의 협력체계를 위해서는 먼저 남북교류와 통일관련 협의체간의 입장조율이 필요하고 협의체의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 또한 대북정책의 효율적·안정적 추진과 더불어 정부부처간 및 기관간 정보교류체제를 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통일안보관련 부처 중 국정원, 외교통상부, 국방부는 각각 정보수집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막상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통일부의 경우 자체적인 정보수집 기능이 없어 때로는 업무수행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대북정보 수집기관인 국정원,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등은 긴밀한 정보교류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정보교류를 부처간 협조차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도화하여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내부적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정부는 새로운 차원의 한·미간 또는 한·일간 정책공조방안을 마련하고, 적어도 차관급이상의 정책조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대북 및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국정부는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양자회담과 다자회담의 틀을 혼합할 수 있는 틀을 찾되, 그러한 혼합된 틀 속에서 북·미간의 직접대화와 다자간 대화가 동시에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다자간 대화 무드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다자협의체가 단순한 회담의 성격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자협의체를 통해 강경일변도의 대북압박정책을 펴는 수단적인 방편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하겠다.

6.2. 동북아 평화번영 참여네트워크 구축방안

대북 및 통일정책결정체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구체화는 사회의 많은 부분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공공네트워크”(public network)를 외부적으로 확대하고 내부적으로 그 메커니즘을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쌍방향식 활동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은 <그림 3>동북아 평화번영 참여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묘사되어 있다. 다음에서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정책주체들이 “공존, 협력 및 경쟁하는 네트워크” 구축과 참여제도화 및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림 3> 동북아 평화번영 참여네트워크 구축방안

6.2.1. 국내외 정책참여 확대방안

대북 및 통일정책관련 정책협의 및 건의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 있는 국내외 정책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동북아 평화번영 참여네트워크에는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화통일정책네트워크, 국제교류협력네트워크, 경제교류협력네트워크, 사회교류협력네트워크, 문화교류협력네트워크, 스포츠교류협력네트워크, 정보교류협력네트워크 등이 포함된다. 또한 단계적으로 정치, 군사, 교육, 관광 등의 분야별 교류협력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민참여확대방안은 정부차원, 국회차원 및 정책결정협의체 및 자문회의 차원이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부처간(통일부, 청와대, 외교통상부, 국정원 등) 대북 및 통일정책관련 조정역할 강화, 주무부처의 업무분장 및 기능 재조정, 국내외 학계,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 현재 통일부 주관으로 진행 중인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통일포럼」의 회수 및 범위를 증대하고 확대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북정책토론 및 통일논의의 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국회차원에서는 초당적 상설 정책협의체, 정책협조체제, 및 남북관계관련 공청회 및 청문회 등을 개최하여 국회차원의 국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결정협의체 차원에서는 앞서 논의한 정책부서관련 개선방안, 국민적 합의기반강화 및 국내외 협력체제 강화가 있다. 자문회의 차원에서는 민주평통을 확대·개편하여 대북 및 통일정책관련 정책자문 및 건의활동 강화, 이에 따르는 법제도적 지원체제 확립,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 민주평통의 법정회의체,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재편성 및 확대운영 등이다.

국내를 물론 해외동포와 국제사회의 여론 수렴 및 지지기반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북아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국제기구, 국제학계/언론, 국내외 기업, 국제금융기관, 국제비정부기구 등을 망라하는 국제교류협력네트워크 및 경제교류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 홍보하는 방안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한상(韓商) 등 분야별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추진과 병행하여 남북한 및 동북아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업·에너지, 금융협력 등 동북아에서의 외교 및 통상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국제환경 조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포괄, 균형 및 참여정책”에 부합되는 가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통일포럼” 및 “동북아 평화번영 포럼” 등도 개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성공적인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이

며 체계적인 계획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일회적이거나 홍보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정부·기업·사회단체간의 개별적이고 경쟁적인 접근방식보다는 집단적, 협력적 접근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지원을 통하여 최소한의 경험환경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남북한의 무관세 교역, 서독의 경우처럼 GATT협정에서 예외조항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북 및 통일정책관련 정책추진의 속도, 범위 및 원칙 등에 대한 정파, 이념, 지역 및 계층별 다양한 견해와 의견을 청취, 수렴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사회문화분야에서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즉, 통일논의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방안에는 시민사회단체를 포괄하는 민간부문의 통일논의 활성화가 포함되어야 한다. 남북 시민사회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사회교류협력, 문화교류협력, 스포츠교류협력네트워크 등을 구축하여 동북아 평화번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 또는 비정부기구의 전문분야별, 사안별 및 성격별 또는 내용별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개별적,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북교류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대북인도지원단체, 탈북자후원단체, 통일교육관련 사회단체, 통일연구관련 학술단체, 통일운동단체, 종교단체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한다. 같은 차원에서 한민족네트워크공동체 건설도 제안되고 있다.⁶⁷⁾

구체적으로 시민사회단체 및 비정부기구가 주체가 되어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시민사회단체 및 비정부기구의 주도로 국내외 기업, 국제기구 등이 연계한 대북지원 및 진출사업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및 비정부기구의 대북한 경제기술교육 지원, 남북 시민사회단체, 조직, 분야별 자매결연 맺기 및 교류 활성화(남북 노동자대회, 농민대회, 여성대회, 청년대회 등), 남북 학술공동세미나 개최, 학문적 교류(공동 연구소 설립 및 상주 연구원 파견 및 교환), 남북 합작 문화상품 및 민속상품 개발 및 상품화 등도 있다. 남북 시민사회단체 협력기구 설치 및 정례화 등이 활동방안에 포함될 수 있다.⁶⁸⁾ 더불어 민간부문의 통일논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북한주민접촉승인제도의 개선, 민간단체의 방북절차 간소화 및 결과보고의 개선, 북한방문기간 연장 등 제도적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대북관련 정보제공, 국민홍보, 의견수렴 및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정보교류협력네트워크의 구축을 제안한다. 대북 및 통일정책관련 정

67) 김인영, “한민족네트워크공동체: 현황과 과제,” ■■■북한연구■■■, 제3권(2000), pp. 23-56 참조.

68) 구영록·임용순, ■■■한국의 통일정책■■■(서울: 나남, 1993).

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포털사이트 체계 구축은 온오프라인상에서 국민적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방안의 일환이다. 인터넷 생중계, 동영상, 사이버 커뮤니티, 전자신문, 검색기능 등을 통해 각종 정책관련 선호도, 여론조사결과 제공 및 국민홍보를 강화하고, 대북관련 현안전반에 걸친 심층해설, 전문가 칼럼, 전문가 기획연재 등 사이버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보화 및 시민사회의 발전에 부흥하여 각종 정보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네티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사이버 신문고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정보네트워크 활성화 및 남북정보통신교류협력이 북한의 사회개방 및 경제발전, 남북한 평화통일, 그리고 동북아 평화번영 구축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선전선동정보를 전파하거나 이적 사이트에 접속,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및 남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법규정 강화(‘이적의 인식 및 목적’을 가지고 이적 인터넷사이트 정보를 전파하는 경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적용 처벌)하는 것이 있다. 그밖에 해킹, 전산망 교란 등 사이버 테러관련 법체계를 마련(형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사이버 범죄관련 적용범위, 내용, 처벌 등의 법체계 일원화)하는 것과 사이버 테러대비 국가안보와 개인안보차원에서의 보안장치 개발 및 대국민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가 있다. 남북신뢰와 긴장완화가 진행되고 평화정착이 된 후 또는 그 과정에서 남북공동관리 남북한 통신망 연결 및 인터넷 홈페이지와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사이버상의 통일논의를 관리운영해야 한다.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트라넷 구축,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민족동질성 회복, 사이버 네트워크 또는 동영상 면회소를 통한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 등을 구축하고, 정보네트워크관련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을 통한 종합적인 남북교류협력, 대북지원 및 국민참여를 증진시키는 국내 기본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될 사안중의 하나는 문화예술 및 스포츠교류를 통해 민족공존의식을 높이는 방안이다.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한 여론조사 결과, 남북한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교류분야로 ‘스포츠교류’를 꼽고 있다. 스포츠교류는 남북한간에 이념갈등을 배제하고, 결속력을 도모하는 최상의 자원이며, 예술교류는 민족의 하나됨과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효율적인 자산이다. 그러므로 ‘남북문화교류협의회’와 ‘남북스포츠협의회’를 구성하여 남북문화와 스포츠 교류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단계적으로 정치, 군사, 교육, 관광 등 분야별 참여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6.2.2. 국민적 여론수렴 및 정책홍보

정책홍보는 평화지향적 남북관계설정, 상호체제존중 및 동북아 공동번영 구축 등 국내 통일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우선적으로 북한 핵문제와 분단의 모순 그리고 통일과정상 제반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가치합의를 형성시키는 방향으로 전개하여 평화통일정책 네트워크 구축에 동참을 유도한다. 대북정책 및 통일관련 TV 토론, 인터넷/사이버 토론문화 정착, 특별초청 세미나, 정책설명회, 정세보고회 및 강연회 등을 정례화하여 국내외 사회단체, 국제 NGO 및 남북사회단체협의회 등을 연계, 사회교류협력네트워크를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국내외 웹사이트 및 사이버 네트워크, 개인 PC통신 및 인터넷, 국제전자정부 등을 연계, 정보교류협력네트워크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최근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안보불감증 및 통일논의에 대한 관심과 이해부족현상에 대한 통일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북한 핵문제가 남북한 통일 및 동북아 평화유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자료를 개발하여 적극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국민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뢰도 제고가 필수적이다.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관련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북교류협력의 과열상, 과다경쟁, 과시성 행사, 북한의 과도한 요구 및 금품제공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통일의 당위성 및 통일한국의 비전 등에 대한 쉽고 구체적인 논리를 개발하여 국민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냉전적 반공주의 정치문화, 획일주의, 적대적 북한인식에서 평화가 공존하는 다원주의 열린 민족문화인식으로 전환하고, 배타/타자 반공교육에서 정체 및 동체성에 대한 통일교육의 강화가 시급하다. 동시에 북한의 양면성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성급한 실적위주의 정책집행, 시행착오 또는 정부부처간 과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오류, 충돌 및 정책의 병목현상 또한 해소되어야 하겠다. 민간단체와 정부간의 대북정보교류 강화, 상호정보교환 및 공동협력사업 실시, 다양한 의견제기 및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정권유지 및 정책 옹호차원에서의 대북 및 통일정책의 이용 배제 등이 국민참여와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이다.

본 연구는 동북아 평화번영과 남북한 평화적 공존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그리고 정치, 경제 및 사회 각 분야의 주체들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적 방향과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동북아 평화번영 참여네트워크는 남북이 화해협력을 추진해 나가면서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

는 단계적 방안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대북 및 통일정책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대안 개발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동북아 평화번영 참여네트워크의 구축은 대북 및 통일정책관련 정책환경의 다변화, 다양화 및 다차원화에 대비하여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사회의 보다 많은 정책의 주체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공공네트워크”(public network)를 외부적으로는 확대하고 내부적으로는 민주적 절차를 공고히 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이론을 바탕으로 제시되었다.

향후 대북 및 통일정책관련 정책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효과적으로 통합·조정 및 관련 정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 내용은 정부부서의 역할을 재정립, 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하여 국가위기사태 인지, 분석, 평가 및 대응능력의 향상, 의사결정기구의 기능강화 및 정책조정협의체의 구성, 기능 및 운영 재정립, 정부부처의 기능배분 및 업무체계 총괄 재정비, 법령 및 조직·제도의 정비, 예산확보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 국민교육 및 국가위기 인식의 제고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제시된 참여네트워크의 정책적 방향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동북아 평화번영 참여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정책참여의 주체들 즉,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및 국제 비정부기구(NGOs) 등의 역할은 단계별로 도입(introduction, 정부 주체역할), 확산(expansion/diffusion,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및 역할증대), 조정(coordination, 여러 주체들간의 역할 조정) 및 공고화(consolidation, 정책과정 및 결정의 민주화)의 과정을 거친다. 참여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 조직, 전문인력, 재정 등의 면에서 시민, 시민사회단체 및 경제단체, 학술연구기관, 국제 비정부기구(NGOs) 등이 주체가 되는 그리고 정부는 주변 조율작업을 하는 민간주도형으로 점차 바뀌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의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즉, 여러 극에서 이해관계가 분산 형성되는 ‘다극분산형’은 각 분야의 주체들의 역할과 기능이 공고화되는 ‘다면중첩형’으로 전환하여 더욱 성숙된 동북아 참여네트워크체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고상두, “분단구조와 북한 내부의 정치갈등,” 문정인 저, ■■■남북한 정치갈등과 통일■■■, (서울: 오름), 2002.
- 구영록·임용순, ■■■한국의 통일정책■■■(서울: 나남), 1993.
- 권혁범 외, ■■■한반도와 통일문제: 한반도 문제의 재조명■■■(서울: 대왕사), 2002.
- 길병욱·김창남, “통일정책과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이산가족의 시각과 전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6권 1호, 2002.
- 길병욱, “한반도 평화변영정책과 국가안보,”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학술세미나 논문집, 2004.
- 김동성, ■■■한국민족주의의 연구■■■(서울: 오름), 1995.
- 김만흠, “민주화와 권력구조: 지역주의 적 군주권력에서 민주적 시민권력으로,” 국제평화전략연구원, ■■■한국의 권력구조논쟁■■■, (서울: 풀빛), 1997.
- 김육동,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서울: 현암사), 1996.
- 김인영, “한민족네트워크공동체: 현황과 과제,” ■■■북한연구■■■, 제3권, 2000.
- 김홍규, “Q 방법론의 유용성 연구,” ■■■주관성 연구■■■, 통권 제1호, 1996.
- 강정인, “서구중심주의 극복을 위한 예비적 시론: 여러 대안의 비판적 검토,” ■■■국가전략■■■, 제6권 3호, 2000.
- 동아일보■■■, 2004년 7월 28일, A1면 및 A3면.
- 문정인, ■■■남북한 정치갈등과 통일■■■, (서울: 오름), 2002.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2000.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회복지분과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방안,” 1998년 7월.
- 박건영,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의 통일외교전략,” ■■■국가전략■■■, 제6권 1호, 2000.
- 박상훈, “한국의 유권자는 지역주의에 의해 투표하나: 16대 총선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2호, 2001.
- 박성복·이종렬, ■■■정책학 강의■■■, (서울: 대영문화사), 2000.
- 박영호,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패권적 안정이론

- 의 시각,” ■■■국제정치외 패러다임과 지역질서■■■, (서울: 오름), 1999.
- 박준영, “북한이해를 위한 기본적 요소,” 홍순호·박준영·함인희, ■■■북한 인식과 한반도■■■, (서울: 살림), 2000.
- 북한인권시민연합, ■■■생명과 인권■■■, (서울: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2004.
- 배성인, “남북한 민족문화 건설과 문화통합 모색,”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
- 백종천, “한국의 국방정책: 주변 4강과의 비교시각에서,” 이대우 편, ■■■한국 대외정책의 평가 및 발전방향■■■, (서울: 세종연구소), 2000.
- 백학순, “대북정책,” ■■■국가전략■■■, 제4권 2호, 1998.
- 윤인진,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 사회학■■■, 제33집, 1999.
- 이흥구 외, ■■■분단과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 (서울: 박영사), 1984.
- 송대성·이대우, ■■■평화체제구축: 국제적 경험과 한반도: 중동 및 북아일랜드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 세종연구소), 2000.
- 송 복,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서울: 현대문학), 1990.
-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1989.
- 서재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
- 신도철, 김광웅, 최명, 박찬욱, ■■■민주주의의 미래: 의식과 이념적 성향분석■■■,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 안드레예비치, 유가이 게라심, “민족통일 사상으로서의 초한민족(Korean Superethnos),” ■■■통일정책연구■■■, 제8권 2호, 1999.
- 양성철, “한국정치학연구의 발전과 현황: 남북한 정치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1집 2호, 1987.
- 양창윤, “지역정치문화와 선거: 제주도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한국 정치학회보■■■, 제35집 3호, 2001.
- 양호민 외, ■■■북한 40년: ‘조선인민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성과 변천과정■■■, (서울: 을유문화사), 1989.
- 이금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정책과제,” ■■■한반도군비 통제■■■, 군비통제 자료 35, 2004.
- 이시형, “김정일시대 북한의 대남인식,” ■■■한국동북아논총■■■, 제30집, 2004.

- 이우영 외 4인,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이우영, “통일논의를 둘러싼 이념논쟁 비판: 실질적 통일논의를 위하여,” 권혁범 외, ■■■한반도와 통일문제: 한반도 문제의 재조명■■■, (서울: 대왕사), 2002.
- 이종석, “북한외교의 변화와 남북관계,” ■■■외교■■■, 제54호, 2000.
- 이현출·길병욱, “민주주의의 의미: Q 방법론을 통한 자아참조적 관점에서의 고찰,” ■■■대한정치학회보■■■, 제8권 2호, 2000.
- 전득주 외, ■■■정치문화와 민주시민교육■■■, (서울: 유평출판사), 1999.
- 전현준, “북한의 대내변화: 실상과 전망,” ■■■북한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전홍찬·장덕준, “중앙-지방 관계에서 본 러시아 개혁의 제약요인: 모스크바와 극동지역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2호, 2000.
-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2001.
- 정춘일, “동북아 안보 군사 질서의 새로운 경향,” ■■■국제정치학의 패러다임과 지역질서■■■, (서울: 으뜸), 1999.
- 중앙일보■■■, 2004년 7월 24일, 4면.
- 중앙일보■■■, 2004년 7월 28일, 5면.
- 최수영·박영호·홍관희·허문영, ■■■1999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1999.
- 최장집(편), ■■■한국자본주의와 국가■■■,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85.
- 큐 방법론 홈페이지, <http://www.rz.unibw-muenchen.de/~p41bsmk/qmethod>.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 동향■■■, (서울: 통일부 교류협력국), 2004.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 동향■■■, (서울: 통일부 교류협력국), 2002.
- 통일부 웹사이트 <http://www.unikorea.go.kr>(검색일: 2004년 8월 21일).
- 통일부,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4.
-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2004.
- 한국문화정책연구원,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적 갈등해소 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7.
- 한만길, “탈북이주자의 남한사회 적응문제와 재사회화 방안,” ■■■통일문제연구■■■, 제5권 2호, 1996.

- 한상진, ■■■한국사회와 관료적 권위주의■■■,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8.
- 한인숙, “포스트모더니즘, 복지정책 그리고 여성,” ■■■한국행정학보■■■, 제 34집 4호, 2000.
- 허문영, ■■■북한지도부의 정세인식변화와 정책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황병덕,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구조와 기본방향,” ■■■남북한 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 정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2. 국외문헌

- Adler, Emanuel. “Conclusion: Eispemic Communities, World Order, and the Creation of a Reflective Research Program,”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 1992.
- Almond, Gabriel and Sydnet Verba.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Boston, MA: Little, Brown, 1963.
- Almond, Gabriel. *Comparative Politics Today: A World View*, Boston: Little, Brown, 1974.
- Baker, James. “America in Asian Emerging Architecture for a Pacific Community,” *Foreign Affairs* 71, 1992.
- Baldwin, David A. ed.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The Contemporary Debat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 Baudrillard, Jean. *Selected Writings*, Oxford: Polity, 1988.
- Brown, Steve R. *Political Subjectivity: Applications of Q Methodology in Political Science*, New He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80.
- Brown, Steve R. “A Primer on Q Methodology,” *Operant Subjectivity* 16, 1993.
- Cronin, Patrick. “Pacific Rim Security: Beyond Bilateralism?” *The Pacific Review* 5, 1992.
- Derrida, Jacques. *The Other Heading: Reflections on Today's Europe*,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2.
- Derrida, Jacques. *Monolingualism of the Other or the Prosthesis of Origi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8.
- Doyle, Michael.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Michael E.

- Brown, Sean Lynn-Jones, and Steven Miller, eds., *Debating the Democratic Peace*,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96.
- Dryzek, John S. *Democracy in Capitalist Times: Ideas, Limits, and Strateg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Ferguson, Thomas. *Golden Rule: The Investment Theory of Party Competition and The Logic of Money-Driven Political Systems*,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 Foucault, Michel.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New York: Random House, 1977.
- Fowler, Bridget. *Pierre Bourdier and Cultural Theory: Critical Investigations*, Thousand Oaks, CA: Sage, 1997.
- Gibney, Frank. "The Promise of the Pacific," *Wilson Quarterly* 16, 1992.
- Heidegger, Martin. *The Basic Problem of Phenomenology*, Indianapolis, I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8.
- Heidegger, Martin. *Time*, San Francisco, CA: Harper Collins, 1962.
- Hermann, Charles F. "Changing Course: When Governments Choose to Redirect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4, 1990.
- Holsti, Kal J., ed. *Why Nations Realign: Foreign Policy Restructuring in the Postwar World*, London: Allen & Unwin, 1982.
- Huntington, Samuel P. "The Lonely Superpower," *Foreign Affairs* 78, 1999.
- Huntington, Samuel P.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OK: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 Huntington, Samuel P. "Why International Primacy Matters," *International Security* 17, 1993.
- Inglehart, Ronald.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 Inglehart, Ronald. "Value Change in Industrial Socie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1, 1987.
- Johnston, Alastair I. "Thinking about the Strategic Culture," *International Security* 19, 1995.
- Katzenstain, Peter J.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 Keohane, Robert O. "The Theory of Hegemonic Stability and Changes in International Economic Regimes, 1967-1977," Ole R. Holsti, Randolph M. Siverson, and Alexander L. George, eds. *Change in the International System*, Boulder: Westview Press, 1980.
- Kil, Byung-ok. *Security Policy Dynamics: Effects of Contextual Determinants to South Korea*. London: Ashgate, 2001.
- Kim, Kyong-dong. "The Culture of Capitalist Development in East Asia," *Asian Perspective* 24/3, 2000.
- Legro, Jeffrey W. "Which Norms Matter? Revisiting the 'Failure' of Internat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51, 1997.
- Lipson, Charle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conomic and Security Affairs," *World Politics* 37, 1984.
- Nelson, Joel L. *Post-Industrial Capitalism*, London: Sage, 1995.
- Newsweek*, December 10, 2001.
- Offe, Claus. *Contradictions of the Welfare State*,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84.
- Putnam, Robert.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Pye, Lucian W.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Rhodes, R.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bility and Accountability*,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1997.
- Sowell, Thomas. *A Conflict of Vision: Ideological Origin of Power Struggles*, New York: Basic Books, 2002.
- Stephenson, William. *The Study of Behavior: Q-Technique and Its Methodolog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3.
- Stephenson, William. "Concourse Theory of Communication," *Communication* 3, 1978.
- Stephenson, William. "Principles for the Study of Subjectivity," *Operant Subjectivity* 4, 1981.
- Walt, Stephen M. "Why Alliances Endure or Collapse," *Survival* 39, 1997.
- Waltz, Kenneth W.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 Addison-Wesley, 1979.

Woshinsky, Oliver. *Culture an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Mass and Elite Politic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95.

Yang, Jonghoe and Lim, Hyun-chin. "Asian Values in Capitalist Development Revisited," *Asian Perspective* 24/3, 2000.

비무장지대(DMZ)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특성 변화 분석



김 상 욱

(한국토지공사
책임연구원)

목 차

【 요약 문 】	71
1. 서론	73
2. 연구 대상지 현황	75
3. 연구 방법	85
4. 분석 결과	93
5. 결론 및 고찰	109
【 참고문헌 】	112

【 요약 문 】

DMZ의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DMZ의 생태학적 가치를 제대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언론에서 보도된 사실과 같은 60년대 고엽제 살포, 금년 봄까지 수 십 년 동안 이루어져 온 사계청소를 위한 화공작전의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DMZ는 자연이 가진 자생적 회복력에 의해 오늘날 남한의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천연적인 서부와 중서부내륙의 광활한 습원지대와 동부산악지대의 자연성이 우수한 삼림과 계곡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DMZ 및 민통선지역의 토지이용변화양상을 생태학적 측면에서 파악해보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수행한다. 첫째, 남·북한 DMZ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특성을 파악하고,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하는 위성영상인 Landsat의 공간해상도에 알맞은 토지이용수준을 결정한다. 둘째, DMZ지역의 토지이용변화를 분석한다. '80년대 중반 및 2000년대 초반의 위성영상을 활용함으로써 최근 15년 동안 토지이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해본다. 비접근지역인 DMZ 지역의 토지이용 분류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원격탐사의 기법의 하나인 분광혼합화소분석(Spectral Mixture Analysis: SMA)의 결과물을 함께 이용한다. 분광혼합화소분석은 저해상도 위성영상에서 발생하는 분류오차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법으로서, 화소 내 분석을 통해 추출하고자하는 토지이용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추출할 수 있다. 셋째, DMZ 변화를 계량화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경관구조분석을 수행한다. 토지이용분류의 결과 가운데, 산림지역 토지이용만을 이용하여 경관구조분석을 수행한다. 경관구조분석은 경관생태학에서 이용하는 기법으로서, DMZ 지역 산림의 파편화(fragmentation) 정도를 계량화하여 평가함으로써, 경관이 지닌 생태적 건전성의 변화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넷째, DMZ의 토지이용 및 경관구조의 변화 특성을 파악하고, 보전 및 활용 대안을 제시한다.

DMZ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 과거 약 15년 동안 서부 DMZ 지역의 시가화 지역, 산림 및 농경지 등은 양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산림의 경우 양적으로 많은 감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간분석의 결과 산림의 훼손은 민통선지역 뿐만 아니라 DMZ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MZ 내부의 산림훼손의 주요 원인은 산불이라 할 수 있는데, 북한의 경우 화전영농 중 실화, 자연 발화, DMZ내 동물들의 지뢰 밟기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즉 DMZ는 생태적으로는 안정된 원시림의 모습이 아니라, 산불이나 군사적 목적의 인간간섭을 지속적으로 받는, 그래서 2차 천이가 지속적으로 진행

되는 생태계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경우 식량난 및 에너지 난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간섭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DMZ 생물상은 인근 민통선조사에 의해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그 생물학적 다양성 가치가 국제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지역임을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DMZ는 한강유역가운데 북한강의 최상류, 하천 집수역으로서 환경지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미루어, DMZ는 한반도 중부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종과 남북한의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의 마지막 피난처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앞으로 경제적,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가치는 예측 불가능의 높은 생산적 효과와 생태적 기능을 수행할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한 경관분석적 측면에서의 과거 20년 동안의 변화 결과를 살펴본다면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파편화되고, 내부핵심지역의 면적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환경부는 DMZ를 유네스코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는 '세계자연유산'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은 분쟁이 잦았던 5개 지역에만 현재 지정돼 있을 정도로 희소성이 높다. DMZ를 관통하는 경의선이 개통되고 남북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면 이곳은 세계적 생태관광코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의선 복원과 도로건설 등에 의한 DMZ의 환경파괴,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을 피해서 생태계의 보고를 지키는데도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남한측의 반쪽만의 지정은 의미가 없으며, 남북이 함께 유네스코에 지정신청을 하고 이를 계기로 공동 생태조사, 생태지도 작성 그리고 생태관광을 비롯한 체계적 관리 방안의 마련과 같은 공동보전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비무장지대(DMZ)는 군사적 목적을 위해 훼손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개발활동이 미치지 않아 온대권에서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다. 민족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보존한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남북화해무드와 발맞추어 정부, 민간단체, 학계에서 거론되고 있다. 생태적 보전론자(ecologist)들의 입장에서는 비무장지대는 지난 반세기동안 사람의 출입과 개발이 금지된 지역으로서 제2의 원생자연지역으로 계속하여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얼마 전 끝난 2004 DMZ포럼 국제회의에서도 '2004 DMZ 선언문'을 통하여 "남북한이 뜻을 모아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을 추진하고 이 지역에 대한 위성탐사를 통해 환경 생태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 자연친화적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개발론자들은 비무장지대 또한 통일이후의 국토계획 및 개발의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개발될 곳과 보전되어야 할 곳을 계획하는 작업의 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극적 입장으로는 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한다거나, 운동경기장의 건설과 관련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는 신도시 또는 산업단지의 건설 및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기피시설의 입지 등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근 DMZ 일원은 남북한의 화해와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면서 각종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거나 계획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체의 실시, 지역의 낙후성 탈피 노력, 토지이용규제의 완화, 개인의 사적 재산권의 강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DMZ 일원에 대한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보전과 개발에 대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¹⁾ 물론 이러한 사업들은 남북 간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사업들로서 남북한 사이에 다양한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DMZ가 지닌 생태, 인문지리 그리고 토지이용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

1) DMZ 일원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의 종합계획은 강원도(1996)의 '접경지역 종합관리계획', 경기도(1999)의 '경기북부·접경지역의 발전전략' 등이 있다. 각 지자체가 수립한 접경지역계획(안)을 기반으로 하여 행정자치부(2003)는 「접경지역종합계획(2003-2012)」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접경지역종합계획은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수립하던 접경지역 관련 계획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정계획으로 종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지만, 접경지역이 그동안 각종 통제와 규제로 인하여 낙후되었다는 인식 하에 이를 탈피하기 위하여 수립된 계획이므로 기본적으로 환경보전 보다는 지역개발적 성격이 강한 것 또한 사실이다(전성우 외, 2003).

는 접근은 정책제시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미 남한의 경우 민통지역이 도시화 및 농경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 화공에 의한 사계청소, 산림훼손 등으로 비무장지대 및 민통선의 생태적 환경에 많은 간섭 내지는 교란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DMZ 및 민통지역의 연구의 대부분은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연관되어 추진되어 온 것이 대부분으로 DMZ 북한지역 및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²⁾ 이에 본 연구는 통일 전후 DMZ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과거 약 15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경관 구조적 측면에서의 DMZ 및 남·북한의 접경지역의 토지이용³⁾의 변화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DMZ 일원이 지니는 생태적 중요성, 남북협력과 민족동질성 회복, 낙후지역의 사회·문화·경제적 발전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수행한다. 첫째, 북한지역 및 DMZ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특성을 파악하고,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하는 위성영상인 Landsat의 공간해상도에 알맞은 토지이용수준을 결정한다. 둘째, DMZ지역의 토지이용변화를 분석한다. '80년대 중반 및 2000년대 초반의 위성영상을 활용함으로써 최근 15년 동안 토지이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해본다. 비접근지역인 DMZ 지역의 토지이용 분류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원격탐사의 기법의 하나인 분광혼합화소분석(Spectral Mixture Analysis: SMA)의 결과물을 함께 이용한다. 분광혼합화소분석은 저해상도 위성영상에서 발생하는 분류오차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법으로서, 화소 내 분석을 통해 추출하고자하는 토지이용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추출할 수 있다. 셋째, DMZ 변화를 계량화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경관구조분석을 수행한다. 토지이용분류의 결과 가운데, 산림지역 토지이용만을 이용하여 경관구조분석을 수행한다. 경관구조분석은 경관생태학에서 이용하는 기법으로서, 산림의 파편화(fragmentation) 정도를 계량화하여 평가함으로써, 경관이 지닌 생태적 건전성의 변화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넷째, DMZ의 토지이용 및 경관구조의 변화 특성을 파악하고, 보전 및

2) 조사주체에 따라 조사지역과 조사시기 등이 달라 자연생태계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고, DMZ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지역이 지니는 군사적 특성으로 인하여, 그나마 이루어진 조사도 충분한 조사가 되지 못하였다(전성우 외,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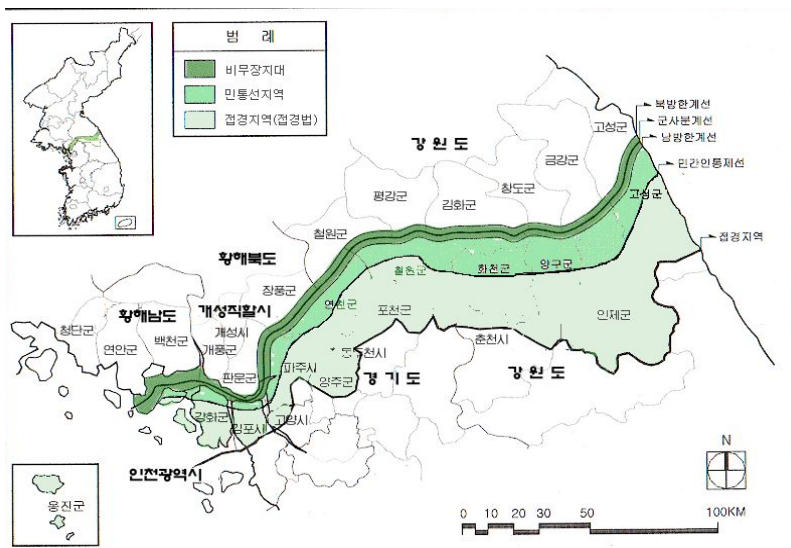
3) 토지이용은 토지의 이용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계획을 말하며, 토지피복이란 지표의 현재 상태를 표현하는 용어이다.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분석된 결과는 엄밀히 말해 토지이용 현황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 토지피복분류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토지이용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활용 대안을 제시한다.

2. 연구 대상지 현황

2.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DMZ 지역의 토지이용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DMZ 보전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정책적 해결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DMZ 지역의 산림황폐화 변화분석을 위한 문헌자료의 경우 분단 이후의 북한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조사이므로, 본 연구는 인공위성영상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다. 이에 취득 가능한 위성영상의 영상취득시기에 따라 시간적 범위가 결정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자원탐사위성인 Landsat TM 및 ETM+ 영상을 활용하기로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87년과 '02년 늦은 봄에 취득된 위성영상을 이용하기로 한다.



<그림 1> DMZ 및 민통지역의 지리적 현황 (자료: 김귀곤 2000)

DMZ는 동서로 긴 대상의 띠로서 전체적인 분석은 그 특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으며,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여 서부, 중부 그리고 동부로 구분하여 분석하

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DMZ 서부권역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이 지역은 임진강의 지천인 사미천을 중부권역과의 경계로 한다(이하 서부 DMZ 지역).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장 3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DMZ는 띠 형태의 공간으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폭원의 결정과 지형 및 DMZ를 가로지르는 하천에 따른 권역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폭원에 따른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각각 10km내의 지역을 포함하는데, 이 지역은 민통지역을 상당 부분 포함하게 된다⁴⁾(그림 1).

2.2 DMZ 및 민통지역 토지이용현황

2.2.1 DMZ 및 민통지역의 정의

1) 정전협정에 의한 비무장지대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DMZ)는 1953년 7월 27일에 합의된 정전협정 제 1 조 11 항에 의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쌍방이 각기 2km 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지역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경우 군사상의 목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전진배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구간(서해안 구간)의 경우, 군사분계선에서 북방한계선까지의 거리가 1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2)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민간인통제지역

민통선은 군 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분계선의 남방에 설정하는 선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설정하되, 군사분계선의 남방 15km의 범위 안에서 설정된다. 북한의 경우 민간인통제지역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군사분계선에 가까운 지역의 경우 주민의 접근이 거의 허락되지 않으며 취락 또한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도 남한의 경우 민통지역까지를 포함하여 연구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는 DMZ 북측지역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도 유사한 규모, 성격의 선과 지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Westing,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접경지역의 대상을 민통지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 또한 군사분계선에서 각각 10km 범위의 구간을 포함시켜 조사하기로 한다.

4) 민간인 통제구역은 그 폭원이 일정치 않지만 A. H. Westing(2000)은 남한지역의 민간인 통제구역의 평균 폭원을 5.4km로 밝히고 있다.

3)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

‘접경지역지원법(2000.1.21 제정)’ 상의 접경지역은 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 3개 시·도, 15개 시·군 및 98개 읍·면·동에 이른다. ‘접경지역지원법’ 상 접경지역은 민간인통제선 이남 20 km 이내에 소재한 시·군의 읍·면·동으로서, 5개 지표 중 3 개 이상의 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저조한 지역을 말하는데, 이 5개 지표는 인구증감률,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제조업종사자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을 말한다(안병민, 임재경, 2003).

2.2.2 북한 토지용도 구분

북한의 토지는 사회주의적 소유관계를 선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기반으로 토지법, 도시경영법, 산림법, 대외경제관련법 등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북한은 전체 토지를 크게 6가지용도 즉 농업토지, 산림토지, 주민지구토지, 산업토지, 특수토지, 수역토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DMZ 및 민통지역의 경우 특수토지, 산림토지 및 농업토지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DMZ 북측지역 및 최근린 지역은 특수토지 가운데에서도 군사용 토지로 구분되어 군부대가 그 이용 및 관리를 담당하며, 농업토지는 경작이 가능한 농지만이 포함되며 이의 관리는 농업지도기관과 이를 이용하는 해당 협동농장 및 기관, 기업소, 단체가 행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의 산지이용은 무림목지, 잡관목지, 농경지, 과수원, 잠업, 생산림지, 상전 등의 조성을 미리 예정하고 현재의 산림상태를 고려하여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김일성저작집 15 권), 산림식생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경사지(산지)를 대상으로 한 농업, 축산, 임업 등의 생산활동과 보호보존 및 서비스 활동까지를 포함하는 산지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활동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김광주, 1988). 즉 북한은 산림식생에 한정하지 않고 산림토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이용까지를 포함한 토지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남한은 정책의 기반을 지상물인 산림식생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광원 미발표자료, 2000).

2.2.3 DMZ 및 민통선지역 토지이용현황

위성영상을 이용한 토지이용의 분류를 위해서는 토지이용분류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DMZ 및 내에서 생태학적으로 의미를 지니는 토지이용으로 산림, 농경지(전, 답, 과수원, 다락밭), 초지 및 습지 등을 들 수 있겠다. 산림청 임업연구원(1995)이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DMZ지역의 토지이용을 분류한 결과를 살펴보면, 남한지역의 경우 DMZ의 산림면적비율은 77.6%, 경작지비율은 1.3%에 이

르고 있으며, 나지의 경우 전체면적의 0.2%를 보이고 있다. 북한지역의 경우는 DMZ는 산림면적비율이 73.5%, 경작지면적비율이 4.2%에 이르고 있으며 나지의 경우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서창완과 전성우(1998)의 연구결과에서 주거지역이 남측의 경우 DMZ내에서는 6.37%, 외곽 10km 내에서는 10.24%를 차지하며, 나지의 경우 각각 2.52%와 4.75%를 차지하고 있다. 북측의 경우도 주거지역이 DMZ내에서는 5.93%, 외곽 10km까지 에서는 10.77%로 조사되었으며, 나지의 경우도 3.08%와 9.98%로 나타나 이 지역내의 토지이용의 변화가 큼을 알 수 있다. 실제 답사와 위성영상자료를 동시에 활용하여 DMZ 산림자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지역은 민간인에 의한 간섭이 없었다는 것을 말할 뿐, 군인들에 의한 간섭은 포함하지 않은 표현임을 알게 해준다(산림청, 1995-2000).

2.2.4 위성영상을 이용한 북한 및 DMZ 지역 토지이용분류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Landsat 위성영상은 공간해상도 30m로 저해상도 위성영상이며, 토지이용분류의 항목을 세분화할 경우 분류정확도를 담보할 수 없다. 또한 북한지역의 경우 분류 전의 토지피복특성(ground truth) 파악 및 분류 후의 정확도 검증이 거의 불가능하며, 특히 '87년 영상의 토지이용의 경우 검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02년의 토지이용의 현황을 바탕으로 유추해야하는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류 항목을 최소화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의 토지이용 분류항목은 식생, 농경지, 수체, 시가화지역 및 나대지의 5가지로 구분한다. 식생의 경우 산림, 초지 및 습지(습지식생이 서식하는 부분)를 포함하며, 농경지의 경우 논과 밭 지역을 포함한다. 또한 수체의 경우 하천 및 저수지를 포함하며, 시가화지역은 도시지역, 도로 등 포장지역과 나대지를 포함한다. DMZ 서부지역의 경우 습지가 나타나고 있으나, 그 지역이 넓지 않고 정확한 위치의 파악이 힘들기 어렵기 때문에 Landsat과 같은 저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하는 본 연구에서는 분류항목에서 제외하였다.

북한 또한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토지이용변화를 살피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 중에 있으며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이며 다락밭 등과 같은 나뭇의 독특한 토지이용특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북한의 연구결과를 참고하는 것은 보다 정확한 토지이용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태성 등(1989)은 토지이용실태 파악을 위해 위성영상(북에서는 우주사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을 활용하고 있는데,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지대 논은 4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찍은 사진

에서 거의 100% 확실성을 가지고 판독된다. 그러나 골짜기와 물을 대지 않았을 때의 구릉지대의 높은 논은 밭과 잘 구별되지 않았다. 둘째, 밭은 갈지 않았을 때, 비경지, 풀밭, 과수원, 작은 부락 등과 잘 구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름철 사진에서는 논과 잇닿는 대상을 밭으로, 가을철 사진에서는 수확후의 난가리 혹은 기 경작업흔적에 의하여 판독하였다. 셋째, 갈밭과 소금밭은 조건색 합성사진에서 거의 완전무결하게 판독된다. 넷째, 주민지와 광산, 탄광부지들은 큰 규모일 때 그 위치와 분포경계가 매우 정확히 판독된다. 다섯째, 물대상(호수, 저수지, 강하천, 바다)들과 산림대상들은 확실하게 판독되었다. 여섯째, 새로 건설 중에 있는 간석지, 갑문 등 최근 시기의 변화상태도 측량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김룡선 등(1990)은 산림 유형의 해석에 적합한 계절과 시기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데, 위성영상으로는 Landsat MSS 영상을 이용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한반도를 8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개성을 포함한 DMZ 지역은 지역3(일부 아한대 식물구와 온대북부 식물구)에 해당되며 계절별로 해석률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봄철영상: 높은산(해석 어려움), 낮은 산지대의 산림들은 뚜렷하게 해석
- 여름철영상: 산림의 생육상태가 가장 왕성한 시기이므로 전혀 갈라지지 않거나 보통정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음
- 가을철영상: 모든 산림류형들이 잘 갈라지나 높은 산에 있는 신갈나무 위주의 넓은잎나무림(闊葉樹林)은 보통정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음
- 겨울철영상: 눈피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해석

<표 1> 몇 가지 토지이용별 판독징표

지목별	직접징표			간접징표	비 고
	표준조건색 사진에서 색깔	대역사진 에서 색조	영상의 구조와 형태	지형조건과의 관계	
논	청록색 또는 암록색	7대역에서 암회색	불균일한 임의의 형태	하천류역, 해변가 골짜기의 낮은 지대	4,5,6월 사진이 판독에 가장 유리함
밭	회색 또는 연회색 (적갈색토양: 황록색 양토: 흰색)	모든 대역에서 연한회색	불균일한 임의의 형태 (대규모포전일 때 규칙적임)	주민지주변의 구릉지대와 골짜기, 대지	5대역에서 산림과 뚜렷이 구분
과수원	6월 사진에서 연청색, 9월 사진에서 황갈색, 4월에 찍은 사진에서 청·회색	연한 회색	임의의 형태	주민지주변의 산기슭, 구릉지대	현지조사 자료와 대비 분석하여 확정
갈밭	5월, 10월 사진에서 감색	암회색	균일한 구조, 단조로운 형태	간석지구역에 위치	수확후에는 논과 같이 판독
주민지	암청색	7대역에서 암회색	단조로운 형태	해변 및 하천류역의 평지	군소재지와 특별로동자구 는 명확히 구분
광산, 탄광	6로천광산- 청색 석회석, 화강석, 마그네사이트- 흰색 탄광-군청색	7대역에서 진한 회색	단조로운 형태	주로 산기슭과 중턱, 평지일 때에는 주변에 물웅덩이	모든 계절사진에서 잘 판독
소금밭	암청색-연청색	7대역에서 암회색	규칙적 형태	흰색의 제방이 있고 간석지에 있음	가장 잘 판독되는 대상에 속함
간석지	연청색과 연회색	회색	균일 또는 불균일구조를 가진 임의의 형태	해안(동해안에 는 금야군)	
수문대상 (강,호수)	암청색	암회색-검 은색	균일한 구조, 임의의 형태	골짜기와 낮은 지대	판독정확도가 가장 높음
모래땅 (백사장, 하천부지)	흰색	흰색	임의의 형태	강하류와 해변가에 위치	모든 대역에서 잘 구분

(자료: 최태성 외, 1989)

위의 분석결과를 정리해보면 북한지역의 분석을 위해서는 여름 영상보다는 봄과 가을의 영상이 산림유형을 구분하는데 유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계절별이 아닌 월별로 보다 자세히 계량화시킨 해석률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월평균해석률 (%)

구분	월	2	3	4	5	6	7	8	9	10	11
	건수	5	4	6	1	1	1	1	4	3	2
전체 대상에 대한 해석률%		57.2	91.0	91.7	100.0	93.0	77.0	55.0	100.0	100.0	50.0
뚜렷한 대상에 대한 해석률%		53.2	80.0	73.5	92.0	60.0	61.0	36.0	81.9	88.0	38.2

(자료: 김룡선 등, 1990)

2.3 DMZ 및 민통지역의 보전 및 활용모델

2.3.1 DMZ 및 민통지역의 보전 및 활용모델 정리

통일 후 DMZ 및 민통지역의 보존과 이용 측면에서 김은식(1996)은 보존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DMZ를 핵심보전지역(core area)으로 설정하여 보존하고, 민통지역까지를 완충지대(buffer zone: 통제이용지역)로, 민통선에서 군통제선까지를 전이지역(transition area: 제한이용지역)으로,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을 자유이용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로서 황지욱(2000)은 지역공간의 자연생태와 지리공간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핵심보존지구 - 완충지구 - 농촌행정주지구의 3-Zone-System을 제안하고 있다(표 3). 하지만, 위의 연구들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보전의 중요성은 떨어지고 활용의 기회가 많아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생태계의 보전 정도는 비접근성의 거리요소보다는 지형적 요소, 수문 그리고 군사작전상의 제한요인 등에 의해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에 실제로 자연환경요소를 고려한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요소에 대한 보다 정확한 현황파악을 필요로 하게 된다.

<표 3> DMZ 및 민통지역 보전 및 활용모델 정리

	DMZ 내부	남·북방한계~민통	민통~군통제선	군통제선 이외
김은식 (1996)	핵심보전지역	완충지대	전이지역	자유이용지역
황지욱 (2000)	핵심보전지구	완충지구		농촌형 정구지구
본 연구	생태계보전구역	전이구역 (전이지대)		인간활동구역

2.3.2 DMZ 및 민통지역의 자연환경별 지역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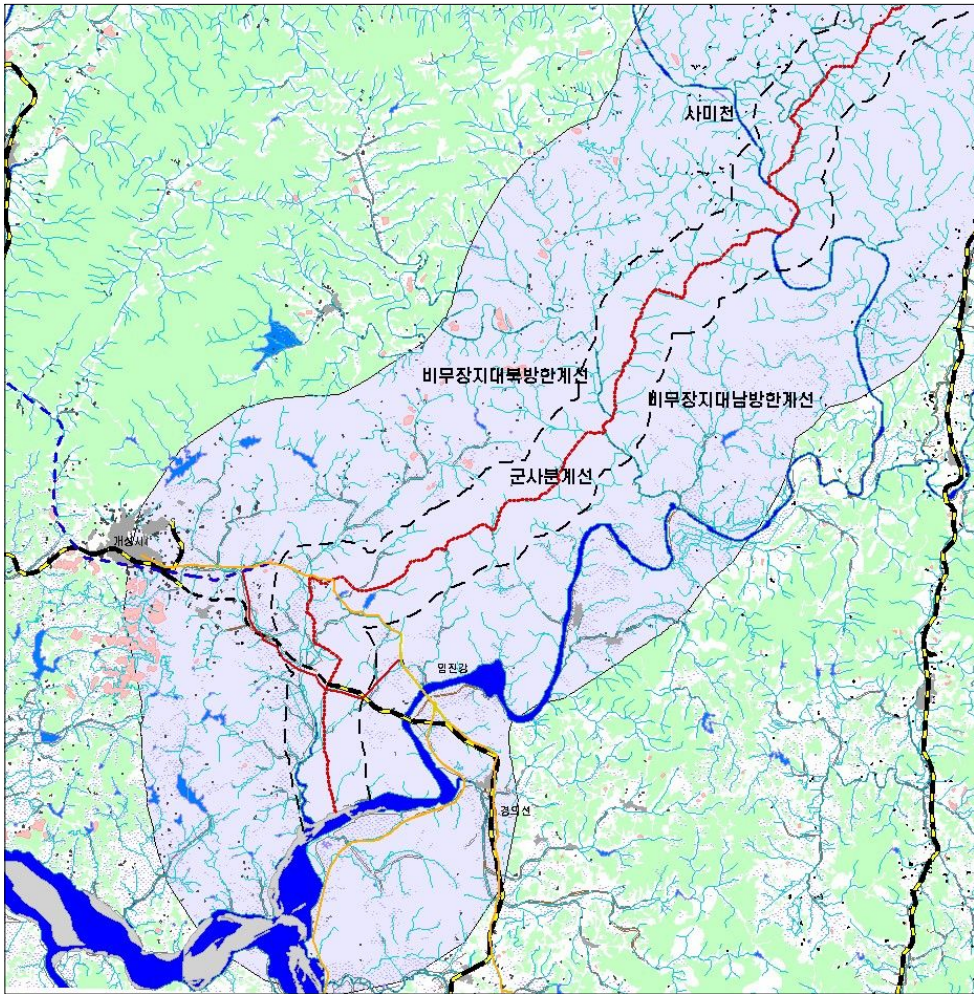
DMZ지역은 한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음으로 서부평야지역, 중부내륙지역 및 동부산악지역이라는 한반도의 전형적 지형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DMZ의 자연환경별 지역구분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표 4에 정리하였다.

<표 4> DMZ 및 민통지역 지역구분

연구	구분	주요 지역 또는 지형요소
양홍모, 이태희 (1996)	서부하구지역 중부평야 및 구릉지역 동부산악지역	교동도 일원에서 김포, 임진강 입구에서 문산, 임진강과 한강의 하구수역 임진강 수계의 하류지역 북한강 수계의 상류지역
산림청 (1995~2000)	서부해안 및 도서지역 중서부내륙지역 중동부산악지역 동해안지역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및 옹진반도지역 강원도 철원군, 경기도 연천군 산지와 분지형태의 철원평야 태백산맥 내륙산지 해안지역
김귀곤 (2000)	서부 DMZ, 민통지역 중부 DMZ, 민통지역 동부 DMZ, 민통지역	판문점, 장단반도, 어룡저수지, 사천, 초평도 핀치볼, 대성산, 대성산계곡습지, 철원습지 금강산, 건봉산, 향로봉, 가칠산, 감호습지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서부평야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부평야지역의 경우 해안 및 도서지역을 포함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육역부만을 그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하며, 표 4의 내용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의 지역구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서부평야지역: 판문군(북) / 파주시(남) (임진강입구, 사천, 장단반도, 사미천)



<그림 2> 서부지역 DMZ 및 연구대상지 (군사분계선 중심 10km) 현황

2.3.3 서부 DMZ 및 민통지역의 자연생태 현황

서부 비무장지대에 대해서는 남북 연결도로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단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UNDP와 한국정부의 지원 하에 조사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97. 03~'99. 12). 식물 및 동물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특히 조사 대상지역이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지역이면서 아직까지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지뢰 등의 위험요인과 출입제한 등으로 인해서 인공위성 이미지를 이용한 조사를 병행하기도 하였다. 조사지역의 범위는 비무장지대 52km², 민통지역 77km², 그리고 임진강 남측 81km² 등으로 총 면적은 203km²에 해당한다.

서부지역은 습지와 갯벌이 발달함으로써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생물다

양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50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북대결과 분단의 산물이라 볼 수 있는 화공(火攻) 및 맞불작전(다행스럽게도 '02년 2월 제 5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화공작전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합의된 바 있음)으로 인해 산악지대 생태계는 많이 파괴되어 새로운 초기식생천이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 새로운 가치 있는 습지생태계가 형성되는 곳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식생천이과정은 산불로 방해를 받은 후 새로운 선구식물의 침입-경쟁-정착을 의미한다.

남북연결도로 개설지역에서 볼 수 있는 습지 생태계 역시 강과 하천에 의해서 형성된 곳으로, 이곳에는 사천강 중류지역으로 유입되는 석포천을 비롯한 소하천이 존재하는 지역으로서 사천강의 주기적인 범람으로 인한 하천변 습지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민통지역의 백연교 주변과 비무장지대내의 소하천은 중요한 생물서식공간으로서 많은 조류가 서식하는 공간이다. 또한, 높은 지하수위로 인해 비무장지대내에 연못습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도로건설로 인한 수문학적인 변형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민통지역은 통일촌을 중심으로 한 농경으로 인해 습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동물중에 중요한 먹이원이 되는 공간이며, 비무장지대내는 50년 동안의 방치로 인해 묵논으로 변화되어 조류의 중요한 서식처가 됨과 동시에 갈대, 줄 군집이 형성되어 좋은 서식처가 형성되어 있다.(김귀곤 2000; 경의선 남북연결도로 환경공동조사단 2001) 그림 3은 남북연결도로 개설지역에서 나타나는 습지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남북연결도로 주변의 습지(경의선 남북연결도로환경공동조사단, 2001)

3. 연구 방법

3.1 자료 취득 및 처리

본 연구를 위하여 '87년에 취득된 Landsat TM 영상과 '02년의 Landsat ETM+ 영상을 이용하기로 한다(표 3). '87년에서 '02년까지 15년간의 토지이용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87년 영상의 경우 5월말에 취득되었으며, '02년의 영상은 6월초의 영상으로, 두 시기의 영상 모두 식생이 활착되는 단계에 있어, 생물계절주기의 차이에 따른 토지이용분류 오차를 최소화하였다(표 5).

북한지역의 투영방법 및 Datum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UTM52 지역을 그리고 타원체는 WGS84를 그 기준으로 한다. 위성영상의 분석을 위해서 ENVI 3.6을 이용하며, 산림변화량 및 경관지수를 이용한 산림의 변화량과 고도별 그리고 경사도별 산림황폐화 조사를 위해서는 ArcView v3.2를 이용하였다. 지상기준점(GCP: Ground Control Point)은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제작한 1:50,000 수치지형도를 기본으로 하여 구축한다. 군사분계선과 남·북방한계선 폴리곤자료를 추출 및 편집한 후 이를 이용하여 분석범위 이외의 지역을 잘라내기로 한다.

<표 5> 분석에 이용된 위성영상자료

Sensor		해상도	주파수 영역(um)	영상촬영일	자료출처
Landsat	TM	30m	0.45 - 0.52	87. 05. 20	한국토지공사
			0.52 - 0.60		
			0.63 - 0.69		
			0.76 - 0.90		
	ETM+		1.55 - 1.75	02. 06. 06	
			10.40 - 12.50		
			2.08 - 2.3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2 토지이용특성변화 분석방법

3.2.1 위성영상을 이용한 북한지역 토지이용변화 분석

위성영상을 이용한 북한관련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현장답사자료(Ground truth)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복분류의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의 연구에 대한 것이다. 북한의 토지이용은 대개 수채, 논, 밭, 주거지, 나지, 초지, 산림으로 구분하였으며 무감독분류(ISODATA)방법 후 감독분류(최대우도법)를 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이승호 외 1996; 정미령과 이규성 1997). Change Detection을 위해서는 피복분류후 조사(Post Classification)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정규식생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⁵⁾ 분석을 통해 산림을 침엽, 활엽, 혼효, 고산침엽으로 세분하였다. 이렇게 NDVI 또는 발전된 형태의 식생지수(TVI, GVI)를 이용하여 북한지역의 토지이용을 분류하고 그 양적 질적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제시되고 있다(산림청 1995; 황순욱 1997; Zheng et. al. 1997; 이규성과 정미령 1998; 서창완과 전성우 1998; 김상욱과 정중철 2002). 정미령과 이규성(1997)은 북한 평양지역의 토지이용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NDVI값의 계절별 반사특성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으며, Zheng et. al.(1997)의 경우 백두산지역의 산림변화량 및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피복분류 항목을 산림과 비산림의 2가지로 단순화시켰으며 종이지도로 바탕으로 분류정확도를 검증하고 있다. 김천(1998)의 연구는 Landsat 및 JERS-1 OPS 영상을 이용하여 황해북도 서남부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량을 분석하였는데 종이지도로 이용한 Visual Interpretation 기법 및 DEM을 활용하고도별 산림변화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산림, 비산림, 수체의 3가지로 분류항목을 단순화시켰으며 에러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분류정확도를 검증하고 있다. 또한 산림의 정량적 변화와 패턴을 조사하기 위해 녹색식생지수(GVI)와 토양명도지수(SBI)를 이용하였다. 요즘에는 최근영상의 토지이용을 기본으로 하여, 문헌이나 지도와 같은 보조자료를 획득하기 어려운 과거영상의 토지이용을 유추하는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Zheng et. al.,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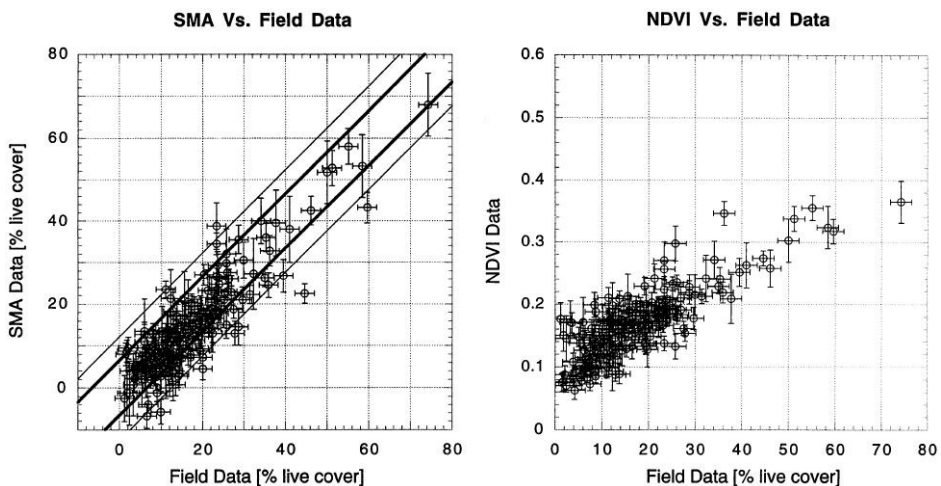
3.2.2 DMZ 지역의 토지이용분석과 분광혼합화소분석의 응용

DMZ 지역의 토지이용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토지이용분류 기법 외에 분광혼합화소분석(Spectral Mixture Analysis: SMA) 기법을 병행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하고자하는 저해상도 위성영상인 Landsat 위성영상의 경우 하나의 화소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동질한 물체의 분광반사값을 나타내기보다는 다양한 분광값을 가진 물체들의 대표값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혼합된 화소를 분해하는 방법을 SMA라하며 혼합된 화소를 분해하는 분광혼합화소분석 방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선형혼합모델(linear mixing model)이다(Keshava et

5) 식생지수들 가운데 토지이용변화 측정에 적합한 식생지수(Landscape Index)를 찾아내는 연구의 결과 NDVI가 지형적 영향을 가장 적게 받으며 통계적으로 정규분포를 보여 피복 변화 측정에 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yon et. al. 1998).

al. 2002). 특히 식생, 수문 및 토양요소들이 혼합된 생태계의 보고라 할 수 있는 DMZ 지역의 경우, 하나의 화소가 하나의 물체를 대표함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분석방법 보다는, 이렇게 발생하는 혼합화소(mixed pixel)를 대상지의 토지이용을 가장 잘 반영하는 순수한 화소값(endmember)들로 분해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판별 및 분류를 가능케 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토지이용분류에 대표적인 식생지수라 할 수 있는 NDVI 값을 이용하는데, 최근의 연구결과(그림 4) 등을 살펴보면 NDVI 값 보다 SMA 식생분할영상이 보다 식생의 활력도를 잘 반영해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Elmore et. al., 2000). 이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극세분광 위성영상의 분석에 활용되는 기법인 SMA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DMZ 및 주변지역에 대한 위성영상의 각 화소의 식생, 수문 및 토양요소의 혼합정도를 분해한 후, 이들의 분할영상(fraction images)을 추출해내고 이를 원자료와 함께 피복분류에 이용하였다.

토지이용분류를 위해서 감독분류기법을 이용하였다. 감독분류를 위한 현장조사자료(ground truth)의 확보는 첫째, 국한된 지역이지만, 남북연결도로 및 북한 DMZ지역에 대한 최근의 현장답사자료('4. 5, 6, 7월)를 이용하였으며, 둘째, 고해상도 위성영상인 SPOT 5 위성영상자료를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림 4> 식생피복과 SMA 및 NDVI의 상관관계 (Elmore et. al., 2000)

(a) 식생피복과 SMA값과의 관계: 식생피복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SMA 값이 나타나고 있음, (b) 식생피복과 NDVI값과의 관계: 식생피복이 높은 지역의 경우 NDVI 값이 일부 포화되는 경향을 보임

3.2.3 분광혼합화소분석

1) 선형혼합모델

선형혼합모델은 분광혼합화소분석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다음의 식은 분광혼합화소분석의 주요 식이다(Manolakis, 2001).

$$x = \sum_{k=1}^M a_k s_k + w$$

단,

x 혼합화소의 분광반사값

s_k endmember들의 분광반사값

a_k endmember들의 비율

M endmember 개수

w 잔차

$a_k \geq 0$ (비율값이 음수나 1보다 큰 비율값이 나오지 않도록 제약)

$$\sum_{k=1}^M a_k = 1 \text{ (모든 endmember의 비율의 합은 1)}$$

3.3 경관구조 변화 분석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동시에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문지리와 생태학의 총체적 접근을 의미하는 경관생태학적 원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관생태학이란 생태학 관련 연구에서 배제되어 온 인간의 영향 - 토지 및 산림 이용형태와 같은 인위적 요인을 포함- 이 가해진 생태계를 과감히 연구주제로 삼을 수 있는 학문으로 경관의 형성 및 발전과정(process), 그리고 그 형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조도순 1992). 즉 경관 모자이크(landscape mosaic)나 경관 패턴(landscape pattern)의 특정한 분포나 자연지역 단위를 파악하는 것이 경관생태학이다(Korman and Gordon 1986). DMZ 및 주변 지역의 경관구조의 변화, 즉 토지변화(Land Transformation)를 살펴보기 위해서 경관지수(Landscape Indices)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경관의 구조적 변화를 계량화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도구이다.

3.3.1 경관구조분석 선행연구

경관구조로서 조각요소에 대한 연구를 보게 되면 박찬열(1994)의 서울시 도시림의 면적과 조류종수와와의 관계분석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김명수, 안동만(1996)연구는 도시공원을 경관생태학적 구조 가운데 조각요소로 간주하고 서울을 포함한 4개 도시내의 조각요소의 형태지수, 분산도, 평균면적, 평균주연부의 길이 등을 연구하였다.

경관구조에 대해 지리정보시스템 및 원격탐사기법을 응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oossens의 연구는 지역단위의 생태패턴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위성영상자료의 활용방법에 관한 것이다. 자이레의 카텐다(Katenda)지역의 '86, '87, '88년 SPOT 영상을 기존의 여러 감독분류방법(box or parallel piped, minimum distance to mean, maximum likelihood classifier 등)으로 분류한 후 경관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조각요소, 통로 및 배경기질의 변화를 감지 및 지도화(mapping)하였다. 조각요소의 경우 교란, 도입 및 환경자원 조각요소로 분류하였는데 특히 도입조각요소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엽면적지수(LAI:Leaf Area Index)를 이용하였다. 통로는 위성영상의 필터링처리를 통하여 선형의 사상을 추출하였는데 교란통로 및 환경자원통로로 분류하였다. 배경기질의 경우는 '86년에서 '88년에 이르는 배경기질의 구멍뚫림현상(the matrix porosity)을 파악하였다(Haines-Young 1993). Gulinck et. al(2000)의 연구는 지역단위의 경관구조 조사방법에 관한 것으로 생태적으로 서식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각요소들을 SPOT 영상의 감독분류를 통해 추출해 내고, 이들 조각요소들의 면적, 둘레길이, 형태, 개수, 고립도 및 연결성에 대한 조사를 그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다(Haines-Young 1993).

실제로 경관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사례로는 이응경(1998)의 연구가 있다. 이는 경관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과 평가를 위하여, GIS 및 RS기법을 이용하여 경관지수(Landscape Indices)를 산출하고 이를 통하여 '83년부터 '96년까지의 한강 하류지역 산림경관의 시공간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는 FRAGSTATS 2.0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32가지 경관지수를 계산 및 분석하여 대표적인 4가지 경관지수를 선정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경관지수는 C%LAND(Core Area Percent of Landscape), LSI(Landscape Shape Index), CACV1(Patch Core Area Coefficient of Variation), IJJ(Interspersion and Juxtaposition Index)로서 '83년에 '96년에 이르는 동안 대상지역의 산림조각들이 더 작고 불규칙한 모양으로 변해왔으며 유역내 산림 패치 크기의 이질성이 증가했으며 산림 주변의 지피종류가 복잡해 졌음을 밝혔다. 또한 경관지수분석을 위해서는 조각의 내부면적(Core Area)을 계산해야하며 이를 위해서 조각의 주연부(ecotone)의 폭을 결정

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박종화, 1995; 박영임, 1996).

3.3.2 토지이용변화와 조각의 파편화

경관생태학에서 조각(patch)이란 특성과 시각적 양상에서 주변과 구별되는 공간적인 단위이다.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로서의 조각의 파편화(fragmentation)는 토지변형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변화로서 경관조각의 크기 축소를 수반하는 서식처의 손실과 고립에 의해 조각내부에 서식하는 개체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Grashof-Bokdam 1997; 이도원 2002).

1) 경관지수(Landscape Indices)의 정의

경관지수란 경관구조를 정량화시키는 일반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이를 통하여 첫째로 경관 모자이크내의 특정한 생태과정의 조각을 추론해낼 수 있으며, 또는 둘째로 특정 경관구조 패턴의 보전가치를 평가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Haines-Young, 1996).

경관지수는 흔히 조각요소지수(Patch Indices)라고도 하는데 그 위계에 따라 3가지 범주로 구분되어 분석될 수 있다.

- 경관: 모든 조각요소, 다각형, 연속된 화소 또는 폐곡선 등을 포함
- 클래스: 모든 조각요소, 폐다각형, 연속된 화소 또는 폐곡선 등을 포함하며 경관의 1차 세부속성을 포함
- 조각요소: 개별 다각형, 연속된 화소 또는 폐곡선 각각의 조각요소는 독립된 테이블을 가짐

2) 조각의 파편화 영향

여러 형태로 발생하는 파편화의 영향을 크게 3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Forman, 1995).

<표 6> 파편화의 영향

	증가요소	감소요소	기타
공간적 영향	조각 밀도 조각사이의 거리 둘레 길이, 징검돌, 통로	조각 크기, 연결성 내부/가장자리 비 중심내부지역 최대크기	조각 형태 프랙탈 차원
종에의 영향	비전문종 서식처고립 가장자리종의 수 외래종의 수, 둥지 포식, 멸종률	내부종 전파 행동권이 큰 생물종 내부종 풍부도	

3) 조각의 공간적 특성과 생태적 특성

작은 조각이 좋으나 큰 조각이 좋으나(LOS: a large or a small patch)의 문제와 관련하여 도서생물지리설의 원리에 따른 Diamond(1975)의 자연보호구역 종다양성 설계원리를 들 수 있다. 이 원리는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극대화할 6가지의 원리를 제안하였다. 첫 번째, 원리는 면적이 큰 자연보전지구가 작은 것보다 종 보존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넓은 면적이 더 많은 종을 수용할 수 있고 또한 멸종의 확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원리는 자연보전지구의 전체 면적이 한정된다면 큰 자연보전지구 하나가 이와 면적의 합이 같은 작은 자연보전지구 여러 개 보다 종 보존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 원리는 인접한 자연보전지구가 서로 가까울수록 종 보존에 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이들이 가까울수록 자연보전지구 사이의 생물종의 이주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원리는 여러 개의 자연보전지구가 있을 경우 이들이 직선적으로 배열되는 것보다 서로 같은 거리로 모여 있으면 종의 재정착이 쉬워진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원리는 서로 떨어진 자연보전지구 사이에 종이 이동할 수 있는 생태통로(corridor)를 만들어 줌으로써 이입의 증가와 멸종의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 원리는 다른 여건이 같다면 길쭉한 모양보다는 둥근 모양이 종 다양성 유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보전지구 내에서의 종의 이동이 원형일수록 이동할 거리가 가깝고 주변 효과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7; 환경부, 2002). 이와 같은 원리를 DMZ 일원의 생태계 보전에 연계시킨다면 이 지역의 산림은 그 면적이 커야 좋고, 도로나 철도 등에 의해 가급적 생태계가 단절되지 않아야 하고, 전체 면적이 비슷하다면 그 형태는 원형에 가까울수록 좋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설계원리는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체면적이 같을 경우 작은 조각이 많은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적은 숫자의 큰 조각이 좋느냐(SLOSS: a single large or several small patches)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조도순, 1992; 이도원, 2002).

환경관리의 차원에서 크고 작은 조각 모두 중요하지만, 큰 조각이 없을 경우 생태적으로 매우 위험하다. 작은 조각이 가질 수 있는 기능은 큰 조각이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조각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조각의 공간적 특성과 생태적인 이점의 측면에서 그 중요도를 순위를 매긴다면 다음과 같다.(1) 큰 조각, (2) 높은 통로 연결성(큰 조각과 비슷한 장점을 지님), (3) 여러 개의 작은 조각, (4) 긴 둘레길이(이도원, 2002).

3.3.3 산림파편화 변화 조사

1) 경관지수의 결정

이용경(1998)은 경관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과 평가를 위하여 32가지 경관지수를 요인분석 및 주성분분석을 통하여 4가지 대표성을 띤 경관지수를 선정하였는데, C%LAND(Core Area Percent of Landscape), LSI(Landscape Shape Index), CACV1(Patch Core Area Coefficient of Variation), IJI(Interspersion and Juxtaposition Index)가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경관지수들을 대분류한 후에 이들 가운데 몇 가지씩을 선택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였다. Patch Analyst에서 제시한 대 분류 기준은 Patch Density & Size Metrics, Edge Metrics, Shape Index, Diversity & Interspersion Metrics 및 Core Area Metrics의 다섯 가지이다.

대상지의 식생 조각요소의 단편화의 변화추세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9가지 지수들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보다 과학적인 경관지수의 선정을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변이계수, 상관성분석 및 주성분 분석 등을 통하여 가장 설명력 높은 지수들을 선택하여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사례에서 이용된 경관지수를 선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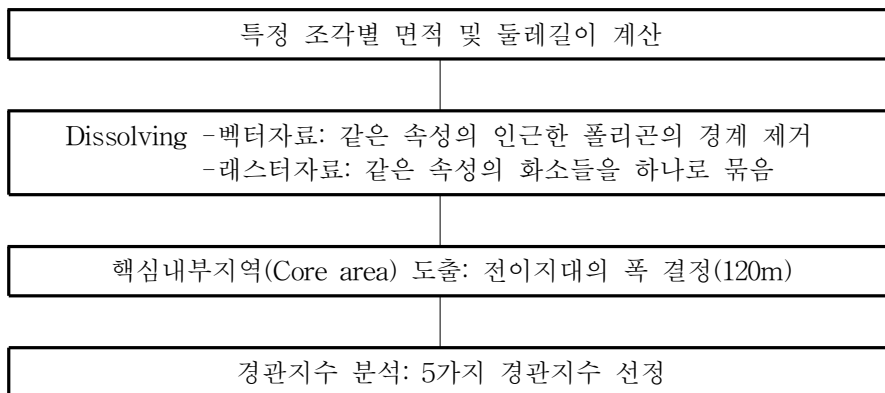
- Class Area(CA): 주어진 클래스 각각의 면적의 합으로 표현(m^2), 즉 산림 클래스 면적은 산림 폴리곤 또는 산림격자의 전체 합으로 계산됨
- NUMP(Number of Patches): 산림조각의 개수
- PSSD(Patch Size Standard Deviation): 조각의 표준편차(ha)
- TE(Total Edge): 조각 경계부의 둘레길이의 합(m)
- ED(Edge Density): 전체면적에 대한 조각 경계부의 길이비율
- MSI(Mean Shape Index): 조각형태의 복잡성($MSI \geq 1$, 1=원 또는 사각형), 값이 클수록 조각형태가 복잡함
- TCA(Total Core Area): 핵심내부지역의 총면적(ha)
- MCA(Mean Core Area): 핵심내부지역의 평균내부면적(ha)
- CASD(Core Area Standard Deviation): 내부면적 표준편차(ha)

2) 경관지수 분석수단

경관지수분석을 위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는 FRAGSTATS*ARC r1.0이다. 오레곤 주립대학의 McGarigal 교수팀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Grid 모듈이 설치되어 있는 UNIX 또는 NT용 ARC/INFO 환경에서 운용이 가능하다. 경관지수를

분석하기 위한 또 다른 소프트웨어로는 Patch Analyst가 있다. 이것은 온타리오 주에서 산림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산림환경의 평가를 보다 계량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작하였으며 벡터 또는 래스터 포맷의 자료를 완충역 생성(Buffering), 경계제거(dissolving), 조각 핵심내부지역(core area) 생성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약 26가지에 이르는 경관지수를 제공하고 있다. Patch Analyst는 ArcView(3.x)에서 하나의 extension으로 운용이 되며, 요구사항으로는 ArcView(3.x)의 Spatial Analysis Extension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의 경관지수 분석을 위해서는 Patch Analyst v2.3을 활용하였다.

경관지수 분석의 순서는 다음의 그림 5와 같다. 첫째 특정 조각(본 연구에서는 산림조각)의 면적 및 둘레길이를 먼저 계산한 후, 같은 속성의 화소값들을 하나로 묶는 과정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핵심내부면적을 계산하기 위하여 경계에서 핵심지역까지의 완충공간이라 할 수 있는 전이지대의 폭을 결정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120m를 그 임의의 폭으로 결정하였다.



<그림 5> 경관지수 분석과정

4. 분석 결과

4.1 DMZ 토지이용변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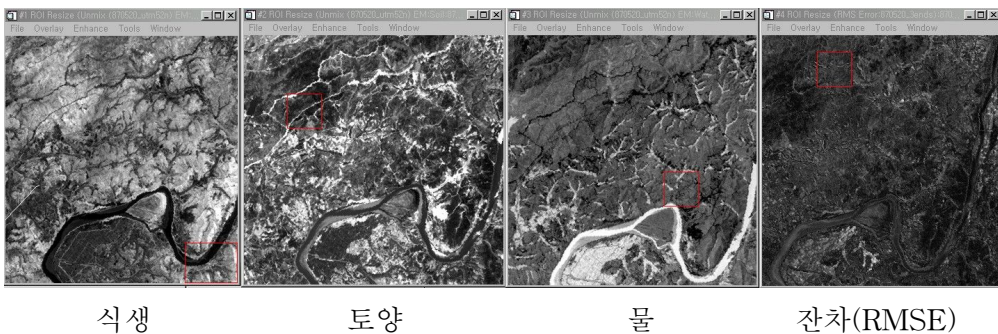
4.1.1 분광혼합화소분석 결과

분광혼합화소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식생(Green Vegetation: GV), 토양(Soil) 및 물(Water)의 3개의 endmember를 선정하였다. 서부 DMZ 지역은 장

단반도, 사천 주변으로 습지가 분포되어 있는 등 생태적으로 중요한 토지이용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구성의 기본 요소인 식생, 토양 그리고 물의 3 요소를 endmember로 선정하였다.

1) '87년 서부 DMZ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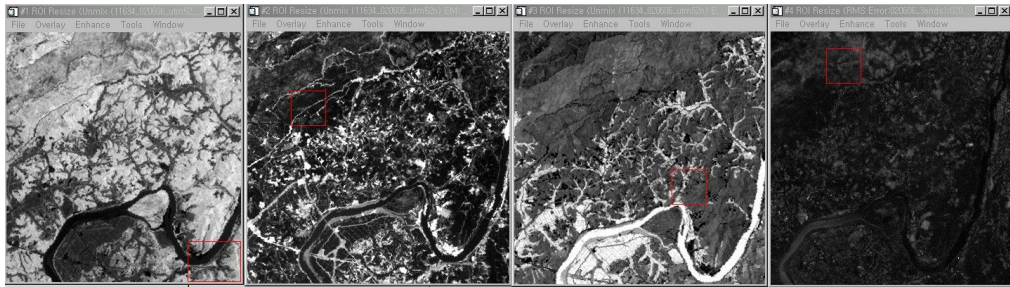
그림 6은 '87년 서부 DMZ 지역 가운데 장단반도지역의 분광혼합화소분석 결과를 확대한 것이다. 첫 번째 그림은 식생 endmember를 보여주고 있는데, 밝은 색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식생의 활력도가 높은 지역이며 어두운 지역은 식생이 아닌 다른 토지이용이 있는 지역을 나타내준다. 즉 임진강의 수체부분 그리고 나대지 지역은 어두운 색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그림은 토양 endmember를 보여주는데, 밝은 색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시가화건조구역, 나대지 및 하천 사구 등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영상은 물 endmember 분할영상으로 임진강 및 논 지역이 밝은 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 영상은 잔차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화소의 endmember 별 분할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각각의 화소마다 endmember 별로 정확히 분할되었다면, 그 화소는 0에 가까운 값을 보이며 RMSE 영상은 검게 나타나게 된다. 그림 6에서의 RMSE 영상은 전반적으로 어둡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논 주변지역의 화소값이 밝은 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6> '87년 서부 DMZ 지역 분광혼합화소분석 결과

그림 7은 '02년 서부 DMZ 지역의 분할영상들이다. '87년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그림은 식생 endmember를 이용한 분할영상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상당히 밝은 값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토양 분할영상의 경우 국도 1호선 연결구간 및 경의선 남측구간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물 분할영상의 경우 임진강 및 논 지역이 밝은 값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영상의 촬영시기가 6월 초로 모내기를 위해 논에 물이 대어진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87년 물

분할영상에 비하여 논·밭의 면적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RMSE 영상은 '87년 영상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어둡게 나타나고 있어 endmember 별 분할이 잘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식생

도양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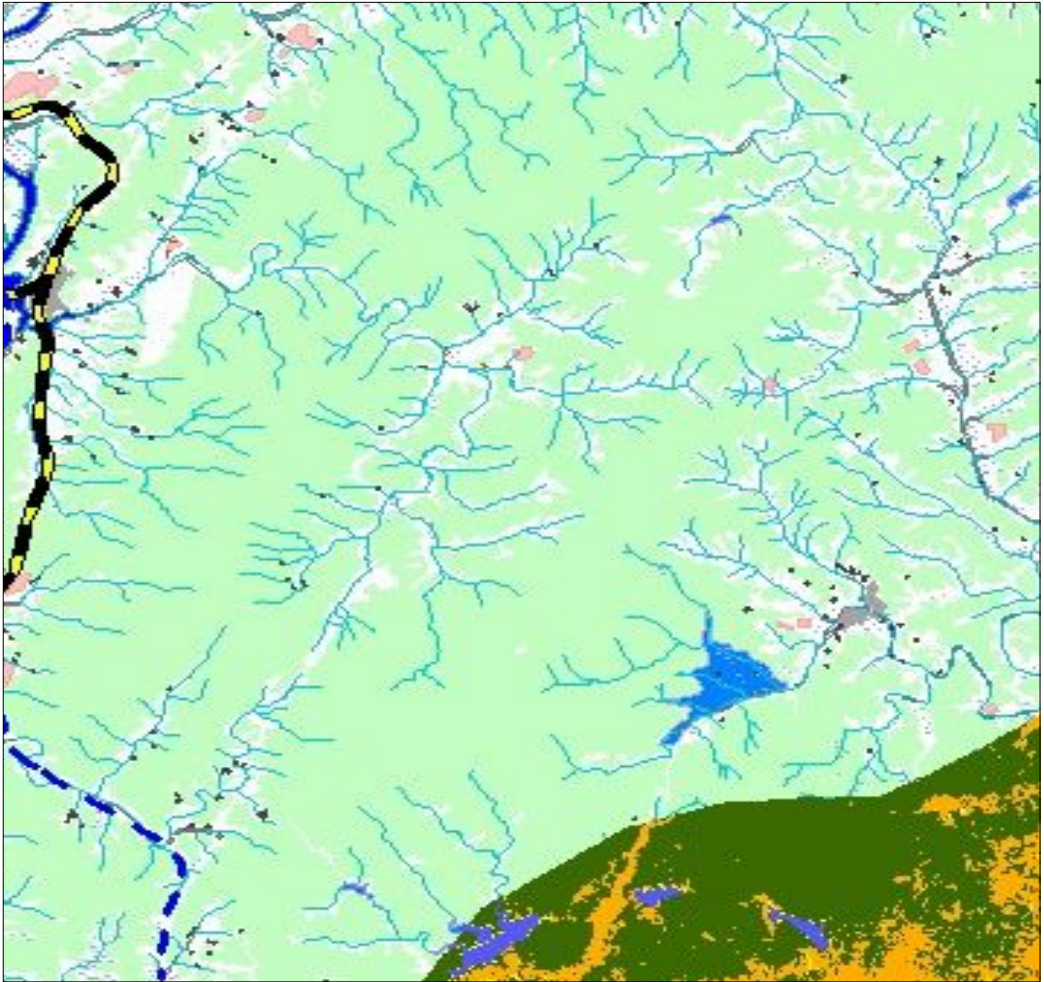
잔차(RMSE)

<그림 7> '02년 서부 DMZ 지역 분광혼합화소분석 결과

4.1.2 토지이용분류

1) '87년 서부 DMZ 지역 토지이용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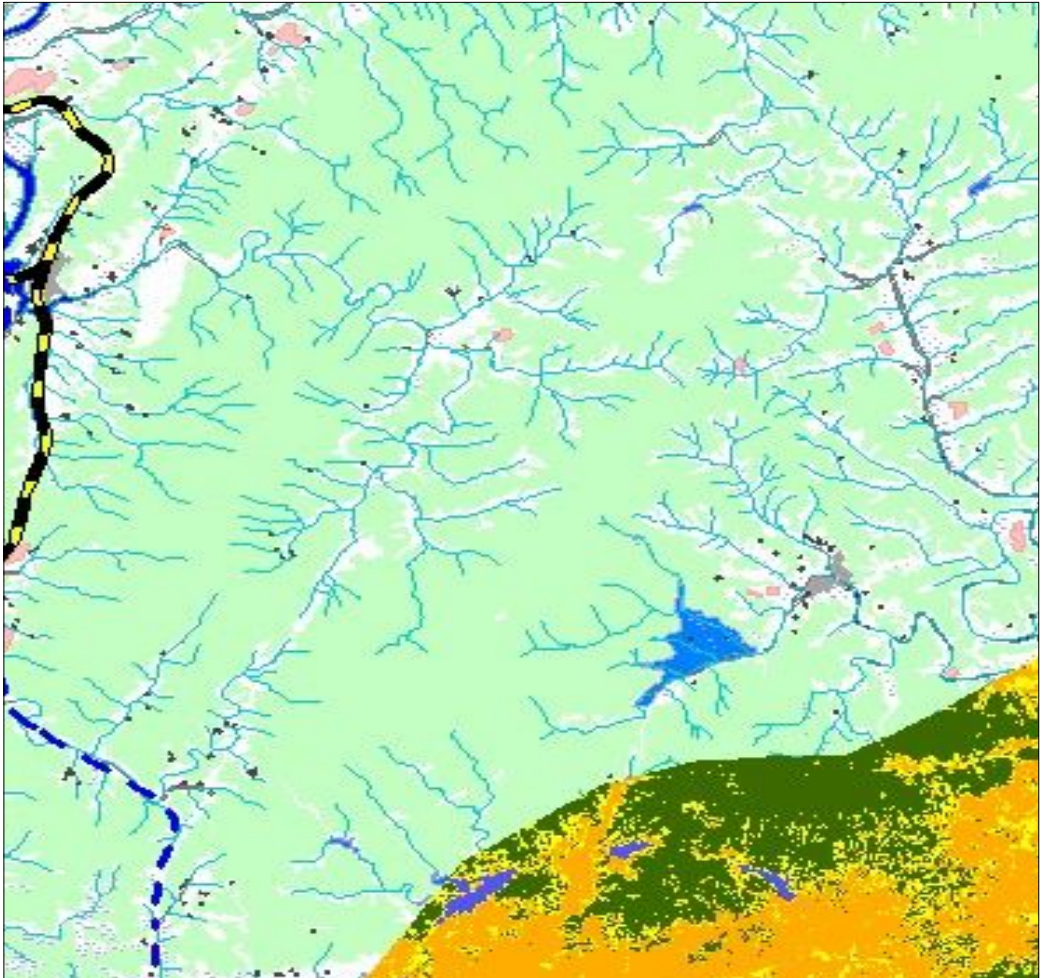
'87년 Landsat 위성영상의 원자료와 분광혼합화소분석 결과를 모두 이용하여 '87년 토지이용분류도를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DMZ 서부지역 및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각각 10km 폭원으로 연구대상지를 선정하고 토지이용분류도를 구축하였다. 연구 대상지를 가로지르는 굵은 실선이 군사분계선이며, 2km 폭원의 남북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의 내부지역이 DMZ이다. 남한지역은 임진강 주변으로 농경지가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북한지역은 비무장지대 북측구간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넓은 면적이 나대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우리의 민통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DMZ 인근지역의 경우, 군사지역이 대부분으로, 취락은 거의 발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군사적 목적으로 사계청소의 결과로 파악될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군부대의 식량생산을 위해 개발된 다락밭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나대지화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비무장지대의 경우 대부분 산림으로 분류되었지만, 북측구간의 경우 일부 농경지와 나대지로 분류되어 있어, 비무장지대 내부라도 산림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림 8> '87년 서부 DMZ 지역 토지이용도 구축

2) '02년 DMZ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도 구축

'02년도의 경우 '87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산림면적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개성시 관문읍 아래편의 산림지역의 면적이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 9). 남한지역의 경우 민통선지역의 산림이 농경지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삼림이 농경지 또는 나대지로 상당부분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비무장지대 내부의 경우 대성동 및 기정동 마을 주변으로 농경지와 나대지 면적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림 9> '02년 서부 DMZ 지역 토지이용도 구축

4.1.3 토지이용별 면적변화 조사

서부 남측지역은 임진강입구의 고루리, 장단반도, 파주군 석곡리 및 연천 사미천 지역에 이른다. 표 7은 서부 DMZ 남측의 토지이용 변화를 매트릭스로 작성한 것이다. 열측으로는 '87년의 토지이용을 그리고 행측으로는 '02년의 토지이용을 나열한 것이다. 가운데 보다 어두운 색으로 나타난 칸은 15년 동안 변화가 없는 지역의 면적을 나타낸다. 산림지역의 경우 농경지로의 변화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일부 나대지로 변화되었다. 이는 민통선지역의 경우 일부 산림지역을 농경지화 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나대지의 경우 농경지로의 변화가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나대지를 개간하여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다음으로는 산림으로 복원된 면적도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나대지가 초지 또는 잡목지로 천이가 진행되었거나 또는 식생의 활착과 관련하여 영상의 촬영시기의 차이에 따른 오차일 가능성이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농경지를 살펴보면 기존에 농경지였는데 산림으로 변화한 지역이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산림지역이 농경지로 변화된 면적과 거의 비슷한 양상을 나타나고 있다.

<표 7> 서부 DMZ 남측 토지이용 변화('87~'02)

(단위: km²)

토지이용		'87년 DMZ 남측					
		산림	나대지	농경지	시가화	수체	면적
'02년 DMZ 남측	산림	204.52	16.37	23.28	0.01	0.21	244.39
	나대지	13	17.95	16.33	0.4	0.23	538.69
	농경지	25.08	22.93	49.13	0.11	1.37	1,176
	시가화	0.14	0.12	0.62	0.87	0.04	2,353.79
	수체	0.67	0.48	2.48	0.11	6.44	4,717.76
	면적	243.56	57.88	91.89	1.5	8.3	0
	변화면적	39.04	39.94	42.77	0.63	1.85	0

<표 8> DMZ 북측 토지이용 변화('87~'02)

(단위: km²)

		'87년 DMZ 북측					
		산림	나대지	농경지	시가화	수체	면적
'02년 DMZ 북측	산림	210.49	20.54	11.31	0.06	0.24	244.64
	나대지	23.8	138.89	56.15	0.85	0.38	709.35
	농경지	27.99	23.59	53.46	1.03	1.55	1,526.32
	시가화	0.02	1.36	2.29	2.62	0.08	3,059.01
	수체	0.32	0.34	1.67	0.06	3.19	5.57
	면적	262.86	184.74	124.96	4.62	5.45	0
	변화면적	52.37	45.85	71.5	2	2.26	0

서부 북측지역은 개성직할시 판문군과 장풍군을 그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판문읍, 판문점, 장단반도, 어룡저수지, 사천유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장조사 결과, 북한의 서부지역의 민통지역 및 외부지역의 구릉지 및 계곡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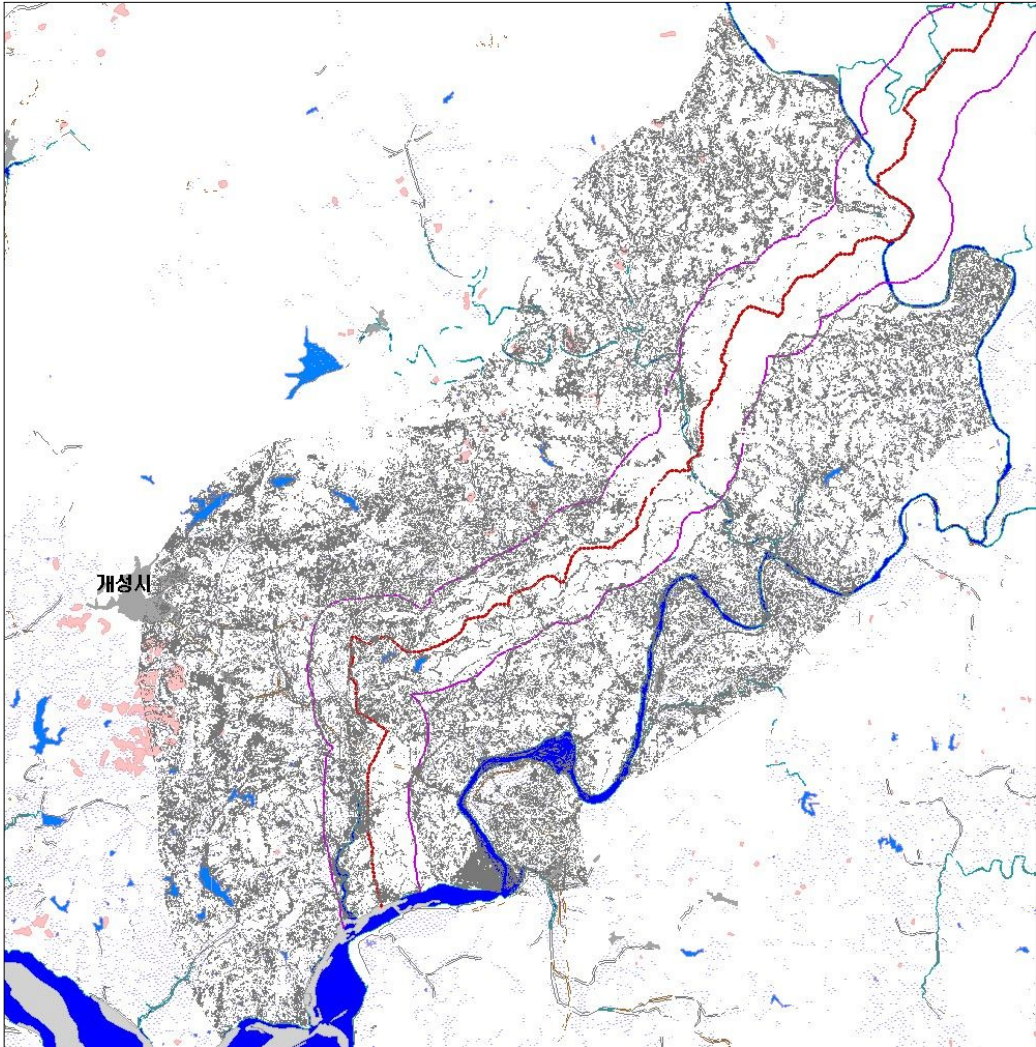
다락밭으로 조성되었다가 현재는 식생의 피복도나 밀집도가 떨어진 묵밭, 나대지 또는 무림목지의 형태로 방치되고 있다.

서부 DMZ 북측구간의 토지이용변화를 정리하면 표 8과 같으며, 그 경향은 남측구간의 그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산림지역의 경우 나대지 및 농경지로의 변화가 대부분인데, 이는 산림을 다락밭으로 개간하여 식량증산에 이용하거나, 겨울을 나기 위하여 땔감으로 산림훼손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대지의 경우 농경지 및 산림지역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개간을 통하여 밭이나 과수원 등으로 나대지를 활용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분석에 이용된 영상의 촬영시기에 약간의 차이를 보임으로 인하여 휴경상태의 농경지가 나대지로 분류된 결과가 반영되었을 수 있겠다.

서부 DMZ 남측 및 북측을 비교해보면, 변화면적에 있어 북측의 면적 변화가 보다 크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연구 대상지의 면적이 북측이 좀 더 넓게 분석된 영향도 있지만, 산림의 경우 남측은 39.04km² 북측은 52.37km² 가 다른 토지이용으로 변화되었다. 농경지의 경우 남측은 나대지(16.33km²) 보다는 산림(23.28km²)으로의 변화면적이 넓은 반면, 북측은 산림(11.31km²) 보다는 나대지(56.15km²)로의 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북측은 남측에 비하여 농경지가 관리 소홀 등으로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식량증산을 위해 '70년대부터 조성했던 다락밭의 경우 관개 시설 등이 미비하고 또한 지속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현실이며, 하계 집중 강우 시 표토 등의 토사유출로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4.1.4 토지이용의 공간적 변화 분석

면적변화를 통해 DMZ 지역의 토지이용의 양적인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토지이용간의 변화는 DMZ 서부지역의 공간적 변화를 반영할 수 없으며, 이에 '87년에서 '02년에 이르는 동안 공간적인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은 서부 DMZ 지역에서 토지이용변화가 나타난 지역을 표시한 것으로 DMZ 내부를 제외하고는 DMZ 지역이 전반적으로 토지이용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MZ 지역 남측구간을 살펴보면, 통일대교 건설, 국도1호선의 연결 등으로 인한 토지이용변화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단반도의 경우 대규모 면적의 토지이용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87년에는 산림지역이 대부분이었지만 '02년에는 나대지와 일부 농경지로의 변화되었다.



<그림 10> DMZ 지역의 토지이용의 공간적 변화 분석

민통지역에 비하여 남방한계선에서 군사분계선에 이르는 DMZ 내부지역의 경우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단 대성동마을 및 판문점 주변지역의 경우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DMZ 북측구간을 살펴보면 남측구간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토지이용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접근이 자유롭지 못한 군사분계선에서 북방한계선에 이르는 지역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화공을 통한 시계확보 그리고 군부대의 식량증산 또는 땀감마련을 위한 산림벌채 등이 그 원인이라 하겠다. DMZ 남측 및 북측구간 모두 양 한계선 및 군사분계선과 같은 방향의 선형으로 매우 뚜렷한 토지이용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남

· 북한 모두 군 작전 및 보초근무를 위한 시설물들이 DMZ 내부에 건설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임진강 수체 구간 또한 변화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첫째, 하천흐름에 따른 사구의 변화 또는 수량의 변화에 따른 차이일 수 있으며, 둘째, 영상 분류상의 오차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분석에 이용된 두 영상은 모두 봄 영상으로 모내기 시기의 영상이다. 이에 논에 물이 대어진 상태와 하천의 얕은 물 지역이 같은 토지이용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2 경관구조변화 조사

4.2.1 산림의 경관구조 변화

1) 서부DMZ 남측 산림 변화('87 ~ '02)

생태적 측면에서 경관구조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87년에서 '02년에 이르는 사이의 산림지역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양적으로 15년 동안 산림훼손이 계속되었음을 전제로, '87년의 DMZ지역 산림(밝은 색)과 '02년의 DMZ 지역(어두운 색) 산림을 중첩하였다. 밝은 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87년에는 산림이었으나 '02년에는 다른 토지이용으로 변화된 지역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11).

서부 DMZ 남측의 경우 DMZ와 민통선지역의 산림현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 평화리, 판문점 그리고 남북연결도로 구간을 제외하고는 DMZ 내부는 대부분 산림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민통지역의 경우 계곡지역의 산림이 상당부분 훼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표고와 경사가 낮은 계곡지역을 농경지나 과수원 등으로 토지이용을 변경시킨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겠다. 특히 임진강 주변 장단반도 일부지역의 경우 대규모로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자세한 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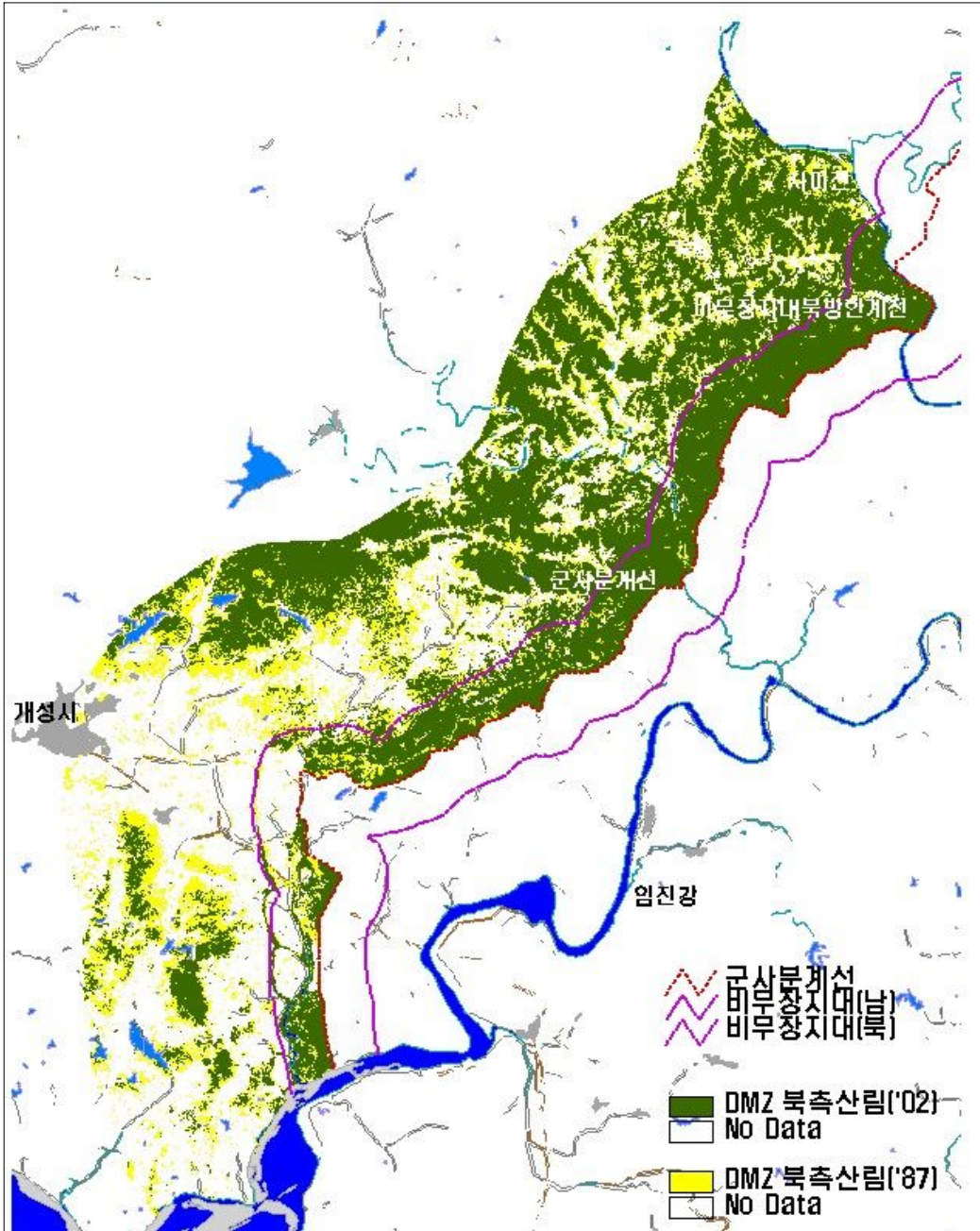


<그림 11> 서부DMZ 남측 산림 변화('87~'02)

2) 서부DMZ 북측 산림 변화('87~'02)

서부 DMZ 북측의 산림의 DMZ 내부를 살펴보면 장풍군 서암리 지역의 경우 군사분계선과 동일 방향으로 선형으로 산림이 훼손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군사적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훼손된 결과라 할 수 있겠다(그림 12). 장풍군 구화리 지역과 같이 산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표고와 경사가 낮은 계곡부에서부터 산림훼손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농경지

와 나대지 주변의 산림지역의 경우 산림훼손의 정도가 보다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무장지대 내부의 경우도 거의 마찬가지로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12> 서부DMZ 북측 산림 변화('87~'02)

4.2.2 경관지수 분석결과

1) 서부 DMZ 남측구간 분석결과

총 9가지 경관지수를 분석한 결과, 서부 DMZ의 남측구간의 경우 어느 정도 산림 조각의 파편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표 10). 서식처 조각의 크기분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PSSD의 경우 15년 동안 약 94 ha로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림이 파편화되면 산림 조각의 개수는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각의 개수(NUMP)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산림복원에 의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전체산림 조각의 면적이 감소하였으며(CA값, 약 3,793ha 감소), 산림조각의 경계부 길이 값이 감소한 것을 보면(TE값, 약 129,840m 감소), 이는 산림조각 자체가 다른 토지이용으로 변화한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식생이 남아있던 구릉지를 완전히 개간하여 농경지화 하였다라고 가정한다면, 산림의 면적, 조각의 개수 및 경계부의 길이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산림 면적에 대한 경계부 길이의 비율을 보게 되면 오히려 '02년에 증가하였는데, 이 또한 산림조각들이 훼손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조각요소가 얼마나 견고한 지를 나타내어주는 지수인 조각형태지수(MSI) 값은 각 조각들의 형태에 대한 값으로 훼손이 적으면 1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되며 형태는 원형을 보이게 된다. '87년에 비하여 '02년의 값이 보다 커졌다는 것은, 원형과 같이 정형화된 형태의 산림조각들이 계곡부로부터 파편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겠다. 나머지 3개의 지수는 내부핵심지역의 면적의 변화양상을 보여준다. 내부핵심지역이란 간섭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으로, 야생동식물에 있어 서식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계부에서 120m의 완충공간을 두고 그 내부공간만을 내부핵심지역으로 계산하였다. 내부핵심지역의 전체면적(TCA) 그리고 평균면적(MCA)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야생동식물의 서식공간이 그만큼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표준편차(CASD) 면적 또한 줄어든 것은 작은 크기의 산림조각들이 훼손에 의해 사라지거나, 파편화에 의해 내부면적이 그만큼 축소되었음을 알려준다고 하겠다.

<표 10> 서부 DMZ 남측의 경관구조 변화('87~'02)

(단위: m²)

NAME	CA	NUMP	PSSD	TE	ED	MSI	TCA	MCA	CASD
서부DMZ 남측 '87	28218.24	564.00	1014.63	2472240.0	87.61	1.36	12830.76	34.03	617.24
서부DMZ 남측 '02	24425.28	496.00	920.65	2342400.0	95.90	1.42	10306.44	22.90	457.18

2) 서부 DMZ 북측구간 분석결과

앞서 살펴본 토지이용변화 결과에 따르자면, 북측구간의 경우 산림 훼손이 남측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보다 계량화시킨 결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11).

산림면적(CA)의 경우 약 6,750km² 정도 감소하였으며 산림조각의 개수(NUMP)의 경우 기존 산림조각의 35%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산림조각의 표준편차(PSSD) 면적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산림면적과 개수가 감소한 것과 연계하여 분석해보면, 섬 형태를 보이는 소규모 산림조각들이 농경지 또는 나대지로 변경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산림조각의 표준편차 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이는 다음 분석요소인 산림조각의 경계부 길이값(TE)을 통해서도 유추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다. 파편화는 일반적으로 2가지의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다. 첫째는 하나의 큰 산림조각이 2개로 나뉘게 되는 경우로, 조각의 둘레길이는 증가하게 된다. 두 번째는 하지만 파편화가 조각의 경계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조각의 면적이 감소하게 되면서 경계부 길이 또한 줄어들게 된다. 첫 번째의 경우는 도로의 건설이나 대규모 토목공사 발생 시 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며, 두 번째의 경우 식량증산을 위하여 산림을 농경지화 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경우 대규모 토목공사는 고속도로의 건설이나 댐 건설 등을 제외하고는 흔치 않은 경우라 할 수 있으며, 이에 개성지역의 산림훼손은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림지역을 농경지로 변경하거나 또는 에너지 난을 해소하기 취약인근 산림의 잡목을 모두 떨감으로 이용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조각형태지수(MSI) 또한 값이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내부핵심지역의 면적과 관련된 지수(TCA, MCA, CASD)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또한 앞의 설명을 뒷받침해준다고 하겠다. 즉 내부핵심지역이 줄어들게 되면 내부종의 행동권역이 제약을 받게되며, 종다양성 즉 종 풍부도 또한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표 11> 서부 DMZ 북측의 경관구조 변화('87~'02)

(단위: m²)

NAME	CA	NUMP	PSSD	TE	ED	MSI	TCA	MCA	CASD
서부DMZ 북측 '87	32328.36	1363.0	695.91	3248400.0	100.48	1.26	14052.24	31.09	576.33
서부DMZ 북측 '02	25578.00	900.0	724.83	2658960.0	103.95	1.30	10528.56	29.16	521.72

남측과 북측구간의 분석결과를 서로 비교해보면, 우선 산림훼손의 면적이 남측에 비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산림조각의 개수도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산림조각의 표준편차(PSSD)면적의 경우 남측은 15년 동안 줄어든 반면, 북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준편차값의 증가는 조각요소들의 분산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의 경우, '87년에는 비교적 균등한 산림조각들이 그 구성의 대부분을 이루었으나, '02년에 이르러서는 큰 조각들과 작은 조각들이 함께 존재함을 나타내어주는데, 이는 곧 산림의 파편화 현상으로 인하여 작은 크기의 산림조각들이 증가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4.3 DMZ 지역 환경보전방안

4.3.1 DMZ 보전방안 정립

DMZ는 1950년 정전 이후 끊임없이 변화하는 살아있는 생태계이다. DMZ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영농활동 그리고 군사활동과 같은 인간활동과 자연생태계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 지속 가능한 발전개념에 입각한 환경보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DMZ 남측구간에 대해서 만이라도 보전 및 활용모델을 정립해야할 시기가 아닌 가 판단된다. 기존 연구에서 기 제시된 표 3의 경우처럼 군사분계선에서의 거리와 같은 접근성을 그 평가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지형, 수문, 지역주민의 생산활동 및 군 작전상의 제한요인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절차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자원에 대한 인벤토리 맵이 정확히 구축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광역의 분석을 위해서는 GIS 및 원격탐사와 같은 기법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GIS 및 권역 등에 의해 DMZ지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역선정을 위한 지표로는 크게 법적 평가기준 및 환경·생태적 평가기준으로 구분하여 구축될 수 있겠다(전성우 외, 2003). 법적 평가기준으로는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등의 자연환경부문의 평가항목 및 수질환경부문의 평가항목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환경·생태적 평가기준으로는 생물종다양성,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도로접근성 등이 주요한 평가항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DMZ 생태환경평가시스템이 구축되면 물리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관

리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로 관리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관리지역은 크게 핵심보전지역, 완충지역 및 인간활동지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관리지역은 지형·지물의 현황과 연계하여 정확한 ‘관리지역지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즉 관리원칙의 제시는 기존에 구축된 DMZ 인벤토리 맵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DMZ 권역의 관리와 복원 기준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하겠다. 예를 들어, 녹지의 네트워크(Green Network)를 위해서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파편화된 녹지조각요소를 포함하는 관리원칙이 구축되어야 한다. 즉 이미 파편화 되어서 황폐화될 위기에 놓인 취약생태계(황폐화된 녹지조각요소 등)들의 경우도 녹지네트워크 연결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복원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녹지뿐만이 아니라 하천의 연결(Blue network) 또한 중요하다. 저수지, 습지, 수로 및 실개천 등을 연계시키고 또한 주변 녹지와도 연결시켜 보전 및 복원할 수 있는 디테일한 인벤토리 맵이 구축되어야 하겠다. 즉 개별적인 생태 조각요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네트워크의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분석하여 핵심보전지역 및 완충지역 등을 평가 및 선정하여야 하겠다.

넷째, 구축된 관리시스템을 통한 DMZ 지역의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DMZ 내부지역은 군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원칙적으로는 군사분계선에서 남·북방한계선까지의 거리는 2km 폭원이지만, 현재 북한의 경우 일부지역의 북방한계선을 지속적으로 남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사분계선과 불과 1km까지 DMZ를 좁히고 있다. 북방한계선의 남진은 곧 DMZ 내부지역을 특수토지인 군사용 토지로 이용 및 관리하게 됨을 의미하며, 이는 곧 DMZ 내부의 환경훼손을 일으키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사계청소를 위한 지속적인 화공이나 야생동물이 건드린 지뢰로 인한 산불 또한 생태계의 교란을 일으키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군작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DMZ의 관리 및 복원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훼손이 발생하였는지를 보다 과학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탐지 자료는 위성영상 등을 활용하여 구축될 수 있으며, 향후 DMZ 지역의 군 작전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현재 DMZ 관리의 당사자인 군(軍)에 의한 DMZ 자연환경조사 등의 작업을 촉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4.3.2 DMZ 활용방안 정립

1) 생태관광의 필요성

DMZ 지역은 개발 보다는 보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지역주민

들의 경제활동 없이는 DMZ 지역의 환경보전 또한 담보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철원지방이 겨울 철새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농업 용수를 위한 인공저수지의 개발과 기계화 영농활동에 있다 할 것이다. 즉 철원 철새도래지가 인간활동의 결과를 통해 후천적으로 조성되어졌음을 볼 때, DMZ 지역 보전 및 활용은 자연생태계 그 자체만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되며, 지역주민의 경제활동 및 생활터전으로서의 입장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DMZ 지역의 활용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안보관광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관광이다. 지속가능한 관광은 '사회, 문화, 생태 그리고 경제적 적합성을 만족시키는 관광으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와 미래세대에 걸쳐 사회·윤리적으로 평등하며, 문화적으로 적합하고, 생태적으로 지속되며,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관광(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0)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관광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지속가능해야 한다. 아무리 지속가능한 관광지라 할 지라도, 경제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본래의 계획과 같이 자연친화형 관광지로 관리·운영도리 수 없으며, 또한 경제적인 지속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현재의 대중관광처럼 그 역효과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DMZ 일원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관광형태는 곧 생태관광이라 할 수 있다. 생태관광은 기존에 이루어지던 대중관광과는 달리 비교적 훼손되지 않은 자연 지역에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 등을 감상하면서 관찰, 학습하는 관광으로서 관광지의 자연환경 및 지역문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연보전 및 지역사회의 이익에 기여하는 관광이라고 볼 수 있다. DMZ 지역의 경우 특히 생태관광의 필요성은 그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문화 자원의 보호와 함께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득의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아울러서, 영구적으로 현존 자원을 보호하면서 이를 자연학습의 소재로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2) 생태관광 방안

철원군의 경우 철원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무엇인지를 조사해본 결과, 철원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DMZ/땅굴/군부대 등을 든 것이 가장 많았고, 철원평야의 청정쌀이나 두루미를 포함한 철새에 대해서는 낮은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철원의 관광이미지도 안보관광지가 54.8%, 두루미 등 탐조관광지가 22.1%, 녹색관광지 12.6%, 역사·문화 관광지 7.7%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면에 탐조, 녹색 및 역사관광지를 모두 합치면 42.6%로 향후 효과적인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면 생태관광지로 부각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

을 나타내주고 있다(철원군, 2002).

철원군은 현재 광활한 평야의 기계화된 농법으로 풍부해진 먹이(낙곡)를 찾아 많은 기러기류가 도래하고 있어, 내륙지역으로서는 우리나라의 최대의 철새도래지역이다. 철새보전을 극복하여 경제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루미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지역으로서 이미지를 브랜드화해 판매를 촉진하는 한편, 두루미 보호를 매개로 한 도농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확실한 수요처를 확보해 나가는 방식으로 주 산업인 쌀 농업을 살리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DMZ 일원의 농산어촌 마을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도시민들의 농산어촌 생활체험관광 또는 그린투어 대상지로 개발되어 관광수입을 늘려 가는 한편, 특산물 가공(고성군의 햄·소시지 가공, 양구의 쌀 가공품, 인제의 산약초 가공)을 통한 고품질 환경친화산물과 지역특산물의 판매를 촉진시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즉 특화된 농수산물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의 환경·청정 농산품을 개발하고 이를 브랜드화하여 외지 소비를 촉진하고, 제조업과의 연결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추구해야 한다(전성우 외, 2003). 현재 이러한 개발은 농림부, 행자부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직 그 성과를 논하기에는 이르지만, DMZ 일원의 관광개발이 초래할 수 있는 환경적 위험과 지역소득 증대의 가능성을 함께 염두에 두다 두면서 지역의 고유한 자산의 보전과 지역산업의 발전을 조화하는 대안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다.

5. 결론 및 고찰

5.1 결론

DMZ의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DMZ의 생태학적 가치를 제대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언론에서 보도된 사실과 같은 60년대 고엽제 살포, 금년 봄까지 수 십 년 동안 이루어져 온 사계청소를 위한 화공작전의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DMZ는 자연이 가진 자생적 회복력에 의해 오늘날 남한의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천연적인 서부와 중서부내륙의 광활한 습원지대와 동부산악지대의 자연성이 우수한 삼림과 계곡을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DMZ 및 민통선지역의 토지이용변화양상을 생태학적 측면에서 파악해보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과거 약 15년 동안 서부 DMZ 지역의 시가화 지역, 산림 및 농경지 등은 양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산림의 경우 양적으로 많은 감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간분석의 결과 산림의 훼손은 민통선지역 뿐만 아니라 DMZ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MZ 내부의 산림훼손의 주요 원인은 산불이라 할 수 있는데, 북한의 경우 화전영농 중 실화, 자연 발화, DMZ내 동물들의 지뢰 밟기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즉 DMZ는 생태적으로는 안정된 원시림의 모습이 아니라, 산불이나 군사적 목적의 인간간섭을 지속적으로 받는, 그래서 2차 천이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생태계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경우 식량난 및 에너지 난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간섭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DMZ 생물상은 인근 민통선조사에 의해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그 생물학적 다양성 가치가 국제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지역임을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DMZ는 한강유역 가운데 북한강의 최상류, 하천 집수역으로서 환경지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미루어, DMZ는 한반도 중부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종과 남북한의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의 마지막 피난처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앞으로 경제적,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가치는 예측 불가능의 높은 생산적 효과와 생태적 기능을 수행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는 서식 종뿐만 아니라, 생태계 다양성에서도 그 학술적 가치가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한 경관분석적 측면에서의 과거 15년 동안의 변화 결과를 살펴본다면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파편화되고, 내부핵심지역의 면적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환경부는 DMZ를 유네스코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는 ‘세계자연유산’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은 분쟁이 잦았던 5개 지역에만 현재 지정돼 있을 정도로 희소성이 높다. DMZ를 관통하는 경의선이 개통되고 남북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면 이곳은 세계적 생태관광코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의선 복원과 도로건설 등에 의한 DMZ의 환경파괴,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을 피해서 생태계의 보고를 지키는데도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측의 반쪽만의 지정은 의미가 없으며, 남북이 함께 유네스코에 지정신청을 하고 이를 계기로 공동 생태조사, 생태지도 작성, 체계적 관리 방안의 마련과 같은 공동보전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5.2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다.

첫째, DMZ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의 현황 및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변화특성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함으로써 향후 DMZ 및 접경지역의 보전 및 개발 정책수립을 위한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대안마련의 기초를 제공한다. 통일이후 DMZ가 철조망을 기준으로 개발과 보전의 갈림길이 될 수는 없으며, DMZ 내부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보전만을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다. DMZ 내부라고 하더라도 군사적 목적으로 산림이 훼손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으며, 반면에 민통선 지역이라도 산림이 잘 보전되거나 사천유역 일대처럼 유네스코 접경생물보전지역으로 지정을 추진 중인 중요한 습지를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저해상도 위성영상의 토지이용분류를 위한 보다 개선된 분석방법인 분광혼합화소법을 이용함으로써, 비접근지역인 DMZ의 분류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몇몇 기관에서 수행한 DMZ의 토지이용분류 결과들이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피복분류기법들이 일반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비접근지역인 북한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하여 GIS 및 원격탐사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정책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북한환경에 대한 대안제시를 보다 구체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최근 들어 북한에서도 국토환경보호성의 국토환경보호사업을 전산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사업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지역의 자연환경요소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GIS 기법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이며 장기적 차원에서 구축할 필요성 또한 제기해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

- 경의선 남북연결도로 환경공동조사단, 「통일대교~장단간 도로확장 및 개설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01, p. 658.
- 김광주, “산의 종합적 리용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산림과학연구논문집■■■, 1988 제1호, pp. 471-480.
- 김귀곤, “비무장지대와 민통지역의 생물상; 과주시 일원”,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p. 191.
- 김귀곤, “자연보전 차원에서 본 비무장지대; 습지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중심으로”, 「비무장지대의 합리적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심포지움」, 2000, pp. 64~80.
- 김룡선, 리선종, 주수길, “우주사진에서 산림류형해석의 적합한 계절과 시기에 대한 연구”, 「지리과학(90.2월호)」, 1990.
- 김명수, 안동만, “도시공원의 경관생태학적 분석 -패취의 형태지수와 분산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Vol.23, No.4, 1996, pp. 12-19.
- 김상욱, 정종철, “식생지수를 이용한 DMZ의 생태적 영향권 조사”, 「한국지리정보학회지」, 제5권, 제4호, 2002, pp. 24-34.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삼성그룹, ‘통일후 한반도 국토공간구상’, 통일시대 한반도 국토개발구상, 1997. 2.
- 류해웅, “통일후 북한의 토지이용과 개발에 대한 기본구상”, 「토지연구」, 제4권, 제1호, 1993.
- 문석기, “DMZ개관: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현황과 과제”,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환경보전과 개발에 관한 국제심포지움보고서」, 한국조경학회. 1996.
- 박영임, “인공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한 북한산국립공원 전이지대 식생분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p. 15-22.
- 박중화, “Landsat 녹색식생지수를 이용한 서울시 도시녹지 변화 조사”, 「한국원격탐사학회지」, Vol.8, No.1, 1992.
- 박찬열, 1994, 야생조류의 서식에 적합한 도시환경립 조성 및 관리 방안,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산림청 임업연구원, 「비무방지대 및 인접지역의 산림생태계 조사 종합보고서」, 1995~2000.

- 서창완 외, “원격탐사와 GIS기법을 이용한 접경지역 토지피복연구”, 『환경영향평가학회지』, 제7권, 제1호, 1998, p. 20.
- 신재훈, “경관구조원리에 의한 생태적 산림보존 경계설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안병민, 임재경, “남북한간 접경지역의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정립 방안(1단계)”, 교통개발연구원, 2002, pp. 38-41.
- 양홍모, 이태희, “비무장지대의 육역 및 하구환경의 지속가능한 계획과 관리”,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환경보전과 개발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보고서』, 한국조경학회, 1996.
- 염형민, “북한의 국토개발: 도시와 교통을 중심으로”, 공보처, 1994.
- 원병오 외, “야생의 보고 비무장지대”, 현암사, 1996.
- 유네스코환경위원회, 『세계 생태관광 총회 선언과 발표자료』, 2002.
- 윤혜정, “통일에 대비한 효율적 국토개발 방안”, 『토지연구』, 제4권, 4-5호, 1993.
- 이규성, 정미령, “북한지역의 토지피복 분류를 위한 위성영상의 시기적 특성”,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대한원격탐사학회, 1998, pp. 34-37.
- 이도원, 『경관생태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이승호, “인공위성에서 본 북한의 산림자원현황”, 『월간임업정보』, 제74호, 임업연구원, 1997, pp. 45-48.
- 전성우, 변병설, 이병준, 『DMZ 일원의 환경보전 기본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3.
- 정미령, 이규성, “Landsat 영상자료를 이용한 평양주변지역의 토지피복변화 분석”, 『한국GIS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997.
- 조도순, “경관생태학적 원리를 이용한 생물다양성 보존”, 『한국생태학회/한국조경학회 공동심포지움 논문집』, 1992, pp. 25-39.
- 철원군, 『철새보존계획 및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II』, 2002.
- 최상철, “비무장지대의 잠재력과 보전/개발 방향”,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환경보전과 개발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보고서』, 한국조경학회, 1996.
- 최태성, 김룡선, 한봉록, 리선중, “우주사진에 의한 토지이용실태와 지도와에 관한 연구(1)”, 『지질과 지리(89. 2호)』, 1989.
- 함광복, “DMZ의 오늘과 내일”, 한림대학교 국제문제 연구소, 1996. 5. 14.
- 홍선기, 이창석, “생태학의 새로운 분야로서 경관생태학의 발전과 역할”, 『한국생태학회지』, 제20권, 제3호, 1997, pp. 217-227.

- Forman, R.T.T., *Land Mosaic: The Ecology of Landscape and Regions*, Cambridge University, New York, 1995, pp. 405-412.
- Forman, R.T.T., M. Godron, *Landscape Ecology*, New York, Wiley, 1989, pp. 85-120.
- Grashof-Bokdam, C., *Forest species in an agricultural landscape in The Netherlands: Effects of habitat fragmentation*, J. Veg. Sci. Vol.8, 1997, p. 21.
- Haines-Young, R., David R.G., and Stevea C., *Landscape Ecology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Taylor & Francis, London. 1993, pp. 129-159.
- Harris L.D., *The Fragmented Fores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IL., 1984.
- John G. Lyon, et. al., *A Change Detection Experiment Using Vegetation Indices*, PE & RS, Vol.64, No.2, 1998, pp. 143-150.
- Kevin McGarigal and Barbara Marks, *General Technical Report PNW-GTR- 351*, FRAGSTATS Manual, 1995.
- Kim S.W., & Park C.H., Spatio-temporal change detection of forest patches of North Korea between 1979 and 1998,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mote Sensing, KSRS*, 2000.
- Kim., C., Remote Sensing for Monitoring for Deforestation in North Korea, *Proceedings of The Joint German-Korean Symposium*, 1998, pp. 76-82.
- Lee, K., Yoon, J., Development of a Methodology to Estimate the Degree of Green Naturality in Forest Area using Remote Sensor Data,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ol.8, No.3, 1999, pp. 82-83.
- Lee., E., *Trend of Forest Fragmentation in the Lower Region of the Han River Basin*,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8.
- Mark J. Carlotto, Detection and Analysis of Change in Remote Sensed Image with Application to Wide Area Surveillance, *IEEE Transactions on Image Processing*, Vol.6, No.1, Jan 1997.
- Naveh, Z., & A.S. Lieberman. *Landscape Ecology: Theory and Application*

2nd ed. Springer-Verlag, New York.

- P.C. Elkie, R.S. Rempel, & A.P. Carr, *Patch Analyst User's Manual - A Tool for Quantifying Landscape Structure*, Ont. Min. Natur. Resour. Northwest Sci. & Technol. Thunder Bay, Ont. TM-002. 1999.
- Park, C., A Study on the Evaluation Method of Urban Open Spaces of Seoul with Remote Sensing: Detection of the Ecotone of the Mt. Pukhansan National Par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emote Sensing*, Vol.11, No.3, 1995, pp. 71-81.
- Park, C., A Study on the Evaluation Method of Urban Open Spaces of Seoul with Remote Sensing: Detection of the Ecotone of the Mt. Pukhansan National Par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emote Sensing*, Vol.11, No.3, 1995, pp. 71-81.
- Robert C. Frohn, *Remote Sensing for Landscape Ecology*, Lewis Publishers, pp. 10-18.
- Robert, H. Gardner, *Center for Environmental Science*, University System of Maryland
- Rodd D. Macleod and Russell G. Congalton, *A Quantitative comparison of Change-Detection Algorithms for Monitoring Eelgrass from Remotely Sensed Data, PE & RS*, Vol.64, No.3, March 1998, pp. 207-216.
- <http://flash.lakeheadu.ca/~rrempe/patch>
- <http://www.csc.noaa.gov/products/sccoasts/html/ccapguid.htm#c3>
- <http://www.innovativegis.com/products/fragstatsarc/manual/index.html>

부시행정부期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GO와 NGO의 상호작용



서 보 혁

(고려대 평화연구소)

목 차

【 요약 문 】	119
1. 서론	121
2. 미국 대외인권정책의 성격과 유형	124
3. 미국의 대북인권정책결정 관련기구	137
4. 부시정부하의 대북인권정책에서 GO와 NGO의 협력 ...	148
5. 결론	172
【 참고문헌 】	176

【 요약 문 】

2000년대 들어 소위 ‘북한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변화가 발견되고 있다.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개입의 증대가 그것이다. 물론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서방의 국제인권단체들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비판과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이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공화당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상황과도 관련된다.

본 논의는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특징을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그것이 한국의 대북(인권)정책에 주는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논의 수준을 정부 차원이 아니라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로 확대한 것은 다원주의적 정책결정과정을 갖는 미국의 외교정책 특징과 그것이 특히 인권문제와 같은 소프트이슈(soft issue)에 더욱 잘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이 글의 연구범위는 시간적 측면에서 볼 때, 1990년대 이후로 하되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의 상호작용은 현 부시정부기에서의 동향을 집중 분석하고자 한다. 본 주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문헌분석, 비교연구, 인터뷰(진행중)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미 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비정부기구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하여 전반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여론 조성과 일련의 입법화를 전개하고 있다. 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북한인권 결의안 추진 등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협력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인권 개선을 향한 미국의 이러한 국내외적 움직임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보다는 북한인권단체와 협력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본 논의의 결과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방향은 한국과 미국 정부는 각각 북한과 쌍무적인 인권대화를 증진하고 국제인권기구를 통한 기술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북정책 차원에서는 양국이 북한인권 문제의 정책적 우선순위 및 접근방식에 관하여 공동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단체의 경우 당면한 북한의 생존권을 회복하는데 일차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북한이 국제인권협약을 준수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 정부와 관련 NGO는 북한인권문제가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된 다른 과제들과 분리된 것이 아님을 직시하고, 북한인권문제가 강대국의 권력정치에 이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접근이 북한인권 상황 개선에도 유의할 것이다.

1. 서론

1.1 연구 목적

2000년대 들어 소위 ‘북한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변화가 발견되고 있다.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개입이 그것이다. 물론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 특히 미국의 반응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이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잇달은 식량부족 사태로 탈북자들이 속출하고, 그러면서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가 국제사회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물론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한 북한인권 실태는 신빙성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의 반복된 증언을 통해 그들이 밝힌 북한인권 상황은 인정되고 있다. 그 결과 국제인권기구들 사이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우려와 개입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유엔 인권기구에서의 북한인권 결의안 추진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둘째, 미국에서 공화당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상황과 관련된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부시 행정부의 등장은 전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정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제네바 핵합의 ‘개선’을 비롯하여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소위 하드이슈(hard issues)에 국한하지 않고 소프트이슈(soft issues)에 대해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강력히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후자의 대표적 이슈가 바로 북한 인권상황이다. 물론 부시정부 들어서도 하드이슈가 북-미관계의 중심적 관심사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인권 문제는 부시정부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강제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라는 점에서 필요한 경우 부각시킬 수 있는 이슈이다. 부시정부의 입장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적대국이자 ‘불량국가’인 북한의 정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인권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하여 대북정책 수행에서 빚어질 수 있는 국내정치적 균열을 돌파할 수 있는 호재로 판단될 수도 있다. 최근 미 의회에서 초당파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북한 인권관련 입법 과정은 그 전형적인 사례들로 볼 수 있다. 부시행정부는 이미 6자회담에서 북한에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미국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우

려와 관심에는 종교의 자유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는 부시 대통령의 종교적 신념과 그의 기독교적 지지 기반을 고려할 때 북한인권 문제는 그의 대북 정책과 국내정치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교집합의 의미를 가진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일국이 타국의 인권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정치(학)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부시정부가 외교적 채널을 통하여 북한에 인권문제를 아직 전면에 부상시키지 않는 대신, 미 의회와 비정부기구가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은 시사적이다.

이 글은 이상과 같은 상황에 주목하여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의 전개과정을 서술하고 그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의주제는 북-미관계 혹은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그동안 큰 관심을 얻지 못해왔던 소프트이슈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 일차적인 의의를 가진다 할 것이다. 논의 방식은 외교정책론의 관점에서 주로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을 논할 것이다. 현재 북-미간에 소프트이슈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주된 관심사이고 따라서 양국간 등가적인 인권외교를 다루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글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첫째,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특징을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하고,¹⁾ 둘째 그것이 한국의 대북(인권)정책에 주는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논의 수준을 정부 차원이 아니라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로 확대한 것은 다원주의적 정책결정과정을 갖는 미국의 외교정책 특징과 그것이 인권문제와 같은 소프트이슈에 더욱 잘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은 현실적으로도 서술에 충실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정부 차원의 논의보다 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1.2 연구 범위와 방법

이 글의 연구범위는 시간적 측면에서 볼 때, 1990년대 이후로 하되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의 상호작용은 현 부시정부에서의 동향을 집중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위 문제의식과 지면의 제약을 고려하여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이 구체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시점에 논의를 한정하기 위해서이다. 또 공간적으로는 미국 국내와 국제사회 등 양측면에서 다룰 예정인데, 이는 부시정부의 외교정책이 일방주의적 특징을 갖는다는 점과 미국의 인권외교의 전개과정이 다자주의적 특징을 갖는다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부시정부의 대

1) 미국의 인권정책 결정기구를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로 구별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의회와, 의회가 설치를 결정한 기구의 경우 위 범주로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3장에서 결정기구를 분류할 때는 국가기구와 비국가기구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북 인권정책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서 다른 행정부의 인권외교정책과 비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 미 행정부의 인권외교정책을 사전 검토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 다음 몇 가지 연구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첫째, 가장 일차적인 방법으로 문헌연구를 채택하였다.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 등 미국내 다양한 정책결정자들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기구의 보고서 및 인사들의 발언 등 1차자료를 분석할 것이다. 여기에는 ①미 백악관, 국무부 등 행정부의 북한 관련 보고서 및 고위 인사들의 발언, ②상하 양원의 관련 청문회 및 법안, ③인권단체 및 관련 인사들의 북한인권 보고서 및 발언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①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의 보고서 및 성명서, ②유엔 인권기구 및 국제 인권단체들의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이나 자료 등을 통해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국제적 동향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로 채택하고 있는 연구방법은 비교연구 방법이다. 이는 단일 사례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좋은 연구방법인 비교연구를 통해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에 대한 객관적 설명과 평가를 시도하기 위해서이다. 구체적으로 현 부시정부를 포함한 미 행정부의 대외인권정책 유형을 상대국의 국력 및 정치체제, 시기 등을 고려하여 몇 가지로 유형화하고 이를 부시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을 설명·평가하는데 기초로 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뷰이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에 관여하는 행정부 인사, 의원, 인권단체 활동가들에게 서면 인터뷰를 실시하여 상기 연구방법을 보충하고자 한다.(현재 진행중)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미국의 인권외교정책의 성격을 논하고 정책 사례를 검토하여 그 유형을 도출해볼 것이다. 3장에서는 미국의 대북 인권외교정책 결정기구를 살펴보고 각 기구의 역할과 상호 관계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사례연구로 부시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을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데, 미국과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인권 관련 동향을 동시에 검토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한국의 대북인권정책 및 한-미간 대북정책 협력에 주는 시사점과 과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2. 미국 대외인권정책의 성격과 유형

2.1 정책 목표

미국이 세계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미국민의 가치와 국가이익이라는 두가지 대내적 요인이 국제사회에 투사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을 국시로 하고 있다. 이는 정치엘리트들 뿐만 아니라 전국민적인 동의를 얻은 미국의 가치관으로 자리잡았고, 미국의 외교정책이 고립주의에서 벗어나면서부터 대외문제에서도 이런 가치관이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세계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국제적으로는 동서간 긴장완화, 국내적으로는 민권운동의 활성화와 베트남전쟁 개입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난 1970년대 초반이었다. 또 냉전체제의 확립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속한 제3세계 국가들에서 인권탄압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내에는 이들 국가들의 독재정권에 대한 지지 및 지원에 대한 비판도 미국내 여론과 정가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 비판적 시각에서 보면 세계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데탕트 이후 대외정책을 수행하는데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국내정치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권의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미국이 인권문제를 이상과 같은 배경에 의해 수동적으로 바라보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미국은 인권문제에 관한 관심을 통하여 미국의 도덕적 이미지는 물론 세계 지도국가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물론 미국은 인권외교를 표방하면서 그것을 국가이익 증진과 연계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미국이 대외적으로 인권정책을 전개하면서 얻고자 한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²⁾

첫째, 이념적 목표이다. 미국은 건국 이후 추구해온 자유, 근본적 권리와 같은 기본가치를 외교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건국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왔으며 그것을 외교정책 목표의 하나로 삼아, 인권과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와 국제적 행동에 반대한다.

둘째, 미국의 국익과 직결되는 측면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국가에서는 그 사회의 어떤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한 징후로 판단되고 그것은 결국 미국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일부 중동 아랍국가들

2) 홍득표, 이범준 외, “미국의 인권정책,” ■■미국외교정책: 이론과 실제■■(서울: 박영사, 1998), p. 284.

의 인권탄압과 불안정한 내정은 미국의 석유 수급과 중동정책에 차질을 줄 수도 있다.

셋째, 같은 맥락에서 인권침해는 국제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인권정책의 중요성이 재확인된다. 이는 미국이 특정 국가의 국내정치의 불안이 해당 지역의 국제적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에 대하여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넷째, 미국의 가치관 수호 및 확산을 목표로 하는 미국식 외교정책의 특징과 관련된다. 즉, 세계의 인권존중이 미국의 가치를 보호하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국익과 관련이 있는 국가에서 인권이 존중된다면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인권이 갖는 의미와 그 정책적 목표를 살펴해보았는데, 이것은 미국이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세계 인권 증진에 높은 관심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대외정책의 특징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인권이 일국의 대외정책의 일부로 추구된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과정에서 보편성과 일관성 등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론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평가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2.2 정책수단

미국이 대외인권정책을 수행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미국의 국력에 상응하여 다양하다.³⁾ 여기서는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제시하고 있는 흥득표의 논의를 소개하면서 본 주제에 관련하여 약간의 코멘트를 추가하고자 한다.⁴⁾

2.2.1 여론조성

미국은 매년 국무부에서 ‘세계 각국의 인권보고서’(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를 발간하여 인권 위반국을 지목하여, 그 구체적인 내

3) 뉴섬(Newsom)은 미국 인권외교의 수단으로 접근, 공식성명, 입법, 특정 인권프로그램, 동맹국 정부와 협의, 다국적 은행, 국제기구, 민간기구 등 8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David D. Newsom, *The Diplomacy of Human Rights*; 김계수 역, ■■■미국의 인권외교■■■(서울: 탐구당, 1988), pp. 17-21. 또 베헤르(Baehr)는 조용한 외교, 제재, 개발지원, 외교관계, 개입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Peter R. Baehr, *The Role of Human Rights in Foreign Policy*(London: The Macmillan Press, 1994), pp. 31-41.

4) 흥득표, 앞의 논문, pp. 286-290.

용을 폭로하고 세계 여론을 환기시키고 해당국에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국가를 지명하여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naming and shaming) 방법은 미국의 높은 도덕성을 전제로 하는데 때로는 이를 둘러싸고 미국과 미국이 지목하는 인권위반국 사이에 외교적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상의 북한인권 위반 내용에 대하여 북한은 ‘사실무근’, ‘내정간섭’, ‘이중잣대’ 등의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2.2.2 조용한 외교(quiet diplomacy)

일국이 타국의 인권문제로 타국의 국내 법 및 제도, 정책 등에 간여할 경우 내정간섭의 소지를 갖고 있어 필요 이상의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고, 애초 인권외교의 목적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조용한 외교는 비대결적인(nonconfrontational) 방법으로 인권위반국으로 판단되는 국가의 정부나 의회를 설득하여 사실 인정, 개선 등을 요구한다. 조용한 외교가 성공할 관건은 상대국의 자존심, 정체(polity) 등을 건드리지 않는 것과 인권 위반 사실 인정 및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의 제공 등 두 가지이다. 따라서 조용한 외교는 대개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진행된다. 예를 들어 미국이 냉전 시대 소련 당국과 비밀 협의를 통해 반체제인사의 미국행을 허용받은 것이나, 최근 한국정부가 재중 탈북자의 한국으로의 입국을 위해 중국과 벌이는 비공개 협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2.2.3 개입(intervention)

개입은 국내문제에 대한 외국의 간여를 말하는데, 인권문제의 경우 해당국 내에서 인권위반 행위가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반인륜적인 수준에서 진행될 때 국제사회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유엔의 결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국제법적 근거가 된다. 미국은 舊유고슬라비아 연방의 붕괴 과정에서 일어난 ‘인종청소’, 르완다 등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의 대량학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개입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동티모르에서의 대량학살에는 개입하지 않았고, 유고 및 아프리카의 경우에도 개입 시점과 방식 등을 살펴볼 때 해당 지역이 미국의 국익에 차지하는 비중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응하였다.⁵⁾ 이런 점에서 개입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5) 강성학, ■■새우와 고래싸움: 한민족과 국제정치■■(서울: 박영사, 2004), pp. 276-277.

2.2.4 압력과 영향력 행사

미국은 인권 위반국에 대하여 자국의 정책자원, 혹은 국제기구 등을 통하여 압력과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미국은 경제·군사원조 등을 지렛대로 인권위반국 정부에 인권 개선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가까운 예로 미국은 한국의 박정희 정권시절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잉여농산물, 신형 무기 판매, 미 수출입은행의 지불보증 중지 등을 압력수단으로 행사한 바 있다. 또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지역 개발은행 등에 높은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위치를 활용하여 특정 국가의 인권개선을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1997년 미국은 크로아티아가 소수자 보호와 전범 체포에 실패하자 국제통화기금의 대부를 중단시킨 바 있다. 그러나 국제경제기구를 이용한 미국의 외국에 대한 인권개선 압력은 일관성에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기구를 통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추진이 국제인권 전망을 어둡게 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⁶⁾

2.2.5 보상과 원조중단

미국은 인권상황이 개선되는 국가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보상을 해주거나, 그렇지 않은 국가에게는 원조를 중단하기도 하였다. 특히 카터행정부는 미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은 한정된 미국의 자원을 배분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로 대외원조와 인권을 결부시켰다. 탈냉전기에 들어서도 미국은 인권과 보상 혹은 원조중단을 계속 연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1993년 과테말라정부가 의회 해산, 사법권 정지, 헌법상 기본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자 원조를 중단하고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제공 중단을 경고하였으며, 교역상 혜택을 박탈한 바 있다.

미국이 인권과 연계한 대외원조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1999년의 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 시절 인권에 대한 고려는 어떤 외국이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원조를 받을 지를 결정하는데 하나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카터와 클린턴 행정부때는 그렇지 않았다. 클린턴 행정부를 예외로 한다면, 인권은 비록 그 중요성이 이차적이라고 할지라도 미국의 대외경제원조를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결정변수였다. ... 인권에 대한 고려는 원조 할당에 있어서 유일한 혹은 중요한 고려사항은 아니었다.”⁷⁾

6) David P. Forsythe, “US foreign policy and human rights: The price of principles after the Cold War,” in David P. Forsythe, ed., *Human Rights and Comparative Foreign Policy*(Paris: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1999), pp. 32-33.

7) Clair Apodaca and Michael Stohl, “United Human Rights Policy and Foreign Assistance,”

2.2.6 경제제재

인권과 연계된 경제제재도 미국 인권외교의 수단이 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인권을 이유로 최혜국(MFN)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다. 인권침해가 심한 중국에 부여했던 최혜국 지위를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제한하려는 논의도 여기에 해당한다. 세계 각국의 인권 개선을 위하여 경제제재를 연계할 때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실증적인 사례를 살펴볼 때 반대의 경우도 많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⁸⁾ 한편 인권침해국에 대한 다른 경제적 압력수단으로 미국의 다국적 기업의 태도를 꼽을 수 있다. 미국 다국적 기업은 인권침해국에 투자하거나 교역을 하고자 할 때 의회가 정한 사업 상대와의 계약조건, 국가선정 기준, 모형기업원칙 등 관련 인권 법률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2.2.7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와의 공조

미국은 외국의 부도덕한 행태를 개선하려는 외교방법으로 국제기구를 활용해왔는데, 유엔과의 공조가 가장 대표적이다. 미국은 유엔헌장에 명시된 인권선언과 국제인권법을 근거로 인권침해국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 모든 국제인권법에 서명·비준한 것이 아닌 점이나, 국가이익에 따라 인권외교가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 미국의 유엔 인권외교의 정당성 및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 또 미국은 유엔 이외에 국제인권단체와 연계하여 인권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데 Human Rights Watch, Amnesty International 등 유명 국제인권단체와 공조를 취하고 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미국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개선 압력을 가하는데 있어서 유엔은 물론 국제인권단체,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2.2.8 군사력 사용

군사력은 국제갈등을 해소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나 무력동원은 결국 무고한 양민의 희생을 수반하기 때문에 또다른 차원의 인권침해 논쟁을 불러일으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43, No.1(March 1999), p. 185.

8) Mohammed Ayoob,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Vol.6, No.1(Spring 2002), pp. 81-102; Bertil Duner, "Violence for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Vol.5, No.5(Summer 2001), pp. 46-71. 결국 인도주의적 개입을 둘러싼 논란은 그 명분과 실제상의 괴리에서 빚어진 비일관성과 위선의 문제로 귀결된다. Alex J. Bellamy,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the Three Traditions," *Global Society*, Vol.17, No.1 (January 2003), pp. 19-20.

킬 수 있다. 미국이 인권수호나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군사력을 동원한 대표적인 예는 1983년 그라나다, 1989년 파나마에 대한 군사행동을 들 수 있다. 미국은 냉전 붕괴이후 유엔과 협의하거나 동맹국과 협력하여 다국적 평화유지군 혹은 연합군을 분쟁지역에 투입하여 분쟁 중재와 시민의 생명 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미국은 국력과 국제적 지위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인권외교 정책수단을 갖고 있는데, 그 방식은 미 행정부의 단독 행동, 동맹·우방국과의 협조,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등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물론 실제 특정국에 대한 인권정책을 실시할 때는 3가지 방식이 조합되어 나타난다.

2.3 정책 유형

일국의 인권정책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국내인권법과 국제인권법 간의 상대적 우위문제이다. 예를 들어 헝가리 헌법은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이 국내법에 우선하는 반면 미국은 전통적으로 그와 반대이다. 다른 하나는 자유권과 사회권의 상대적 우위 문제이다. 모든 국가들은 사회권을 추상적으로 수용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무시하고 있다. 미국은 사회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⁹⁾

이 두 가지 측면을 통해 미국의 대외인권정책의 기본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각기 다른 대외인권정책 유형에도 불구하고 그 밑바탕에서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정책 기조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첫째, 미국의 대외인권정책은 국내 인권법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국제인권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대외인권정책은 국제인권법의 선택적 적용으로 국제적 보편성과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미국은 인권을 자유권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어 사회권, 발전권 나아가 평화권 등은 미국식 인권 범주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해외 인권상황에 대한 판단이 특정 인권범주로 치중되어 있으며 상대국의 사회권 등에 대한 요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인권개선 과정에서 부작용 혹은 국제적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상 두가지를 전제로 미국의 대외인권정책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그 속에서 정책기조의 지속성이 발견되는 지도 검토해보도록 하자. 아래에서 살펴볼 미국의 대외인권정책 유형은 대북 인권

9) David P. Forsythe, "Introduction," in David P. Forsythe, ed., *Human Rights and Comparative Foreign Policy*(Paris: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1999), p. 9.

정책을 비교의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3.1 집권당별 비교

닉슨행정부(공화당)의 대외인권정책은 데탕트 조성을 위한 대소 유화정책으로 정책적 비중이 높지 않았다.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키신저(Kissinger)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우리의 한계를 의식하는 것은 도덕적 무감각이 아니라 평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과 사회를 유지하는 것도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¹⁰⁾ 그러나 닉슨정부의 대소 유화책은 소련의 인권 개선과 미국의 교역확대를 연계시킨 의회의 반발을 초래하였으며, 앙골라에서 소련이 보인 무력개입으로 국내의 비판 여론에 더욱 직면하였다. 말하자면 닉슨정부의 국제적 세력균형정책은 국내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¹¹⁾

이에 비해 카터 행정부(민주당)는 미국의 대외정책 목표에 세계 인권 증진을 포함시킴으로써 닉슨 행정부와 차이를 보였다.¹²⁾ 카터 정부의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브레진스키(Brezinski)는 데탕트가 아니면 전쟁이라는 키신저의 가정을 거부하였고, 미국의 대안을 그 둘로 환원하는 것은 미국의 행동 자유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대소정책에 인권을 부각시킨 브레진스키는 소련 내에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였다. 그는 그런 대소정책이 소련이 군사적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지지를 받으면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소련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의 도덕적 권위를 재수립하여야 하고, 다른 한편, 그것은 소련을 다름으로써만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 카터정부의 외교정책상 딜레마였다. 물론 미 행정부의 대외인권정책에 대한 대내적 조건의 영향력이 높아져갔다. 그것은 특히 미국이 베트남전쟁 개입과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난 직후 국가주의적 사고가 높아진 상태에서 더욱 요구되었는지도 모른다. 카터정부 이전부터 인권을 미국의 대외지원과 연계시킨 의회의 입장은 더욱 분명하였다. 그

10) Henry Kissinger, "The Process of Detente. Statement Delivered to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September 19, 1974," in Henry A. Kissinger, *American Foreign Policy*, 3rd ed.(New York: Norton, 1977), p. 145.

11) Stanley Hoffmann, "Will the Balance Balance at Home?," *Foreign Policy*(Summer 1972); Gebhard Schweigler, "Carter's Detente Policy: Change or Continuity?," in Barry M. Rubin and Elizabeth P. Spiro, eds., *Human Rights and U.S. Foreign Policy*(Boulder, CO: Westview Press, 1979), p. 165에서 재인용.

12) 카터정부의 인권외교를 국제인권규범의 제도화를 위한 비정부기구간 초국가적 네트워크에 기인한다는 구성주의적 분석으로는 Daniel C. Thomas, "Boomerangs and Superpowers: International Norms, Transnational Networks and US Foreign Policy,"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15, No.1(2002), pp. 25-44 참조.

런 점에서 카터정부는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카터의 인권외교는 공산권의 반체제 인사들을 돕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가, 데탕트의 종식이 미국의 우방국에 미칠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또 소련의 브레즈네프는 군축과 인권을 연계시킨 카터의 정책을 수용하지 않았다.¹³⁾ 나아가 카터정부의 인권외교는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동서 냉전질서의 현상유지 필요성에 밀려 퇴조하였다.¹⁴⁾

다시 공화당의 레이건정부는 반소비에트주의와 이종기준을 특징으로 하는 대외인권정책을 전개하였다. 첫째, 레이건정부의 안보외교는 반소 안보정책의 도구로 다뤄졌다.¹⁵⁾ 인권 탄압이 심각한 남미 등 제3세계 반공 권위주의정권에 대한 원조는 이같은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둘째, 레이건정부는 전임 카터 정부가 전체주의와 권위주의를 구별하지 못하여 그 둘이 미국의 국익에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을 판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패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레이건 정부는 미국의 국익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연공(聯共) 전체주의를 견제하기 위하여 반공 권위주의정권에서의 인권침해를 묵인한다는 이중논리를 전개하였다. 레이건정부의 인권외교정책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도덕적 우위와 영향력을 약화시켰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국익 추구에도 기여하지 못하였다.¹⁶⁾ 그러나 아래에서 언급하는 민주당 클린턴정부의 대중 인권정책도 인권을 강조하는 외교적 수사(rhetoric)에도 불구하고 무역 등에서의 국가이익에 영향을 받으며 독자적인 외교정책적 위치와 비중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2.3.2 시기별 비교

다음으로 미국의 대외인권정책을 냉전시기와 탈냉전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자. 먼저, 레이건정부 2기까지 전개된 냉전시기 미국의 인권외교는 안보외교에 종속되며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냉전기 미 행정부 중 인권외교를 강조한 카

13) Schweigler, "Carter's Detente Policy: Change or Continuity?," pp. 166-170.

14) Diane F. Orentlicher,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Richard P. Claude and Burns H. Weston, eds., *Human Rights in the World Community*(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2). p. 343.

15) 1981년 미 국무부의 '세계 각국의 인권보고서' 서론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세계에서 인권을 위한 일관되고 진정한 정책은 소련을 정치적으로 견제하는 것이며, 반복하여 소련 진영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세계인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것이다." "Introduction to the State Department's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for 1981," A. Mower Jr., *Human Rights and American Foreign Policy: The carter and Reagan Experiences*(Conn. Greenwood, 1987), p. 26에서 재인용.

16) 박영호·최선근,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대외인권정책에 대한 규범적 비판," **국제정치논총** **35**, 제35집 2호(1995), pp. 251-267.

터 행정부조차도 이런 평가에서 예외는 아니다. 물론 미국과 서방국가의 정부는 서구사회가 소련과의 이념적 투쟁에 큰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 인권문제를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였다.¹⁷⁾

카터 행정부 시절에도 한국은 인권탄압국에 대한 원조를 삭감한다는 의회의 법안 제출에도 불구하고, 필리핀과 함께 그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미 행정부의 대외인권정책이 소련 견제와 동맹국 보호 등 더 큰 국가이익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과 특정국에 대한 인권논란은 미국 행정부와 해당국 정부가 아니라 미 의회 대 해당국 정부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¹⁸⁾ 실제 미 행정부가 한국의 인권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제한되어 있었으며, 전략적 이유로 인해 인권외교의 의지도 부족하였다.

결국 카터의 대소 인권외교는 군축협상에서 하나의 협상카드로 활용되었다. 집권 2년째인 1977년 가을에 접어들어서 이미 카터정부는 인권이 외교정책의 유일한 최고 가치가 아님을 공언하였다. 그런 입장은 “국제적 긴장의 축소가 결국 국 인간의 창의적 잠재력을 전면 실현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대내적 압력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로 설명되었다.¹⁹⁾ 이런 점을 들어 일부에서는 냉전기에 미국을 포함한 서방 민주국가들이 인권문제에 관하여 방어적이거나 소련 등 세계 각지의 인권위반에 저항하기를 중단하였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를 ‘위험 제한’(danger limitation)이라고 말한다.²⁰⁾

그렇다면 냉전 붕괴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인권의 비중은 높아졌는가? 미국은 탈냉전 이후(특히 1991-93년) 유엔의 복잡한 평화유지 프로그램을 확대하였는데, 이는 미국이 국제 평화 및 안보가 일국내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미국의 대외인권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다자적이든지 양자적이든지 간에, 생명이나 물질적 비용을 크게 감수하지 않으려는 경향이다. 이는 소말리아 사태 후 적은 사상자조차 피하려는 태도에서,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적은 곳에는 공식적인 민주주의 지원자금만을 제공하는 데서 명백하게 알 수 있다.²¹⁾

1995년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인권 증진과 민주정부

17) Walter Laqueur, “The Issue of Human Rights,” Commentary(May 1977); Barry M. Rubin and Elizabeth P. Spiro, eds., *Human Rights and U.S. Foreign Policy*(Boulder, CO: Westview Press, 1979), pp. 54-55에서 재인용.

18) 정연식·이상환, “미국의 인권외교정책: 중국과 한국의 사례 비교,” 1999년도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pp. 588-591.

19) Schweigler, op. cit., pp. 170-171.

20) Daniel P. Moynihan,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in Rubin and Spiro, eds., *Human Rights and U.S. Foreign Policy*, p. 78.

21) Forsythe, “US foreign policy and human rights,” pp. 43-44.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 목록 중 13-14번째(각각 34%, 25%)의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에 비하여 외부로부터의 불법마약 유입 규제, 일자리 보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등에 관해서는 80% 이상이 응답하였다. 이는 미국인들이 도덕적 국제주의가 아니라, 실용주의적이고 자국 이익 중심의 국제주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²²⁾ 미국은 또 냉전기-탈냉전기 구분과 관계없이 인권 위반국에 대응함에 있어서 그 나라가 미국의 이익에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고 판단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르완다 같이 미국의 인도주의적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나라, 보스니아 같이 미국의 이익이 매우 작은 나라, 터키나 중국과 같이 미국의 경제·안보상 이익이 높은 나라에 따라 인권외교의 비중은 달라진다.²³⁾

이상과 같은 사실은 탈냉전 이후 미국이 레토릭상으로는 인권을 자주 언급하지만 실제 대외정책에서는 여전히 높은 위치를 차지 못할 뿐 아니라, 인권외교도 일관되게 전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예를 아래 대중정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3.3 상대 국가별 비교

셋째, 미국의 대외정책은 미 행정부나 또 상대 국가의 성격에 따라 그 목표와 수단이 달라질 수 있다. 대외인권정책도 이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상대국가의 국력 그리고 미국과 상대국의 관계에 따라 상대 국가를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상대국가가 강대국일 때와 약소국일 때 미국의 인권정책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상대국이 강대국일 경우 그 나라에 대한 미국의 인권정책은 냉전시기 소련, 탈냉전시기 중국을 상정해볼 수 있다. 물론 이들 두 국가는 강한 국력과 사회주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서방의 인권개선 압력에 대응하였다. 소련은 서방권에 이념공세를 강화해왔는데 소비에트공화국을 나치를 타도한 국가로 자부하고, 이스라엘을 나치와 동일시하여 소련내 유대인들의 인권 탄압을 정당화하였다.²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권외교를 강조한 카터정부마저 대소 인권정책은 큰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지 못하였다. 카터정부의 인권외교는 서방의 힘이 쇠퇴하고 있다고 판단한 소련의 지도자들을 놀라게 하였

22) Chicago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merican Public Opinion Report-1995, http://www.uicdocs.lib.uic.edu/ccfr/publications/opinion_1995/2-3html

23) Forsythe, op. cit, p. 44.

24) Daniel P. Moynihan,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in Barry M. Rubin and Elizabeth P. Spiro, eds., *Human Rights and U.S. Foreign Policy*(Boulder, CO.: Westview Press, 1979), pp. 70-80.

지만, 카터정부의 외교정책이 인권을 가장 중시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카터의 대소 인권외교는 군축협상에서 하나의 협상카드로 활용되었다. 강대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인권정책은 주로 소련, 중국 등 국제정치적·이념적으로 적대(혹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를 상대로 하였기 때문에 그 양상은 이중적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미국은 이들 국가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거나 때로는 반체제인사의 망명 허용 등으로 갈등을 빚기도 하였지만, 크게는 냉전질서의 유지 작계는 지역 국제정치에서 상대국과의 위기 억제 차원에서 인권문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이와 달리 약소국에 대한 인권외교는 미국이 그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정책 방향 및 수단에 영향을 주었다. 즉, 미국이 인권위반국으로 비난하는 약소국과 동맹(혹은 우방)관계일 경우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정책수단은 비교적 제한된 범위에서 구사된다. 카터 행정부 시절 밴스(Vance) 국무장관이 인권위반을 이유로 이디오피아, 아르헨티나에 군사원조를 감소하고 우루과이의 원조 요구를 거부한 데 비해, 한국과 필리핀의 인권 위반에 대해서는 안보상 이유를 들어 원조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미국은 1963년 북한과 적대관계에 처해 있는 한국에 대하여 박정희가 쿠데타 이후 선거를 치르기까지 원조를 중단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그 조치를 취하면서 인권외교를 천명하지는 않았다. 카터정부에 들어서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원조 감축 혹은 중단은 없었다. 단지, 박정희정권이 군대를 병영으로 철수시킨 대가로 더 많은 원조를 약속하였다. 또 카터정부의 인권 이미지와 달리 카터정부는 유신정권의 민주화운동 탄압에 대한 우려를 대한정책의 제일순위로 삼지 않았다.²⁵⁾

1976년 민주당의 샘 브라운(Sam Brown) 의원은 인권 위반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중단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1973년 칠레 군사정부에 대한 인권 존중을 요구하는 해외원조법과 같은 취지이다. 그러나 브라운 의원의 법안은 그 법안이 적용될 수 있는 국가가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하드웨어를 구입하고 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경우에는 속수무책인 편의적인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또 현실적으로 법안에 따라 군사 독재정권에 반대한다면 미국은 거의 모든 국가를 싫어하는 꼴이 된다는 문제도 발생하였다.²⁶⁾ 또 적대관계에 있는 약소국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은 인권문제를 거론하기는 하였지만 전략적 고려도 작용하였다. 예를 들어, 카터정부는 의회의 수 차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니카라과에 대하여 인권 개선과 전략적 고려를 병행한다는 기존의 틀에서

25) Donald M. Fraser, "Human Rights and the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The Congressional Perspective," Rubin and Spiro, eds., *Human Rights and U.S. Foreign Policy*, pp. 96-97.

26) Moynihan,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p. 83.

정책을 수행하였다. 사실 미국은 친미 군사독재정권과 반미 혹은 민주정권으로 갈 반정부세력 중 어느 쪽을 지지할 지를 두고 딜레마에 빠져있었다. 미국은 1978년 시리아, 리비아 등에 대하여 민간인 살상, 국제테러지원 등의 이유로 원조 및 교역을 중단시킨 바 있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수출 증대를 위해 전술적 조치로 경제제재를 포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 여기에는 인권 탄압에 이용될 수 있는 무기 수출도 포함되었다.²⁷⁾

이상과 같은 사실로부터 미국의 대외인권정책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시기와 대상국을 초월하여 미국의 대외인권정책은 연속성을 강하게 띠고 있는데 그것은 인권이 안보(냉전기), 경제(탈냉전기) 등 다른 국가이익에 밀려 정책 우선순위에서 부차적인 지위에 머물거나, 그 방편으로 이용되어 왔다.

둘째, 미국이 인권문제로 특정국과 외교적 갈등을 빚을 경우 그것은 공개적으로 처리되어 왔는데, 거기에는 미 행정부보다는 의회와 언론의 역할이 작용한 탓이다. 그럼에도 인권문제가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부차적 지위에 머무는 한 의회의 역할에도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²⁸⁾ 그러나 그런 추세는 탈냉전기에 들어 약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탈냉전 이후 초국가적 규범의 영향력이 국가주권을 약화하는 경우로까지 발전하였다.

2.3.4 미국의 정책 유형과 북한인권

미국의 대외인권정책 유형을 위와 같이 분류할 경우 미국의 인권외교정책에서 북한인권은 어떤 범주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어떤 가정을 할 수 있을까?

먼저, 북한은 적어도 미국에 비할 때 약소국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하다. 미국은 1990년대 들어서서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하여 군사력 사용 준비를 포함하여 앞에서 제시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였다. 그렇게 볼 때 만약 북한 인권문제가 미국의 대북정책 혹은 동북아정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면 다양한 국내외적, 유무형의 정책을 구사할 선택지는 넓다고 할 수 있다. 다만, 1990년대 상반기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및 제재 시도가 국제적 협조를 얻지 못한 것처럼, 북중·북러관계와 남북관계 등 지정학적 요소가 미국이 북한의 인권개선을 추구하는 정책수단의 채택 여부와 그 범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대외인권정책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반감과 남북관계의 개선을 추

27) Barry M. Rubin, "Carter, Human Rights, and U.S. Allies," in Rubin and Spiro, eds., *Human Rights and U.S. Foreign Policy*, pp. 126, 117-118.

28) 정연식·이상환, 앞의 논문, pp. 591-592.

구하는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이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에서 북한의 열세를 상쇄해 줄 수 있는 요소이다.

둘째, 탈냉전기에 들어 북한은 인권문제로 체제 정당성 및 국제적 지지도는 크게 추락하게 되었다. 냉전시기에 북한 인권문제는 남한의 인권 위반과 상호비난의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냉전기에는 부분적으로는 실제로, 부분적으로는 선전을 목적으로 체제 우위를 강조하며 인권문제를 회피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권 붕괴과 북한의 경제난, 그에 따른 북한의 외부세계와의 접촉 증대 등은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으로서도 선전을 예외로 한다면, 남북간 체제 경쟁이나 ‘우리식 사회주의’론으로 인권문제를 은폐하거나 변호할 수 없게 되었다. 냉전 붕괴는 초국가적 이슈에 관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증대시켜 국가주권의 우위를 지속할 수 없도록 하였다. 북한은 대표적인 초국가적 이슈로 꼽을 수 있는 핵확산과 인권문제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다.

셋째, 북한과 미국이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적대관계에 있다는 점은 양국의 정치·사회체제가 상호 이질적이라는 점과 결합하여, 인권을 보는 시각에서도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고 있다. 이 점은 양국이 어렵게 대화나 협상에 나서더라도 불신의 골을 넘기 어려운 현실을 설명해준다. 예를 들어 북미간 적대관계에서 미 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나 외교적 접근은 의회나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불신은 여전히 살아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권정책은 대상국의 민주화 혹은 정권 교체의 목적 아래 전개될 수도 있다. 반대로 북한은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순수’한 인권 개선 요구도 높은 위협인식을 갖고 판단할 수 있다.

요컨대, 미국의 대외인권정책 유형에서 북한의 경우는 세 범주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critical case)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 3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본 주제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즉,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은 미국내 광범위한 정치적 컨센서스와 다양한 정책수단을 갖고 전개될 수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정책은 북핵문제 등 다른 대북정책상 우선순위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신중하게 모색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다양한 인권정책 수단은 북한인권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3-4장에서는 대북인권정책을 둘러싼 미국내 정치적 컨센서스와 관련하여 국가기구와 비국가기구의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인식과 대북 인권정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3. 미국의 대북인권정책결정 관련기구

일국의 대외정책 결정기구는 정부와 비정부기구로 분류하여 논의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본 논의 주제와 관련하여 미 의회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와 의회를 묶어 국가기구(national institution)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비정부기구로 불리는 범주를 국가기구와 대칭하는 표현으로 비국가기구라 부를 것이다.

3.1 국가기구

3.1.1 행정부

미 행정부내에서 대외인권정책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조직은 국무부의 민주주의, 인권 및 노동국(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이다.²⁹⁾ 국무부 내에서도 국제개발처(USAID)는 인권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또 법무부가 법치 프로그램, 국방부는 인권프로그램을 각각 지원한다. 국무부는 자체 조사국은 물론 중앙정보국과 국방부 정보팀의 해외인권 상황을 종합하여 연례 인권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내외 인권단체 등과 협력하여 해외인권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민주주의, 인권 및 노동국은 카터행정부 시절인 1976년 인권·인도주의국(Bureau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Affairs)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미 시시피주의 시민운동가였던 데리안(Patricia Derian)를 초대 국장으로 시작한 인권·인도주의국은 미국의 원조를 받는 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담은 연례 인권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장은 국무장관에 직보하고 국무부내 고위간부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인권·인도주의국내에서는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특정 국가를 “최악의 인권 위반국”으로 지목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연례 인권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개별 국가 단위로 작성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³⁰⁾ 또 미 행정부 내에서 대외정책 관련 부처들이 인권의 비중을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방부는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인권의 가치를 높게 삼고 있지 않는데, 클린턴정부 2기 올브라이트(M. Albright) 국무장관은 취임한 이후 국무부와 국방부 사이에 이 문

29) 물론 민주주의, 인권 및 노동국이 북한인권 상황 등 세계 각국의 연례인권보고서를 작성하지만 구체적인 북한인권정책은 국무부내 동아태국의 한국과에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30) Barry M. Rubin, “Carter, Human Rights, and U.S. Allies,” in Rubin and Spiro, eds., *Human Rights and U.S. Foreign Policy*, p. 116.

제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³¹⁾ 그러나 두 부처간의 논란은 미국의 대외인권정책이 미국의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의무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전반적인 대외정책 목표 내에서 이루어진 부처간 대외정책운영 스타일의 문제로 국한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인권 중,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미 국무부 소속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모니터, 보고서 발표, 청문회 개최, 대통령 및 의회에 정책 권고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 조직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1998년 설립된 미 행정부 소속 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세계종교자유법(공법 105-292)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다른 나라의 종교 자유 상황을 조사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대통령, 국무장관, 의회에 자문한다. 부시대통령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며 그의 강한 정치적 지지 세력이 보수성향의 기독교단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조직은 부시행정부의 북한인권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행정부의 한 기관이고 미국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인권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위원회의 활동은 지속성을 갖고 전개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 자유화법안이나 북한 인권법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회는 법안에 근거하여 재정 지원을 받아 북한내 종교의 자유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다.

동위원회가 2004년 9월 15일 발표한 ■■■2004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으며 특히 기독교인들이 수감, 고문, 생체실험 대상이 되거나 심지어 살해되는 등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³²⁾ 그러나 탈북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하고 있는 이 내용은 탈북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어 신빙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³³⁾

오늘날 미국의 대외인권정책은 자유권 중심의 접근, 미국의 국익에 따른 선택적 접근 등 기존의 정책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01년 제57차 유엔 인권위원회 미국측 대표였던 무스(George Moose) 주체네바 미대표부 대사는 미국의 인권정책 기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첫째, 기본적인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호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불가결하고, 둘째, 발전이 인권에 앞서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의 인권 범주에는 발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발전과 인권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³⁴⁾ 국무부의 민주

31) Michael Mandelbaum, "Foreign Policy as Social Work," *Foreign Affairs*, Vol.75, No.1(July/August 1994), pp. 16-32.

32) *The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for 2004* 중 북한편, <http://www.state.gov/g/drl/rls/irf/2004/354052.htm>(검색일 2004년 9월 20일).

33) "미국무부 종교보고서, 탈북자들 '어이없다'," 「연합뉴스」, 2004. 9. 16.

34) George Moose, "Item 7: The Right to Development," Remarks to the 57th Session of

주의, 인권 및 노동 담당 차관보인 크래너(Lorne W. Craner)도 미국의 인권정책은 국가가 아니라 개인에 관심을 둔다고 밝히고 있다.³⁵⁾ 무스는 또 위 연설에서 개인의 자유가 창조적이고 기업가적인 정신을 열어놓는다, 국가가 통제하는 경제는 결국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는 동 인권위원회의 다른 연설에서는 세계화를 긍정적으로만 평가한 바 있다.³⁶⁾ 즉 미국의 인권정책은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유지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미 국무부 국제문제담당 차관보인 돕리언스키(Paula Dobriansky)는 “인권 옹호는 명백히 우리의 국익에 봉사한다”고 전제하고 인권은 중국, 쿠바, 인도네시아, 이란, 수단, 발칸반도의 국가들을 접근하는데 중요한 관심영역이라고 말함으로써, 미국이 해외 인권문제를 전반적인 국가이익 달성을 위하여 선별적으로 취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³⁷⁾

한편, 9·11사태로 부시행정부가 반테러즘을 비롯한 안보 중심의 대외정책 기조를 강화함에 따라 대외인권정책은 국내 인권정책의 퇴조³⁸⁾와 함께 정책적 비중의 하락과 일방주의적 접근이 두드러지고 있다. 9·11테러 다음달 크래너 차관보는 미국의 대외인권정책을 설명하면서 전세계의 근본적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을 변함없는 원칙으로 전제한 뒤, 9·11테러 이후에는 미국 국익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하였다.³⁹⁾

3.1.2 의회

미 의회는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하여 법안 제정, 행정부의 정책 승인, 혹은 청문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부를 지지 혹은 견제해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March 27, 2001.

35) Lorne W. Craner, “The Role of Human Rights in Foreign Policy,” Remarks to the Heritage Foundation, October 31, 2001.

36) George Moose, “EOV: L. 48, Globalization and Human Rights,” Remarks the 57th Session of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April 23, 2001. 이 연설에서 무스 대사는, 미국은 세계화가 가난을 확대하고 인권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전제를 부정한다고 말하고, 반대로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다.

37) Paula Dobriansky, “U.S. Human Rights Policy,” Testimony Before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and Terrorism Subcommitte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May 24, 2001.

38) Natasha Fain, “Human Rights Within the United States: The Erosion of Confidence,”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1, No.3(2003), pp. 607-630; Ruth Reitan, “Human Rights in U.S. Policy: A Casualty of the ‘War on Terrorism’?”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Vol.7, No.4(Winter 2003), pp. 51-62 참조.

39) 크래너 차관보는 이외에도 셋째, 인권과 민주주의가 위반되는 국가 혹은 지역에 장기 프로젝트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넷째, 민주적 관행 정착과 부패 근절, 투명한 법치 등 거버넌스 지원, 종교의 자유 옹호 등을 위해 기업, 종교단체와 협력, 다섯째, 전세계 인권 상황에 대한 모니터 및 보고를 미국의 인권외교정책의 원칙으로 추가하고 있다. Craner, op. cit.

행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특정 정책수단의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이루어졌으며, 양측은 전반적으로 미국의 국가이익 획득이라는 목표 앞에서 타협하였다.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카터 행정부 시절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해외 인권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미 의회는 군사원조 혹은 경제원조는 인권위반국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하였다. 의회와 행정부가 이런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한다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원조 중단이 필요한 국가를 지명하기까지 하였다. 카터정부 등장때 미국은 최소 30개의 인권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행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상원의 반대가 그 원인이었다. 다만, 카터정부 들어 고문방지 금지협약이 비준되었다. 그럼에도 카터정부가 국제인권기구의 발달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수시 개최, 인권고등판무관의 임면 지지 등이 그것이다. 반면, 카터정부는 1977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정치화되었다고 주장하며 탈퇴하였다. 이 당시 미국은 국제금융기구에 대하여 상하원, 행정부 등이 다른 입장을 나타냈는데, 하원은 인권 위반국에 대한 대부 금지를 주장한 반면 상원과 행정부는 좀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⁴⁰⁾

미 의회는 많은 외교정책 문제들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행동해왔다. 그러나 냉전 붕괴이후 미국의 국제적 역할이 커지면서 수많은 외교정책 제안에 대하여 피로현상이 나타났고 대외예산 부문에 대한 지출 삭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이같은 현상은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된 클린턴정부 2기를 계기로 변화를 보게 되는데, 안보정책을 포함한 행정부의 모든 대외정책에 대한 의회의 견제 및 독자적 입장 제시가 두드러졌다. 그런 점에서 의원의 가치관, 여론의 민감성, 정부의 대외정책 수행에 있어서 도덕성 판단의 필요성, 그리고 전통적으로 의회의 높은 관심 등을 고려할 때 대외인권정책에 관한 의회의 관여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또 탈냉전 이후 자의반타의반으로 미국이 각종 세계문제들에 관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미 행정부와 의회간의 상호협력이 높아지게 되었다. 미 의회에서 특정 국가의 인권관련 법안 제출이나 국가전략에 관한 보고서 작성 그룹 설치 등에 있어서 여야의 협력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미 의회는 또 1990년대 후반 보수적 기독교단체의 로비를 받아 국무부에 세계 종교의 자유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앞서 말한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만들어졌다.⁴¹⁾

제108기(2003-2004년) 미 의회가 상정하거나 결의한 해외 인권관련 법안이나

40) Fraser, 앞의 논문, pp. 99-100, 101, 102.

41) Forsythe, "US foreign policy and human rights," p. 26.

결의안의 일부를 살펴보더라도 대외인권정책에 관한 미 의회의 활발한 동향을 알 수 있다.

○ 인권관련 법안

2004-2005 회계연도 외교관계법(H.R.1950.IH) 인권정보법(H.R.2534.IH), 국제자유언론법(H.R.1950), 베트남인권법(H.R.1587.IH), 북한인권법(H.R.4011.IH), 평화봉사단확대 등에 관한 법(H.R.1950.EH.), 아프간여성의 안전·자유법(H.R.4117.IH), 캄보디아민주주의법(S.1365.IS), 북한자유법(H.R.3573.IH, S.1903.IS), 이라크 여성·아동해방법(H.R.4671.HI, S.2519.IS), 우간다북부지역 위기대응법(S.2264.ES) 등

○ 인권관련 결의안

홍콩의 자유화, 베트남의 종교자유, 중앙아시아의 인권유린, 수단,의 노예제 및 인권남용, 장애인 인권, 리비아의 유엔인권위 의장국 획득 관련.

마지막으로 미 의회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행정부 관리나 인권피해자 혹은 인권전문가 등을 불러 인권위반국의 실태나 피해 사례 그리고 미국의 정책 대응을 모색한다. 청문회 역시 해외인권 관련 법안 상정 혹은 결의안 채택과 함께 의회의 독자적인 대외인권정책 수단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아래는 최근 2003-2004년 미 의회에서 열린 해외인권 관련 청문회 사례들인데,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을 보더라도 해외인권문제에 관한 미 의회의 높은 관심과 개입을 알 수 있다.⁴²⁾ 청문회 개최는 의회의 고유기능이지만 아래와 같은 북한인권 관련 비정부기구들의 로비로 청문회가 개최되기도 한다. 따라서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청문회는 의원들과 관련 비정부기구들이 북한인권문제를 공론화하거나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하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의 해외인권관련 청문회

2003년 6월 5일, “북한내 주민들의 생활”

2003년 2월 25일, “아프리카에서 북한에 이르는 전세계의 기아 실태”

2003년 10월 2일, “미국의 쿠바정책 과제”

2004년 2월12일, “무역과 인권: 미국과 베트남 관계의 미래”

42) 이 가운데 북한인권 관련 청문회 내용은 4장을 참조.

o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해외인권관련 청문회

2003년 5월 7-8일, “2004년 회계연도, 외교관계권한법”

2003년 4월 16일, “카스트로정권의 혹독한 탄압”

2003년 4월 1일, “북한에 관한 비공개 브리핑”

2003년 7월 9일,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조사 및 분석: 2002-2003년의 기록”

2003년 10월 30일. “북한의 전노동당 비서 황장엽과의 미팅”

2004년 3월 10일, “세계의 인권실태: 2003 국무부의 인권보고서 검토”

2004년 3월 24일, “평화봉사단의 안전과 안보”

2004년 4월 28일, “북한: 인권, 난민, 인도주의적 도전”

2004년 5월 11일, “세계기아의 문제”

3.2 비국가기구⁴³⁾

3.2.1 북한인권위원회

북한인권위원회(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는 2001년 10월 9일 초당파적 비영리단체로 결성되었다. 현재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프레디 이클레(Fred Ikle, 레이건정부 시절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며, 이사진은 스테판 솔라즈(Stephen J. Solarz, 전직 국회의원), 헬렌-루이스 헌터(Helen-Louise Hunter, 전직 CIA 요원), 아브람모위츠(Morton Abramowitz, 세기재단 선임연구원), 칼 거쉬만(Cark Gershman, 국립민주주의재단 의장), 제임스 릴리(James Lilley, 전직 주한 미대사), 리차드 알렌(Richard V. Allen, 전직 국가안보 차관), 마크 커크(Mark Kirk, 공화당 의원), 개리 아커만(Gary Ackerman, 민주당 의원), 조셉 피츠(Joseph Pitts, 공화당 의원),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 미기업연구소 연구위원), 척 다운스(Chuck Downs, 미기업연구소 연구위원), 마커스 놀랜드(Marcus Noland,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수잔 솔티(Suzanne Scholte, 방위포럼 회장), 존 샷턱(John Shattuck,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 역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데브라 리앙-펜튼(Debra Liang-Fenton)이 실무를 맡고 있다.⁴⁴⁾ 이 명단은 워싱턴의 정책결정 집단 내의 매과에 속할만한 사람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가 북한인권문제를 어떤 방향에서 접근할 것인지를 강력히 시사해주고 있다. 한가지 주목할

43) ‘비국가기구’로 표현한 것은 아래 일부 단체들이 형식상 비정부기구이나 재원이나 사업 내용이 정부와 깊은 연계가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44) “Board of Directors Biographical Information.” <http://www.hrnk.org/about-board.html>

것은 보수재단 중 하나인 스미스 리처드슨 재단이 이 위원회가 결성되기 9개월 전인 2001년 1월에 이미 위원회에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연구·분석을 출판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작업의 착수금으로 5만 달러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다.⁴⁵⁾

북한인권위원회는 단체 명칭과 위 이사회 인사들의 면면에서 보듯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결성된 단체이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다음 7가지를 활동 목적으로 삼고 있다: ①대북구호활동 모니터, ②대북경제지원활동 모니터, ③국경통제 해제, ④북한주민에 정보제공, ⑤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개방, ⑥NGO의 북한입국 허용, ⑦자유로운 대북투자 등 경제개방. 이런 목적에는 인도주의 활동, 순수 인권개선 노력보다는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조건 부여 및 북한주민과 정권의 분리를 꾀하려는 부분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대북 구호활동이 독립적 지원단체에 의해 모니터 되어야 한다, 대북 경제지원이 인권 개선과 연계 되어야 한다, 북한주민의 고립 탈피를 위해 외부세계와 다양한 교류접촉을 발전시킨다는 대목이 그것이다.

북한인권위원회는 국립민주주의재단(National Endowment Democracy: NED), 방위포럼재단과 함께 미국내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는 3대 조직의 하나로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행사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이 개최하는 ‘북한인권·난민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NED, 방위포럼재단과 함께 2003년 7월 16일, ‘강제수용소, 기근 그리고 난민: 북한의 심각한 인권위기’ 라는 제하의 심포지움을 공동 개최한 바 있다.⁴⁶⁾ 주최측은 이 심포지움에 강철환 등 3명의 탈북자들을 초청하여 북한의 인권상황과 탈북자 실태를 듣는 시간을 갖고 이를 미국사회에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3.2.2 국립민주주의재단

국립민주주의재단은 미 의회의 결정으로 설립되었으며 미 의회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구이다.⁴⁷⁾ 이 단체를 준정부기구 혹은 의사(擬似)비정부기구로 부르는 것은 재정 출처 외에도 그 활동이 미 행정부의 대외인권정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냉전시대에 중앙정보국(CIA)를 통해 제3세계 국가

45) “Mediatransparency: Money Behind the Media.” www.mediatransparency.org

46) <http://hrnk.org/events.html>

47) NED측은 이 기구가 사설 독립기구로서, 미국이 해외의 민주주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과 전세계의 자유 및 자치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설립되었다고 밝히고, 그재정은 의회로부터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www.ned.org 참조.

들에 반공친미공작을 한 것은 잘 알려져있다. 그런데 CIA의 비밀공작이 반미여론을 불러일으키자 레이건 정부는 1983년 정부 밖에 NED라는 기구를 만들어 CIA의 역할을 보조하도록 하였고,⁴⁸⁾ 냉전 붕괴 이후에도 이같은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NED의 구체적인 활동은 제3세계국가 혹은 동구의 체제전환 국가들 중 반미정권에 반대하는 정치단체나 시민단체에 재정을 직접 제공하거나 그들 단체와 연대하는 일이다. 현 부시대통령도 이 재단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아랍국가들, 중국, 북한, 쿠바 등과 같은 국가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실현을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헌신(committment)을 강조하며 NED를 치하한 바 있다.⁴⁹⁾ 이런 점을 반영하여 NED의 성격에 대하여 미 카토연구소는 “NED는 소위 민간신분을 이용해, 국제개발처(AID)나 미 공보처(USIA)의 영역 밖에 있는, 그리고 이 방법(NED의 활동)이 아니라면 CIA의 비밀공작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 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벌여왔다”고 말하였다.⁵⁰⁾ 또 NED 설립 법령의 초안 작성에 관여하였던 와인스타인은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 CIA가 25년 전에 비밀리에 했던 일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⁵¹⁾

NED는 설립 직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필리핀, 코스타리카, 칠레, 니카라과,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하이티, 쿠바, 베네수엘라, 몽골 등의 선거에 개입하여 친미단체에 재정 지원을 하였다. NED는 선택된 정치단체, 시민단체, 노동조합, 반정부단체, 학생단체, 출판업자, 신문사 및 기타 언론매체에 재정지원 외에도 기술적 지원, 물자, 훈련 프로그램, 언론에 관한 노하우, 대외관계 지원, 최첨단 장비 등을 제공하여, 사회주의적 혹은 민주사회주의적 성향이 있는 운동들을 와해시키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NED의 이런 활동에 대하여 보수성향의 미 헤리티지재단은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NED는 舊소비에트 연방, 중국, 쿠바, 이란, 이라크, 니카라과, 베트남의 ‘민주화운동’에, 특히 러시아에서는 보리스 옐친(Boris Yeltsin)의 재선에 엄청난 공헌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더 나아가 “NED는 공산주의로부터 그 국가들을 구출하기 위해 미국이 엄청나게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군사작전에 나설 필요 없이, 그 국가들이 공산주의의 포로가 된 자신들을 스스로 해방시키도록 도운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48) 서재정, “미국의 제3세계 지배기구 NED의 정체,” ■■■말■■■, 1991년 6월호, pp. 62-66 참조.

49) “President Bush Discuss Freedom in Iraq and Middle East,” Remarks by the President at the 20th Anniversary of the NED, November 6, 2003. www.whitehouse.gov

50) Barbara Conry, “Loose Cannon: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Cato Foreign Policy Briefing*, No.27, November 8, 1993, <http://www.cato.org/pubs/fpbriefs/fpb-027.html>

51) *Washington Post*, September 22, 1991.

방식이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⁵²⁾ 이는 미 행정부가 세계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개선을 명분으로 제3세계 및 사회주의 진영을 향해 진행한 소위 ‘저강도전쟁’에 NED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NED 의장인 거쉬만은 NED 이사회가 2002년 1월 결정한 향후 3-5년간의 4가지 세계전략을 소개하면서, 북한을 독재체제를 개방하는 목표에 꼭 들어맞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북한을 민주주의 증진이 아니라 인권 증진이 필요한,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독재체제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NED가 북한 인권을 증진을 위해 북한에서 직접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를 계속 지원할 것을 밝혔다. 그는 외부에서 북한의 인권 증진과 개방 촉진은 북한내에 정치적 공간을 형성하고 독립적인 의사표현과 조직을 낳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하였다.⁵³⁾ 그에 따라 NED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북한인권 상황을 폭로하는 출판물 발간, 탈북자 초청 강연회 및 청문회 주선,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주최하는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해왔다.

3.2.3 방위포럼재단

방위포럼재단(Defense Forum Foundation)은 1987년 국가안보, 국제문제, 그리고 인권문제를 다루는 비영리 교육재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상의 프로그램을 통해 의회에 관련 법안 및 정책 검토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재단측은 북한인권문제를 최근 활동의 초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재단의 회장인 수잔 솔티는 북한의 前노동당 비서 황장엽을 비롯하여 북한 망명자 혹은 탈북자들을 미국에 초청하여 북한인권문제를 미국 정가와 여론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솔티 여사는 1996년 7월 황장엽씨를 미국에 초청하는 프로젝트를 시도한 바 있다. 재단 차원에서도 미국 단체로는 처음으로 탈북자를 초청하여 의회 청문회를 비롯한 미국 조야에 증언을 하도록 주선하였다. 재단측이 초청한 북한 인사로는 前북한인민군 장교 최주환, 前외교관 고영환씨, 탈북자 강철환, 이순옥, 안명철 등 5명이다. 재단의 로비로 상원 외교위원회는 이들의 증언을 듣는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방위포럼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안보, 테러리즘, 인권 등 활동 내용은 미 의원들로부터 높은 인

52) James A. Phillips and Kim R. Holmes, “The National Endowment in Democracy: A Prudent Investment in the Future,” Executive Memorandum #461, The Heritage Foundation, <http://www.heritage.org/Research/TradeandForeignAid/em461.cfm>

53) Carl Gershman, “Promoting Democracy in the Post-9/11 World: The Case of North Korea,” October 11, 2002. <http://www.ned.org/about/carl/oct1102.html>

지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재단측은 상원 소속 직원의 76%, 하원 직원의 60%가 재단측이 운영하는 정기적인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⁵⁴⁾ 재단은 한편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 활동의 일환으로 앞의 두 단체와 함께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 일본의 남북자를 돕는 모임(Society to Help Returnees to North Korea) 등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3.2.4 북한자유연합(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북한자유연합은 2003년 7월 25일, 미국의 25개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이 결성한 연합단체이다. 이 단체의 주요목표는 북한주민에게 자유를 가져다주고, 북한인권문제를 미국과 국제사회의 최우선적인 대북정책 사안으로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북한자유연합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①북한당국의 가시적인 인권개선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대북지원 반대, ②북한주민을 향한 직접적인 지원, ③탈북자의 송환 전면 반대 및 난민촌 건설 지지 등 7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⁵⁵⁾

북한자유연합은 미국내에서 개별 단체들이 전개하고 있는 북한인권개선운동을 하나로 결집하여 미 의회와 언론 그리고 자체 홈페이지 등을 하여 북한인권의 실태 홍보와 그 개선을 위한 법안 상정 로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그 구체적인 예가 전자의 경우 북한 ‘자유의 날’ 행사 개최이고, 후자의 경우가 북한자유법안 및 북한인권법안 상정 및 통과 로비활동이다. 이 외에도 북한자유연합은 탈북자 초청 청문회 개최, 북한의 인권상황 폭로와 북한정권의 ‘악행’ 홍보 등을 위한 활동을 조직적으로 벌여왔다. 또 이사회에 미국내 북한인권 관련단체의 주요 인사와 전문가는 물론 재미 기독교 한인 인사와 탈북자들도 포함시켜 이같은 활동에 대한 여론의 지지 획득에도 노력하고 있다.⁵⁶⁾

3.2.5 전미복음주의연합

전미복음주의연합(the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NAE)은 허드슨 연구소의 호로위츠(Mike Horowitz) 선임연구원, 종교와 민주주의 연구소의 크니퍼스(Diane Knippers) 소장 등의 인사들이 관여하는 보수성향의 기독교단체이다. 1996년 NAE가 발표한 ‘전세계의 종교 박해에 관한 전미복음주의연합의

54) “Program Participation.” <http://www.defenseforum.org/page8.html>

55) 2004년 10월 16일 현재, 북한자유연합에는 32개 개별 단체들이 결합해 있는데 이 가운데는 기독교단체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http://www.nkfreedom.org/about.html>(검색일 2004. 10. 16)

56) 이사회 명단은 위 주에서 밝힌 북한자유연합 사이트 참조.

양심선언'에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국가로 중국, 쿠바, 라오스, 베트남과 함께 북한이 거명됐다. 이 선언은 미 행정부에 몇 가지 조치를 제시하면서 종교적 박해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비인도주의적 해외원조의 중단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에 대하여 미국 기독교계 내에서 비판이 없지 않았다. 1997년 5월 위 선언의 내용은 법안으로 제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진보성향의 미국 기독교교회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hurches, USA)는 인권 위반국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고 제재는 자동적으로 첫번째 조치가 아니라 사려깊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과 다자적 접근 그리고, 관련국 정부관리에 대한 훈련 등을 제안하였다.⁵⁷⁾

그러나 이 법안은 클린턴행정부를 곤혹스럽게 했는데, 당시 미 국무부 샤투크(John Shattuck)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제재를 포함한 공공 비난이 많은 경우에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인권 위반국을 비난하는 시기와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유연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⁵⁸⁾ 결국 국제종교자유 법안은 행정부의 우려를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양원에서 통과되었고, 클린턴대통령은 1998년 10월 27일 서명하였다. 이 법안의 통과로 국무부에 국제종교자유 사무처, 종교자유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에 국제종교자유에 관한 전문가를 두고 이 문제에 대하여 보고 및 감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국제종교자유 사무처의 신설은 인권단체의 활동방식에 영향을 미쳤는데, 예를 들어 Human Rights Watch는 ‘종교자유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 행정부가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국가를 지목하고 국제종교자유법상의 제한조치를 시행하도록 압력을 가하도록 하였다. 국제종교자유법이 추구하는 종교 박해에 대한 대응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법안의 통과를 주도한 전미복음주의연합의 활동은 성공적이었다. 클린턴대통령은 종교적 자유를 실현하는 것을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 요소(central element)”라고 말하였다.⁵⁹⁾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부시대통령이 전미복음주의연합과 같은 보수성향 기독교단체의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북한 인권에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있다.

이 밖에도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미국을 염려하는 여성들(Concerned Women of America), 종교·민주주의 연구소(Institute on Religion and Demo-

57) Julie Mertus, “Raising expectation? Civil society’s influence on human rights and US foreign policy,” *Journal of Human Rights*, Vol.3, No.1(March 2004), pp. 30-32.

58) John Shattuck, Hearing Before the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Statement. 105th Cong. 87, 12 May and 17 June, 1998.

59) W.J. Clinton, Statement by the President on signing the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of 1998. *Weekly Compilation of Presidential Documents*, p. 2149.

cacy), 엑소더스 21(Exodus 21) 등의 시민단체들이 북한인권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미 언론과 싱크탱크들도 탈북자의 중국내 외국공관 진입이나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등 ‘사건’이 발생하면 논평이나 정책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부시정부하의 대북인권정책에서 GO와 NGO의 협력

여기에서는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인데, 본 논의의 초점을 살려 국가기구와 비국가기구 간의 상호 협력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 논의는 비교적 복잡하기 때문에 편의상 대내 및 대외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대내적으로는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홍보와 인권개선의 필요성을 확산하는 여론조성 작업과 그것을 바탕으로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의 상정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미 행정부가 유엔에서 나타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미국의 비국가기구들이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와 전개해온 협력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4.1 여론 조성과 입법화

4.1.1 여론 조성

① 국무부의 북한인권 보고서 발간

미국에서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는 인권단체들보다는 국무부가 매년 발간해 오고 있는 ‘세계각국의 인권실태 보고서’(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의 북한인권 관련 내용이 가장 광범위하고 상세하다. 1977년 처음 발간된 이 보고서는 처음 미국의 원조를 받고 있는 국가들의 인권 실태를 중심으로 다뤄졌는데, 지금은 미국의 원조를 받는 국가만이 아니라 유엔의 모든 회원국의 인권 상황이 평가대상이 되고 있다.⁶⁰⁾ 예를 들어, 국무부는 2003년 보고서

60) 1977년 이 보고서에 다뤄진 국가는 82개국이었는데 2003년 보고서에는 196개국이 포함 되어있다. "Overview and Acknowledgements,"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 2003*, February 25, 2004. <http://www.state.gov/g/drl/rls/hrrpt/2003/29640.htm>

를 내면서 각국의 인권상황 평가 범주에 각종 시민·정치적 권리뿐 아니라 노동권도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주로 시민·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 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국무부의 인권실태 보고서상에 북한 인권을 분석하는 틀이나 구체적인 범주는 다음과 같이 큰 변화 없이 나타나고 있다.

제1장. 소극적 자유(Freedom From)을 포함한 개인의 존엄성

- a. 정치적 및 재판을 거치지 않는 처형
- b. 행방불명
- c. 고문과 기타 잔악한 행위, 비인간적 또는 모욕적 처우 또는 처벌
- d. 자의적 체포, 구금 및 추방
- e.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거부
- f. 사생활, 가정, 통신에 대한 불법적 간섭

제2장. 시민적 권리 존중

- a. 표현과 언론의 자유
- b. 집회와 결사의 자유
- c. 종교의 자유⁶¹⁾
- d. 국내이동, 해외여행, 이민 및 송환의 자유

제3장. 정치적 권리 존중: 시민의 정권 교체 권리

제4장.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국제 및 민간 인권단체의 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제5장. 인종, 성별, 종교, 장애, 언어 또는 사회적 지위에 기초한 차별

제6장. 노동자의 권리

- a. 결사의 권리
- b. 조직 및 집단협상의 권리
- c. 강제 또는 의무노동의 금지
- d. 어린이 노동실태와 최소 취업 연령
- e. 수용가능한 노동조건
- f. 인신매매

국무부의 2003년 북한인권 보고서는 1쪽에서 북한의 정치·경제체제를 “세계 최고의 군사국가,” “세계에서 가장 집중화되어 있고 통제가 강한 경제”로 규

61) 세계 각국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 국무부가 2001년부터 발간하는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한 뒤, 북한정부의 인권 실태 역시 “극도로 빈약하고 계속해서 수많은 심각한 인권위반”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위와 같은 순서로 북한의 인권실태를 다루고 있다.

국무부의 북한 인권 보고서를 2000년 보고서와 2003년 보고서를 비교하면 위에서 언급한 논의 틀을 기조로 하면서 사실 확인의 측면에서 약간의 변화된 언급이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2003년 보고서에는 2002년 6월 미 상원이 개최한 청문회에 이순옥 등 탈북자들이 수용소에서 인민군에 의해 생화학실험이 자행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런 언급은 2000년 보고서에도 발견된다.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상이용사가 된 사람을 제외한 장애인들은 정치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국내 추방된다는 보고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2000년 보고서는 경제침체의 일시 중지, 유부녀와 처녀들에 대한 인신매매, 종교인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 지속 등을 새롭게 담고 있다. 2003년 보고서에도 김정일정권의 일본인 피납 인정 및 일본 귀환 허용, 종교활동의 부분적 인정 등을 밝히고 있다.

한편, 국무부의 보고서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대목도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인권 실태를 직접 증명하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과 관련된 것이다. 보고서가 인용하는 정보 원천은 탈북자 및 북한방문 인사의 증언, 유엔 및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서, 미국 내외의 언론 보도, 북한정부 관리의 발언, 그리고 “신뢰할만한 증언과 보고” 등이다. 물론 북한과 미국이 상호 적대관계에 있고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접근이 어렵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정보 원천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럴 경우 사실에 대한 교차확인 이루어지기까지 사실의 객관적 존재와 그에 대한 평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수용소내 강제 낙태와 출산시 영해살해, 혹은 죄수들에 대한 가스실험, 가족 한 사람의 범행시 3대에 걸친 가족 처벌, 2001년 400명에 달하는 기독교인 처형, 북송된 모든 탈북자의 처형 등에 관한 언급은, 비록 의혹이나 보도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미국 등 서양인들에게 필요 이상의 반복감정을 초래하여 북한과 서방 국가들과의 대화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 밖에 정치적 권리를 정부를 교체할 권리로 환원하여 평가함으로써 북한 인권개선과 김정일정권의 교체를 등치시키거나 그런 의도를 가진 정치세력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지적 외에도 국무부의 북한인권 보고서 내용이 개인의 인권과 자유권 중심 등 미국식 인권관을 보편주의로 이해하고 그것을 맥락적 고려없이 다룸으로써 집단으로서 국가의 발전권이나 전반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국제적 지원과 협력, 한반도 평화 등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지적을 별도로 한다면 국무부의 연간 북한인권 보고서는 미국 언론과 정가의 부정적인 대북 인식에 크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종교·인권단체들의 북한인권 개선운동을 촉진시키고 있다.

② 의회 청문회 개최

미 의회는 2000년대에 들어 북한 인권 및 탈북 현상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미국내 여론의 우려를 반영하여 수차례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청문회 내용은 북한의 인권 실태 파악과 그에 대한 미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것인데, 증언에 참석한 이들은 미 행정부 관리와 전문가는 물론 북한인권 개선운동에 나서는 NGO 인사들과 탈북자들도 포함된다.

먼저, 청문회에서 증언된 북한인권 실태를 살펴보자. 탈북자들의 증언은 북한인권 청문회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2003년 6월 5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위원장: 샘 브라운백 의원)는 ‘북한내 주민들의 생활’(Life Inside North Korea) 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인권 청문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는 탈북자들도 증언에 나섰다. 탈북자 지혜남씨(여)는 북한 감옥소에 구타, 강제노동, 규정이하의 식사, 장시간의 중노동과 탈북 이후 중국에서 일어난 강제결혼 및 성폭력, 그리고 강제송환 후 감옥에서 자신과 다른 여성들이 받은 비인간적 대우 등을 증언하였다. 그녀는 20일 후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탈북 이후 북한으로 되돌아온 사람이 풀려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⁶²⁾ 같은 청문회에 나온 미북한인권위원회의 리앙-펜턴(Liang-Fenton) 사무국장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총체적으로 심각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탈북 현상은 많은 경우 식량 부족이 동인인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현실도 부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치적’ 난민으로 볼 수도 있다고 증언하였다.⁶³⁾

탈북자 증언은 하원에서도 이루어졌다. 2004년 4월 28일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태소위원회(위원장: 제임스 리치, James Leach 의원)가 연 ‘인권, 난민, 그리고 인도주의적 도전’ 이라는 제하의 북한 청문회에서도 안혁, 김태진, 최동철 등 3명의 탈북자들이 북한 인권 및 탈북자 실태에 관해 증언하였다.⁶⁴⁾

62) Hae-Nam Ji, Testimony before the U.S.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June 5, 2003.

63) 리앙-펜턴 사무국장은 탈북현상과 관련한 ‘다른 현실’로 첫째, 차별적인 자원 배분을 일으키는 북한 정치체제의 성격, 둘째, 기아가 반드시 주민들을 억압에 무감각하게 만들지 않으며, 셋째, 강제송환을 동반하는 범죄적, 정치적, 사회적 처벌이 북한주민을 ‘정치적’ 난민으로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 못지 않게 북한의 강제수용소에 대한 관심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Debra Liang-Fenton, Testimony before the U.S.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June 5, 2003.

이같이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청문회의 분위기는 매우 부정적이었는데, 이는 북한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위 청문회에서는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강은의 입장 차이가 있었지만 아래 두 인사의 발언은 북한의 경제 회생이 힘들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국제경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 놀랜드는 북한이 7.1경제관리 개선 조치와 경제특구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건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하였다. 한편, 미국이 대북 제재조치의 해제를 요구하는 유진벨 재단의 린턴(Steve Linton) 회장도 북한의 경제정책이 이중적이라고 진단하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는 또 북한이 진정한 경제개혁을 하기까지 주민들은 비공식경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청문회에서 제시된 대북인권정책 제안은 북한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높이고 그 정책수단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미국의 기존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내 북한인권 개선 여론을 조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솔티 방위포럼재단 회장은 2004년 4월 28일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태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재중(在中) 탈북자 정책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하였다. 솔티 회장은 1997년부터 황장엽, 강철환 등 북한 망명자들을 미국에 초청하는 일을 시작하였는데, 청문회에서 북한정권을 “체제의 잔혹성과 김정일 및 노동당의 완전한 대중 통제로 현대사에 유례없는 정권”으로 규정하였다. 솔티 여사는 미 행정부와 의회가 탈북자 수용에 소극적인 사례를 제시하며,⁶⁵⁾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접근되면서 북한인권문제를 무시하거나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그녀가 보기에는 북한의 핵위협과 인권 부재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이다.

이어 솔티 회장은 대안으로 북한 자유법안과 인권법안의 도입을 제일 먼저 꼽으면서 대북정책에 인권은 핵문제와 같은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북한에 외부정보 유입과 그것을 위한 라디오 유포, 식량지원 모니터,⁶⁶⁾ 난민촌 설치, 동맹국과 탈북자 수용 정책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이런 분

64) 그러나 이들의 증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65) 솔티 회장은 그 사례로 미국이 선양주재 영사관에 들어온 탈북자 2명(2002년 5월 8일)이나 영국 영사관에 진입한 4명의 탈북청소년들이 부시대통령에게 미국 입국을 요청할 때 거부한 점을 들고, 브라운백-케네디법안의 탈북자 관련 내용도 미국의 소극적인 탈북자정책이라고 비판하였다. Suzanne K. Scholte, Testimony before the Hous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April 28, 2004. 미 법무부 이민심사국(EOIR)의 ‘이민법원 국가별 망명 현황 보고서’(www.usdoj.gov/eoir)에 따르면 미국은 1997년부터 7년 간 북한인의 망명신청을 42건 접수하고도 계속 거부하거나 다음 회기로 넘겨왔다. 그러나 2002년 처음으로 5명의 망명을 공식 허용한 뒤 2003년에 3명에 대해 망명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04. 7. 22.

위기는 하원 청문회에서도 나타났는데,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태소위원회 위원장인 리치 의원도 상기 아태소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이 이 소위원회 전원의 승인을 받은 초당적 법안이라고 말하고, 이 법안의 목적을 북한 인권 및 탈북자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 대북 지원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다만, 탈북자 정책과 관련하여 솔티 회장과 달리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 인정 및 미국 입국은 신중하고 사례별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리치 위원장은 그 이유로 탈북자들이 반미교육으로 세뇌받았고 미국을 자유의 희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북한인권 관련 청문회에서 대북인권정책을 가장 체계적으로 제시한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2003년 6월 상원 청문회에서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밝힌 정책권고이다. 구체적으로 동위원회는 미 행정부와 의회에 ①대북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외부정보를 북한주민에게 공급하고, ②관련국들과 국제사회에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③민간단체의 대북지원 규모의 확대 및 지원의 투명성 확보, ④북한인권단체 및 북한인권상황 홍보를 위한 재정 지원 등을 권고하고 있다.⁶⁷⁾

③ NGO의 북한인권 개선운동

위에서 언급한 북한인권 관련 비국가기구들의 활동에 관여하는 인사들은 2003년 1월 행정부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⁶⁸⁾ 이 선언문에는 종교·민주주의연구소 소장 크니퍼스(Diane Knippers)를 비롯하여 이 연구소의 3명의 이사와 미기업연구소(AEI)의 에버스타드, 허드슨연구소의 호로위츠 등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의 전문가, 울시(James Woolsey) 前CIA국장을 포함하여 17명의 인사들이 서명하였다. 이들은 북한체제에 대한 근본적 불신에 기초하고, 헬싱키 협정의 경험을 살려, 정부와 비정부기구가 협력하여 북한의 인권 개선 궁극적으로는 정권교체를 추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헬싱키협정의 교훈으로 불량정권에게 어떤 타협도 해서는 안되고 인권개선이 최우선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⁶⁹⁾

66) 북한관련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 지원과 북한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균형적인 입장은 미국제개발청의 나치오스(Andrew Natsios) 행정관의 증언을 참조. Andrew S. Natsios, Testimony before the U.S.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February 25, 2003.

67)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Subcommittee on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Hearing on "Life Inside North Korea," Statement by the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June 5, 2003.

68) 이 선언문은 2003년 1월 17일 *The Wall Street Journal*에도 실렸다.

69) 이와 달리 온건한 시각에서 헬싱키협정의 경험을 북한인권 개선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

이 선언문이 주목되는 것은 미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대북인권정책이 북한자유법안의 내용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북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수단으로 자유아시아방송의 한국어 방송시간을 확대하고, 위성사진과 컴퓨터 자료로 북한정권의 인권위반 사례를 수집하고,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 자금을 확대하여 북한정권의 종교탄압에 주목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탈북자와 고위 망명자들에게 주목할 것도 요청하면서 이해 이해 중국, 러시아, 그리고 난민고등판무관실이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못하도록 요구하고, 고위 망명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북한의 역선전에 대항함으로써 이들의 망명을 촉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⁷⁰⁾ 참고로 이 선언문 채택을 주도한 종교·민주주의연구소는 미 행정부가 탈북자의 난민 지위를 허용할 것을 골자로 하는 브라운백-케네디안(Brownback-Kennedy Bill)⁷¹⁾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고, 자체의 ‘종교자유 프로그램’을 통하여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진 일부 인사들의 위 선언문 발표가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에 관한 입장 제시였다고 한다면, 3개월 후에 열린 ‘북한자유の日’(North Korea Freedom Day) 행사는 북한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대중적 행사라 말할 수 있다. 2004년 4월 28일 워싱턴D.C. 일대에서 열린 이 행사는 북한인권 개선에 나선 각계의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미국의 여론을 알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의 브라운백 위원장과 하원 국제관계위 아태소위원장 리치 의원, 도널드 페인 하원의원 등이 참여하였다. 비정부기구에서는 북한자유연합, 방위포럼재단, 미국제종교자유위원회, 주빌리캠페인(Jubilee Campaign) 등의 간부와 회원들이 참석하였고, 한인들로는 워싱턴한인 장로교회의 이원상 목사와 미주한인학생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한인학생연합회는 예일, 코넬, UCLA, UC버클리, 펜실베니아대학 등 17대학에 북한해방(Liberation in North Korea: LiNK)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한국에서 탈북자들과 한국전쟁 상이군인들도 참석하였다.⁷²⁾

이날 행사는 탈북자 증언, 기자회견, 시위, 하원 청문회 등 다양하게 펼쳐졌

견에 대해서는 Alexandre Mansourov, “Approaches to the Formulation of a Human Rights Agenda,” Nautilus Institute Special Report, February 1995 참조.

70) “The Lessons of History: A Statement of Principles for U.S.-North Korean Relations,” January 17, 2003. www.ird-renew.org

71) 이 법안(S.1336)은 2003년 6월 25일자로 상원에 제출되었는데 후에 ‘Foreign Relations Authorization Act’(S.925)로 수정 제출되었다.

72) 종교·민주주의연구소 홈페이지. www.ird-renew.org

다. 행사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은 북한정권의 인권탄압에 대한 폭로와 미 의회를 향한 북한자유법안 제정 요구이다. 증언과 기자회견에 나선 탈북자들은 북한이 “거대한 감옥소와 같다”고 말하면서 주민들의 인권, 특히 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심각하다고 주장하였다. 북한 자유법안 제정과 관련하여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쉬어(Nina Shea) 부위원장은 “이번 행사가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북한의 인권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자유의 날 행사 참석자들은 북한 자유법안 제정을 지지하고 미 상·하원이 이 법안을 즉각 통과시키도록 촉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이외에 북한 인권 및 탈북자 문제, 북한의 종교 자유 문제를 의제로 다뤄줄 것을 요구하였다.⁷³⁾

4.1.2 입법화

① 추진 배경 및 경과

2003년 11월 4일 브라운백 상원의원(공화당)은 자신이 주도한 상원 외교관계 위 동아태소위원회가 주최한 북한인권 청문회에서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포괄적인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하였다. 동년 11월 20일 브라운백 의원은 민주당의 바이(Bayh) 의원과 북한자유법안(North Korean Freedom Act of 2003)을 상원에 공동발의하였다.(법안번호 S.1903) 이틀후 하원에서도 이 법은 리치 국제관계위 아태소위원장(공화당), 스미스(Smith) 국제관계위 부위원장(공화당), 팔레오마바에가(Faleomavaega) 의원(민주당) 등의 공동발의로 상정되었다.(법안번호 H.R.3573)

북한자유화법안이 미 상하 양원에,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의 발의로 거의 동시에 발의된 것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우려와 대응 모색이 표면화 되고 있으며, 그것이 정가는 물론 NGO와 언론 등 여론의 전반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의회와 북한인권 관련 단체,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의 긴밀한 정책적, 조직적 협력이 이 법안의 의회 상정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의회의 북한인권 관련 청문회와 NGO의 북한인권 개선 캠페인 등은 이들 3자가 상호 협력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자유법안의 의회 상정을 전후로 한 의원과 북한인권 관련 NGO 인사 그리고 북한전문가들의 이 법안 제정 및 의회 상정 지지 발언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자유화법안이 의회에 상정되기 전, 1년 동안 법안 상정을 추진한 주요 인사

73) 「세계일보」, 2004년 4월 28일.

들의 여론 조성 활동을 간단히 살펴보자. 먼저, 부시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소위 신보수주의 인사들(Neo-Cons)과 같은 입장인 주간지 *The Weekly Standard*의 크리스톨(William Kristol)은 2002년 10월 동 잡지를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에 석유 등 원조 중단, 자유아시아라디오 방송 시간의 24시간으로의 연장, 중국에 재중 탈북자의 봉쇄 중단 등을 촉구하였다.⁷⁴⁾ 이중 대북 원조 중단은 같은 해 12월 부시정부의 경수로 사업 중단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3가지 내용은 북한자유법안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크리스톨은 2003년 2월에도 같은 잡지에 북한주민을 공포와 기아에 몰아넣은 “김정일정권은 차우세스쿠나 스탈린처럼 과거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부시정부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⁷⁵⁾

전문가들 가운데 북한정권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갖고 자유법안의 상정 및 통과를 지지하는 인사로는 허드슨연구소의 호로위츠를 꼽을 수 있다. 호로위츠는 북한인권 실상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해왔다. 그는 자유화법안과 관련해서도 2003년 7월 31일 ‘북한경제의 부패’라는 제하의 상원 청문회에 참석하여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정권을 연명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안보와 북한의 자유에 초점을 둔 주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기도 하였다.⁷⁶⁾

북한자유법안의 상정이 다가오면서 이를 추진해온 인사들, 특히 정치인들의 발언은 그 수위를 높여가면서 북한정권의 붕괴를 주장하고 나섰다. 루가(Lugar) 상원 외교관계위원장은 자유법안이 상정되기 4개월전 *Washington Post*지에 기고한 칼럼을 통하여 “북한에서 더많은 주민들이 탈출하도록 야기한다면 그것은 대북 압력이 될 것이며, 1988년 동독인들의 탈출이 동독공산정권의 전복을 가져온 것과 같이 북한정권의 전복을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다”고 주장하였다.⁷⁷⁾ 그리고 자유법안 상정을 목전에 두고 열린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동아태소위가 주최한 청문회(2003. 11. 4)에서 법안의 발의자인 브라운백 소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북한정권이 붕괴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자유국가들은 북한을 떠받치지 말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청문회 제목은 ‘숨겨진 강제수용소’(The Hidden Gulag: Putting Human Rights

74) William Kristol and Gary Schmitt, "Lessons of a Nuclear North Korea," *Weekly Standard*, Vol.8, Issue 7(from the October 28, 2002). www.weeklystandard.com

75) William Kristol, "Morality in Foreign Policy," *The Weekly Standard*, Vol.8, Issue 21(From the February 10, 2003 issue). www.weeklystandard.com

76) Statement of Michael J. Horowitz, Hearing Before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July 31, 2003.

77) Richard G. Lugar, "A Korean Catastrophe," *Washington Post*, July 17, 2003.

on the North Korea Policy Agenda)였는데, 이 제목으로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하는 책을 낸 호크(David Hawk)씨가 증언을 하였다. 그는 북한의 강제수용소 등에서의 인권 침해를 증언하고 나서 부시정부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는데, 많은 부분 자유법안에 반영되었다.

첫째, 북한의 각종 수용소를 촬영할 위성활동을 늘릴 것.

둘째, 중국정부에 압력을 가해 난민고등판무관실이 탈북자들을 접촉할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의 감옥에 있는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도록 할 것.

넷째, 6회담 의제에 북한인권문제를 포함시킬 것.⁷⁸⁾

② 북한자유법안 상정

그러면 자유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그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말한 북한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인사들의 주장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미 상원에 상정된 법안은 명칭과 목적 및 정의조항 등이 5개 조문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총 5장 24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하원에 상정된 법안 역시 명칭과 목적 및 정의조항 등은 5개 조문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총 5장으로 26개 조항이다. 양원에 상정된 동법안의 내용은 거의 같기 때문에⁷⁹⁾ 여기서는 하원에 상정된 법안을 기준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북한자유법의 목적은 ①대량살상무기와 그와 관련된 유통구조·물질·기술의 개발·판매·이전의 금지, ②민주주의 체제로의 한반도 통일 지원, ③UN헌장에 부합하는 북한의 인권보호, ④탈북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해결책 제공 등으로 밝히고 있다.(SEC. 4)

본문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북한난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 북한의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대북협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78) Oral Testmony by David Hawk,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Sub-Committee on East Asia and the Pacific, November 4, 2003. 또 이날 청문회에는 북한자유법안의 제정 및 통과를 위해 결성된 북한자유연합의 리오스(Sandy Rios) 회장도 증언하였다.

79) 하원에 상정된 북한자유법안이 상정의 법안과 다른 점은 첫째, 미 국무장관이 설정한 범주에 해당하는 탈북자들은 미국의 P2 지위를 획득할 수 있으며(209조), 둘째, 탈북자들의 미국 입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북한국적자로 간주한다는 점(212조) 등이다. 그러나 이 둘의 질적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 제목1.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 SEC.101(보고서): 국무부는 이 법 제정후 90일 이내에 CIA의 협조아래 전담팀을 구성해 북한의 강제수용소와 탈북자에 관한 비밀보고서를 해당 상원 위원회에 각각 제출해야하고, 대통령은 위 비밀보고서 제출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상원에 제출해야 한다.
- SEC.103(북한의 종교적 박해):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이 법 제정후 1년 이내에 북한의 종교박해 상황을 다루는 ‘정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고, 대통령은 탈북자들에 대해 미국난민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취해진 조치 등을 매 연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SEC.104(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식량제공): 미 국제발전소 소장은 이 법 제정후 180일 이내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식량제공을 위한 자금 및 그 출처 그리고 제공기관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 상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식량제공을 하였거나 할 수 있는 세계식량기구와 미국의 NGO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상원안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억달러의 정부지출을 승인한다.

○ 제목2. 북한난민 보호를 위한 조치

- SEC.201(우선난민지위 인정 정책의 실시): 북한주민에 대해 우선난민지위 인정에 관한 국제협약이 적용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미국에 입국하였거나 입국하려는 탈북자에 대해 안전한 피난처와 보조를 보장한다.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 북한 주변국가들에게도 유사한 정책을 권장한다.
- SEC.202(미국인의 북한아동 입양): 북한 어린이 수천 명이 고아인데 이들이 북한에 남아 있으면 기아와 질병으로 위협받게 되므로, 국토안보부장은 북한 고아들의 입양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SEC.204(북한주민의 신분변경): 국토안보부장관의 재량으로 북한주민 중 미국에 입국허가 또는 임시입국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일정한 조건아래 영주권을 부여한다. 그 조건은 첫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둘째, 그 외 경우라도 최소 1년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불법목적으로 입국한 것이 아니며 미국에서 불법목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다.
- SEC.206(S비자): 이 부분은 이 법안의 상정으로 미 이민법의 일부를 개정한 내용이다. S비자(특별우선순위 비자)와 신분변경에 관한 것들로, 이민법 중 각 ‘법무장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국토안보부장관’으로,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시스템 또는 그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정보사항 등’ 이 S비자의 대상에 포함되며, 그 인원은 3,500명을 넘지 않는다.

- SEC.207(대량살상무기정보센터): 국토안보부에 대량살상무기정보센터를 설립하며, 이 센터는 대량살상무기와 그 관련 유통구조, 물질, 기술 및 그러한 물품이나 기술을 수출하거나 그럴 의도가 있는 국가에 대한 정보 입수를 첫째 역할로 하는 한편, S비자와 관련된 상담원을 교육시키고 S비자 신청에 대한 접수 및 평가를 하는 등 이 법에 규정된 S비자의 발급과 관련된 역할을 한다.
- SEC.209(난민지위): 국무장관은 정치적·종교적 신념과 행동으로 박해받는 종교인이나 정치범 등을 ‘특별우선순위 제2그룹’으로 지정한다.
- SEC.212(난민 고려에 있어서의 자격): 이 법의 목적상 북한주민이 남한 헌법상 향유할 수 있는 제반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으나, 그러한 권리가 미국에서의 난민 지위에 관한 적격성 획득을 방해하지 않는다. 북한주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제목3. 북한의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 SEC.301(대북 라디오방송): 미 행정부 산하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방송과 ‘자유아시아라디오’(Radio Free Asia) 방송을 현재 수준(1일 3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리도록 촉구한다.
- SEC.302(북한주민에 대한 라디오 공급): 방송위원회는 이 법 제정후 90일 이내에 NGO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라디오 배포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 이 법 제정후 1년 이내에 실시된 라디오 배포에 관해 해당 상원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00만달러(상원안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100만달러)를 책정한다.
- SEC.303(북한의 경제·정치체제 변화를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상원의 입장): 북한의 경제·정치체제 변화를 위해 마련된 미국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남한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불법행위방지구상(Illicit Activities Initiative)에 참가할 것을 권장하고, 그러한 지원을 받기 전 6개월간 북한 인권을 위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 SEC.304(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단체를 위한 기금): 미 국제발전소소장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인, 단체, 외국정부기관에게 최대 2년간 매년

총 50만달러(상원안은 100만달러)를 제공한다. 이 기금을 제공받는 경우 지급된 기금의 사용과 활동에 대해 매년 3월 1일까지 소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4. 대북협상

- SEC.401(대북교섭에 관한 상원의 입장): 미국은 북한과의 어떠한 협상이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이전의 종식, 북한의 핵무기개발 정지, 북한의 미사일프로그램과 생화학무기프로그램의 해체를 포함시켜야 하며, 아울러 정치적 자유, 강제수용소, 종교의 자유 등 인권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
- SEC.402(경제제재와 재정지원에 관한 상원의 입장): 미국의 대북경제지원은 북한정부가 아닌 북한주민에게 이득이 되도록 해야 하고, 북한경제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미국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해서는 안되며, 마약이나 위조지폐 거래와 같은 국제적 범죄행위에 가담한 북한주민을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경제제재 해제나 경제원조 제공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이 법안은 2006년까지 매년 1억2,950만 달러(상원안은 1억4,050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 그 내역을 볼 때 대북 인도주의 지원 및 인권 개선만이 아니라 정치·경제체제 변화 등 북한의 전반적인 변화에 미국이 적극 나설 계획을 담고 있다. 자유법안의 상정 이후 미국내 관련 단체와 인사들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지지 표명이 많았다. 인권 개선,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폭압적이고 폐쇄적인 독재정권’이 통치하는 국가의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명분으로 하는 법안에 대하여 미국내에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찾을 수 없었다.

② 북한인권법안 통과

북한자유법안이 의회에 상정되면서 그에 대한 문제제기가 미국과 한국 일각에서 일어났다. 구체적인 지적은 이 법안이 대량살상무기 등 인권과 무관한 사안도 다루고 있고, 북한 민주화 추진과 대량탈북 유도 등 북한체제 붕괴를 의도하거나, 미 행정부의 대북 교섭권을 제한하는 등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⁸⁰⁾ 그에 따라서 법안 상정을 추진해온 측에서는 그런 지적을 피하고, 자유법

80) ‘북한자유법’안에 국내외의 비판은 김승교, “북한자유법안 분석,” 인권운동사랑방 등 5개 시민단체 주최 ‘NK자유법안의 문제점과 시민사회의 대응’ 토론회(2004. 3. 2) 자료집, pp. 38-50; Hazel Smith, “Brownback bill will not solve North Korea’s problems,” *Jane’s Intelligence Review*(February 2004), pp. 42-45 등을 참조.

안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북한인권만을 다루는 보다 세련된 새 법안의 필요성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된다.⁸¹⁾

2004년 3월 23일, 리치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태소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이 제안하고 29명의 공화·민주당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2004 북한인권법’안이 하원에 상정되었다. 하원은 이 법안을 국제관계위원회 아태소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이민·국경안보·청구 소위원회 등에서 검토하도록 배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제관계위원회의 전문위원의 검토와 한국 인권단체들로부터의 지적이 있었다.⁸²⁾ 이 법안은 7월 21일 하원, 9월 28일 상원, 10월 4일 하원 등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최종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⁸³⁾

○ 제정 목적(SEC.4)

- 북한내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와 존중
- 탈북자들의 곤경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해결책 촉진
- 북한내 인도주의적 지원의 투명성과 접근성, 모니터 향상
- 북한 안팎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 촉진
- 민주적인 정부체제하에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 가속화

○ 북한주민의 인권신장(TITLE I)

- SEC.102(인권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 지원): 북한주민의 인권신장을 위해 대통령이 2005 회계연도부터 2008 회계연도까지 매년 20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
- SEC.103(대북 라디오방송): 미 방송위원회(BBG)는 북한내에서 방해받지 않는 정보의 송출을 용이하게 하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 소리(VOA) 등이 하루 12시간씩 북한에 대한 방송을 한다는 목표로 북한을 향한 방송시간을 늘린다.
- SEC.104(정보의 자유 증진): 북한 주민들이 북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라디

81) 북한인권법안의 작성에 재미한인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증언은 장세규, “워싱턴에서 본 열린우리당의 북한인권법 저지 지도,” 『업코리아』, 2004. 7. 28. www.upkorea.com

82) 전자에 관해서는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보고서(Report 108-478), 후자에 관해서는 인권운동사랑방 등 9개 시민단체 명의의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를 참조.(2004. 5. 19) 이에 앞서 4월 위 시민단체들은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을 조목별로 검토한 후 의견서(Korean Civil Society’s View Statement Regarding ‘The North Korean Freedom Act of 2003’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를 미 의회에 전달한 바 있다.

83) 동법안이 하원에서 최종 심사하게 된 이유는 상원 통과 과정에서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하원은 이를 그대로 통과시켰다.

오 방송 등을 통해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정보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SEC.105(유엔 인권위원회):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위반은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각별한 주목과 각종 실무그룹과 주제별 특별보고관의 보고에 담겨야 한다.
- SEC.106(지역적 구도 마련)
 - (a) 현황 파악: 의회는 인권보호노력이 인권, 과학 및 교육 협력, 경제·통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적 구도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같은 다자적 형태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 (b) 의회의 입장: 미국은 헬싱키 과정과 같이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데 공통적으로 노력하는 지역적 차원의 대북인권협상의 구도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다.
- SEC.107(북한인권담당 특사)
 - (a) 특사: 대통령은 국무성 내에 북한인권담당 특사를 임명한다.
 - (b) 주목적: 특사의 주된 목적은 북한주민의 근본적인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을 조정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 북한주민 지원(TITLE II)

- SEC.202(북한내에 제공되는 지원):
 - (a) NGO와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원조- 의회의 입장
 - (1) 의회가 인도적 근거로 북한주민들에게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원조를 제공하고 정치적 또는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을 극소화하고, 가장 취약한 북한주민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감시해야 한다.
 - (2) 북한내에서 전달한 미국의 인도적 원조를 위한 미국의 지원이 현 수준을 상당히 초과할 경우 투명성, 감시 및 북한전역의 취약한 인구에 대한 접근의 실질적인 개선을 조건으로 지원해야 한다.
 - (b) 북한정권에 대한 미국 지원- 의회의 입장
 - (1) 북한정권의 어느 부처나 기관에 대한 미국의 인도적 원조는
 - (A)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인도적 기준에 따라 전달, 분배, 감시되어야 한다.
 - (B) 필요에 따라서 제공되어야 하며 정치적 보상이나 억압수단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
 - (2) 북한에 대한 비인도적 원조는 다음 사항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 진

보를 조건으로 이행해야 한다.

- (A)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북한주민의 기본적 인권 존중
- (B) 북한주민과 미국내 후손 및 친척의 가족상봉 주선
- (C) 북한정부에 의해 납치된 일본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모든 정보의 완전 공개
- (D) 일본인과 한국인 피납자들이 가족을 동반하여 북한을 떠나 귀국할 수 있는 완전하고 순수한 자유의 허용
- (E) 북한 감옥과 강제노동수용소 체제의 개혁 및 독립적 국제기관의 개혁 감시
- (F)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해금

- SEC.203(북한 외부에 제공되는 지원):

- (a) 북한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 밖으로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탈북자)에 인도주의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기구나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으며,
- (b) 북한 밖으로 나온 난민, 망명자, 이주자, 고아들에게 난민캠프 지원, 임시 거처 등을 포함하는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 지원금이 사용될 수 있으며,
- (c) 대통령은 이를 위해 2005회계연도부터 2008회계연도까지 매년 2천만 달러를 북한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북한난민 보호(TITLE III)

- SEC.301(미국의 난민 및 망명자 정책): 이 법의 제정 120일 이내에 국무장관은 다른 연방 기관장들과 협의하여 의회에 탈북자들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북한 난민들의 상황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SEC.302(난민의 적격성): 북한 주민들은 한국인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때문에 미국 내에서 난민지위나 망명자격을 얻는 데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 SEC.304(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
 - (a) 중국에서의 조치-의회의 입장
 - (1) 중국정부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에게 탈북민들이 난민인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중략) 결정하기 위해 국경 내의 탈북민들을 접촉할 방해받지 않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 (2) 미국, 기타 UNHCR 지원 정부, UNHCR은 중국에 자국내 탈북난민들에 대한 무제한 접근권을 UNHCR에 허용하도록 한 이전 협약을

준수하도록 즐기치게 최고수준으로 계속 촉구해야 한다.

- (3) UNHCR은 난민보호 의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중국내 탈북민들에게 인도적 원조를 제공한 상당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나 선교사를 자유롭게 활용해야 한다.
 - (4) UNHCR은, 난민보호 의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중국내 탈북민들에게 인도적 원조를 제공한 검증된 기록을 가진 적절한 비정부기구들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어야 한다.
 - (5) UNHCR은 탈북난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와 원조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첫 망명’ 정책을 채택하기 위해다자간협정을 추진해야 한다.
- (b) 중재절차- 의회의 추가 입장
- (1) 중국정부가 자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 (UNHCR)의 접근을 계속 거절한다면 UNHCR은 UNHCR 설립협정 16조에 따라 중재절차를 시작하고 중재자를 임명해야 한다.

하원을 통과할 당시 법안은 처음 하원에 상정된 내용의 일부가 수정된 것이다. 3월 23일 상정된 법안에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인 원조를 1억 달러 이상 할 수 있으며, 탈북자들이 미국에 망명이나 난민지위를 신청할 때 특혜(P-2 지위)를 준다는 등의 조항이 있었는데 이 대목이 삭제되었다. 대신 미 행정부가 이민·국적법에 근거하여 탈북자들의 난민 보호 신청을 신속히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EC.303) 그리고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때는 대북 지원과 북한 인권의 연계를 법적 구속력에서 의회의 입장으로 완화하였고, (SEC. 202) 역내 국가들이 참가하는 북한과의 인권대화 모색(SEC.106 의회의 입장)과 북한인권 특사 임명(SEC.107 등을 추가하였다. 이런 수정과정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의로 이루어져 상원의 만장일치 통과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북한인권법안의 특징은 첫째, 북한에 대한 원조를 북한당국의 인권 보호조치와 연계시키고 있으며 둘째, 탈북 유도과 북한주민들의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고 셋째, 탈북자 및 탈북지원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담고 있다.⁸⁴⁾ 북한자유법안이 북한체제의 붕괴를 의도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북한인권법안은 그 용어와 의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외교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북한체제의 완전한 전환(complete transformation)을 북한인권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⁸⁵⁾

84) 미국의 이중적 탈북자 정책에 관한 지적은 "미국의 '입맛대로' 탈북자 정책," ■■■연합 뉴스■■■, 2004. 10. 1.

4.2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4.2.1 유엔 인권위에서의 북한인권 결의안 추진

미국의 인권정책은 개인주의적 사고와 자유권 중심의 미국식 인권관을 보편주의로 합리화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⁸⁵⁾ 그리고 그것이 대외정책의 일환으로 적용될 경우 ‘인권정치’로 나타난다는 것은 앞의 프레이저(Fraser)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전제로 미국이 유엔을 무대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였는지를 제59차-60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북한인권 결의안 추진과정과 그 속에서 한국의 관련 NGO의 입장과 비교해보자.⁸⁷⁾

①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의 활동

북한 인권문제가 유엔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결의안이 추진되기는 2003년 봄에 개최된 제59차 회의가 처음이었다. 물론 제49차-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위원회(1997-98년)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프랑스 주도로 채택된 바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상정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유럽연합이 주도하여 작성되었으며, 여기에 한국의 일부 북한인권단체의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3년 4월 17일 북한인권 결의안은 53개 위원국 가운데 28개국이 찬성하여 통과되었다. 이때 한국은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등을 감안하여 투표에 불참하였다. 결의문 내용은 고문, 공개처형, 종교의 자유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관한 우려 표명, 식량권 등 각종 주제별 특별보고관의 북한의 인권 상황 확인을 위한 접근 협조 촉구, 북한의 불확실한 보고에 대한 우려 표명, 대북지원 현황 파악을 위한 자유로운 접근 촉구, 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협력프로그램의 이행 등이다.⁸⁸⁾

미국은 유럽연합이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한 방침을 적극 지지하기로 하고 찬성하였다. 이는 미국이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고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유럽연합과 적극 협

85) 미국의 시민단체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의 John Feffer씨와의 이메일 인터뷰. 2004년 9월 7일.

86) Peter L. Berger, “Are Human Rights Universal?” in Rubin and Spiro, eds., op. cit., pp. 3-12.

87) 서재진·김수암, ■■■2002년 미국의 북한인권 문제 관련 동향 분석■■■, 통일정세분석보고서(2002. 5), 통일연구원 참조.

88)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CN.4/2003/L.31.Rev.1 <http://www.ohchr.org/english>

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당시 유엔 인권위 총회에 미국 대표단 단장으로 참여한 패트릭(Jean Kirkpatrick)은 북한을 “지구상의 지옥”이라 일컬으며, 시민들의 인권이 이 보다 더 가혹하게 학대받는 나라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규탄한 바 있다. 이때 미국의 대표단에는 4명의 NGO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미국인권위원회측은 밝히고 있다. 제59차 유엔인권위 회기 중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미국 행정부와 NGO의 협력은 회의장 밖에서도 나타났다. 인권감시협회(Human Rights Watch)와 세계기독교연대(CSW) 등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들은 회의 장소인 제네바 유엔빌딩 주변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세미나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특히 인권감시협회는 북한을 ‘인권 침해국’으로 지목하고 유엔인권위가 북한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도 하였다.⁸⁹⁾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처음으로 논의·채택된 데에는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의 역할도 크게 작용하였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은 4월 5일 허만호 이사(경북대 정외과 교수)와 이해영 국제 캠페인팀 간사를 제네바에 파견하여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호크(David Hawk), 영국 세계기독교연맹의 바사 등과 공동으로 각국 대표단을 상대로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위하여 로비를 벌였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앞서 진행된 토의 과정에서 이해영씨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임신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강제 유산과 유아 살해를 주장하고,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및 유엔 인권위원회에 속한 주제별 메커니즘들과의 포괄적인 대화를 주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유엔 인권위원회 회원국들이 북한결의안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4월 15일, 국내에서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피랍탈북인권연대, 탈북자협의회 등 9개 북한인권 관련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정부가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⁹⁰⁾ 이들 단체들의 입장은 유엔 인권위의 북한결의안과 같으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제4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에서 미국 등 해외의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인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⁹¹⁾ 이같은 현상은 2004년, 제60차 유엔 인권위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과정에서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②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활동

제60차 유엔 인권위의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4년 4월 15일 투표를 통해 결

89) 최의철·임순희,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통일정세분석보고서(2003. 4), 통일연구원, pp. 12, 21.

90)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www.nknet.org>

91) 이때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인권시민연합 홈페이지에서 뉴스레터 No.20을 참조.

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권, 특히 수용소와 노동교화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여성인권도 인신매매, 강제 낙태 등 구체적인 인권침해 혐의를 거론하고 있으며, 둘째 외국인납치 관련 의혹의 해결, 셋째 국가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유엔 총회와 인권위에 보고할 것과 북한이 각주제별·국가 특별보고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넷째 인권고등판무관실이 북한과 인권분야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갖고 그 결과를 제61차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것도 언급하고 있다.⁹²⁾

이 결의안을 전년도 결의안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영아살해 및 인신매매 등을 지적하고 둘째, 유엔의 접근방법으로 국가별 인권 특별보고관의 선임과 활동을 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 결의안은 찬성 29: 반대 8: 기권 16으로 통과되었는데 찬성에 전년도와 같이 과거 사회주의국가였던 국가들과 함께 아프리카 국가들이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투표 결과는 이전 해에 비해 찬성이 1표 많아졌고 반대표는 작년에 비해 2표가 줄고, 공동제안국은 작년 38국에서 금년에 42국으로 늘었는데 공동 제안은 인권위 회원국이 아닌 나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아졌다.⁹³⁾ 한국은 투표에 참여하였지만 기권하였다. 그러나 표결 직전에 주체네바 한국 대표부의 최혁대사가 밝힌 한국의 입장은 북한을 지목하지 않고 남북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권한다고 하였지만,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강한 메시지를 표명하였다.

전년도와 같이 북한인권 결의안은 유럽연합이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미국 행정부가 적극적인 지지를 나타내고 한국 및 미국의 시민단체들이 활발한 로비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 인권위 미국 대표단장으로 제네바에 온 윌리엄슨(Richard S. Williamson)은 북한 결의안 표결 직전 연설에서 북한 결의안이 북한 주민의 심각한 곤경과 북한 정권의 억압성을 고발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북한이 작년의 결의안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위반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⁹⁴⁾

92)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CN.4/2004/L.21. <http://www.ohchr.org/english>

93) 참고로 투표에 임한 위원국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찬성국: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부탄,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도미니카, 프랑스, 가봉, 독일, 과테말라, 온두라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파라과이, 페루,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스웨덴,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반대국: 중국, 쿠바, 이집트,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러시아, 수단, 짐바브웨. ◇기권국: 바레인, 부키나파소, 콩고, 에리테리아, 이디오피아, 인도, 마우리타니아, 네팔, 파키스탄, 카타르, 한국, 시에라레온, 남아공화국, 스와질란드, 토고, 우간다.

94) Statement by Ambassador Richard Williams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ited States General Statement Before the Vote, April 15, 2004.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의 로비는 2003년에 이어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주도하였는데, 작년보다 더 많은 5명이 제네바에 와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외국 인사들과 적극적인 로비를 전개하였다. 이들은 회의 일정 기간은 물론 그 이전에 북한결의안을 준비한 유럽연합의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토론회에도 참여하여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들의 로비활동은 북한의 심각한 자유권 침해를 폭로하고 영아살해, 강제낙태, 강제결혼 등을 북한인권 결의문에 포함시키고, 결의안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명을 지지하고 보고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 등을 밝혔다.⁹⁵⁾ 한편 이 기간 한국 내에서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16개 탈북자 출신 혹은 탈북지원 단체들은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국정부의 북한결의안 기권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표명을, 북한의 인권상황 조사에 대해서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기대를 나타냈다.⁹⁶⁾

4.2.2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과의 협력

북한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한 미국 단체들은 자연히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와 협력을 모색하게 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북한인권 실태 폭로 및 그에 대한 세계여론 형성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한국과 미국의 북한인권단체들 사이의 국제연대 활동인데, 유엔을 무대로 협력은 앞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이 개최해온 ‘북한인권·난민 국제회의’ 행사를 통한 연대활동을 소개한다. 이 회의는 1999년 12월 1-3일 이화여대에서 처음 되었고, 이후 제2회 회의가 2000년 12월 8일(연세대), 제3회 회의가 2002년 2월 9-10일(도쿄)가 각각 열렸다. 이 회의는 회의 제목에서 보듯이 북한 인권 및 탈북자에 대한 실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고, 개선책을 공동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마련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는 국내외 단체들의 참석 인사들은 대북 인식, 북한인권 개선 방안 등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보여주고 있다. 가령, 1회 회의때 참가한 단체들은 모두 북한정권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갖고 있으며⁹⁷⁾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북한정권의 종식과 연계시키고 있는 인상을

95) 북한인권시민연합 대표단의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 로비활동 보고, No.119-120. 북한인권시민연합의 뉴스레터, No.119-120.

96) 성명서 전문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홈페이지 참조.

97) 참석 단체들은 미국 이지스 재단, 미국 방위포럼재단, 일본 북조선난민구조기금, 일본 RENK, 일본 북조선귀국자의생명과인권을지키는회, 일본 피랍자구출가족협의회, 프랑스 동아시아워치,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이다.

주고 있다. 1회 회의후 발표된 ‘서울선언’에서는 한편으로 김정일에게 정치범 수용소 폐쇄와 북한주민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촉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 “(김정일)정권의 독재가 종결될 수 있도록 전세계인들이 압력을 가하길 요청”하고 있다. 이 국제회의에는 앞에서 언급한 미국의 주요 북한인권단체와 소속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는 방위포럼재단, 북한인권위원회, NED, 미국기업연구소(AEI) 등이다. 이들 단체의 주요 인사들이 이 국제회의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는데, 주요 인사로는 방위포럼재단의 솔티 회장, NED의 거쉬만 회장, 미북한인권위원회의 잭 랜들러 부의장, 동위원회의 데이비드 호크 연구원, 미기업연구소의 다운스(Chuck Downs) 연구원 등이다. 이 중 솔티 회장, 거쉬만 회장, 랜들러 부의장은 1회 회의부터 5회 회의까지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다.⁹⁸⁾ 매 회의때마다 거쉬만은 환영사 혹은 기조연설을 하였고, 솔티와 랜들러는 세션의 사회와 결의문 기초위원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단체들이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식이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그것과 일치하며, 이들 사이에 강한 연대감이 있음을 말해준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2003-4년의 두 차례 회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제4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는 2003년 3월 2-4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렸는데 한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12개국 62명(미국측 13명)의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당시 거쉬만은 환영사를 통해 사회주의국가 경험을 한 “중앙유럽 국가의 이해 당사자들이 북한 압력에 가세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라고 언급하였는데, 그의 발언은 곧이어 개최된 유엔 인권위에서의 북한인권 결의안 투표에서 중동부 유럽국가들의 지지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호크는 제5회 회의에서 한 발표에서, 제50차 유엔 인권위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위한 NGO들의 지지전략(advocate strategy)이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다.⁹⁹⁾ 또 이 회의에서 다운스 연구원은 ‘북한 정권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선명한 제목의 발표에서 “북한 정권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이용하자” 등 5가지 행동계획을 제시하기도 하였다.¹⁰⁰⁾ 제5회 회의에서는 10개항의 결의문이 채택되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제59차 유엔 인권위 북한 결의안에 반영되었

98) 랜들러는 2002년 3회 회의때 ‘북한 인권 국제캠페인: 활동과 계획’을 발표하여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할 때 필요한 행동전략을 한국측 참여자들에게 교육한 바 있다.

99) David Hawk, “북한과 유엔 인권위원회.” 북한인권시민연합 홈페이지 자료실. <http://www.nkhumanrights.or.kr/inter05.html>

100) 다운스가 제시한 나머지 4가지 제안은 북한 정권의 실패가 알려지도록 하자, 탈북자들과 북한 내 억압 받는 사람들의 요구를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알리도록 하자, 김정일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하고 그 결정들에 대한 책임을 김정일 개인에게 부가하자, 국제사회의 우려와 단결된 힘과 의지를 보여 주자 등이다.

다. 그 내용은 유엔인권위원회가 차기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유린을 비난하는 결의를 채택해 줄 것을 비롯하여 북한 인권실태 고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과 구호단체의 자유로운 탈북자 접근 허용, 식량 제공국(혹은 국제기구)에 의한 식량 분배 통제, 탈북 귀환자 및 피억류자의 강제송환 중지, 재북 피랍자 석방 요구 등이다.¹⁰¹⁾

제5회 국제회의는 2004년 2월 29일-3월 2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렸는데 이때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이 헬싱키 인권재단과 공동 주최하였다. 이 회의는 제4회 회의가 제59차 유엔 인권위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최초로 통과시킨 이후 개최되는 것이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유엔 로비가 논의되고 결의된 자리였다. NED의 거쉬만 회장은 환영사에서 “중국과 한국 등의 북한 붕괴에 대한 두려움은 과장된 것” 이라고 전제하고, “북한에서의 억압은 너무나 심각하여 독립적인 활동에 대한 제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거쉬만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인권의 보편주의적 시각에 기초하여 이에 대한 외부 개입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판단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 이 행사에서 이어졌는데, 역시 미국측 인사로 참여한 타릭 라드완(쥬빌리캠페인 변호사)의 발표가 그것이다. 그는 ‘미국 북한자유법안의 배경과 전망’이란 제하의 발표를 통해 상하양원에 상정된 북한자유법안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것이 북한 인권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미북한인권위원회의 호크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전략’ 이라는 제하의 세션에서 이 행사 직후에 개최되는 제60차 인권위원회에서 전개할 로비활동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제59차 유엔 인권위가 북한인권 결의안 통과 이후 그 이행을 위해서 행해진 것은 거의 없다고 평가하였다. 호크는 주제별 접근 혹은 기술협력 프로그램이 북한의 인권개선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결의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으며 그럴 경우 보고서 준비를 위하여 접근가능한 모든 자료를 이용하여 북한인권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¹⁰²⁾

바르샤바 회의를 마치면서 참석자들은 11개항의 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대

101) 낙태 및 영아살해 비난은 제60차 유엔 인권위의 북한결의안에 포함되었고, 한반도 관련 안보합의에 북한인권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목을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북한인권단체가 강조하는 후자는 미국내 보수인사들 사이에 공감대를 갖고 있는 내용으로,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에 반영되어 있다.

<http://www.nkhumanrights.or.kr/inter04.html>

102) 호크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활용할 수 있는 북한인권 자료의 예로 2004년 국제엠네스티 보고서인 ‘권리에 대한 갈증: 북한의 인권과 식량난’과 2003년 11월 자신이 쓴 *Hidden Gulag*을 꼽았다.

부분의 내용이 제60차 유엔 인권위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반영되었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담당할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를 권고한다.
- 언론과 국제사회가 ... 북한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 중국과 러시아가 독자적 구호단체들의 북한난민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할 것
- 탈북자의 강제송환 반대, 한국 및 일본 등의 재북 피랍자의 석방
- 미 의회에 상정된 북한자유법안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지지한다.¹⁰³⁾

이상의 사실을 갖고 다음과 같이 몇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가 한국과 미국측 북한인권단체 및 인사들의 교류를 지속시켜 주는 것은 물론 양측간에 공동의 행동전략과 통일된 행동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인권문제에 민감한 한국과 미국의 여론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이 회의가 개최지를 옮겨가면서 참석 단체 및 인사들에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주최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상기 주요 미국측 단체의 인사들은 처음부터 제5회 회의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다. 또 유럽측 인사들의 꾸준한 참여도 주목되는데, 이것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제59-60차 유엔 인권위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사실과 일정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도 있다.

둘째, 상기 국제회의가 유엔 인권위원회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는 유엔 인권위 개최 직전에 열려왔으며, 제4-5회 회의 개최지가 제네바에 가까운 유럽국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의 인사들이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시키는데 이 행사와 유엔인권위를 연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4-5회 국제회의의 결의문 대부분의 내용이 유엔 인권위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반영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이 행사에 참가한 단체의 유엔 인권위에서의 로비가 성공적임을 알 수 있다. 또 제4-5회 국제회의에 조선일보와 NED가 후원을 하고 있는 것도 이 행사의 성격과 참가 단체들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의 한국측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다. 공개된 바로는 국립민주주의재단은 1997년부터 북한인권시민

103) <http://www.nkhumanrights.or.kr/inter05.html>

연합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북한인권단체들에게 각각 매년 40,000 달러에서 151,865 달러를 지원하였다.¹⁰⁴⁾ 이 재단이 미 의회에 의해 설립되었고 재정이 미 행정부로부터 나온다고 할 때, 한국의 일부 북한인권단체들이 이 재단과 협력하고 재정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미국의 대북인권정책과 깊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5. 결론

미국의 인권외교정책이 정권과 시기, 그리고 상대국을 초월하여 미국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데 인권문제를 활용하는 ‘인권정치’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은 자국의 국익 달성 가능성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묵인하기도 해왔다. 이런 특징은 특히 냉전시기 소련과 아시아권 동맹국들에 대한 인권외교에서 잘 나타난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상대국의 인권 신장에 기여해온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미국의 인권외교정책의 변화는 첫째, 민주당이 집권한 경우 인권외교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둘째 냉전기에 비해 탈냉전기에 들어 외교정책에 인권을 더 강조하고 있다. 셋째, 강대국보다는 약소국에 대하여 미국이 인권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제기하여 왔다. 그러나 이런 차이점은 대체로 연속성 아래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인권외교정책에서 북한인권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가? 먼저, 북한은 적어도 미국에 비할 때 약소국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이 대북 인권정책에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하다. 둘째, 탈냉전기에 들어 북한은 인권문제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더 큰 압력에 노출되어 있다. 셋째, 북한과 미국이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적대관계에 있다는 점은 양국간 상호 이질적 세계관의 작동과 맞물려 북한의 인권개선 과정이 양국간 갈등으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인권외교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론조성, 국제기구 활용, 그리고 군사력 사용까지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냉전 붕괴 이후 국제사회의 높아진 관심과 국제인권기구의 역할 증대, 그리고 미 의회 및 인권단체 등 국내적 자원의 역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미 행정부는

104) NED 홈페이지에는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을 2002년까지 밝히고 있다. www.ned.org

일차적으로 대북정책에 있어서 하드이슈에 집중하면서도, 의회와 인권단체 그리고 국제여론 등을 활용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을 제기할 수 있는 정치적·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요컨대, 미국의 대외인권정책 유형에서 북한의 경우는 매우 ‘중요한 사례’(critical case) 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은 미국내 광범위한 정치적 컨센서스와 다양한 정책수단을 갖고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론에서 살펴보았듯이, 미 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비정부기구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여론 조성과의 일련의 입법화를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북한인권 결의안 등 국제사회에서도 상호 협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논의에서 미 행정부와 의회는 주로 부시행정부에 한정하여 살펴보았지만, 미 행정부는 집권당과 무관하게 인권의 보편성과 대북인식 등에 있어서 광범위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 이는 북한인권법안이 상하 양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실제 이 법안의 상정 및 통과, 그리고 북한자유법안의 상정 과정에서 미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은 의원들을 향하여 적극적인 로비를 벌였으며, 상하원의 관련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장들과 일부 의원들은 이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전개하였다. 대부분 공화당 소속인 이들 의원들은 부시 행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벌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미 행정부는 6자회담 진행과정에서 북한에 인권개선을 요구한 바 있고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하여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앞으로 미 행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의회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 상정 및 통과, 북한인권단체들의 활동은 장래 행정부의 북한인권정책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내 북한인권단체와 미 행정부의 연계는 전자에 미 행정부의 재정적, 조직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의사(擬似)비정부기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국립민주주의재단의 활동에서 보듯이, 이런 단체들은 북한인권 개선운동 과정에서 일반 비정부기구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요컨대, 미국에서는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행정부-의회-비정부기구들 사이의 상호연계가 매우 긴밀히 형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인권 개선을 향한 이러한 국내외적 움직임에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정부보다는 국내 북한인권단체와 협력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즉, 미국의 대북 ‘인권정치’와 비정부기구의 북한인권 개선운동의 결합이 한국의 대북정책과 한미간 공조체제 형성에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행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은 인권개선 그 자체보다는 전반적인 대북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일부 인권단체의 북한인권 개선운동은 그것을 위해

북한정권의 붕괴가 불가피하거나 한반도 평화는 이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한국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미간 외교적 갈등과 국내에서 제2의 ‘남남갈등’을 초래할 잠재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전면에 부상해있지 않은 상태이고, 실제 의제로 오를 경우에도 구체적인 정책은 정책적 우선순위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인권외교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인권을 외교정책에 적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위기의 하나로 과도한 기대가 초래하는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해당국 정부의 정책결정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상대국의 인권상황은 그 나라의 문제 혹은 그 나라 시민이 주체가 되어 해결할 문제라는 인식과, 그것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제재 등 강압적 방식은 인권 상황 개선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다른 한편, 강대국의 ‘인권정치’를 견제하는 대신 특정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대안으로 인권단체의 지원이 제시되곤 한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일부 북한인권단체의 경우, 북한정권에 대한 부정과 북한인권에 대한 근본주의적인 접근으로 볼 때 북한인권 개선운동이 강한 정치적 성향을 띠 수도 있다. 이는 본론에서 검토한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의 상징 및 후자의 통과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물론 현상적으로 북한인권법안이 북한자유법안에 비해 다소 유화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법안 상징을 주도한 세력과 그들의 법안 통과 로비활동 이면의 목적을 고려할 때 그것을 질적인 차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의의 결과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각각 북한과 쌍무적인 인권대화를 증진하며 국제인권기구를 통한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대북정책 차원에서는 북한인권 문제의 정책적 우선순위 및 접근방식에 관하여 양국이 공동의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단체의 경우 당면한 북한의 생존권을 회복하는 데 일차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북한이 국제인권협약을 준수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정부와 관련 NGO는 북한인권문제가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된 다른 과제들과 분리된 것이 아님을 직시하고 그것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접근이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유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의 특징과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첫째,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은 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비정부기구들 사이의 협력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에게 정부·비정부기구를 막론하고, 대북 인권개선 노력이 강대국의 ‘인권정치’에 이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둘째,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자유권에 치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권의 범주는 크게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국가 차원의 경우 발전권과 평화권(안전보장)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북 인권 인식은 편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와 북한인권정책에 협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하여 공감대를 가져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 둘째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셋째, 대북정책 전반에 있어서 북한인권문제의 위상과 비중, 넷째 양국의 북한인권단체들과 공유할 역할 분담의 내용 등이 그것이다. 또 한국정부는 이와 같은 점들을 미 의회와 비정부기구들과도 협의하고 협력을 구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김국신, “미국의 대북 지원정책 결정배경과 향후 전개방향,” 「통일연구논총」, 제5권, 제1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김근식, “북한의 인권: 안으로부터의 시각,” 「한국인권재단 주최 제주인권회의 발표문」, 2001.
- 김병로,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데이비드 D. 뉴섬 편·김계수 역, 「미국의 인권외교」(서울: 탐구당), 1988.
- 도거키, 제임스 E.·로버트 L. 팔츠그라프, 「미국외교정책사: 루스벨트에서 레이건까지」(서울: 한울아카데미), 1997.
- 박영호·최선근,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대외 인권정책에 대한 규범적 비판,” 「국제정치논총」, 제35권, 제2호, 1995.
- _____, 「북한인권백서 2003」(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서보혁,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통합적 이해와 포괄 접근을 위한 시론,” 「민주법학」, 제25호, 2004.
- 서재진·김수암, “미국의 북한인권 문제 관련 동향 분석,” 「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보고서」, 2002.
- 송원호, “테러리즘과 그에 대한 대응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9·11테러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송지영, “북한의 ‘우리식 인권’ 외교 연구: 대남, 대미, 대일정책을 중심으로,” 경남대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오영달, “주권과 인권에 관한 홉스와 로크 이론 비교,”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문」, 2001.
- 이상현·남궁곤, “부시 행정부 외교안보팀 성향 분석,” 「세종연구소 정책보고서」, 2001-03, 2001.
- 이상환·정연식, “미국의 인권외교정책: 중국과 한국의 사례비교,” 「한국정치학회 1999년도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1999.
- 이원웅, “북한의 인권위기: 국제사회 동향과 정책적 제언,” 「통일문제연구」, 제15권, 제2호, 2003.
- 이현석, “미국 인권 외교정책의 이론적 접근: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사례로,”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정인섭, “인권 및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탈북동포 문제,” 미래전략연구원,

2002.

- 잭 도널리 지음·박정원 옮김, 「인권과 국제정치」(서울: 오름), 2002.
- 제성호, 「유엔인권소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평가와 전망」(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지미진, “미국의 대중국 인권외교정책,” 서강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최성철, “북한의 인권실태와 개선방안,” 「북한」, 제387호, 2004.
- 최의철, 「냉전종식후 국제정치와 인권: 대북인권정책 추진방향모색」(서울: 통일연구원), 2000.
- _____, 「미 국무부의 2000년 북한인권보고서와 통일연구원 2000년 북한인권 백서 비교분석」(서울: 통일연구원), 2000.
- _____, 「북한인권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책방향」(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_____, 「북한 인권과 유엔 인권레짐: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2002.
- _____,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 방향」(서울: 통일연구원), 2003.
- _____,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의 2차 정기보고서: 내용분석 및 평가」(서울: 통일연구원), 2001.
- _____, 「인권과 국제정치 그리고 북한인권」(서울: 백산자료원), 2001.
- _____. 임순희,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보고서」, 2003.
- 홍현익, “9·11테러와 세계질서의 변화,” 「세종연구소 정책보고서」, 2002.
-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 자료.

2. 해외문헌

1) 미국 행정부 문서

Department of State, *DPRK Religious Freedom Report 2003*, December 18, 2003.

Department of State, *DPRK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February 25, 2004.

Department of State, *Human Rights Reports*, each year.

Department of State, *Supporti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The U.S. Record*, September 30, 2002.

George Moose, *EOV: L. 48, Globalization and Human Rights*, 04/23/01.

George W. Bush, *Human Rights Day, Bill of Rights Day, and Human Rights Week*, 12/09/02.

Lorne W. Craner, *A Comprehensive Human Rights Strategy for China*, 0129/04.

Lorne W. Craner, *The Role of Human Rights in Foreign Policy*, 10/31/01.

Paula Dobriansky, *U.S. Human Rights Policy*, 05/24/01.

2) 미국 의회 청문회 문서

○ 상원 청문회

Tuesday, *The North Korean Nuclear Calculus: Beyond the Six Power Talks*, March 2, 2004.

Thursday, *Public Diplomacy and International Free Press*, February 26, 2004.

Thursday, *Trade & Human Rights: The Future of U.S.-Vietnamese Relations*, February 12, 2004.

Wednesday, *Pakistan & India: Steps Toward Rapprochement*, January 28, 2004.

Tuesday, *Afghanistan Stabilization & Reconstruction: A Status Report*, January 27, 2004.

Tuesday, *The Hidden Gulag: Putting Human Rights on the North Korea Policy Agenda*, November 4, 2003.

Thursday, *Challenges for U.S. Policy Toward Cuba*, October 2, 2003.

Tuesday, *North Korea*, September 9, 2003.

Thursday, *Corruption in North Korea's Economy*, July 31, 2003.

Thursday, *Life Inside North Korea*, June 5, 2003.

Tuesday, *North Korea & Indonesia*, May 20, 2003.

Wednesday, *Hearing: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in East Asia and Beyond: A Review of US Policy*, April 9, 2003.

Wednesday, *Effects and Consequences of an Emerging China*, March 19, 2003.

Wednesday, *Regional Implications of the Changing Nuclear Eq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March 12, 2003.

Thursday, *An Agreed Framework for Dialogue with North Korea*, March 6, 2002.

○ 하원 청문회

Human Rights Practices Around the World: A Review of the State Department's 2003 Annual Report

March 10, 2004,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errorism, Human Rights and the Future of U.S.-Libyan Relations

July 9, 2003, A Survey and Analysis of Supporti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The U.S. Record 2002-2003

June 19, 2002, Foreign Government Complicity in Human Trafficking: A Review of the State Department's 2002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March 14, 2002, The Afghanistan Freedom Support Act of 2002

November 1, 2001: Radio Free Afghanistan Act of 2001

June 6, 2001, Markup of: H.R. 931, the Sudan Peace Act

March 7, 2001, Reinvigorating U.S. Foreign Policy

March 1, 2001, Conducting Diplomacy in a Global Age

February 14, 2001, State Department: In the Lead on Foreign Policy?

3) 연구물

Ayoob, Mohammed,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Vol.6, No.1, 2002

Berting, Jan et al. eds, *Human Rights in a Pluralist World: Individuals and Collectives*, Meckler, 1990.

Chuter, David. *War Crimes: Confronting Atrocity in the Modern World*, Lynne Rienner, 2003.

Donnelly, Jack. An Overview. in David P. Forsythe, *Human rights and comparative foreign policy*,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2000.

Duner, Bertil, Violence for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Vol.5 No.2, 2001.

Evans, Gareth and Mohamed Sahnoun,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2002.

Fowler, *Thinking about Human Rights: Contending Approaches to Human Rights in the U.S. Foreign Policy*, University Press of America, Michael R. 1987.

- Forsythe, David P., *Human Rights and U.S. Foreign Policy: Congress Reconsidered*. University Press of Florida, 1988.
- _____ ed. *Human rights and comparative foreign policy*,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2000.
- Hawkins, Darren, Universal Jurisdiction for Human Rights, *Global Governance*, Vol.9, No.3, 2003.
- Heaps, David, *Human Rights and U.S. Foreign Policy: The First Decade, 1973-1983*.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1984.
- Holzgrefe, J.L. & Robert Keohane, *Humanitarian Intervention: Ethical, Legal, and Political Dilemma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Horowitz, Shale and Albrecht Schnabel, eds, *Human Rights and Societies in Transition: Causes, Consequences, Responses*.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2004.
- Ignatieff, Michael, The Attack on Human Rights,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2001. .
- Kaufman, Natalie, *Human Rights Treaties and the Senate: A History of Opposi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0.
- Kissinger, Henry A., The Pitfalls of Universal Jurisdiction,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01.
- Mansourov, Alexandre, Human Rights Agenda in the US-DPRK Dialogue, Nautilus Institute Special Report, 1995.
- Mower, A. Glenn, Jr. *Human Rights and American Foreign Policy: the Carter and Reagan Experiences*, Greenwood Press, 1987.
- Ogata, Sadako and Johan Cels., Human Security-Protecting and Empowering the People, *Global Governance*, Vol.9, No.3, 2003.
- O'Hanlon, Michael E. & Peter W. Singer, The Humanitarian Transformation: Expanding Global Intervention Capacity, *Survival*, Spring 2004.
- Plummer, Brenda G. ed., *Window on Freedom: Race, Civil Rights, and Foreign Affairs: 1945-1988*.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3.
- Pogany, Istvan, ed., Human Rights in Eastern Europe. Edgar Elgar, 1995.
- Raymond, Susan, Foreign Assistance in an Aging World, *Foreign Affairs*,

March/April 2003.

- Reitan, Ruth, Human Rights in U.S. Policy: A Casualty of the 'War on Terrorism'?,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Vol.7, No.4, 2003.
- Roberts, L. Kathl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Changing Approach to Human Rights Diplomacy under the Bush Administration,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1, No.3, 2003.
- Rubin, Barry M. and Elizabeth P. Spiro, eds. *Human Rights and U.S. Foreign Policy*. 1979. Westview Press.
- Shue, Henry, *Basic Rights: Subsistence, Affluence, and U.S. Foreign Polic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 Tamaki, Taku, China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Vol.6, No.3, 2002.
- Tang, James T. H., ed.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Asia Pacific*. St. Martin's Press, 1995.
- US. Institute of Peace, U.S. Human Rights Policy: a 20-Year Assessment, *SPECIAL REPORT 49*, 1999.
- US. Institute of Peace, The Role of the Ambassador in Promoting U.S. Human Rights Policy Abroad, *SPECIAL REPORT 61*, 2000.
- US. Institute of Peace, *U.S. Human Rights Policy toward Africa*, *SPECIAL REPORT 73*, 2001a.
- US. Institute of Peace, U.S. Human Rights Policy toward Latin America, *SPECIAL REPORT 65*, 2001b.
- US. Institute of Peace, Advancing Human Rights and Peace in a Complex World, *SPECIAL REPORT 86*, 2002.
- Vincent, R.J., *Foreign Policy and Human Rights: Issues and Respons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 Walters, Gregory J.,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CA & Eaglewood Cliffs, 1995.

3. 기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시민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좋은벗들 등 시민단체들의 발행 자료와 홈페이지
International Federation of Human Rights, *Repor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Violations*, 2003.
UNICEF, *Situation Analysis of DPRK*, 2003.
Amnes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Watch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World Food Plan 등 국제인권·인도주의 단체들의 북한 관련 보고서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CN.4/RES/2003/10.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CN.4/2004/31 등 유엔 자료.

남북한 아동의 복지환경에 관한 연구



오 미 희

(영동대학교 전임강사)

목 차

【 요약 문 】	185
1. 서론	189
2. 남·북한 아동복지 현황	191
3. 남·북한 아동복지현황의 문제점	216
4. 남·북한 아동복지제도 개선방안	220
5. 결론	224
【 참고문헌 】	229

【 요약 문 】

최근 남북한 어린이 복지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변화와 과정을 살펴보면 부부간의 이혼으로 인한 편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부모가 존재한다고 해도 기능적으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이소희, 2002; 보건복지부, 2000; 전재일 외, 1997). 남한의 경우는 IMF 위기 이후 이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오는 결과가 크다고 볼 수 있고,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전반적인 경제구조의 침체에 따른 심각한 빈곤으로 굶어 죽거나 만성 영양실조(2000년 5세미만 아동 45.2%)로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어린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가 하면 발육부진 상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중앙일보, 2003).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현실과 관련하여 남한과 북한의 어린이를 둘러싼 복지환경에 대한 현황과 그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양 체제를 복지적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어린이 복지를 위해 개선 또는 남북 어린이 복지를 위한 장점만을 수렴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아동복지 환경은 남한의 경우 취학전 아동의 보육서비스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최근 들어 국가차원의 노력이 차츰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특히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자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복지정책과 많은 관련이 있다는 것도 밝혀냈다. 이에 비해 북한은 이미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동을 위한 복지환경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왔다는 점이 남한과 크게 달랐다. 이외 남북한 아동복지제도구성의 기본적인 형태, 운영의 방식이나 철학에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남북한 아동복지제도의 이질화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반된 이념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 제일 큰 이유였다. 이를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남한의 아동을 둘러싼 주변 환경 변화는 우선 여성의 가치관 변화로 인해 기혼모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 증가, 남녀평등의 보편화 추구, 이로 인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 및 확대, 그리고 각종 모성보호제도 등이 축을 이루면서 제도화 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생애 가치관의 변화는 남한의 사회적인 변동을 가져오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보육서비스인 아동복지제도가 발달 할 수 있는 구조로 까지 변화되었다. 남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자본주의에 입각하여 생산성의 제고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였으며 “선별주의(요보호여성대상)”방식과 “적극적 선별주의 방식(일반여성대상)”의 여성정책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모성보호조치와 탁아소 등의 보육시설을 양·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반면 북한은 해방이후 남녀평등정책을 추진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높여왔다는 것이 남한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증가 요인과 다

르다는 점을 연구과정에서 지적하였다. 또한 북한 여성은 출신성분에 따라 직업 선택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남한의 아동 양육이란 테두리속의 변수로 볼 때 큰 차이점이 드러났다.

한편 1980년대 들어오면서 북한은 여성의 사회화를 제지하고 가정에서 그들의 자녀를 키우도록 하였으나 사회주의 체제의 30년이란 세월 속에 북한 여성의 가치관은 사회참여와 일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게 만들었다. 이점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북한의 여성들에게 자아의 승화보다는 사회참여와 일로 활동영역을 오히려 좁혀버렸다. 이는 아동복지차원을 넘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서 남북한이 동질적인 요소보다 이질적인 요소로 발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남한에서는 성차별, 북한에서는 그들의 출신성분이 영향을 받는 정책이 계속 이어진다면 여성의 직업선택에 있어 많은 부작용을 낳는 요인으로 대두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남북한 아동복지에 관하여 상이한 양 체제를 비교 분석하면서 언젠가 다가올 통일 한국의 어린이 복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남한의 아동복지차원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확대와 자녀양육의 문제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남녀 평등사회를 내세우는 남한에서는 남성도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해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지 않고 있다. 이제 남한은 주 5일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직장 일을 가진 남성에게는 가정에 있는 시간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며 그들의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역시 많아질 것이다. 아동복지의 주체가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가 함께 관리되어야 하고 아동들 스스로가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건설하거나 이끌어 나아 갈 수 있는 인격 및 기술을 갖추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남한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거와는 달리 남성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아동복지의 우려의 시각에서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해방 후 평등한 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로서 남녀평등성을 주장해왔으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오히려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아지면서 그 평등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같은 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분단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통일과정이나 통일이후 어떻게 하면 아동복지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는 정책대안도 제시하였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과 모성보호 조치 및 보육시설 문제, 여성의 건강문제, 등의 각론적 문제를 주제로 선정하여 논리 개발로 현실정책에 반영되어야겠

다. 이보다 선행적으로 지적해야 할 점은 식량난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왜냐하면 식량난이야 말로 문맹률이 증가되는 원인이 되고, 건강악화, 질병 및 휴먼자원의 적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복지제도도 생존권이 유지되는 속에서 추구할 수 있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을 연구결과로 제시하였다.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삶의 영역이 세계화로 확대되고 정보통신 혁명으로 생활양식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르게 변화되어가면서 복지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아동문제와 관련해서 나타난 가장 큰 사회적 현상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인구 참여 증대, 소가구화, 가구당 평균 자녀수의 감소, 편부모 가족의 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화이다. 특히, 결혼 전에 일시적으로 취업했던 미혼 여성들이 이제는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취업을 함에 따라 2001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49.0%로 미혼여성 48.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여성개발원, 2002).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여성들이 결혼이나 출산·자녀양육과는 무관하게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1995년 20.9%이던 것이 2002년 35.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취업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식변화를 실감하게 하고 있다(www.nso.go.kr).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가정에서의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전념하던 시대와는 달리 사회적 존재로서의 의식이 강화되면서 경제적 이유와 더불어 자아발전을 위해서 취업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로 아동이 이전처럼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려워졌으며 자녀를 돌봐주는 이가 없을 경우 방치되어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아산복지편람, 1997). 따라서 앞으로 아동을 위한 복지환경은 가정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재가복지서비스나 대인적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적인 기술 개발과 추진이 요청된다. 이는 아동복지의 주체가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함께 관리되어야 하며 아동들 스스로가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건설하거나 이끌어 나아 갈 수 있는 재능 및 인격과 전문 기술을 갖추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은 21세기를 맞이한 현 세대에게 주어진 중요한 문제점이자 극복해야 될 과제로 등장하였다.

최근의 남북한 아동복지의 사회제도적 환경변화와 과정을 살펴보면 부부간의 이혼으로 인한 편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부모가 모두 존재한다고 해도 기능적으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이소희, 2002; 보건복지부, 2000; 전재일 외, 1997). 남한의 경우는 IMF 위기 이후 이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오는 결과가 크다고 볼 수 있고,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전반적인 경제구조의 가동 중단에 따른 심각한 빈곤으로 절대 다수의 아동들이 굶어 죽거나 만성 영양실조(2000년 5세미만 아동 45.2%)로 병마에 시달리고, 발육부진의 상황에 처해 있다(중앙일보, 2003). 이런 전반적 사회 제도적 변화가 남북한 아동복지제도 및 서비스과정의 차이점이다. 다시 말해 북한 아동의 현 실정은 통일 후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남북한 통일이 먼 미래가 아닌 현실로 대두된다면 북한의 아동 역시 소중한 인적자원이 될 것이다. 이들을 관리하는 것도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따라서 남북한 아동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 및 서비스를 수립하는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양 체제의 아동에 대한 복지제도 및 서비스를 연구하여 장점만으로 새로운 아동 복지제도를 제시해야 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복지 분야의 연구를 살펴보면 1980년 후반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1990년대 들어오면서는 남북한 사회복지에 대한 통합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우선, 남북한 통일 관련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로서 북한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연구(문옥륜, 1972, 1989; 오정수, 1987, 1991b; 변중환, 1989; 김연명, 1991; 김영치, 1997; 노용환, 1997)와, 비교학적인 시점에서의 분석적 연구(박동운, 1972; 전응렬, 1972; 양재모, 1972; 송미순, 1992; 정경배, 1992, 1994; 한국사회보건연구원, 1993, 박창희, 1995; 정기원, 1995)가 있다. 그리고 통일 후 남북한의 사회복지제도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유인학, 1994; 함인희, 1994; 이정우, 1997)가 있다. 이 외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사회복지세부적인 내용을 함께 다룬 연구(유인학, 1973; 오정수, 1987; 1991a; 1991b; 김연명, 1991; 성경룡, 1993; 이상은, 1993; 홍종덕, 1993; 박순성, 1994; 함인희, 1994)도 있으나 대부분이 사회보장제도만을 다룬 연구(전응렬, 박길준, 1972; 문옥륜, 1972, 1989, 1993; 박동운, 1972; 한국개발연구원, 1988; 정경배, 1992, 1993; 박진, 1994; 박진외, 1994; 노용환, 1997)에 한정되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로는 남북한 보건 의료에 대한 비교연구분야(변중환 외, 198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가 있으며, 노인복지분야에 송미순(1992), 아동복지분야 심중수(1990), 최민수(1996)를 들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연구로서 2001년 이소희의 '남북한 부모부재 아동복지제도'에 대한 것이 있으나 이는 이혼가정을 중심으로 다루어 연구의 내용이 광의의 아동복지제도라기 보다는 협의의 아동복지 분야의 일부분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남북한 아동을 위한 복지 환경과 제도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한의 어린이를 둘러싼 복지환경에 대한 현황부터 제시하고 그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상이한 양 체제의 제도를 하나로 수렴하여 남북통일을 대비한 아동복지제도의 개선방안을 1차적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지금까지 논의·연구되었던 아동복지 관련 국내외 학위논문 및 학술지, 신문기사 및 뉴스·인터넷자료 등 문헌 조사에 의한 기술적인 방법과 시계열적 방법 및 환경 영향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코자 한다.

2. 남 · 북한 아동복지 현황

2.1.1 남한의 아동관

아동이 행복한 나라는 먹고 입고 배우며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복지가 이루어지고, 기아, 방임, 유기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아동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나라를 말한다. “어린이를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말자.” 라는 외침은 1920년대 소파 방정환 선생을 포함한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에 의한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만들기를 위한 구호였다(이배근, 2004). 과거 조선시대의 남한은 남녀유별과 장유유서의 원리로 성인과 아동간의 철저한 위계질서를 강조하였으며, 엄격한 수직적 신분사회에서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복종이 당연시되었던 때와는 달리 오늘날 남한의 아동관의 변화는 해방이후 서구 문물이 유입되면서 제도적으로 인격을 가진 인간적 대우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현대 아동은 핵가족화, 소자녀화 현상에 의해 다양한 대인관계를 경험하는 기회가 감소되고, 도시화에 따라 지역사회와의 교류도 적어지고 있다. 남한 아동들의 놀이는 텔레비전게임과 컴퓨터게임 등이 주류가 되어 점점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적은 혼자놀이가 형태로 자리 잡고가고 있다. 게다가 부모들은 자녀를 소중하게 키우려고만 한 결과 ‘아동의 잘못된 행동양식에 대해서 무관심 하는 현상’도 나타나는데, 이는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능력의 저하 요인이 될 수 있다(오미희, 2003). 이 밖에도 고학력화로 과거에 비해 아동들이 청년기 과정을 걸쳐 사회인으로 되기까지의 기간이 연장되어 이른바 모라토리움(유예) 기간이 길어졌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은 신체적으로는 예전에 비해 성숙도가 높지만 사회적 성숙도가 낮아 ‘신체적으로는 조숙하고 사회적으로는 지체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부적응이나 비행, 왕따 등의 아동문제

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인간의 성격과 사회성 발달이 평생을 통해서 발달해 감과 동시에 인생 초기의 환경적인 자극과 경험이 이후의 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심각한 조기교육을 낳게 한 근원이기도 하다. 많지 않은 자녀를 기 안 죽이고 남보다 앞서게 하고 한시라도 빨리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와 상관없이 조기교육과 사교육이 범람하는 사태를 야기 시켰다.(어린이 문화진흥회, 1995). 이러한 가운데 서구 세계의 아동의 인권존중 이라는 일련의 세계적 추세에 힘입어 남한도 1991년 UN의 ‘아동권리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이어서 아동복지법, 가족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아직까지 자녀를 부모의 소유로 인식하며 인격이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시대와 세계적 흐름에 걸맞게 올바르게 정립된 아동관 확립과 준수는 결국 아동을 위한 복지환경 개선이란 명제를 던져주고 있다.

2.1.2 남한 여성의 경제활동지원정책

여성들의 사회참여는 아직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나 고위직임원, 변호사, 의사, 간호사, 공무원, 사업가, 자영업자, 언론인, 대학교수, 중·고등학교 교사 등 각 분야로의 진출이 활발해 졌으며 이는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자아정체성이 강해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근 남한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정책이 활발해 지는데 이는 곧 여성을 위한 질 높은 복지정책의 하나가 되며 결과적으로는 아동을 위한 복지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남한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980년 41.6%, 1985년 41.9%, 1990년 47.0%, 1999년 47.4%, 2002년 48.8%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계층별로는 20세 중반까지 상승하다가 30-34세까지 결혼과 육아로 인해 빠른 감소를 보인 후 다시 상승하는 전형적인 M형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여성들에게 조사를 한 결과 20대 여성의 27.8%, 30대 여성의 39.3%, 40대 여성의 25.8%가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상당수의 남성들 역시,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육아문제가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육아문제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에 절대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한의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적 지원의 미비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여성근로자들의 이직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직장에서 일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과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로 인

하여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남한은 취업여성의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은 물론 육아휴직제도를 정비하고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지원 정책(한국여성개발원, 2000)을 펴면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남한의 여성 정책이자 아동복지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사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남한에는 보편적인 여성을 위한 복지정책은 없었다(강이수·정혜선, 1997). 당시에는 주로 공적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로 영세여성가구주, 미혼모, 윤락여성, 가출여성과 같은 요보호 집단이었고 이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는 고작 ‘부녀복지’라는 용어가 거의 전부였다. 이후 '80년대 후반기 일반여성을 위한 복지가 조금씩 확장되었는데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제정(1989)과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여성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법의 기본 이념은 “근로여성은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다음세대의 출산과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그 능력을 직장생활에서 최대한 발휘 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인식하고 있다(장혜경, 2002). 이후 두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배우자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였다. 또한 육아휴직제도(고용보험법, 1987. 12)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월 20만원의 육아휴직급료를 지불하게 되었으며, 2003년에는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2004년부터는 월 40만원씩 지불하게 되었다. 이 외 보건복지부 등은 2004년 1월 출산 축하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국가 실천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같은 정책을 분석해 보면 남한의 정부는 모든 산모에 대해 2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자녀양육비에 대한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분양순위를 한 단계 상향조정하여 저 소득층 세 자녀 이상 가정에는 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였다(여성신문, 2004. 2. 2).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모성복지가 적극 장려되는 시기이다. 게다가 취업모 여성의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아동의 양육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자 보육의 책임을 국가에 두겠다는 의지로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시대에 맞게끔 개정 보완하게(1997)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법의 제정과정은 탁아운동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당시 국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수준에서 탁아정책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독립적인 ‘탁아법’을 요구하는 탁아운동의 주장이 일부 수용된 것

이다(장혜경, 2002).

한편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적 부담에 대한 논의와 요구가 제기되었으나 기업, 정부, 여성노동자, 여성운동 등의 역학관계 속에서 여성들의 평생평등 등 노동권을 보장하는 모성보호에 대한 보장을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즉,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종업원 300인 이상의 민간 기업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를 현실화하기에는 어려운 요인이 많았다. 게다가 영유아보육사업 보충계획(1995-1997)에 의해 직장보육시설을 1,472개로 확충한다는 계획은 정부의 지원 미비로 1997년 사업이 끝날 무렵에는 132개소 4,251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을 뿐이었다. 수요자인 여성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장 탁아시설의 필요성을 매우 절실하게 느끼었으며 실제로 이를 지원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여성근로자들의 근속기간이 길어지고 생산성도 매우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인 기업주는 비용에 대한 부담과 자녀양육은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를 회피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커다란 제재를 받고 있지 않다.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노동관계법에 육아와 관련된 규정이 있으면서도 미비사항이 많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요인의 하나이다. 직장 탁아시설의 성패는 남한의 행정적, 법적, 재정적 지원체제가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는 육아에 대해 사회적 인프라 구축으로 인정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제도 정비와 함께 재정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양육문제로 인하여 상당수의 취업 여성이 직장을 그만둔다면 이는 여성들의 지속적인 노동권 확보와 평등실현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 될 것이다. 육아가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사회마다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정책이나 제도도 그러한 역사적 철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설정된다. OECD 국가들 가운데 프랑스는 자녀 양육을 국가와 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하고 일찍부터 국가가 지원을 시작하였다. 프랑스는 유아기 어린이들을 위한 공교육 제도를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일찍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탁아시설도 잘 발전시켰다(정미라, 2003a). 반면에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육아란 전적으로 가정에서 담당하는 일이며 국가에서는 사회적으로 혜택 받지 못하는 계층에만 지원을 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탁아시설의 대부분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박은혜 외, 2000). 전통적으로 육아를 가정의 책임으로 이해해 왔던 남한 역시 특히 그 책임이 여성에게 지워져 있었기 때문에 취업 여성에 대한 국가적 혹은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자녀양육이 개인의 몫이라는 사회적 통념은 유럽의 복지선진국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이웃 일본과 비교해 보아도 매우 미흡

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정미라, 오미희, 2004).

따라서 1994년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영유아 탁아시설 확충 방안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탁아시설을 늘리는 방안으로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전체 탁아시설 중 국·공립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6.63%, 직장탁아시설 1.03%에 불과하였다. 2004년 6월 12일자로 보육의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다. 여성부는 보육의 문제를 "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오는 2008년까지 국가의 보육비용의 정부 부담률을 현 30%에서 50%까지 늘리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의 질을 정부가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네이버뉴스, 2004).

2.1.3 남한의 아동복지제도

남한의 아동복지사업은 해방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전쟁고아·기아 및 부랑아들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남한의 커다란 과제로 응급구호에 치중하는 정책이 계속되었으나, 그 재정적 지원은 외국 단체들에 크게 의존하였다. 당시 다수의 민간외국 원조기관들이 국내에 들어와 활동하였는데, 기독교 아동복지회(C.C.F.; 철수 후 한국어린이 재단, 한국복지재단으로 명칭변경), 선명회세계본부(철수 후 최근 월드비전으로 명칭변경) 등 외원(민간외국원조기관) 단체에 의한 아동후원사업이 전개되었다. 외국원조 중심의 아동복지시설은 196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초 남한은 생활보호법과 아동복지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국가책임의 원칙이 처음으로 법제화되는 정책이 기대되었으나, 당시 복지 입법의 대부분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 한계를 두고 있었다. 아동복지의 경우도 공비부담의 극소화와 요보호 아동의 발생예방을 정책의 기조로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한에서는 가정보호를 강조하였다(공계순, 박현선, 오승환, 이상균, 이현주, 2004). 이는 정부의 아동보호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현 아동복지법)의 보호대상은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로 명확히 한정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사후 조치적이고 잔여적인 아동복지관과 가정보호의 강조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이혜경, 1993).

이 시기 남한은 요보호아동들이 무차별하게 시설에 수용되지 않도록 아동상담소 외에 10종에 달하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보호받게 한다는 취지로 입양과 위탁보호, 탁아서비스를 권장하였다. 게다가 고아입

양특례법(1961년)을 제정하고 국내외 입양의 확대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정책적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국내입양보다 해외입양이 증가추세를 보이면서(표갑수, 2000), 아동복지시설의 수와 수용아동인구가 증가하는 듯하다가 1967년 568개 시설, 수용인구 65,212명을 고비로 1970년대 이후에는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다. 결국 1970년대 말까지 법적으로나 실제 행정에 있어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서비스로는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이 시기 남한의 아동복지에 대한 개념은 개인의 책임만을 강조한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가치관의 변화로 소년소녀가장문제, 가출아동, 불량아동, 비행아동, 정서·신체장애아동의 문제와 함께 저소득층과 일반가정의 방치된 아동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아동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변화된 아동 및 가정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1981. 4. 13)되었다. 80년대 중반 이후로는 기혼여성의 취업확대에 따른 탁아수요증가와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탁아시설 설치에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남한은 1989년 8월 아동복지법 일부를 개정하여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탁아시설을 추가하였으며 가정탁아제도도 신설하여 주민의 탁아시설 이용편의를 증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탁아와 관련된 내용은 아동복지법에서 분리되었으며, 시설탁아 및 가정탁아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제외되었다. 기존의 보육사업이 보건사회부로 행정소관을 일원화함으로써 보육사업의 체계화와 보육시설의 확충이 가능하게 되었다<표 1참조>. 이 시기는 외국 원조의 감소와 남한의 국가지원 강화, 그리고 일반 아동의 복지까지 도모하는 아동복지로의 변모를 시도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아동복지서비스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증대하여 1990년도에는 정부지원 60%, 자체수입 15.8%, 민간보조 12.0%, 기타 7.3%로 나타난다(표갑수, 2000).

이러한 변천 과정에서 한국의 아동복지는 시설 수용보호, 입양사업, 영유아보육사업, 아동결연사업, 가정위탁 등의 서비스로 그 형태가 다양하였다. 즉, 과거 시설수용보호사업의 중요성은 점차 퇴조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중심의 보육서비스, 국내입양, 가정위탁, 재가복지서비스의 의의와 중요성이 강조되게 되었다(장인협, 오정수, 2001). 그러나 사회변모는 가족구조에 대한 변화와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으며 마침내는 더욱 세분화 된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보건복지부, 2001; 서영숙, 김경혜, 1990). 출산력 저하, 취업모 증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및 결손 가정의 증가, 자녀양육에 대한 가족기능의 약화, 여성의 가치관 변화 등 이 모두가 아동의 복지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 오늘날 보육 기능강화가 사회적 관심사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표 1> 남한의 아동복지 특징

	남한	특징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46.9 미군정 법령 제122호로 아동노동법규 공포 시행 -1947.5 미성년자 노동보호법 -1961.12 아동복지법 제정 -1981.4 아동복지법 개정 -1982.12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1991.1 영유아보육법 제정 -1997 영유아보육법 개정 	-1961년 법제정, 1980년대 실시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보육시설에서 보육) -아동: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아동복지시설에서 양육) -요보호임산부: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임산부(조산시설에 입소시켜 조산을 받게 함) 	-취학아동포함
서비스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보호아동 발생예방:아동상담소, 어린이 안아주기 종합센터 설치 -아동복지시설(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교호시설 등) 설치운영 -보육서비스 사업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빈곤아동은 국가 부담에 의한 무료서비스, 그 외는 자기부담
전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총 관리는 보사부에서 담당하나, 장학지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교육부 장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보사부:중앙 아동복지 위원회,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각도(지방아동복지위원회) -서울시·직할시·도:아동상담소 -시·군·구: 아동복지지도원 배치 -구·시·읍·면: 아동위원 -보건소: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영양개선 등 임산부 건강상담 및 지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총 관리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 -여성부로 이관(2004.6.12)

출처: 정경배외3인, “남북한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pp. 163-164(최광현, “남북한 사회복지제도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2003 재구성, p. 78)

남한의 0-6세 아동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일본과 동일하다. 현 여성부가 관할하는 보육시설은 보호기능을, 교육부가 관할하는 유치원은 교육의 기능을 각각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보호와 교육이 통합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양쪽 모두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특히 취업모의 보육부담을 무겁게 하는 요인이 되

고 있다. 남한 여성이 출산 및 직장생활을 꺼리는 요인 중의 하나가 사회적으로 보육서비스가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아울러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취업모 여성을 위한 보육서비스 대책과 아동의 복지환경을 향상시키는 보육서비스 대책과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 같은 보육서비스 대응방향이 양적인 문제에만 급급한 나머지 진정한 아동을 위한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한의 보육서비스는 탁아기능에 비중을 둔 어린이집(시설보육)과 놀이방(가정보육) 그리고 전통적 교육기관인 유치원(유아교육기관) 등의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하에서는 이 들 각각의 성격과 제도 그리고 현재의 실상과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

(1) 어린이집 변천과정

남한의 보육시설 및 수용인원을 살펴보면 2002년도 국·공립탁아소 약 1,294개와 민간시설 12,311개, 직장탁아시설 195개, 가정탁아시설 7,467개에 약 770,029명을 수용하였다. 어린이집은 1921년 기독교 단체가 탁아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부터 발전하여 왔다. 이후 50년 동안, 아동 보호는 극빈 자녀에 대한 구호의 성격과 동일시되었으며, 시설의 명칭도 아이들을 맡기는 장소 곧 「탁아소」이었다. 그러나 1961년 「아동복지법」 제정을 통하여 탁아소는 아동복지 증진 사업으로 발전하고 명칭도 “어린이집”으로 바뀌었다. 남한의 보육사업 발달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1980년대에 들어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고 취업여성의 자녀양육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면서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이어 1987년 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직장 탁아제도를 도입하고, 1989년 보건복지부가 보육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관련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추진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이 실시되지 않아 1991년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보육사업의 통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을 추진하였다. 이후 보육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을 하게 되었으며, 종전의 「탁아」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으로 발전하였다. 남한은 보육사업 확충을 위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 동안 1조 3천억원을 투입하여 보육시설을 확충하였다. 1997년에는 취학전 1년의 무상유아보육을 법제화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02년부터 유치원과 동시에 만 5세 무상유아보육이 시행되고 있다(나정, 유희정, 문무경, 2002).

어린이 집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 그리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이 있다. 국공립과 법인은 공적재정으로, 민간 및 놀이방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운영되나 최근 영아보육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 시설에도 공적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설치하며 사업장의 자녀를 우선 입소시켜야 한다. 한편 취원아 기준 민간 시설 분담율은 87%로서 분담율이 높아지면서, 질 관리를 위해 인증제 도입을 모색하는 등 교육적 요소를 강화하고 있다(나정, 유희정, 문무경, 2002).

아동의 연령은 0-5세가 주 대상이며, 원칙적으로 저소득층과 취업모의 자녀를 우선 보육하게 되어 있다. 일정 시설을 갖추고 있어 아동보육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도 할 수 있으며 교육적 기회도 제공되고 있다. 종일제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고 보육시간은 07:00-19:00까지 1일 12시간이다. 40인 이상의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은 시설장을 두고, 2세 미만의 아동 5인당 교사 1인, 2세아동 7인당 교사 1인, 3세 이상의 아동 20인당 1인(유치원교사 자격의 보육교사는 40인당 1인)을 둔다. 이곳에서의 하루 일과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발하여 보급한 프로그램을 근간으로 보육이 이루어진다. 출생이후 취학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비 지원, 종일 연중 서비스 제공, 신고만으로도 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03년 현재 시설 수 약 2만2천여 개소, 보육 아동 수 약 800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사진 1>은 남한의 삼성어린이집이다. 교사와 아이들의 수업장면을 부모님이 뒤에서 참관하고 있는 모습이다. 원아를 위한 남한 어린이집의 교실의 다채롭게 꾸며진 환경미화 또는 자유로이 앉아 있는 원아들의 수업태도가 뒤에 나오는 북한의 탁아소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삼성어린이집(www.iwink1004.co.kr)

<사진 1> 남한의 어린이집 부모님 참관수업

<표 2> 남한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표

시 간	활 동 내 용
09:00~10:00	등원 및 영역별 자유선택활동
10:00~10:20	영역별 교재정리 및 화장실 다녀오기
10:20~10:30	음악 감상시간
10:30~10:50	영어 수업 시간
10:50~11:30	간식 먹기 및 대집단 활동(이야기 나누기)
11:30~12:00	영역별 수업(표현 활동 및 신체활동)
12:00~12:30	조형 활동(만들기, 종이접기, 재활용 활용)
12:30~13:30	맛있는 점심시간
13:30~14:00	특별 수업(태권도, 국악, 멜로디언 수업)
14:00~14:30	실외놀이 및 자유놀이 시간
14:30~	평가 및 귀가지도

자료: 삼성어린이집(www.iwink1004.co.kr)

위 <표 2>는 남한의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표이다. 삼성어린이집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자료를 옮겨본 것이다. 어린이집의 성격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어린이집이란 본래 교육보다는 보육의 기능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가 변하고 부모들의 요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최근의 어린이집에서는 교육적인 내용을 함께 넣기도 한다. 특히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및 특기 교육(태권도, 국악, 멜로디언 등)을 일찍부터 가르치고자 하는 남한 어머니의 조기교육열풍이 어린이집 일과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아동양육시설 변천과정(보육원 · 고아원)

보육원은 그리스·로마시대부터 있었으며, 중세에는 교회·사원·길드(guild)·자선단체 등에서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현대적 고아수용시설의 시초는 1698년 A.H.프랑케가 할레에 설립한 것으로 독일 각지에 고아원의 개설을 촉진시켰다. 18세기 페스탈로치가 실시한 고아교육사업은 전 유럽의 주목을 끌었다(백과사전, 2004).

남한의 경우는 이미 고려시대에 고아를 사원에 집단수용하여 보호하거나 중으로 양성하였던 예가 있었으며, 조선의 현종·숙종·영조·정조 때에는 아동수양(收養)에 대한 법과 자휼전칙(字恤典則)을 공포하여 유양(留養)·수양한 고아사업을 실시하였다. 현대적 의미의 고아시설로는 조선말인 1888년 프랑스 교

회가 지금의 명동 소재 천주교회에 설치·운영한 천주교 고아원을 들 수 있다. 일제강점기 때인 1934년에는 고아원이 23개가 설립되어 2,192명이나 수용하였다. 광복 직후에는 미국 전문가의 내한으로 고아사업이 현대화되었고 광복 당시 33개였던 고아원이 군정 초기에는 96개 시설에 수용인원 약 9,000명으로 늘었다. 또한 중앙청에 고아행정기구를 강화하는 한편 후생시설 설치운영 기준도 대폭 강화하였다. 그 후 전쟁 등의 원인으로 1970년에는 430개 고아원 시설에 수용인원 4만 2155명으로 최고로 늘었다가 1975년 이후 감소하였다. 특히 남한의 가족계획사업에 의한 출산율의 감소로 아동의 비율이 낮아지면서 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아동의 수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보호되던 아동의 수도 1970년에 비하여 1980년에는 약 절반으로 감소하였으며, 아동시설도 220개소나 감소하였다. 이 같은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1970년대까지는 매우 방임적인 것으로 외원기관에 주로 재정적인 의존을 하다가 외원이 줄면서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었다(공계순 외 4명, 2004). 수용자는 부모사망·가정빈곤·유기·불량자동화·연고자 행방불명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며, 가출아·기아·미아 등의 순위로 나타난다. 최근에는 영아원이나 심신 불구장애자 시설, 부랑아 시설 등 다른 종류의 시설 증가와 국내외 양부모(養父母)와의 결연사업, 가정위탁 양육사업, 해외 입양사업 등의 확대에 차츰 감소되는 경향에 있다.

이러한 남한의 보육원·고아원이 지금은 아동양육시설로 바뀌었으며 3세 이상 18세 미만까지의 아동을 수용하는 시설이다. 기능은 단순 수용보호의 차원에서 이제는 24시간 보육기관, 오후 학교의 기능 등과 함께 종합 아동복지기관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시설 아동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초등학생은 거의 모두 학원에 다니며, 친척집 등에 외출·외박을 자유롭게 하며 더욱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많다. 앞으로는 거의 모든 양육기관이 24시간 보육기관이나 오후 학교의 기능까지 연계될 추세이다. 각 시설마다 약간의 특수성은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되는 아이들은 경제난, 이혼 등으로 일시 해체된 가정의 자녀,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부자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결손 가정의 자녀들이 대략 70-80% 정도이다. 편부모라도 있는 아이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음을 보더라도 옛날의 고아원 개념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부산일보, 2004. 8. 6). 또한 아동양육시설 운영에 대한 적극적 대안이 1990년대 들어서면서 모색되는데 보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육사 2교대제가 2002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고 계속 2교대제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시설아동이 퇴소하는 시기는 18세에 달하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

다고 인정될 때 이루어지고 퇴소 시 자립정착금으로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를 지방비로 보조받는다. 해당 시설의 장은 입소의 조치를 취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하며 계속적인 수용보호가 필요할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호아동은 가능한 한 출생가정과 위탁가정 등으로 퇴소하는 것이 이상적이거나 남한의 경우는 외국과 비교하여 시설에서 보내는 기간이 길다(변용찬, 이상헌, 1998).

그러나 자립정착금은 무연고의 아동이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금액이다. 시설퇴소를 예정하는 연장아동의 경우 오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독립준비가 이루어지도록 시설 내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은 아동 1인당 월6만5천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이며 사후관리로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지도원, 관련 공무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 등으로 하여금 매월 위탁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적응상태 나 양육실태 등을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 결과 양육 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위탁가정을 변경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지원의 미흡과 사회문화적인 부정적인 배경의 이유로 위탁보호가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현대적 아동복지관 시설 아동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들이 건전하게 잘 자라서 건실한 사회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복지의 성공은 국가 및 사회발전의 근간이므로 퇴소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생활지도원 등 전문인 고용확대를 지원하고 일반 시설종사자의 법정인원확보와 처우개선, 그리고 운영비지원 향상, 종사자 재교육 등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3) 유치원 변천과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의 대부분은 초등학교에 병설되어 있다. 유치원은 가정에서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며 소득수준의 향상과 조기교육의 기대에 부응한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종일제수업도 운영되고 있다. 남한의 유치원은 1897년 일본인에 의해 최초로 설립되었고 남한이 독자적으로 설립한 것은 1913년이며 1914년에는 미국인 선교사가 대학에 부설 유치원을 세웠다. 대학 부설 유치원에는 유아교사 양성을 위한 사범과도 함께 설치되었다. 그리고 1922년에는 최초의 유치원 규정을 마련하고 27년 후 1949년 제정된 [교육법]에는 유아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다. 교육과정은 1969년 문교부가 제정하였으며 정기적으로 개편해 오고

있다. 1976년에는 최초의 공립유치원이 설립되고, 1981년에는 정부의 ‘유아교육 활성화 정책’으로 농어촌 지역에는 공립을, 도시지역에는 사립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유치원은 급격하게 늘어남과 동시에 2년제 전문대학에 보육과를 두고 교사 양성을 본격화하였다. 반일제수업이 일반적이며 종일제수업도 권장되고 있고 교육일수는 1년에 180일이상이며 교육시간은 180분(종일제의 경우 480분)이다. 유치원의 원아는 1반당 40인 이하로 한다.

1982년에는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협동유아원, 어린이집 및 농번기 탁아소를 합해서 내무부 관할의 ‘새마을 유아원’으로 통합하였다. 또 1983년부터 문교부와 시도교육위원회 및 시군구 교육청 단위에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를 배치하여 공사립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유아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에는 다시 ‘새마을유아원’을 교육부 관할의 유치원이나 보사부관할의 보육시설로 전환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두 부처로 이관하였다. 교육부는 1994년부터 유치원에 종일반 운영을 적극 권장하였으며 2003년 현재 약 77%의 유치원이 시간을 연장해서 오후까지 운영하거나 종일제를 운영하고 있고 약 67%의 유아가 참여하고 있다. 1997년에는 취학전 1년의 무상유아교육을 법제화하고, 1999년 2학기부터 일부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여 2002년부터 만 5세 무상교육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5세뿐 아니라 3,4세 저소득층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용도 지원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남한의 유치원 중심의 유아교육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한 공립유치원의 수의 감소, 임대 유치원의 불허와 자격원장의 채용 등과 같은 사립유치원의 설립·운영 기준의 강화 등으로 1997년 9010개원, 567천명을 정점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2003년 현재 8,292개원, 약 546천명의 유아들이 취원하고 있으며, 취원율 기준 사립 분담율은 78%이다. 유치원은 이렇게 교육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교육부 산하의 3-5세 대상 학교이다. 공사립유치원 공히 교육청의 설립인가를 받아서 설치하고, 국가가 고시한 교육과정에 의해 교육 활동을 전개하며, 장학지도를 받고, 대학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 국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공적재정을 지원하여 운영하며, 사립은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한 경우 모두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도 보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2.2.1 북한의 아동관

북한은 수시로 방송매체를 통해 “공화국 어린이들은 「나라의 왕」으로서 세

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자라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 반면에 남한과 같은 「어린이날」은 없으나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1950년 4월에 제정된 「국제아동절(6월1일)」이라는 것이 있다. 「국제아동절」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어린이들의 행복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적 명절로써 「국제민주 여성연맹 이사회」(1949년 11월 모스크바)에서 매년 6월1일을 어린이들의 국제적 명절로 정했다고 하였다. 한편, 북한은 명절을 「사회주의 국경절」로 「기념절」·「국제연대성 기념일」·「민속명절」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국제아동절」은 이 중 「국제 연대성 기념일」로 분류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매년 「국제아동절」(6월1일)에는 평양 「만경대유회장」에서 당비서 등 당·정 고위간부들과 평양주재 외국인과 그 자녀들, 근로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참석시킨 뒤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여기서 북한은 김정일의 어린이 보육사업에 대한 찬양 및 사회주의 체제 우월성 선전에 주력하는 등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활용해 오고 있다(사이버 통일넷, 2004). 행사역시 북한 전체 아동들과 부모들이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야의 소수 특권층만이 참가하고 있는데 일반부모들은 휴무가 아닌 이유로 일을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와 같이 행사를 즐길 수 없다. 이외 통일부에서 나오는 북한 아동들의 교육과 생활에는 북한의 아동관을 많이 엿볼 수 있다(통일부, 1998).

북한의 아동들은 모두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없애고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배우고 생활하도록 되어있어 하교 후에는 단결심, 집단의식이 강조된 생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들은 등교시간도 일정시간(오전 7시정도)·장소에서 모여 같이하고, 오후 4-5시 사이에 집단으로 하교한다. 이후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지만 대부분이 전쟁놀이, 공기놀이, 고무줄 등의 놀이를 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평양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유희장, 유원지, 공원 등이 있지만 이런 시설은 간부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일 뿐이다. 북한의 아동들이 가장 잘 부르는 노래는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라는 곡이 있는데 이 노래는 어린이라면 누구라 다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는 노래이다. 음악교과목의 ‘교수요강’을 보면 “어린이들을 김일성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사상이론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우는 데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음악도 공산주의 사상 교육의 수단일 뿐 남한과 같은 아이들의 동심어린 순수한 음악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북한도 남한의 아동들과 같이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북한 전지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조선중앙 TV」와 평양에서만 시청할 수 있는 「교육문화 TV」등이 있다. 아동들은 매일 10-20분 내외로 만화영화, 인형극과

문답풀이인 ‘척척박사’, 학교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아동들이 가장 선호하는 만화영화는 그 내용역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 대남 적개심, 전쟁의 식 고취 등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러한 방송도 북한에는 TV를 소유하고 있는 가정이 적기 때문에 아동들은 보고 싶은 만화영화도 제대로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가수나 연예인들에 대한 감정도 단순히 목소리가 좋거나 얼굴이 예쁘다고 만 생각할 뿐 남한의 아동들처럼 이들을 우상으로 여기거나 특정 사진을 소유하거나 하지 않는다(통일부, 1998).

이처럼 북한의 아동들에 대한 아동관은 모두 당과 수령의 영도 아래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어 노동계급의 투쟁의식을 교양시키거나, 자본가 계급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계급투쟁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다 할 뿐이다. 따라서 북한의 아동들의 일상생활은 모두 이러한 북한의 정치사상에 의해 좌우됨으로 진정으로 아동들의 권리가 얼마만큼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불안할 뿐이다.

2.2.2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지원정책

북한 여성의 노동력 비율은 경제발전계획과 이에 따른 노력경쟁 운동의 전개와 함께 1957년 20%, 1958년 29%, 1964년 38.5%, 1976년 48%, 1991년 49%, 1995년 48% 수준이다. 1995년의 직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여성들은 농업부문에 53%, 공업부문에 44%, 상업유통에 73%, 편의봉사에 76%, 교육 56%, 보건부문 65%이며 전체 여성 기술자, 전문가 숫자는 북한 전체 인텔리 숫자의 40%로서 54만명에 달한다. 북한도 남한과 같이 여성비율이 높은 직종일수록 임금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김원홍, 2004).

북한은 일찍부터 여성의 「가정혁명화, 노동계급화」를 목표로 내세워 해방 직후부터 여성정책을 꾸준히 진행하여 왔다. 여성정책은 여성해방이란 목표 아래 이루어졌으며 남녀평등권과 혼인·이혼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서 시작된다. 북한은 사회주의 개혁과 함께 호적제도를 봉건사회의 잔재로 보고 이를 말살한 후 공민제도를 신설하였다. 1945년 11월 11일에는 「조선 민주여성동맹」을 창립하는 한편,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1946.3)」을 통하여 토지분배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를 남성의 경제 활동력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등 당시로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실제로 북한은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1946.6)■■■과 ■■■북조선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1946.7)■■■ 「사회보호법(1946.12)」등 각종 법률을 제정하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

련하였다. 이들 법령에서 북한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 산전·산후 유급휴가제, 수유시간 허용, 임신부 및 산모에 대한 중노동 및 시간외 노동 금지 등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했다. 특히 모성보호를 위해 산전 1개월 산후 2개월간 유급휴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사회주의 노동법(1978년 실행)’에 의하면 산전산후77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1986년 이래 산전 60일, 산후 90일로 늘어났다(통일부, 2003). 또한 노동법 59조에는 노동보호 위생시설과 쉴터미를 가졌거나 임신한 근로자에게는 야간 노동을 시킬 수 없도록 하였다(장혜경, 2002). 근로시간은 8시간 노동을 원칙으로 하되 3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 노동자의 1일 노동시간은 6시간으로 규정하였다. 이외 가사노동의 사회화의 일환인 밥 공장과 반찬공장을 들 수 있다. 밥 공장은 대도시에 3.4개 정도가 있고 된장이나 간장공장은 군마다 또는 몇 개 군에 한군데씩 있다고 한다(윤미량, 1991). 북한은 특히 취업모 여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947년과 ■■■탁아소 규칙■■■을 제정, 공포하였는데, 1949년에 개정된 ■■■탁아소에 관한 규정■■■은 생후 1개월부터 만 3세까지의 유아를 가진 취업모로 하여금 탁아소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1950년대에 들어와서는 존속하고 있는 가족 중심의 경제활동을 사회주의적 경제활동으로 나가기 위해 가부장제와 대가족제를 폐지하고 여성을 노력경쟁운동에 나가도록 하면서 가사의 사회화, 자녀양육의 사회화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이 당시의 보편적 가정형태는 부부와 2-3명의 자녀를 가진 2세대 가족형태로 변하게 된다. 이후 어느 정도 사회주의 기반이 형성되자 북한은 1960년대 초반부터 더욱 사회주의 경제활동의 강화와 가정의 혁명화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더욱이 1970년대에 들어와 북한은 사회주의적 경제의 진전과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더욱 필요해짐에 따라 이를 위한 제반 사회적 여건을 형성하면서 주체사상을 통한 사회주의적 인간으로서의 개조와 함께 온 사회의 혁명화를 위한 가정의 혁명화를 강조하게 된다(사이버통일넷, 2004). 따라서 1976년에는 ■■■어린이보양법■■■을 제정하여 여성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적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북한의 여성들은 그들의 자녀를 유치원이나 탁아소에 맡기고 직장 일을 갖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후에도 북한은 여맹을 중심으로 문맹퇴치, 여성 상대 선전 교양사업 등을 벌였으며, 「여성상담소에 대한 규정(1948. 12)」을 비롯하여 유아상담소, 탁아소,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실시, 산원에 관한 규정, 국가사회보장제도, 무상치료제 등 여성 및 아동에 대한 각종 법률 및 규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각종 노력 경쟁 운동의 전개를 통해 여성들을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탁아소와 유아원들을 증설하기도 하였다(송경민, 2003). 이처럼 사회주의 건설에 모든 인

력이 동원되므로 사실상 북한에서는 가정에 남아서 가사만을 돌보는 가정주부를 찾아보기는 매우 힘들기까지 하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경제침체에 따른 여성노동력의 필요성이 적어지게 되자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여성의 사회적 동원지향의 정책에서 다소 벗어나 기혼여성의 경우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실제로 1세대당 평균 가족 수는 4.8명(군인제외)으로, 1980년 말 5.1명과 비교하여 완만한 감소경향을 나타낼 뿐이다(사이버통일넷, 2004).

2.2.3 북한의 아동복지제도

북한의 아동복지는 1930년대 ‘10대 강령’과 1946년 ‘20개조 정강정책’ 및 1984년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국가통제를 위한 공산주의 혁명의 충직한 후비대의 양성의 목적과 공산주의 사상을 고취하는 수단으로 되고 있다. 즉, 북한은 정권 초기부터 탁아소와 유치원에 대해 주로 육성 조치들을 강구해 왔으나 이는 청소년 사상교육과 함께 어린이 정치 사상교육을 시키기 위함이었다(홍대회, 1992). 이와 같은 목적에 의하여

북한은 해방 직후 제정된 노동법과 남녀평등권법 등의 규정을 발전시켜 1946년 6월에 인민위원회 보건국 명령을 통해 ‘탁아소 직제’ ‘탁아소 규칙’을 공포하였고, 1949년에는 ‘탁아소 규정’을 제정하여 시설 설비, 운영지도, 탁아소 입소 및 정원 등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만들었다(신우식, 1994). 또한 1948년 12월 23일에는 ‘유아상담소’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으며 1956년 8월3일 전쟁고아들을 위한 ‘초등교육’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1956년 이전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후 후반에 들어와 북한에서는 탁아소와 유치원이 급격히 증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1960년에는 탁아소가 7,624개소로 늘어났으나 이는 1956년의 224개소에 비해 무려 34배가 늘어났다. 1973년 4월 9일에는 전반적 10년제 고등의 의무교육과 1년제 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1976년 4월 29일 ‘어린이 보육교양법’을 채택한바 있는데 동법 제29조에서 “후세들을 어려서부터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것은 조국의 융성발전과 혁명의 휘황한 앞날을 담보하는 중대한 사업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에 근거하여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육, 교양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는다.”고(정경모, 최달곤, 1990) 하면서 어릴 때부터 공산주의형 인간으로 개조하기 위해 고아들을 육아원 및 애육원에서 부모가 있는 어린이들은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집단 보육을 하고 있다. 북한의 아동들은 연령

에 따라 또는 부모의 유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탁아소, 유치원, 육아원과 애육원이라 할 수 있다(최광현, 2002). <표 3>은 지금까지 언급한 북한의 아동복지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미 일찍부터 탁아소·유치원 시설이 비교적 잘 마련되어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자녀양육을 위한 북한의 이러한 시책이 사회주의의 비효율적인 복지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든, 인력난 해소차원의 정책이든 북한의 기혼모 여성들이 마음놓고 직장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북한에서 취학전 어린이를 수용 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탁아소와 유치원이 중심이 되고 있다.

<표 3> 북한의 아동복지 특징

	북한	특징
법령	-1947. 6 탁아소 규칙 -1948.12 유아상담소에 관한 규정 -1964. 7 유아원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새로운 대책에 대한 내각 결정 -1975. 4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에 관한 법령 집행 총화에 대하여 -1977. 4 어린이 보양교육법 채택	-1947년 법제정, 1969년대 실시
적용 대상	-생후 1개월부터 인민학교에 입학할 만5세까지의 모든 어린이	-취학 전 어린이
서비스 내용	1. 대상별 -부모있는 어린이:만3세까지는 탁아소, 만4세와 5세어린이는 유치원, 만5세 어린이는 유치원 높은반 -고아들을 위한 육아원과 애육원 -유아상담소:생후1일부터 만3세까지의 유아의 건전한 발육을 보호하며 유아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 2. 내용별 급여종류 -기본적으로 국가, 사회부담에 의한 위식주와 교육, 놀이용품(시설)공급 -의료 급여	-국가부담
전달 체계	-교육: 3000단어의 문화어, 자기이름, 숫자 10까지의 가깝가능 -정치사회화:주체적, 혁명적 인간	-탁아소는 보건부 유치원은 교육부

출처: 정경배외3인, “남북한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pp. 163-164(최광현, “남북한 사회복지제도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2003 재인용, p. 84)

(1) 탁아소의 변천과정

현재 북한 각지에는 동(洞)마다 중대형의 공장 및 기업소와 협동농장 작업반 별로 일(日)탁아소와 유치원이 설립되어있으며 규모에 따라 여러 개가 설치된 곳도 있다. 중대형 공장 및 기업소의 경우 소속 여성에 국한하지만 동 탁아소·유치원은 지역 내 기관, 공장, 기업소에 근무하는 여성의 자녀를 모두 수용토록 하고 있다(네이버오픈백과, 2004).북한의 탁아소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젓먹이반, 젓떼기반, 교양반, 유치원 준비반으로 구성된다. 탁아소에서 어린이를 돌보는 보육원은 3개월 혹은 6개월 과정으로 도·시·군에 설치되며 남한의 ‘어린이집’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1947년 6월 13일 ‘보건국령 제5호 탁아소 규칙’은 19개조 2개 부록으로 되어 있으며 탁아소의 목적, 설립, 조직 등에 관한 여러 조항을 명시되었다. 이는 다시 1949년 2월 보건성 규칙 제1호에 의거 탁아소에 관한 규정을 개정·공포하게 하였다. 북한의 탁아소는 설립주체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뉜다. 첫째, 각급도·시·읍·면 인민위원회와 관련 공공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탁아소 둘째, 각종 산업기관에서 설립한 탁아소 셋째, 개인이 설립한 탁아소 등이 있다. 그러나 어느 종류이든 당의 규정과 감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다. 첫째, 탁아소는 생후 1개월부터 만 3세까지의 유아를 양육한다. 둘째, 탁아소의 시설 규모는 유아 1인당 2.5평의 건평과 1인당 4평 이상의 대지가 있어야 한다. 셋째, 간호원, 보육원, 보조원은 매 유아반에 1명씩 배치한다. 넷째, 각반의 유아수는 17~18명으로 한다. 특히, 만3세가 넘는 유아, 다른 유아에게 전염할 질병이 있는 유아, 양육상 다른 유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된 유아는 퇴소시켜야 하고, 도시에 있는 일반 탁아소는 생후 만1세부터 만3세까지의 유아만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최광현, 2002).

탁아소는 1949년도 28개소로 늘어났으며, 1953년에는 어린이 보육교양기관의 수가 5.9배 늘어났고, 1954년 상반기에는 전년도에 비해 90.8%가 증가하였다(최민수, 1998). 이처럼 늘어난 이유는 전쟁으로 인하여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육성사업을 국가자금을 돌린 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쟁 중에서도부터 국가부담으로 탁아소, 유치원 사업을 중단 없이 계속하였기 때문에 전쟁에 투입된 여성들이 노동을 계속 할 수 있었다. 1958년 6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되고 여성의 경제참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자 도시와 농촌에 탁아소와 유치원망을 대대적으로 확대·발전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탁아소의 증가로 인하여 당국의 지도 감독이 새로 필요하게 되어 탁아소 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결국 이 시기는 국가와 사회의 부담에 의해 탁아소와 유치원 건설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시기

이다(최민수, 1998).

이듬해 1959년 4월 17일 ‘보건성령 제21호 탁아소 규칙’은 1947년의 ‘탁아소 규칙’에서의 설립주체를 더욱 구체화했으며, 집단생활을 보다 강조하는 성격을 띠었다. 또한 1947년 규정에는 없었던 ‘공산주의 이념’이 1959년의 규정에는 ‘집단주의 이념’교육을 확정하였다.

북한의 어린이들은 생후 한달도 채 안되어 탁아소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탁아소의 시설규모는 대체로 극히 빈약하여 거의가 독립된 시설을 갖지 못하고 현지 직장이나 주택가가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홍대희, 1992). 탁아소 한달 비용은 7~8원 정도로 노동자 평균 월급 70~80원과 비교할 때 그리 비싼 편은 아니다. 전반적인 생활고로 많은 탁아소에서는 처음 아이들을 받을 때 부모로부터 기저귀, 장난감, 타월 등 양육에 필요한 물품이나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기는 하지만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이러한 북한의 탁아소는 수용기간에 따라 ‘일일 탁아소’ ‘주(간)탁아소’ ‘월(간)탁아소’ ‘직장별 탁아소’ ‘거주지역별 탁아소’가 있다.

(1)일일탁아소란 여성들이 일을 마치고 귀가 할 때 오후 6시 또는 7시 경에 어린이들을 집으로 데려가는 체계이다. 이는 공장기업소와 농장주변에 위치하며, 각 도(道)단위로 약 2-3백명 기준으로 1개소의 비율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평양과 동해안에 자리 잡은 도시 원산에서는 생후 3개월짜리 아이를 낳 시간 동안 맡기는 탁아소가 있다. 부모들은 모내기철이나 수확기에 출산을 하게 되면 들판까지 아이를 데려다 두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표 4> 북한 탁아소·유치원 반별 구성

	반 구분	반 연령
탁아소	젓먹이반	생후 6개월까지
	젓떼기 1반	7-12개월(만1세이하)
	젓떼기 2반	13-18개월
	교양반(밥먹이) 1반	19-24개월(만2세이하)
	교양반(밥먹이) 2반	25-36개월(만3세이하)
	유치원 준비반	37-48개월(만4세이하)
유치원	낮은 반 1년	만4살~만5살
	높은 반 1년	만5살~만6살

출처: 김태원, “교육부문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 및 통합방안,” 『남북한 경제관계를 위한 부문별 과제연구』(한국개발연구원, 1991), p. 314 필자 재구성.



자료출처: www.webkoreanhistory.org

<사진 2> 북한의 탁아소 수업장면

이를 위해 농촌지역에는 이동탁아소가 설치된 곳도 많으며(홍대희, 1992), 이외 농번기에는 임시탁아소, 계절탁아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김원홍, 2004).

(2)주간탁아소란 자녀가 많거나 산모가 병상에 있는 경우, 부모의 직업이나 여행 때문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어린이가 일주일간 머물 수 있는 곳이다. 이 주간, 월간 탁아소는 평양, 함흥, 청진 등 3대도시에는 2개 구역당 1개소, 중소도시에는 2-3개소, 군소재지에는 1-2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3)월간탁아소란 부모가 장기 파견근무시나, 연예인으로 타 지방에 공연을 가거나, 그리고 중앙 집회로 교육 등이 장기적으로 있을 경우에 이용가능한 곳으로서 한 달 동안 맡겼다가 데려오는 곳이다. (4)직장별 탁아소는 공장, 기업소, 농장, 작업반 등의 직장에 위치한 탁아소를 말한다. (5)거주지역별 탁아소란 노동자의 구, 읍, 리, 동 등의 거주지에 위치한 탁아소를 말한다. 또한 북한의 탁아소는 연령에 따라 방의 구분을 기능화 시키는데 예를 들면 한방에 30명씩 유아들을 수용하는 ‘녹봉리’에 있는 탁아소에서는 갓난아이들 방이 있고, 기어다니는 방, 발떼기 방이 있다고 한다. 만2세가 넘는 영아는 발떼기 방에서 높은 방으로 넘어오게 만들어 졌으며, 높은 방에는 만2세이상 4세미만의 어린이가 수용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서동익, 1991).

탁아소에서의 교육은 생후 18개월이 지나면서 말을 가르치는데 주로 김일성 부자의 이름과 아버지, 어머니 등 쉬운 것부터 익히고 생후 2년 이상이 되면 간식을 줄때마다 “원수님 고맙습니다.”는 식이 “수령”의 아버지에 인식을 서서히 주입시킨다. 그리고 걷기와 혁명가창, 유희 등을 가르친다. 탁아소의 반 구성은

생후 30일부터 4세까지의 아동을 6개월 단위 기준으로 6개 반으로 분류 운영하고 있다<표 4참조>.

탁아소, 유치원 현황은 1984년 현재 350만 명의 취학전 아동들이 2만 3천개의 탁아소와 3만 7천개의 유치원에 수용되어 교육을 받고 있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초 약 3만 6천개의 탁아소가 1995년 말에는 탁아소, 유치원의 수가 6만여 개 증가하였다(김달웅, 2003).

<사진 2>는 북한의 탁아소 수업장면이다. 아이들은 같은 시간표에 따라 행동하고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은 기본이다. 똑같은 표정과 동작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므로 북한의 보육원 선생님들은 끝없는 반복을 통해 아이들이 '좀 더 비슷해지도록' 지도한다.

<표 5>는 북한 탁아소의 하루 일과를 나타낸 것이다. 하루 일과는 21번의 순번으로 나뉘어져 대부분 아동의 기본생활 습관을 익힐 수 있는 내용으로 아동의 건강에 대한 예방적 서비스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북한 탁아소의 하루 일과표

순서	구 분	시 간		생활 내용
		부터	까지	
1	잠깨기	6	6:20	잠자리 정돈
2	세수	6:20	7	대소변보기, 세수하기, 체온재기
3	아침 먹기	7	8	2교대로 30분씩
4	자유시간	8	8:30	-
5	놀이 및 수업	8:30	9	원수님 따라 배우기, 노래공부
6	손씻기 및 새참	9	9:30	새참은 사탕, 과자
7	산보	9:30	11:30	산보준비시간 포함
8	손씻기	11:30	12	점심 먹기 준비
9	점심밥먹기	12	13	2교대로 30분씩
10	낮잠준비	13	13:30	손발 씻고 대소변 가리기
11	낮잠	13:30	15:30	창문을 열고 재움
12	손씻기	15:30	16	대소변가리기
13	새참	16	16:30	새참은 우유
14	놀이수업	16:30	17:30	기재를 이용하여 밖에서 진행
15	손씻기	17:30	18	대소변 가리기
16	저녁밥 먹기	18	19	2교대로 30분씩
17	자유시간	19	19:30	바깥바람 쏘이기
18	목욕	19:30	20	매일 4-5명씩 목욕
19	새참	20	20:30	새참은 사탕, 과자
20	밤잠준비	20:30	21	손 씻고 대소변 보기
21	밤잠	21	아침 6	밤11시-12시 사이에 오줌 가리기

출처: 『북한총람(1983-1993)』, 북한연구소, 1994, p. 1001. (최광현,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2003 재인용, p. 82)

(2) 애육원 및 육아원의 변천과정

1950년 6월 25일 전쟁 중에 북한은 교육의 기본목표를 “모든 것은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군사교육이나 사상교육을 강조하였으며, 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기능은 거의 중단 상태였다. 1950년 11월 20일부터는 전제민 구호대책의 일환으로 전쟁고아를 국가적·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애육원과 육아원이 증설되기 시작하였으며, 1951년 1월 13일부터는 ‘내각결정 제192호’에 의해 전쟁에서 희생된 장병과 애국열사 유자녀들을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한 유자녀 보육원이 만들어 졌다.

<표 6> 북한 어린이 보육에 관한 주요조치

시 기	조 치 내 용
1947.6	탁아소규칙에 대한 보건국 명령 제5호
1964.7	유치원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한 새로운 대책에 대한 내각결정
1966.10	전국보육교양원 대회
1968.	유치원교육과정제도 심의회 구성
1972.5	만5세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학교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출데 대한 김일성 교시
1975.9	11년제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
1976.4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6차회의, 어린이 보육교양법 채택
1979.3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3차회의 교육부문 보고 - 어린이 보육교양사업을 가일층 강화 -
1993.2	어린이보육교양법세칙 제정, 출산·육아 등에 대한 여성 권익 강화
1996.4	어린이보육교양법 발표 20주년 기념대회 개최
1998.9	제2차 전국어머니대회를 개최하고 다산 운동 전개
2002.5	박길연 주유엔대사, 유엔아동특별총회에서 아동복지강조

출처: 통일부, 2004 북한개요, 2003년 12월 24일, p. 349.

북한에서 고아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다음 4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전체 노동력 중 여성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1990, 48%)이 증가하고 위험 직장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부 사망률이 높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오는 다발적 사고와 사고자의 의료혜택 부족은 사망률을 높이고 있다. 둘째, 부부이혼이 보다 자유스러워지게 됨으로써 결손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부 또는 모의 사망이 고아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경제난, 사상적 갈등, 성문란 등으로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청

소년의 남녀관계가 불분화되는 경향이 있어 사생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육아를 포기하거나 버리는 경향이 문제되고 있다. 넷째, 경제난으로 어린이를 일부러 기아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신체장애자에 대한 기아현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김달웅, 2003).

북한은 아동에 대해서도 출신 계급적 배경이 보호와 양육의 질을 규정하는 주요한 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정상적인 아이들은 고교를 졸업한 뒤 2년간 노동을 한 후에야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추천을 받을 수 있으나, 고아는 당에서 운영하는 고아원 학교에서 양육되는데, 이들은 북한에서는 가장 성스럽고 특혜 받는 대상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송철복 외 역, 1990), 1995년말부터는 일반 가정에서 고아를 맡아 기르기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런 행위를 공산주의 미풍양속이라고 하면서 TV를 통해 고아입양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 되었다. 북한에서 고아들을 일반 가정에 입양시킬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은 고아 보호시설의 부족과 고아 발생시 그 지역에서 해결하도록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아를 입양시켰을 때는 부양가족 식량배급(기준상 1일 300그램)과 약간의 양육 보조금을 지급받고 기타 혜택도 주어지고 있다(김달웅, 2003). 이들은 고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다. 또한 높은 신분의 일자리를 제공받고 최고 지배층의 집단을 형성해 갈 수 있다.

김일성과 그의 정부는 어린이들의 양육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에 대해서도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 같은 북한 정권은 전통적인 부모와 자식관계를, 국가와 어린이란 체제로 바꿔 놓으려 하는 보다 사상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3) 유치원의 변천과정

1976.4.29에 채택한 「어린이 보육교양법」 제2조에는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중요한 시책의 하나이며, 사회주의 교육학에 근거한 교육방법으로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6조에는 '모든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혁명적 새 인간으로 키우며, 여성들을 어린이들을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사업을 실현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역사적 위업수행에 이바지한다'고 명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유치원 교육의 목적이 어린이들을 집단적인 보육교양을 통해 이른바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무장된 혁명가인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육성하고, 한편으로는 취학 전 어린이의 보육교양을 유치원에 전적으로 위탁함으로써 여성노동력의 확보를 극대화 하는데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통일부, 1998).

유치원교육의 목적을 주체형의 혁명적 새 인간으로 키우는 데 두고 있는 배경은 어린이들이 봉건적 사상과 관습인 조상과 부모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심, 가문과 족벌 중시에 물드는 것을 막으면서, 조기 집단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을 공산주의 이념에 투철하고 주체사상에 충실한 인간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한편, 어린이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배경은 '가사노동의 해방'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여성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한 것이다. 유치원은 2년제로 운영되며, 낮은 반(5세)1년과 높은 반(6세)1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표 4 참조> 같은 유치원내에서도 낮은 반은 이른바 '노동하는 어머니들을 대신하여 양육'하는 일종의 탁아소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곳이며, 높은 반은 의무교육(11년제)에 편제되어 모든 어린이들이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의 유치원에서는 정치사상에 대한 기초적 교양과 보편적인 지식을 주로 교육하고 있으며 집단주의 정신, 교육에 대한 순종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 김일성 우상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통일부, 1998). 따라서 유치원 교과목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어린시절 이야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 어린시절 이야기, 우리말, 셈하기, 노래와 춤, 그리기와 만들기, 체육, 놀이, 관찰 등 9개 과목으로 되어 있다. 교육방식은 이른바 '깨우쳐 주는 교수방법'이라 하여 감화식, 문답식, 실물수업, 해설과 설복 등의 방법으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일정한 가치관과 지식을 심어주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말(국어)'과목에 나오는 단어를 김일성/김정일 부자와 관련지어 설명함으로써 말/글에 대한 지도와 함께 김부자에 대한 충성심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고, 김부자를 칭송하는 노랫말을 몸동작으로 표현하면서 부르도록 함으로써 신체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혼연일체가 되게 하여 김부자에 대한 흠모감, 헌신성을 갖도록 가르치는 방법 등이다. 북한의 유치원 교육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이후의 정규과정에서도 의식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군들을 총검으로 찌르는 모습들을 그려 놓음으로써 유아기부터 '미 제국주의'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 주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데 있다.

2년 기간의 북한의 유치원은 교육성 산하로 건강관리와 급식보장이 탁아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그래도 대부분 여성들은 유치원을 선호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유치원 교육을 강요하지 않고 있으며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권한이다. 한글을 가르치는 유치원 높은 반은 학령전 의무교육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부모들은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 유치원에 가지 않으면 자기 아이만 손해일 것이라는 의식으로 유치원에 보낸다(네이버 오픈백과, 2004).

3. 남·북한 아동복지현황의 문제점

3.1 남한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아동복지

D. Easton은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제반 가치에 대한 권위적 재분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정치·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는 중요하다고 하였다. 앞으로의 통일과정이나 통일 후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정에 여성들의 역할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는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낮은 사회적 지위를 비롯하여 경제적으로 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자신은 물론 자녀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 남성들보다 더욱 힘든 여건을 이겨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보다 낮은 임금과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며 남한 또한 예외는 아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사회구조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며 이러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과정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 가부장제는 지배체제로 볼 때 남자가 가족 내에서의 최고 결정권을 지니는 체계이나, 해방 후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남한의 가족구조와 가치관은 변화했고 여성의 위치 역시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전통사회에서의 자기희생적이고 수동적인 여성관은 오늘날 교육기회의 확대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능동적이고 자기 존중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순응적인 자세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컸다고 본다면 현대사회는 적극적인 자세로서 사회구조적 조건의 변화에 적응하는 여성을 선호하게 된 사회적 가치관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모두가 경제적 독립의 기반이 될 만한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네이버 사이트4, 2004).

따라서 여성의 업무는 주로 전문직이기보다는 주변업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평생직장을 갖기란 더욱 힘들다. 프로의식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에는 매우 제한적이며, 대체로 고위직책이라 할 수 있는 남한 여성의 정치적인 직업 참여율 또한 매우 낮다. 현재, 남한 여성의 정치참여율을 살펴보면, 2003년 12월 현재 18명의 전체 각료중 4명의 여성장관(22.2%)이 있다. 그리고 선거나 비례대표제에 의해 총원되는 국회의 경우 전체 273명의 의원 중 여성은 총 15명으로 5.5%에 불과하다. 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의 경우 기초의회 여성 의원수는 77명으로 2.2%, 광역의회 의원은 63명으로 9.2%, 자치단체장 2명으로 0.4%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 12월 현재 여성공무원은 전체공무원의 32.8%를

차지하고 있으나, 3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은 1.5%, 5급 이상은 5.4%로 특히 관리직에의 여성비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사법부에서의 여성참여율은 여판사는 142명인 8.5%로 1994년의 4.6%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였다(행정자치부, 2002). 남한의 경우 최근 들어 정당법에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에 30% 여성공천할당제와 광역의회 지역구 30%, 비례대표제 50% 여성공천할당제를 도입하고, 공직에 있어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등 과거에 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사회에 널리있는 제반 여성문제를 해결하고 여성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김원홍, 2004), 이는 비단 남녀간의 불평등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처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은 남한의 경우 그들의 자녀양육과 깊게 관련된다. 남한은 아직도 육아를 여성에게만 떠맡길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의 책임은 여성노동자가 사회적 노동에서 남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는 사회의 폐쇄적인 인식이 잔재해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사노동은 맞벌이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갈등의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자녀양육지원정책이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그 대책방법에 있어 미흡하다. 다시 말하면 자녀양육지원정책이 여성의 취업과 자녀양육의 지원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또는 궁극적인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인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대책이 수립되어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전술한바와 같이 여성을 위한 보육서비스 강화는 새롭게 등장한 자녀수의 감소 현상에 맞물리어 정책이 연관되어 정책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러한 결과는 이미 일본에서 선 경험한 예에 해당된다(정미라·오미희, 2004).

남한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자녀양육의 사회화에 대한 인식을 하루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첨단의 정보화 서비스 즉 범국민적 홍보사업이 활성화되어 평등한 동반자로서의 남녀관계를 가정 내에서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을 때 사회에서의 올바른 위치가 정립 될 것이다. 아동을 위한 복지는 그를 둘러싼 건전한 가정과 사회가 원활할 그때 자연스럽게 그 초석을 다지게 된다. 즉, 부모가 자녀에 대한 올바른 기대를 갖고, 양육을 통해 얻는 즐거움을 인식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만족스런 아동복지환경도 이루어 질 것이다.

3.1 북한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아동복지

남한과는 달리 북한은 획일적 사고에 기초하여 개인의 행복보다는 집단의 안녕과 발전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김성운, 1997). 특히 북한의 ‘전 인민의 노동계급화’라는 대 여성 개방정책은 사회주의 체제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북한 여성의 상황과 사회적 지위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으며, 아동을 위한 복지환경 정립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은 전 여성의 노동계급화를 통하여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며, 가정의 사회화, 자녀양육의 사회화, 교육의 사회화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비로소 여성해방, 더 나아가 전(全) 인민해방(人民解放)에 이른다는 논리를 펼 수 있었다. 해방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많은 여성들을 각급 인민회의에 다수 참여토록 하였다. 최고 인민회의의 경우 여성 대의원은 20%(남한 5.5%)로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보다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화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동원되는 노력영웅을 선정하고 다른 노동자들에게 영웅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데 대한 정치적 보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것은 여성대의원 비율이 여성노동력 증가비와 같이 증가한다는 것에서 나타난다. 여성의 노동 계급화는 “완전한 가사노동과 생산수단의 사회화, 양육과 교육의 사회화를 통해 가족을 완벽한 사회의 도구”로 만들었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네이버사이트3, 2004).

북한이 해방직후 이처럼 다른 법령과 함께 남녀평등권법령이 제정된 것을 보면 북한의 여성관을 바로 세우겠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 사안으로 봤는지 알 수 있다. 북한은 여성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실현하는데 중심이 있었기에 그 어려운 시기에도 여성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진행시켰다. 여성에 대한 봉건적인 사고방식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가사일과 육아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적 보장제도 모두 국가가 나섰다.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는데 있어 북한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귀결된다. 여성의 가사노동으로부터의 해방과 여성 고유의 모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남한과 다른 점은 북한에서는 여성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당연히 국가의 책임으로 여겼다는 것이다(네이버사이트1, 2004)

한편 북한은 여성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1975년 유치원 높은 반에서 고등중학교 6학년에 이르는 11년간 의무무상교육제를 실시하면서 남녀를 불문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였다. 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실시한 여성 지위 향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2001년 7월 북한이 제출한 국가인권보고서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검토회의에서 북한대표단이 밝혔듯이 북한은 50%대에 육박하

는 여성 취업율을 자랑하고 있다. 2000년도 북한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여성위원은 총원 7명 중 여성은 없고, 후보위원의 경우 총원 8명중 1명(12.5%)이 있었다. 중앙위원회 위원 중 여성 비율은 정위원의 경우 총 140명 중 7명(5%), 후보위원의 경우 총 93명 중 6명(6.5%)으로 나타났다. 반면,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여성 대의원 수가 남한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경우 의장단 8명 중에는 여성은 없었으며 위원의 경우 8명 중 2명(25%)이 여성이었다. 북한 여성의 정치적 지위를 살펴볼 때 남한에 비해 여성의 정치참여는 높으나 북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당 중앙위원회나 내각에는 여성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나 지방인민회의에 여성 대의원 비율이 높은 것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일반적 특징으로 공산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건설 초기부터 많은 여성들을 정치에 참여시켜 이들로 하여금 여성 노동력을 동원하는 데 앞장섰고, 또 그 가운데 노력영웅이 있으면 정치적 보상으로 일정 비율의 여성들을 최고인민회의에 진출시켰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북한 여성들은 외형적으로 '혁명의 수레바퀴'로 강인한 빨치산전사의 이미지로 알려져 있다(행정자치부, 2002).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이념형과는 달리 북한여성들은 전통적인 가부장제가 문화적으로 강하게 남아 있는 과도기적 사회 속에서 이중노동의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탈북여성들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된 사실은 북한에서도 여성들은 간부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2001년 7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대표가 인정한 사실이기도 하다. 또한 여성들의 취업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떠나는 여성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직장을 떠나게 되면 남편에게 종속되어 하루 300g의 배급을 받게 된다. 94년부터 북한을 강타한 식량난으로 북한여성들은 대부분 장마당에 나가 장사 등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남성들은 직장에 나가 출근부에 사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사는 주로 여성들이 한다. 만약 남성들이 장사를 하려면 직장에 별도의 뇌물을 바쳐야 한다. 북한의 식량난은 이혼과 가정파탄을 가져왔고 북한여성들의 생계유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아래 탈북여성들의 증언에서 북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낮은지에 대해 알 수 있다(네이버사이트1, 2004).

...작업장이나 작업반장 모두 남자예요....직장 안에서 노동자나 사무직원은 별 차이가 없어요. 여자들이 사무직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자 사무원은 매달 출근일수를 세어서 통장에 돈을 넣어 주는 통계원 한명 정도 있어요. 여자들은 대개 몇 년 일하다가 시집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시집을 잘

간다는 것은 직업이 있고 끝날 있는 남편을 만나는 것이죠... 배용선(38세), “순응하면서 사는 삶,” 여성한국사회연구소 편, ■■북한여성들의 삶과 꿈■■ (사회문화연구소, 2001), p. 227.

이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사회 역시 균등하게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추정된다(장혜경, 2002). 현실적으로 북한 여성들은 농촌의 고된 일은 물론이고 광산이나 탄광에서의 갱내 작업, 그리고 어선, 여객선을 비롯한 힘든 노동에 이르기까지 남성과 똑같은 조건하에 노동에 참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여성 노동에의 동원은 과중한 군사력 유지를 위한 남성 노동력의 부족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로 취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4. 남 · 북한 아동복지제도 개선방안

4.1 남한의 아동복지개선방안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이나 서비스가 미비하여 아동들이 방치되거나 심지어 화재로 목숨을 잃는 사건 등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보육문제가 여성운동이나 여성복지 차원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지가 오래다. 더불어 1980년대 후반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노동력의 활용 필요성과 그로 인한 보육시설 확대의 당위성도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1990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보육사업 주관 부서가 보건복지부가 전담하게 되었으며 2004년 6월에는 여성부로 이관하게 이르렀다. 남한은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보육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예산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보육시설의 양적인 확대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아직 낮으며, 보육대상이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녀로 국한되고,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 보육욕구에 잘 부응하지 못하는 등 남한의 보육사업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정부는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육시설 확충 노력을 해왔지만, 보육사업의 정책추진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추진계획과 그 실적이 불균형을 이루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자녀양육과 직장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도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아이를 맡길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는 아직 형편없이 부족하다. 2001년

경우만 보아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2개의 사업장에서 125백 만원 설치비용자를 지원했을 뿐이다.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서 공공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전국 주요지역에 보육시설 설치에 충분한 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부족하기만 할 뿐이다(송영인, 2003).

현재 전체 보육시설 2만여 개 가운데 직장여성을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직장탁아소는 1%도 채 안되며(조선일보, 2003), 대부분 보육시설은 유아(3-6세)대상의 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도 전체 19,533개소 중 6.5%로, 보육시설이 민간에 의해 주도됨으로 인해 대기자가 넘치는 영아시설이 있는 반면 다른 곳은 영아의 부족현상을 보이는 등 불균형 상태가 일어나고 있다. 보육시설 설치에 있어 실제로 부모의 요구가 잘 반영 되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부차원에서 일률적인 평가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의 보육사업 실시과정에서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영아전담보육시설 등 특수 보육시설이 지극히 부족하다는 것인데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의 보육시설 2만1267개 가운데 만 2세까지 영아를 전담할 수 있는 곳은 불과 74개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이해 용이하다.

<표 7> 연령별 보육아동 현황

(2001. 3. 31 기준, 단위: 명)

아 동	영 아(2세 이하)				3세 이상유아	계
	6개월미만	12개월미만	24개월미만	만2세		
	2,676	8,118	38,308	101,205	552,553	702,860

자료: 중앙보육정보센터(2001) 내부자료.

<표 8> 영유아보육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시 설 수	아 동 수	종사자 수
영아전담	74	2,524	482

자료: 중앙보육정보센터(2001) 내부자료.

한편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직장여성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원주 종합고용안정 센터에 따르면, 2004년 원주시의 취업모 여성 128명이 육아휴직을 위해 휴직을 신청했으며 휴직급여도 1억2,000여만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78명이 신청해 7,000여만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진 것에 비해 64.1%이상 증가

한 수치이다. 육아 휴직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사회적으로 육아문제로 인한 휴직이 점차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과, 1년 미만의 영아를 맡길만한 마땅한 보육시설이 없어 부득이 육아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또 다른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처음 도입됐으며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할 수 없게 되어있는 제도이다. 최근 들어 남성도 육아휴직을 내는 경우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한 가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남한사회의 성별 고정관념이 아직도 여성이 가정과 일을 선택하는데 있어 반영된다는 것이다.

2004년 6월 여성부는 보육정책을 제대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보육을 바라보는 기본방향이 제대로 서있어야 한다고 했다. 출산장려, 여성의 경제활동장려 등을 위해서도 보육문제는 해결 돼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게 만드는 것’ 그 자체라고 보았다. 여성부는 또한 ‘아이의 행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현 참여정부의 보육정책방향도 언급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여성의 입장에서 전진한 보육정책방향을 아동을 위한 복지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거론된 새로운 정책의도라 볼 수 있다.

이제 남한은 질 높은 아동복지 실현을 위해 지금까지의 보육서비스가 크게 실효를 보지 못한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기혼모 여성만을 위한 보육정책이 아닌,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을 위한 복지환경’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보육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4.2 북한의 아동복지개선방안

북한의 아동복지는 고아에 대한 수용시설과 일반아동에 대한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보육시설은 1947년 탁아소 규칙이 제정된 이후 1950년대 말부터 추진된 사회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인력의 노동력 참여증대로 보육시설이 급속하게 증대되었다. 이는 여성의 노동력 참여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아동에 대한 정치사회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곳이기도 했다. 또한, 사회주의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의 진전이 보육시설의 확대를 가져오기도 하였지만 가족제도에 대한 사회주의가 갖는 입장이 보육시설의 중요성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아동복지편람, 1997). 해방이후 북한 사회주의 이념에 의하면, 전통적인 부권가족은 여성의 가내적 노예상태에 기초하고 있다는 주장에 기초하여 이러한 낡은 제도를 분쇄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제도를 향한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보육시설은 이와 같이 가족제도에 대한 사회주의적 입장과 아동에 대한 정치사회화의 의도를 반영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북한의 모습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에의 참여와 육아 및 일부 가사노동의 사회화로 남녀 평등질서가 구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1980년대 이후 확대된 가부장적 가족정책으로, 가정 내에서는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들 간의 관계가 수직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가족간은 물론이고 부부간에도 서열화 되어있다. 여성들은 사회나 가정에서 슈퍼우먼의 역할을 하도록 기대되었던 것이다. 가족을 위해 행해지는 모든 노동은 여성의 몫이 되었다. 북한의 여성의 가정혁명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여성들은 여전히 가정에서 가사와 자녀의 교육을 전담하는 2중 3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사이버복지넷, 2004). 이는 북한이 여성들의 노동력 확대를 위한 ‘법적 평등’과 ‘가사노동의 사회화 정책’과 ‘자녀양육의 사회화 정책’을 취하면서도 가사와 자녀 양육의 역할 분담에 대한 생각은 전혀 고려치 않은 채 당연히 이러한 일들은 여성의 일로 간주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한층 더 최근 북한은 여성에 대해 가정을 지키는 전통적 여성관을 지속 내지는 강화함으로써 가정의 질서를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의 정당성에 이용하고 있다. 이는 1990년 새로 제정된 가족법에서 전통적인 가족개념을 수용하고 북한식 가족제도를 공식화함으로써 분명히 하고 있다. 경제난에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은 여성이 자녀양육 등을 이유로 가정에 머물고자 하면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여성을 강제적으로 동원해서 사회로 끌어내려는 정책에서 벗어나 이를 점차 허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경제적 지위를 포기하고 가정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가정의 경제력은 점점 약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북한 여성의 지위는 과거 전통사회의 모습 즉, 가부장제에서만 볼 수 있는 여성의 순종과 인내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시급한 것은 북한사회의 악순환 되는 경제난으로 인한 식량난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의 일차적인 피해자는 어린이와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에 의하면 2003년 북한 어린이의 42%가 영양부족현상을 겪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약 7000명의 어린이들이 심각한 영양부족현상과 적절한 치료의 부족으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國際人權報, 2004. 4. 15). 경제난의 피해는 영유아를 비롯한 아동들에게 일차적으로, 그리고 이들을 양육하는 여성들에게 이차적으로 돌아간다. 성장할 연령 대에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극히 왜소한 모습을 하고 있는 북한 아동들의 모습은 말할 것도 없고,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심지어는 재활불능의 상태로 살아가야만 하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다(북한연구회세미나, 2003). 결국은 식량난으로 인해 출생 및 아동보호의 문제가

오히려 아동의 삶을 위협하는 과정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출생률이 낮아지고 사망률이 높아졌다. 1997년 식량난이 극심했던 북한의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유럽의 조 출생률 10.1%)보다 낮은 7.4%로 예상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동 유기가 늘어나고 결혼율이 낮아지는 반면 이혼율이 높아졌다. 가정해체로 이산가족이 늘고 정신적 공황을 겪고 있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로 인해 97년도에는 9·27 수용소를 만들어 방랑 생활을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도 하였으나 열악한 위생환경과 배급부족으로 유명무실해졌다. 2001년 5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5차 아동보호 아태각료급 회의에서 북한 대표 최수현 외무성 부상은 북한의 5세 이하 영유아 사망률이 자연재해 이전 1,000명당 27명에서 48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國際人權報, 2001.6.15). 이후 2002년 7월 1일 경제개혁조치 이후 배급제는 공식 폐지되고 배급소는 양식의 절대 부족으로 제 기능을 상실되었다(네이버사이트5, 2004).

따라서 북한은 우선 그들의 식량난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식량난은 문맹률이 증가되는 원인이 되고, 복지환경도 생존권이 유지되는 속에서 추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과감한 개혁과 개방이 필요하다. 아동복지 개선방향으로 여성들의 사회심리적인 정서를 안정시키는 것이라 본다. 이를 위해 여성들의 경제활동력을 되살릴 필요가 있으며, 가정에서의 남녀평등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물론 남한도 아직까지 가부장제적 성격이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이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과 같이 가족법 등을 다시 제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아쉬운 점은 남한보다 먼저 남녀평등권, 여성의 노동력 확보, 보육시설 및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일원화된 복지정책은 매우 발전적이었다는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남·북한의 어린이를 둘러싼 복지환경에 대한 현황과 그 문제점을 분석 검토하여 상이한 체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장점을 도출하여 새로운 아동복지정책을 모색해보자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오늘날 남한의 고령화, 소자화라는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강조되는 취학전 아동의 남북한 보육서비스 발달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시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점은 머지 않아 통일을 해야 된다는 당위론적 측면에서 고려할 때 아동복지정책의 수립방향과 실천과정에 참고 자료가 된다

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두어 연구를 진행시킨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첫째, 아동관에 대한 남북한의 차이는 예상보다 크다는 점이다. 남한의 아동들에게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부모들에 의한 아동들의 무리한 조기교육 열풍인데 이러한 교육방법에 대한 평가는 뒤로 미루더라도 이는 인생초기의 환경적인 자극과 경험이 이후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재고해야 될 점으로 지적하였다. 반면, 북한의 아동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모두 당과 수령의 영도 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하여 노동계급의 투쟁의식을 교양시키거나, 자본가 계급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계급투쟁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 아동들의 일상생활은 모두 이러한 북한의 정치사상에 의해 좌우됨으로 진정으로 아동들의 권리가 얼마만큼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남한 역시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진정한 아동의 권리가 얼마만큼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으로 남길 수밖에 없다. 남북 양쪽 모두 대조적인 아동관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를 절충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아동복지제도구성의 기본적인 형태, 운영의 방식이나 철학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남한의 아동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우선 여성의 가치관 변화로 급속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한은 기혼모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 증가, 남녀평등의 보편화 추구, 이로 인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상승 및 확대, 그리고 각종 모성보호제도 등이 축을 이룬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점이 보육서비스차원의 아동복지제도가 발달해 온 사회적 요인이다. 특히 여성의 가치관의 변화는 남한 사회의 사회적인 변동을 가져오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반면 북한 여성의 가치관 변화는 북한의 남녀평등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북한은 여성의 사회화를 제지하고 가정에서 그들의 자녀를 키우도록 하였으나 이미 북한 여성의 가치관은 북한체제하에서 직업을 갖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이로 자기의 발전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직장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고통 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남북한 아동복지제도의 이질화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반된 이념에 의하여 오랫동안 상이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초래된 결과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미래 통일사회에서는 여성의 다양한 가치관에 대해 상호 협조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아동복지를 정착한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더구나 이러한 것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는 기초적인 배경이 된다면 앞으로 진전될 소자녀, 고령화 사회에서 부족한 인력자원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남한 여성의 지위와 북한 여성의 지위는 체제가 틀린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 결과 여성의 지위는 서로가 동질적인 요소보다 이질적인 요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남북한 여성들은 여성비율이 높은 직종일수록 임금이 낮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에 남한 여성의 경우는 고용상에 있어 성차별에 따른 직업 선택이 제한되어 있는 반면, 북한의 경우는 성분에 따른 직업선택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주요 차이점으로 밝혀냈다. 또한 남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자본주의에 입각하여 생산성의 제고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였으며 “선별주의(요보호여성)”방식과 “적극적 선별주의 방식(일반여성)”의 여성정책으로 확대해 나가며 모성보호조치와 탁아소 등의 보육시설을 증진시켜왔다(김원홍, 2004). 남한에서는 성차별, 북한에서는 그들의 출신성분이 영향을 받는 정책이 미래 통일사회로 이어진다면 여성의 직업선택에 있어 많은 부작용을 낳는 요인이 될 것이므로 통일 국가 차원에서 남녀평등은 물론이고 출신성분이 우선시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건전한 인격 성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미래 통일사회를 맞이하기 위해 남북한 각각이 노력해야 할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남한의 아동복지차원에서 대부분 열거되는 요소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와 자녀양육의 문제를 들고 있다. 즉 지금까지 여성을 위한 복지수준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아동복지가 향상 될 것이라는 정책은 더 이상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남성도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해 기여 할 수 있다는 데로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현행 산전·산후휴가제도에 있어서 남성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남한은 이를 더욱 활성화 시킬 것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재가복지서비스나 대인적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적인 기술 개발과 추진이 요청된다. 즉, 지역에서 남성들이 그들의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현대적 의미의 아동복지를 정착시킬 수가 있다. 그에 대한 실 사례로 일본의 예를 들어 보겠다. 일본에는 이러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어린이문화관’ 이란 것이 있다. 이는 일본 동경에서도 가장 중심가에 소재하는 곳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빌딩건물에 만들어진 이곳은 옥상은 주로 아이들 놀 거리가 마련되어있으며 실내는 다양한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되어있다.



자료: 동경 시부야 어린이 문화관 2003년 8월

<사진 3> 일본의 어린이 문화관

이제 남한은 주 5일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직장을 가진 남성에게는 가정에 있는 시간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며 그들의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역시 많아질 것이다. 이점이 아동복지를 한 차원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즉 아동복지의 주체가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가 함께 관리되어야 하고 아동들 스스로가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건설하거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재능, 인격 및 기술을 갖출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를 남성이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아동복지를 정착시킬 수 있는 순기능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북한의 아동복지는 고아에 대한 수용시설과 일반아동에 대한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연구 결과에서 도출하였다. 특히 보육시설은 여성인력의 노동력 참여증대로 급속히 발전시켰다. 이는 북한 여성의 노동력 참여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또는 아동에 대한 정치사회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곳이기도 했다(김원홍, 2004). 북한은 해방 후 평등한 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로 남녀평등성을 주장해왔으나 이점이 지금에 와서 보니 오히려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아지는 역할을 하면서 남녀평등 추구에 역행하게 되었다. 이 같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과 모성보호 조치 및 보육시설 문제, 여성의 건강문제, 등의 연구를 확대해야 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식량난부터 해결해야 된다. 식량난은 문맹률이 증가되는 원인이 되고, 인간의 존엄성 침해에까지 이르게 한다. 복지환경도 생존권이 유지되는 속에서 추구된다는 점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아동복지 개선방향으로 여성들의 사회심리적인 정서를 안정시켜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이를 위해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되살릴 필요가 있으며, 가정에서의 남녀평등을 현실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아동복지의 정책적 과제는 무엇보다 많은 아동들을 위한 탁아소 및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분단국의 통일은 단순히 체제와 제도의 통합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질화되었던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아동의 삶의 질을 고양하는데 있다. 따라서 아동의 삶의 질을 제도적 차원에서 결정하는 아동복지정책의 구현은 시설 확충과 함께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 아울러 남북한 통일에 따른 부작용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제도를 겸허하게 비교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이상적인 제도를 고안하여 통일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사회통합을 새로운 조건에서 이룩하자면 어느 일방적 제도를 고집한다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기 때문이다. 미래 통일 한국의 아동복지 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결과는 현재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문제점의 고찰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는데 기여하도록 많은 노력이 있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북한문헌

- 근로단체출판사, ■■■햇빛 따사로운 어린이 왕국■■■(평양: 근로단체출판사), 1976.
- 김일성, ■■■어린이 보육교양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6.
- _____, ■■■아동단원들을 혁명의 후비대로 튼튼히 키우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 김재한, ■■■어린이보육교양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 박연호,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를 밝힌 강령적 지침,” ■■■조선여성■■■, 제6호,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1991.
- 리경혜, ■■■여성문제해결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 리영복,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교육■■■(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2. 국내문헌

- 김영윤,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 ■■■사회보장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사회보장학회.
- 김원홍, “북한의 여성복지 정책에 관한 고찰”, 「북한」, 제264호, 1993.
- 김형모, “한국아동복지의 변천, 현황 및 향후 과제”, 「한국사회복지논집」, 제6호, 경기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복지실, 2002.
- 김성윤, “북한체제의 해부분석과 전망-말뿐인 복지보다 시급한 보험제도-” 1997.
- 김명기, “남북한 사회복지 체제의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공계순 외, 「아동복지론」(서울: 학지사), 2003.
- 네이버오픈백과, 북한의 탁아소 시설(<http://opendic.naver.com>, 2004.7.18).
- 박현선,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가족의 사회적 재생산과 가족제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사회학 박사학위논문, 1999.
- 북한연구학회, ■■■분단반세기 북한 연구사■■■(서울: 한올아카데미), 1999.
- 보건복지부, ■■■2004 아동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04. 2).
- 서문희, 임유경, 박애리, 「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보건복지부·한

- 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송경민, “대북 인도적 지원의 쟁점과 과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쟁점과 과제 -북한 어린이 돕기를 중심으로-」(제30차 북한 연구회 세미나, 2003).
- 신의진, “북한의 기아상태가 소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통일연구, 제4권 제1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0.
- 이배근, “아동복지의 현황과 과제”(http://search.naver.com, 2003. 6. 26).
- 이소희, “남북한 부모부재 아동복지제도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 제15권, 제1호, 2001, pp. 285-306.
- 이종재, “영유아교육과 보육발전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03.
- 리경혜, 「여성문제해결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 양옥승, 김영옥, 김현희, 박경자, 위형희, 이옥, 이차숙, 정미라, 지성애, 홍혜경, ■■■세계의 보육제도■■■(서울: 양서원), 1999.
- 어린이 문화진흥회, ■■■오늘의 어린이, 이대로 좋은가■■■(서울: 어린이 문화진흥회), 1995.
- 오미희, “유아기의 사회적 퍼스넬리티에 관한 연구 -일본유치원에서의 사례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2003년도 정기 총회 및 학술대회 발표」, 한국유아교육학회, 2003.
- 유희정 · 강정희,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방안연구”, ■■■연구보고서■■■, 240- 10, 한국여성개발원, 2003.
- 장인협 · 오정수, ■■■아동 · 청소년 복지론(개정판)■■■(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정경배 외,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 연구■■■(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 정미라 · 오미희, “일본의 자녀양육지원 정책 추진과 현황”, 「한국아동권리학회」, 제8권, 제1호, 한국아동권리학회, 2004.
- 현진권, “보육재정의 확충과 시장규제”(http://search.naver.com).
- 홍대희, “統一準備에 關한 研究 -南 · 北韓 託兒所를 中心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최민수, ■■■북한 유아교육론■■■(서울: 문음사), 1998.
- 최종고, ‘어린이보육교양법’, ■■■북한법■■■(증보신판, 서울: 박영사), 1996. 8. 30.

3. 외국문헌

- Gordon, L.(ed), *Women, the State, and Welfare*,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0.
- Lewis, J., Gender and the Development of Welfare Regim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Vol.3, 1993.
- Nelson, B., The Origins of the Two-Channel Welfare-State: Workmen's Compensation and the Mother's Aid, L.Gordon(ed.), *Women, the State and Welfare*,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0.

4. 기타

- 國際人權報, “北 기아로 22만명 사망,” 2001. 6. 15.
- 國際人權報, “어린이 사망률 2배 늘어,” 2002. 12. 15.
- 國際人權報, “북한 어린이들 영양실조 심각,” 2004. 4. 15.
- 부산일보, “고정관념의 혁신,” 2004. 8. 6.
-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
- “국정브리핑-여성부 공동기획끝” 지은희 여성부장관인터뷰, 2004. 6. 28.
- 네이버 사이트1, <http://search.naver.com>,
(왜 여성인권문제인가), 2004. 8. 10.
- 네이버 사이트2, <http://search.naver.com>,
(통일후 예견되는 여성문제와 여성부의 역할) 김원홍, 2004. 8. 10.
- 네이버 사이트3, <http://search.naver.com>.
(북한여성(北韓女性)의 사회적(社會的) 위상(位相)과 외양변화(外樣變化)에
관한 연구(研究)), 2004. 8. 23.
- 네이버 사이트4, <http://search.naver.com>.
(가족과 일에서의 여성의 지위), 2004. 8. 23.
- 네이버 사이트5, <http://search.naver.com>.
(북한 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보고서), 2004. 7. 29.
- 사이버 통일교육, <http://www.unieu.go.kr> 2004. 7. 28.
- 사이버 통일넷, <http://tongil.news-paper.co.kr>, 2004. 8. 10.
- <http://www.unikorea>.

북한 서사시에 나타난 지배담론 형성 연구



이 지 순

(한국방송대 강사)

목 차

【 요약 문 】	235
1. 서론—북한에서의 문학의 역할	237
2. 체제지배 담론의 형성과 북한 문학	240
3. 서사시에 내면화된 체제지배 담론	249
4. 결론—체제지배 담론의 이중성	286
【 참고문헌 】	290

【 요약 문 】

체제지배담론형성이라고 할 때, 북한 정권이 지향하는 방향성으로 북한 주민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끌었는가가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바이다.

본고에서는 1953년 전후복구건설시기부터 1990년대 김정일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서사시를 네 가지 범주에서 고찰하면서 체제지배담론의 형성을 고찰하였다. 첫 번째 ‘사회주의 국가 건국의 담론’은 북한의 국가적 정체성 세우기에 해당한다. 사회주의 체제 국가의 정체성은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이 건국의 시초로 편입되면서 북한의 역사적 기원이 김일성으로 초점화되는 양상으로 형상화된다.

두 번째 사회주의 국가 건국 이후에 도래하는 것은 김일성에 의해 마련될 ‘사회주의 낙원’이다. 그러나 낙원은 전후복구 이후에 가능한 것이다. 폐허를 재건하는 사업은 인민의 노동력 동원과 북한 주민의 체제 이탈을 막는 문제가 동시에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굳건히 하기 위한 사상교양의 문제가 우선으로 제기되었다. 이 모두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북한이 인민들에게 제시한 것이 천리마운동이다. 여기에 북한이 인민들에게 서사시에서 제시하는 전형적 인물은 ‘천리마기수’들이다.

세 번째 수령중심의 유일체제 담론은 주체사상 이후 수령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며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주체적 공산주의의 전형으로 제시된다. 주체적 공산주의자는 사회주의 체제 위기에도 수령과 체제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에는 3대혁명소조원들이 주체적 공산주의자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 시기는 김정일 후계체제가 공식화되면서 김정일의 지도력이 문학 안에서 부상하여 우상화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중심의 통일담론에서 북한의 대남·대미 시각 및 통일 지향성을 살펴보았다. 통일은 남한을 해방하는 북한의 논리가 재생산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통일의 당위성이 미국과 남한 정권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고취 차원에서 감정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북한 서사시에 나타나는 체제지배담론은 당정책의 결과들로서, 언제나 시대의 모든 이슈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문학에 수용된 당정책이나 체제지향성은 인민들이 내면화시켜 실천할 수 있는 신념의 문제와 결부된다. 언어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국가에 의해 체제에 위반되는 부정성은 철저히 배제된다. 결국 북한 체제지배 담론은 언제나 이중성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 서사시는 또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긍정적인 형태로 결과를 도출시켜 현실에서 생길 수 있거나 생기는 모든 반작용들은 철저히 은폐한다. 그러므로 체제의 지배이데올로

기를 신념화시켜 자신의 실천담론으로 내면화시키도록 짜여있는 북한의 문학 시스템은 지향하는 이상을 명백한 사실처럼 정당화하고 있다.

1. 서론—북한에서의 문학의 역할

1.1. 연구목적

북한의 체제지배 담론에 관한 연구는 정치학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문학 분야에서는 주로 소설을 중심으로 체제지배 담론이 형상화되는 양상을 논의해 왔다. 북한은 정치와 문화, 사회와 경제 각 분야가 당 중심으로 하나의 연대를 형성하는 전일적인 체제를 특성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에 체제지배 담론의 문학적 수용은 북한 문학이 보여주는 특수성 중 하나이다. 북한 문학 연구에 문학 내적 고찰 외에 외적 고찰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 원칙에 따라 지향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북한의 모든 예술은 서사가 있어야 한다. 서사는 사건의 주동인물이 평범한 대중에서 혁명가로서 발전하는 모습을 전형화해야 한다. 문학, 영화, 연극, 가극 외에도 무용이나 가요에서도 혁명적 인간의 전형성을 담아야 한다. 그러므로 북한은 해방 이후부터 정책적으로 서사시를 장려해 왔다. ‘위대한 사회주의 조국 창건’ 테제는 민주건설기의 전변된 사회 반영과 함께 웅대한 서사시 형식으로 제대로 그려낼 수 있다는 논리가 주효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서사시는 인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 형식으로서 북한 체제의 선전과 설득의 전략이 집약화되어 있다. 레닌은 대중의 지지가 없는 행동은 단순한 정치적 모험주의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혁명은 법령으로 일으킬 수 없으며, 대중에게 명령을 부여하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일으킬 수 없기에 “우선 첫째로 설득”을 내세운다. 대중 속에 들어가 대중이 알아들을 말을 하며 대중이 원하는 글을 쓰고, 대중의 요구를 표현하고 해결하는 글을 쓰라는 김일성 또한 인민에 대한 설득의 측면을 중요시하고 있다. 대중이 창발성을 발휘하여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복무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적 신념을 지닌 인간형으로 개조되어야 하며, 문학은 혁명건설의 나팔수 역할로 주어졌던 것이다. 즉 북한의 서사시는 사회·정치적 현실의 요구와 결합된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서사시는 문학소비자인 인민의 요구가 아니라 사상교양의 필요를 절감한 당의 요구로 제기된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서사적 내용으로 편입된 북한의 이데올로기를 효과적으로 재생산되는 구도 아래 형성되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일찍이 발달한 서사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형편이다. 인민 대중을 주인공으로 하는 서사시는 당과 수령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다하는 역할로 그려지면서 체제 지향성의 담지체 역할을 수행한다. 본고

에서는 인민 대중이 서사시 주인공으로 형상되면서 어떻게 지배 이데올로기가 담론화되어 실천규범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체제지배 담론의 변화는 지향성의 변화를 가져오며, 인민들에게 제시되는 ‘역할모델’인 서사시 주인공들의 변모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민대중에게 주체적 인간형의 전형성으로 서사시 주인공이 제시되는 방식과, 주인공들의 사상적 종자에 북한 체제 내적 담론이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이는 북한 당대의 정치·사회·경제적 제반 담론들과 병행하여 분석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북한에서는 문학예술의 발생과 발전은 인류발전의 유년기에 인간의 자주적 요구, 미학적정서적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본다. 예술은 다양한 생활과 시대미학적 요구 및 계급의 지향과 과학기술의 발전, 창작경험의 축적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다양한 종류와 형태로 발전하면서 풍부해졌다는 것이다.

유독 북한에서 서사시가 다량으로 창작된 것은 해방 후에 이룩한 제반 민주개혁들로 삶의 현상이 전변하였으며, 격변하는 역사와 시대의 전형화된 인민의 영웅주의나 애국주의 등을 형상화하기 위해 시대가 서사시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민주건설의 장엄하고 찬란한 현실’을 그리고 ‘당과 조국과 수령에 바치는 헌신성, 땅에 대한 사랑, 삶에 대한 뜨거운 의지’를 지닌 당대의 전형화된 인물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불굴의 투지와 혁명적 낭만주의 정신을 인민적 입장에서 형상화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시에 있어서의 서사성인 것이다. 이러한 서사시적 경향은 “최근 쏘베트의 시인들은 웅대한 시형태로 묘사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그들의 작품은 서사시의 넓은 영역을 개척하였다. 각분야에 걸친 생활면을 표현하며 쏘베트의 현실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을 묘사하려는 경향은 시형에 많은 양식을 취하게 하였다.”¹⁾에서 보는 것처럼 소련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북한 서사시의 전형적 모범이 소련 출신인 조기천의 “백두산”인 것은 북한 문학의 앞으로의 전개 양상에 서사성이 어떻게 시대정신으로 제기되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전후복구 시기와 천리마 시기를 각각 겪으면서, 북한은 인민들을 동원하여 생산력 증강에 힘써야 했으며, 전후복구의 투쟁적인 성과를 혁혁히 보여주어야 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민들을 전후복구 건설에 대량 투입시킴과 동시에

1) 아·마카로브, “시문학의 새로운 영역”, 『문학예술』, 제2권, 제12호, 1949, p. 45.

체제 기반형성을 위해 인민을 사상적으로 고무시키고 정치적인 불순분자 색출에도 힘을 써야 했다. 서사시의 이야기형식은 대중의 수용을 원활하게 하면서,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의 전형으로서 제시된 서사시 주인공들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김일성을 신화하는 전략으로 구사되면서 더욱 본격화된다.

북한 서사시 형태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주인공으로 하는 송가형태의 서사시와 일반 인민 대중을 주인공으로 형상화하는 서사시로 구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및 혁명가족의 송가서사시를 제외하고 일반 인민대중을 형상화한 서사시로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또한 휴전 이후 전후복구시기부터 천리마시기 인민 대중을 선동하여 생산력 증강에 힘쓰던 시기, 주체사상이 김일성 유일체제를 사상·이론적 토대가 되던 주체시대, 1980년대 이후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던 시기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체제지배 담론은 서사시 주인공들의 담화와 시인의 언술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1980년대 김정일 후계 구도가 공식화되고, 동유럽과 소련의 사회주의 좌절과 1990년대 중국의 개방으로 북한이 가지게 된 위기의식이 어떻게 인민통제와 후계구도로 나타났는지도 서사시를 통해 나타나는 중요한 담론 중 하나일 것이다. 김일성 사망 이후 유훈통치를 표방한 김정일 시대가 막을 올리면서, 북한 서사시는 영웅적인 인민의 위훈보다 김정일의 지도자적 면모를 강조하는 수령형상창조의 서사시인 “향도의 해발을 우러러” 시리즈가 방대한 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인민의 자주적인 창발성 발휘는 수령의 계승자인 김정일의 위훈을 돋보이게 하는 보조적 역할로 머물게 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 반면에 2001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담론의 측면에서 민족의 동질성 문제가 대두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북한 문학의 변모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는 서사시가 주로 나타났던 1990년대까지의 서사시 문학을 연구범주로 한정하면서 보론적으로 통일담론에 한정해서 2000년대 이후 최근의 문학적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북한 서사시에 나타난 체제지배 담론 형성을 살펴보기 위해 남한 문학과 비교를 피하고, 북한 문예이론을 위시한 내재적 접근을 통해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문학 내에서 형성되는 담론들은 당정책 및 문예정책을 통해 일정한 방향성으로 유도되고 있어, 그들이 문학에서 정책적으로 수용되어 담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입장에 따라, 전일적인 체제로서 독자들에게 수용되도록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2. 체제지배 담론의 형성과 북한 문학

2.1. 담론 형성의 기저

담론이란 여러 문장들이 연속된 질서를 형성하는 방식으로서 이질적이면서 동질적인 하나의 전체에 참여하게 되는 방식을 일컫는다.²⁾ 담론과 이데올로기를 대비시켜, 담론이 체현하고 있는 믿음·가치·범주의 관점에서 발화행위나 글쓰기라고 볼 수도 있다.³⁾ 푸코는 담론을 특정 대상이나 개념에 관한 ‘지식’과 규칙들을 형성시켜 현실에 관한 설명을 산출하는 언표들의 집합체로 설명하면서, 물질적 조건이 변함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⁴⁾ 담론의 범주는 철학이나 언어학, 사회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는 만큼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한정하기는 어렵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발화행위든 글쓰기든 담론이 언어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이다.

언어에 있어 낱말, 표현, 명제 등은 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언어를 이데올로기적 실천행위의 일종으로 간주할 경우, 담론은 이데올로기 실천과 관계를 맺게 된다.⁵⁾ 언어는 지속적이기 때문에 강한 힘을 내부에 잠재시키고 있으며, 그렇기에 권력은 언어의 장악 및 통제와 관련된다. 이데올로기적 담론은 개인이 아니라 수많은 군중, 대중을 향하여 말을 건네는 행위로서 반복적인 경향을 지니며 ‘개인적 신념이 아니라 권력에 봉사하는 집단적인 믿음’⁶⁾을 표상한다. 그리고 문학은 이데올로기의 언어적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간주할 수 있다.

문학을 이루는 언어, 즉 단어와 어구들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담론의 지표에서 볼 때 순수한 언어학적 의미와는 관련이 없을 수 있다. 담론의 영역에서 의미는 ‘이데올로기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며, 담론은 이데올로기의 특수한 형식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담론의 위치라고 할 수 있다. ‘자유’와 ‘민주’의 경우, 북한의 의미와 남한의 의미는 순수 언어적 자질로서는 충분히 설명

2) Easthope, Antony, *Poetry as Discourse*(박인기 역, 「시와 담론」, 지식산업사, 1994), p. 27.

3) Mills, Sara, *Discourse*(김부용 역, 「담론」, 인간사랑, 2001), p. 18.

4) Foucault, Michel, *Histoire de la Folie à L'Age Classique*(1961); *L'Archéologie du Savoir*(1969); 이정우 역, 「담론의 질서」,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8.

5) Pêcheux, Michel, *Language, Semantics and Ideology: Stating the Obvious*(1975), trans. Harbans Nagpal, London: Macmillan, Basingstoke, 1982.

6) Reboul, Olivier, *Langage et Idéologie*(홍재성·권오룡 역, 「언어와 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2003), p. 98.

되지 않는 변별성이 있다. 즉 그것이 어떤 사회적 제도와 정치적 입장에서 쓰였느냐에 따라 의미는 확장되거나 축소되고, 역사적 행위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단순한 자의적 표현이 아니며 사회적인 것이 언어를 통해 개인의 의식에서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것은 의미있는 전제가 된다.⁷⁾

스탈린에 의하면 언어란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일종의 주어진 자율적 도구”이며 “의사소통과 표현이라는 목적을 위해 완벽하게 작용할 준비를 갖추고 바로 거기에 그렇게 있는 것”⁸⁾이다. 북한은 언어행위인 말과 글을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이며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의 필수적인 수단”⁹⁾으로 규정하면서, 그러한 말과 글을 통해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깊이 학습하여 그 본질을 체득·육화하여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가 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데올로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실제 조건에 대한 상상의 관계를 표현하는 의미체계이며¹⁰⁾, 의식의 반영인 언어는 이데올로기의 물질적 구현물이다. 그러한 이데올로기의 장이 되는 ‘담론과정’은 언어의 집적체인 문학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이데올로기는 신념·의미·실천으로 나타나 진정한 의식이건 허위의식이건 간에 이데올로기적 체계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내면화된다. 북한 문학은 바로 이러한 언어의 이데올로기적 담지체로서 개인의 신념과 실천 행위를 구성하는 담론으로서 작용하며, 북한 체제의 지향성에 따라 개인을 통제하는 기능을 아울러 수행한다.

2.2. 북한 문학의 체제지배 담론형성 원리

2.2.1. 북한 문학의 당정책 수용과 문학생산구조

북한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이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함으로써 착취사회와 착취계급을 때려부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사상교양의 강력한 수단”이며, “생활과 투쟁의 교과서”¹¹⁾로 규정한다. 언론이나 출판 또한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힘있는 무기”¹²⁾로서 언어를 매개로 하는 모든 활동은 강력한 선전선동의 수단이 된다.

7) Vološinov, V.N., *Marxism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1929), trans. Matejka, L. and Titunik, I. L.,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8) Easthope, Antony, *Poetry as Discourse*, pp. 50-51.

9)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우리 당의 언어정책」(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6, p. 8.

10) Althusser, Louis,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아미앵에서의 주장」(김동수 역, 솔, 1991), p. 107.

11)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문학예술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2, p. 364.

12) 「백과전서 6」(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 292.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의 내용은 당의 판단이 기준점이 된다. 중요한 뉴스는 사회주의 건설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북한 신문은 북한 당국이 설정한 목표달성을 위해 일련의 공통된 가치를 규정, 이를 반복 제시함으로써 북한 인민의 사고를 통합하는데 우선권을 두고 있다. 당정책으로부터 인민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공통된 목표와 가치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당화를 유도하면서 사회화 기능을 수행, 지도체제의 현상 유지 및 공고화를 위한 체제유지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¹³⁾

북한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매체의 다양한 내용들은 사실 당이라는 단일 매체의 당적 목소리 하나일 뿐이다. 북한 문학이 예술로서의 향유적 기능보다 당의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문제들을 구체화하는 도구로서 활용되면서, 인민들의 사상교양 및 학습자료 내지는 ‘혁명적 무기’의 역할이 가장 본질적인 가치로 대두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당정책들이 어떻게 문학 안에서 담론으로 제시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의 관점’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해 보인다. 문학이 사상교양의 장소인 점이 분명한 이상,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지의 문제가 그 다음 핵심 사항이다. 북한의 문학에 대한 엄격한 통제 및 관리 시스템이 지배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은 문학 생산물을 소비하는 주체적 대중이라기보다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되어 체제가 요구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순종적이고 복종적인 객체일 뿐이다. 시장매커니즘이 아니라 당정책에 따라 배포되는 북한 문학의 유통과정과 ‘독서회’나 ‘실효모임’을 통해 어떻게 강제적으로 일정 부문 수용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독서회는 “반동통치제도 밑에서 착취사회의 반동적 본질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인식시키며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기 위하여 혁명적이며 진보적인 출판물들을 서로 돌려 읽고 배우며 연구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소조형식의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 조직”¹⁴⁾이며, 실효모임은 “사상정신적으로 배운 내용을 사업과 생활에 구현하여 실지로 효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조직하는 모임”¹⁵⁾을 일컫는다. 북한에서의 독서행위는 사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행위로 규정되는 것이다. 실제로 독서회나 실효모임은 혁명적 작품, 예컨대 소설이나 시, 영화 등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주인공처럼 살 것인지를 학습하고 교양하는 모임으로 운영되는 사회의 공적 영역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작가들은 해방 이후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에서 1953년 발전적 해

13) 김경웅, 「북한정치사회화론」(서울: 박영사), 1995, pp. 100-101.

14) 「현대조선말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 650.

15) 「현대조선말사전」, p. 1587.

체를 통하여 ‘작가동맹’으로 개편되었다가 다시 1961년 3월 김정일의 지시로 재결성된 ‘조선문학예술총동맹’에 속해 있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은 작가들의 창작 방향을 설정하고 창작량을 배당하는 동시에, 작가들의 사상교양을 수행하며, 당의 문예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총괄적인 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다.¹⁶⁾ 작가들은 의무적으로 조선문학예술총동맹에 가입해야 하며, 동맹은 작가들의 작품을 창작 단계에서부터 실제 창작 지도 및 작품발표와 배급에 이르기까지를 통제한다. 거기에 문화정책의 핵심인 창작의 사상적 방향이나 지향성에 대한 결정은 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문학 생산과정은 그야말로 국가의 전면적인 계획과 통제·지도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본다. 북한에서 출판된 문학작품들은 사상성이라든가 당정책의 구체화 등에서 문화예술행정이 부과하는 모든 정책 심의 및 검열을 통과한 연후에 주민들에게 배급된 것이다.

문학에 대한 북한의 국가적인 통제는 언어의 소유자가 바로 국가이며, 작가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쓰지 말아야 할 것’이 철저히 통제된 배제원리에 입각해 있다. 북한에서 언어를 장악한 권력 지배자가 요구하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실천담론으로 수용하는 문제는 결국 문학을 비롯한 언어의 헤게모니가 국가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출판된 문학은 국가통제라는 강제력에 의해 조직화된 승인으로서, 인민들의 암묵적인 동의에 의거하고 있다. 이는 체제 지향성을 내면화하는 것의 승인이며, 모든 사회·정치적 문제에 관한 인식방법과 특정 생활양식을 갖도록 사상적으로 교양되는 것을 의미한다.

당 정책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물인 문학은 지배적인 담론에 반대하는 담론들의 보급에 대해서조차 지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게 된다.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담론들은 부정적인 주제들로 한정되면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반대급부로 언급되거나 투쟁의 대상으로 언급될 때만 제한적으로 보급된다. 결국 담론을 통제하는 장치로서의 저작권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며, 북한 문학은 영웅으로 제시되는 주인공들에게 ‘자유롭게 동의하는’ ‘착한 주체들’¹⁷⁾이 자신과 주인공을 동일화시켜 교양감화되도록 주어지는 양식이며, 동일화를 거부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배 이데올로기는 이와 같은 동일화 과정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정체성을 소유한 자유로운 주체라고 생각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16) 윤재근 공저, 「북한의 문화정보 I」(서울: 고려원), 1991, p. 20; 전영선, 「북한의 문학예술 운영체제와 문예이론」(서울: 역락), 2002, p. 21 재인용.

17) Macdomell, Diane, *Theories of Discourse*(1986)(임상훈 역, 「담론이란 무엇인가」, 한울, 2002중판), p. 62.

2.2.2. 북한 문학의 형상원리

북한문학의 형상원리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과 주체문예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의 문예이론자들은 주체적 인간학의 본질은 인민대중을 가장 힘있고 아름다우며 고상한 존재로 형상화하려는 작업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의 구현이라는 과제로 자연스럽게 이어간다. 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은 원래 구소련 문예이론이 바탕이었다. 즉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이론의 중심적 창작원리를 주체사상에서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소련과 북한의 문예이론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주체사상의 원류인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인민성을 셋 중에서 가장 앞세우는 데 비해, 북한의 주체사상에서는 당성을 제일 앞세우고 인민성을 가장 뒤에 두는 것이 확연한 차이점이다.¹⁸⁾ 왜냐하면 당은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적 참모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조직이기 때문이다. 수령의 사상과 영도는 당을 통하여 실현되며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도 당의 품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주장한다. 그래서 문학에서 당을 형상화할 때는 대중과 혈연적으로 연결된 당을 그려야 한다.¹⁹⁾

북한문예이론의 핵심 중 하나는 ‘주체적 인간학’이다. 주체적 인간학은 ‘우리 시대의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세계관이며 혁명과 건설의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적 지침’으로 간주하는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주체의 문예관은 사람을 가장 진실하게 그리며 인민대중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실로 사실주의적인 문학예술을 창조하기 위한 가장 올바른 문예관이라고 규정한다.²⁰⁾ 주체의 문예관은 인간을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주체로 형상하여 궁극적으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그리는 것을 지향한다.

‘중자론’과 ‘수령형상창조’는 주체적 문예이론의 창작지침으로 제시된다. 북한 사회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역시 주체사상을 창시한 김일성의 혁명위업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것이 문예이론으로 나타난 것이 ‘수령형상창조’이다. 수령형상창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산인간’을 그리는 문학은 인간문제를 다루면서 정치적 생명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풀어야 한다.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고 빛내가는가를 기본으로 내세우고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육체적 생명이 생물유기체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면 정치적 생명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다. 육체적

18) 박태상, 「북한의 문화와 예술」(서울: 깊은샘), 2004, p. 37.

19) 김정일, 「주체문학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54.

20) 김정일, 「주체문학론」, p. 5.

생명보다 더 귀중한 정치적 생명은 수령에 의하여 주어진다 보고 있다. 작가의 창작이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혁명사업’이기에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한 열렬한 애국자만이 진실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우수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거기에 창작적 지침으로서 김정일이 내세운 것이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로서의 ‘종자론’이다.

북한은 사회 전체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새 시대의 참다운 인간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며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인간이다.²¹⁾ 이러한 인간형은 역사와 진보에 대해 실현되어야 할 것에 대한 분명한 유토피아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다. 사회주의 완전 혁명이나, 자립적 경제개혁, 인민이 주인되는 나라, 노동자 계급에 대한 억압의 철폐, 제국주의 분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문학을 통한 유토피아적 담론은 오히려 북한 내부의 혼란스러움과 복합적인 ‘실패’의 예들을 노출시키기도 한다.

주체사상이 명시화되기 이전의 창작방법론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이건 주체의 문예이론에 입각한 창작방법론이건 간에, 북한 문학은 당정책들의 구체화로 인한 상호텍스트성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의 실험적 혁신이나 유희적 측면이 아니라 체제지배 담론을 생산하는 원리로 작용한다. 즉 사회·정치적으로 제한되고 제약된 조건화를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담론은 사회적 주체로서의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의 일부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²²⁾ 북한 문학의 도식성과 당정책의 상호텍스트성은 ‘스테레오형’에 기인한다. 스테레오형은 북한 문학의 형식과 내용 모두에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북한 문학이 시기별로 구현하고자 하는 지향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사하게 보이게끔 한다. 스테레오형은 그 고정성으로 인해 지배상황을 합법화하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한다.

스테레오형은 집단의 고정된 표현들이 집단간의 단결력과 동질성을 강화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집단적 표현의 기능들은 집단간의 유대를 드러내고 집단에게 더 많은 단결력을 부여하고, 변화의 모든 위협에서 이들을 보호하는데 있다. 동화와 그로 인한 소멸이라는 모든 위협에 맞서, 자신들의 근원적인 스테레오형들을 재확인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통적이고 일률적으로 보이는 구조들은 또한 상호텍스트적이다. 그리고

21) 한중모, 「주체의 인간학」(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pp. 115-116.

22) Fairclough, Norman, *Discourse and Social Change*(Polity, London), 1992, p. 103.

이들은 지배집단이 사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피지배자들 즉 북한 주민들의 순종을 정당화하기에 알맞은 이미지로 야기된다. 이 모든 것은 권력을 장악한 집단의 이해 관계를 위해서이기도 하다.²³⁾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유토피아적 미래는 북한이 문학예술에서 혁명적 낙관성 혹은 혁명적 낭만주의로 나타나는 희망과 미래예찬으로서 국가와 당이 약속하는 ‘실현되어야 하는 미래’이다. 반복적 제시를 통해 인민의 신념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독서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 독서행위는 독자들이 의미구축 행위에 참여하여 문학에 구현된 담론들을 실천논리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 전제이다. 독자들이 구축하는 의미망은 텍스트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시나리오들을 합당하게 해석하는 여부가 우선시된다. 스테레오행은 의미를 단성적으로 구현시키도록 하며 공적 독서행위-독서회 또는 실효모임-은 지배이데올로기의 효과적인 확산과 내면화에 기여하게 된다.

거기에 관용구는 문장과 의미의 측면에서 강한 결속력을 보이는 담론의 일부로 작용하고 있다. 김일성에 대한 관용적 수사라든가, 긍정적 주인공의 성격 묘사라든가, 작품마다 다르지만 유사하게 보이는 이러한 관용구의 사용과 더불어 당 정책을 당대에 슬로건으로 구현한 여러 표어적 문구들과 당의 사상교양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어구들이 단성적인 의미 구축에 강한 결속력을 갖고 담론으로 작용하는 원리로서 형상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문학적 표현 안에서 고정된 표현으로 작용하며 분리될 수 없는 연속체로서 주제에 응결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2.2.3. 서사시의 체제지배 담론 구현의 유용성

북한에서는 해방 이후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 서사시 창작이 정책적으로 장려되고 독려되어 왔다. 실제적으로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 한국전쟁과 전후복구건설 시기를 지나고 천리마대고조 시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서사시들이 창작되었다. 장편서사시뿐만 아니라, 비교적 짧고 서정성이 더 강한 ‘서정서사시’라는 장르를 개발하면서 서사시 창작은 박차를 가해 온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수령 중심의 유일체제는 북한 사회를 운영하는 원리로 작용하게 되면서 수령의 영웅적 품모를 형상한 송가서사시들이 유일체제와 수령우상화에 복무하게 되었다. 서사시 창작이 활발한 연유에 대해 북한은 ‘영웅적 시대’를 들고 있다.

23) Amosy, R., Pierrot, A. Herschberg, *Stéréotypes et Clichés: Longue, Discourse, Société* (조성에 역, 「상투어」, 동문선, 2001), pp. 71-74.

부르조아반동문학에서 서사시가 자리를 감춘 것은 사멸하여 가는 운명에 처한 부르조아 자신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들의 생활은 인민의 생활과 담을 쌓고 있으며 황혼과 회색빛만이 비껴있을 뿐이다. 이런 생활에는 만가와 애가만이 적합하다.

이와는 달리 해방후 공화국북반부에서의 20년 간의 력사는 서사시의 발전에 광활한 길을 열어주고 있다.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전통을 직접 계승하고 발전시킨 해방후 20년간의 혁명투쟁은 서사시발전의 새로운 생활적 기반으로 되고 있다. 여기에 서사시 발전의 주관적인 조건, 즉 시대에 대한 시인들의 사색의 심화, 예술적 기량의 제고가 결합됨으로써 실로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서사시를 탄생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서사시가 해방전 문학에서와는 달리 해방후 문학에서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또한 제고되고 있는데서 표현되고 있다. [...중략...] 서사시가 다른 서사적 장르, 즉 소설이나 희곡과는 달리 시대에 대한 창작가-시인의 역할과 범위가 상대적으로 더 넓고 더 능동적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²⁴⁾

즉 사회주의 국가가 지향하는 것은 인민에 대한 착취가 사라진 미래에 대한 희망찬 전망이 되며, 반대로 부르주아 국가들은 사멸하는 역사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차이점이 부르주아 국가들에 비해 사회주의 국가가 서사시를 창작할 수 있는 역사·사회적 토대가 된다. 그렇기에 영웅적인 시대에 대한 이야기로서 서사시가 다량으로 창작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해방 후 영웅적인 현실과 그 현실이 자기 뿌리를 박고 있는 1930년대 항일 무장 투쟁의 현실을 자유롭게 구가할 수 있게 된 사실은 우리 시문학에 고대의 영웅 서사시적 속성들을 가장 많이 보존하고 있는 장르로서의 장편 서사시의 무한한 발전을 촉진시키었다.²⁵⁾

해방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위대한 전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력사적인 승리,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 등은 우리 나라에서 서사시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다.²⁶⁾

시문장론적으로 볼 때 서사시는 운문적형식을 취하나 사건과 인간관계가 주어지고 이야기줄거리를 가지며 시인의 서정화와 주정토로가 결합되어있는 용적이 큰 시이다.²⁷⁾

24) 강능수, 「시대와 서사시」(■■■조선문학■■■, 1966. 10), p. 78.

25) 박종식·현중호·리상태, 「문학개론」(평양: 학우서방), 1964, pp. 162-163.

26) 「문학예술사전」, p. 515.

27) 장용남, 「서정과 시창작」(평양: 문예출판사), 1990, p. 280.

서사시는 대체로 역사적이며 영웅적인 사건, 인물들을 소재로 한다.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거대한 전변,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역사적인 승리,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 등은 우리 나라에서 서사시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다.²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의 영웅적현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위대한 전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인민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영웅적 위훈, 당의 령도따라 벌어진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우리 근로자들의 장엄한 투쟁 등은 우리 나라에서 서사시문학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오게 한 생활적바탕으로 되었다.²⁹⁾

비교적 자세하게 북한에서 정의한 서사시의 개념에 대해 소개해 보았다. 이들 서사시의 공통적인 개념은 ‘해방 후 영웅적인 현실’을 서사시 창작의 추동원인으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해방후 민주개혁과 같은 김일성에 의한 거대한 전변,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인민의 역사적인 승리,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 등이 북한 서사시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고대 이후 중세에 이르면서 사회·정치적 환경의 침체와 보수성, 일제의 조선 강점이 서사시의 발전을 억제해 왔다. 1930년대 항일혁명투쟁시기 《조국 광복회 십대 강령가》 등과 같은 혁명가요에서 영웅 서사시적 표현을 보이게 되었고, 해방 이후의 전변이 영웅 서사시의 창작의 사회·역사적 토대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것이 북한 문헌들의 일반적인 설명이다.

영웅적인 현실은 북한이 주장하는 1930년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시기를 중심으로 그 토대를 소급해 올라가는 양상을 보여준다.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의 성립과 더불어 북한에 정착되기 시작한 ‘위대한 사회주의적 현실’이 웅장한 서사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사회·역사적 토대로서 작용하게 되었으며, 이들 서사시의 주인공은 이전의 신이한 능력을 지닌 영웅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 즉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임을 천명하고 있다.

숨은 영웅들인 인민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서사시는 인민들의 형상(노동자, 군인, 농민)은 북한의 주요 계층성분을 주인공으로 하면서 정치 테제를 내면화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 문학의 경우, 정치와 긴밀한 관계를 맺기에 체제 내적 담론이 내재화되는 것은 북한 문학의 특수성 중 하나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에서 규정하는 서사시는 서사적 구조에 서정성을 유기적으

28) 「문예상식」(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pp. 688-589.

29) 「조선대백과사전 13」(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pp. 612-613.

로 결합한 양식으로서,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인물들의 행동 및 사상감정을 이야기 줄거리를 가지고 묘사하는 것이다. ‘주인공의 생활과 시인의 통일에 의해 서사적인 것과 서정적인 것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서사시’³⁰⁾는 시인의 사상성이 중요 관건이 된다. 시인의 사상은 “정해진 맥락 속에 기재된 주체의 활동”³¹⁾으로서 정치사회적 여건과 결합된 담론으로 형성된다. 즉 서사시에 나타난 어휘들의 의미는 어휘들이 기재되어 있는 맥락과 분리될 수 없으며, 사회·역사적이며 제도적인 장에 속한 화자들—시인의 위치와도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화폭의 역사적 광활성, 그 화폭의 인민적 성격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항상 인민의 역사에서 가장 숭고하고 전형적인 모멘트가 반영”³²⁾된다는 북한 서사시는 당대의 가장 중요한 이념들이 전형화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서사시에 내면화된 체제지배 담론

3.1. 사회주의 국가 건국의 담론—혁명역사건설

위대한 과거 그리기는 하나의 이야기를 역사로 고정하는 방법으로서, 내면적 형식은 서사시이다. 이 서사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하나의 이야기로 관철하는 것이었다. 1959년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출간하기 시작하고, 항일혁명 역사를 복원하여 국가적 과제로 의식하면서 항일무장투쟁의 흔적들을 발굴 조사하는 목적으로 대규모 ‘전적지조사단’이 파견되었다. 조사단의 파견은 위대한 과거를 복원하는 일이 국가적 사업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사를 유일하고 절대적인 역사로 광범하게 체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김일성의 항일혁명 역사를 건국의 역사로 쓰려는 기도가 조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반종파투쟁이 마감된 이후이다.³³⁾

진정한 민족해방의 길은 김일성의 무장투쟁에 의해 열린다는 것이 이러한 유형의 서사시들의 궁극적인 주제이다. 북한이라는 사회주의체제 국가는 김일성을 배제한 역사를 부정한다. 그것은 국가의 건국서사시로서 이후에 김일성의 항

30) 강성만, 「서사시의 형상 창조의 특성」(■■■조선문학■■■, 1963. 5), pp. 99-101.

31) Maingueneau, Domimique, *Les Termes clés de l'analyse de discours*(Éd. de Seuil, coll. <Mémo>, 1996), p. 28; Amossy, R., Pierrot, A. Herschberg, *Stéréotypes et Clichés: Longe, Discourse, Société*, p. 176 재인용.

32) 박종식, 「시인과 개성—시인 민병균을 논함」(■■■조선문학■■■, 1960. 8), p. 195.

33) 신형기·오성호, 「북한문학사」(서울: 평민사), 2000, pp. 200-207.

일혁명투쟁기의 역사가 총서 형식으로 쓰여지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가 진행하는 혁명은 곧 온갖 낡은 것을 때려부시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입니다. 새것과 낡은 것과의 투쟁, 진보와 보수와의 투쟁, 적극과 소극과의 투쟁,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와의 투쟁, 총체적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투쟁, 이것이 우리가 하는 혁명투쟁의 내용입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위업은 우리의 진전을 가로막는 온갖 낡고 썩은 것을 쓸어버리는 과정에서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³⁴⁾

북한은 “오늘의 모든 승리를 가져 왔으며, 또 내일의 보다 빛나는 승리를 가져 올 김일성”³⁵⁾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의 항일무장투쟁을 당의 혁명 전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대중에게 교양하는 것은 전후 국가재건에서 전 국민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지침이었다. 그것은 이 혁명전통으로부터 “오늘의 모든 성과와 승리”가 기초되었으며 “미래의 승리”를 배태할 것이기 때문이다. 혁명전통 연구는 공산주의자들이 과거 혁명투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미래의 승리에 대한 신심을 확고히 심어주면서, 인민들의 애국심과 혁명적 투지를 북돋아 주는 것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차적으로는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의 건국의 타당성을 역사적 ‘당위성’으로 자리매김하고, 반종파투쟁을 통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유일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에 있어 혁명전통 수립은 문학에 있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기원이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 시기로 소급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김일성이 지휘한 ‘공산주의자들’의 항일무장투쟁 과정에서 나타난 혁명문학의 영향으로 1930년대 카프 문학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에 있어서나 문화에 있어서 모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적 근원이 김일성에 있다는 것으로 주체사상 이후 교조적으로 변하는 역사쓰기가 이미 진행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애국주의적 혁명전통을 세우기 위해 문학은 민족의 ‘훌륭한 과거’를 묘사하여야 한다. 항일무장투쟁은 현재의 뿌리와 원천이라고 주장한다. “당과 인민은 바로 김일성에 의하여 지도된 항일무장투쟁에서 그 사상체계, 작풍 및 사업 전통을 직접 계승”하고 있으며, 항일무장투쟁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인민과의 혈연적 연계와 동지 호상간의 고상한 사랑, 곤란을 극복하는 투쟁에서의 불요불굴성과 광명한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³⁶⁾ 등의 최

34) 김일성,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선집 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 257.

35)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공산주의 교양과 우리 문예학의 과업”, 『공산주의 교양과 우리 문학』(평양: 과학원출판사), 1959, p. 11.

36) 한중모, 『공산주의 교양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 창작 실천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고 모범이 되는 것이다.

혁명전통 수립이 어떻게 인민과 연계되는지는 김일성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서사시에서 살펴볼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수립에 있어, 김일성을 중심으로 단결된 충성스런 혁명가들은 ‘공산주의 영웅’이다. 동시에 김일성 일인 체제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향한다. 사회주의 국가의 건국에 있어 김일성에 충실한 인민들의 영웅적 행위가 바탕이 되었다는 논리는 ‘항일무장투쟁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노동자·농민과 같은 인민대중이 어떻게 김일성을 중심으로 충성스럽게 뭉쳐서 ‘조국’을 해방시켜 왔는가, 그리하여 어떻게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건립에 ‘영웅스런 인민’이 기여했는가를 그리는 전략인 것이다.

김일성이 주인공이 아니라 일반 인민 대중이 항일혁명 투쟁에 나섰던 서사시로는 홍순철의 「어머니」(1954)와 박팔양의 「눈보라 만리」(1961), 최승철의 「봄우뢰」(1961) 등이 있다. 홍순철의 「어머니」는 평범한 여성인 어머니가 조국광복회 투사인 남편의 죽음과 아들을 통해 혁명가로 변모해 가는 이야기이다. 남편과 자식들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어머니는 혁명투사로 거듭난다. 박팔양의 「눈보라 만리」와 최승철의 「봄우뢰」에 공통되는 특징으로서, 여성 주인공들이 혁명투사인 남편의 죽음이나 투옥을 계기로 혁명가의 아내에서 혁명전사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박팔양의 「눈보라 만리」의 주인공 김정아는 지주의 밑고로 들이닥친 토벌대에 남편과 시동생들, 혁명동지들이 모두 죽게 되자 “이 내 몸 너자이나 그대들의 뜻을 이어 / 죽기를 기약하고 목숨 바쳐 싸우리라 / 원수들의 머리 우에 불벼락을 던지리라” 기약하고 혁명투사의 길에 들어선다.

복수의 총탄 날아 빗발치는 속에서 / 왜놈의 군경들 모조리 전멸 당하네 /
 어머니도 전우들과 함께 돌격하며 / 쓰러눕힌 원수의 수효 그 얼마이더뇨.
 // 전사들, 일본 자본가놈의 창고 부시고 / 빼앗겼던 인민의 물자 도로 찾아서 /
 굶주린 동포들께 식량 나눠 드리며 // 「동포들이여! 모든 사람들이 단결하여 /
 원수 일본 제국주의 때려 눕히자 / 조선은 영원히 우리 조선 사람의 것 /
 자유 독립 위하여 일떠서서 싸우자」 // 소리 높이 연설하며 격문을 뿌리니 /
 왜놈 총칼에 억눌렸던 남녀와 로소 / 전사들을 부여안고 기쁜 눈물 흘리며 /
 「조선 독립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 // 밤하늘을 진동하는 승리의 만세 소리 /
 이 어찌 붉은 바위에만 울린 소리랴 / 이미 보천보에 오른 구국의 햇불에 이어 /
 삼천리 방방곡곡에 울린 소리 되었어라.

— 박팔양, 「눈보라 만리」 중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정권의 정당성을 반제 반봉건 투쟁에 위치시키고 있다. “원쑤 일본 제국주의”를 “때려 눕혀”, “자유 독립 위하여” 무장투쟁한 여주인공 ‘김정아 어머니’의 정당성은 곧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항일혁명투쟁의 간선으로서 허구적 서사시가 역사 안으로 편입된다. 시는 일제의 폭압과 봉건 지주의 착취 때문에 순박한 농민이었던 주인공과 그의 남편이 지하조직에서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이 와중에 일제 토벌대에 의해 남편과 동지들을 잃게 되자, 투사로서 거듭 난 김정아가 유격근거지로 찾아가는 노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정아가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찾아가는 유격근거지는 “왜놈 없는 우리의 세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바로 ‘김일성 장군’이 있는 곳이다. 유격근거지는 사실상 김일성이 있는 곳이지, 모든 혁명투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곳은 아니다. 그러나 김일성이 있는 유격근거지는 반제 반일 투쟁이 성공하여 일제와 지주의 외풍으로부터 보호되는 낙원의 이미지와 중첩된다. 그곳에 도착할 미래적 시점을 위하여 주인공은 간고한 투쟁을 헤쳐나가게 된다. 주인공의 혁명가적 면모와 투쟁은 김일성의 영도가 있기에 가능해지며, 역사적인 당위성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조국 위하여 모든 것 다 바치며 / 사랑하는 딸마저 떼어는 놓았으되 / 정아 어머니 앞길에는 눈보라 만리 / 혁명의 가시덤불길이 가로놓였다. // 하되 제아무리 대륙의 천지 뒤덮는 / 눈보라 고난길의 혈전의 나날도 / 김 일성 장군의 전사된 자랑을 안고 / 군복 입고 나아가는 어머니 길 못 막았네. // 빼앗긴 고향 산천 찾으려는 어머니 / 혁명자들의 원쑤 깔으려는 어머니 / 김 일성 장군의 무장 유격 대오 속에서 / 그 분의 령도 받들고 싸우고 싸웠더라. // 짓밟힌 사람들에게 대한 뜨거운 사랑 / 원쑤들에게는 불타는 증오로 되어 / 총창 겨누며 달려 나아가신 어머니 / 용감한 어머니는 또 다정도 했어라.

— 박팔양, 「눈보라 만리」 중에서

주인공의 혁명가적 면모는 투쟁에 앞장서는 무력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에 대한 강한 사랑과 원수들에 대한 증오가 교차하면서 대중적 영웅주의를 갖춘 측면으로 묘사되고 있다. 대중적 영웅주의는 ‘용맹스런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인민 모두가 영웅이 될 수 있는 관점이면서, 집단주의적 경향을 일컫는다.

김 일성 장군! / 우리의 빨찌산! // 그들은 믿었다, 이는 승리의 이름, / 노을을 펼쳐 들고 떠오르는 태양임을, / 이는 불행에 대한 복수, / 원쑤의 멸망임을, / 이는 항로 잃은 배를 부르는 등대불, / 가가호호의 초막들을 비치는 광명임을. // 그들은 믿었다, 조국 땅 우에 / 구천리 옥색 하늘 밝아 올 것을, / 바다와 도시들, 온 산야가 / 인민의 행복과 기쁨이 될 것을, / 거기서

그들도 아이들을 기르며 / 노래 같은 삶을 누리게 될 것을...

— 최승철, 「봄우리」 중에서

「봄우리」는 지하공작원으로 활동하던 남편에 의해 혁명적으로 각성된 여주인공 봉녀의 투쟁사를 그리고 있다. 이들은 김일성에 대한 믿음과 투쟁에서 승리하리라는 신념으로 김일성이 가져올 미래적 전망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토벌대에게 남편 준호가 잡혔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공산주의적 신념을 끝까지 관철하며 굽히지 않는다. 그들의 신념의 근거에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과 그 열망을 실현시켜줄 메시아적 존재로서 김일성에 대한 충성에 따른 것이다. 이는 혁명투쟁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조국의 해방이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위해 김일성과 인민들의 투쟁사이기 때문이며 바로 대중적 영웅주의에 근거한 역사 만들기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대중적 영웅주의는 수령과 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발휘하는 투쟁정신과 행동이며, 자기 운명을 주동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인민대중의 창조적 적극성과 집단주의의 발현이다. 대중적 영웅주의의 근본 요인은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며, 당과 수령의 영도를 받들어 나가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다.³⁷⁾ 대중적 영웅주의는 북한이 현재까지도 인민들에게 요구하는 기본 사항으로서 천리마시대의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로 구호화되어 생산력 증강원리 및 인민의 단결력 강화의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과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평하는 한국전쟁은 북한에게 제2의 건국에 해당한다. 북한의 혁명전통수립에 있어 한국전쟁은 인민에게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정권 수립의 정당성과 체제를 옹호고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형상화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서사시에는 민병균의 「조선의 노래」(1955), 신상호의 「련대의 기수」(1956), 위호의 「돌바위고지」(1957), 허우연의 「노래는 철쇄로 묶을 수 없다」(1963), 김태경의 「해녀의 노래」(1965), 김정길의 「군자마을사람들」(1988), 리범수의 「조국과 청춘」(1989), 리범수의 「들국화」(1996)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인민군 전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조선의 노래」와 「련대의 기수」 및 「돌바위고지」, 리수복을 형상한 「조국과 청춘」 등을 들 수 있다. 인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노래는 철쇄로 묶을 수 없다」, 「해녀의 노래」, 「들국화」이며, 이 중에서 「해녀의 노래」는 일제시대부터 한국전쟁을 관통하고 있다. 전쟁에 직접 참가한 인민군을 제외하면 항일혁명투쟁기의 서사시와 마찬가지로

37)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168-169.

가지로 여성을 주인공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평범하고 소박한 노동자·농민 출신들이다. 「런대의 기수」의 두 인민군 전사 철주와 호걸도 각각 농민과 노동자 출신이지만 영웅적인 위훈을 떨치게 된다.

우리 작가 예술가들은 수다한 공화국 영웅들을 작품에 묘사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영웅이라해서 반드시 신기한 사실 전설적인 비범한 인간을 찾으려고 애쓰는 작가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창작적 태도로서는 우리의 영웅들을 옳게 묘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웅들은 어젯날의 로동자 농민 사무원 학생들이며 또는 그들의 자제들입니다.

그들의 풍부한 감정과 인간성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신심 그대로를 묘사한다면 오늘날의 우리 공화국의 영웅들이 될 것입니다.³⁸⁾

공산주의적 신념을 지닌 새로운 인간형, 인민적 영웅들은 노동자, 농민, 학생과 같은 일반 대중들이며, 이들의 영웅성을 묘사하는 것이 예술가의 임무이다. 생활의 교과서로서의 문학이 나타내야 할 주제로 김일성은 가장 먼저 애국심을 들고 있다. 애국심을 표현하는데 있어 추상적인 구호나열을 지양하고 구체적이며 형상적인 감정, 사건, 인물, 사상을 보여주어야 애국심의 구체성과 진실성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인민군은 조국에 대한 애국심과 수령에 대한 충성으로 굳게 단결된 영웅이면서, 또한 도덕적인 존재들이다.

「런대의 기수」의 주인공 철주는 쌀을 얻기 위해 마을에 내려간다. 그러나 농가의 주인을 찾지 못하자, 집안을 뒤지기 시작한다. 짚단을 쌓아 돌을 눌러 둔 담장 밑에서 감자를 파내 배낭에 담던 철주는 순간 한숨을 쉬며 자책과 후회에 빠져든다. 자신의 행동이 “백주의 도적”과 같기에 전우들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낮은 지붕과 삭은 기둥, 찌그러진 문들과 살부러진 창들, 허름한 오막살이는 바로 자신의 고향집과 같은 곳이었다. 감자는 고향에 두고 온 양친 부모와 동생과 같은 이들이 살았을 이들이 돌아와 끼니를 잇고 겨울을 견딜 양식으로 장만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너 뉘를 위해 싸우느냐? / 너 뉘의 목에 칼을 대느냐?」 / 날카로운 량심의
채찍이 / 뺨을 후려친다, / 가슴을 주어 박는다, [...중략...] 하루를 더 굶는
다 해도 / 구년 치수 장마날에 햇빛 본듯 / 차라리 거뜬한 마음이 좋구나 /
돌아 오는 전사의 배낭은 비였으나 / 전우들 참아 주리라,

— 신상호, 「런대의 기수」에서

38) “전체작가예술가들에게 주신 김일성장군의 말씀”, 「문학예술」, 제4권, 제3호, 1951, p. 4.

양심적으로 그려지는 인민군이 자아내는 도덕적 파토스는 윤리적 풍격의 아름다움 외에도 이들이 도덕적 이상의 구현자로서 환희와 경외의 대상이 되면서 인민적 영웅으로 상승하는 순간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 미학에서 예술과 정치의 연관 외에 예술과 도덕의 상호연관을 고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³⁹⁾ 이는 적으로 규정되는 ‘미군’과 ‘괴뢰군’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그려진다. 낡은 것과 새것의 대결에서 언제나 새것이 승리한다는 북한의 인식은 인민군의 도덕적 우월성을 새것으로서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적 우월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미군이 나 일제의 도덕적 열등성은 낡은 것의 멸망성을 의미한다. 인민군의 모습이 인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배려에 있어 양심적이며 예의바른 모습이라면 원쑤가 지나간 자리는 약탈과 방화, 만행으로 점철되어 대조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인민군들은 포로가 된 12명의 빨치산을 구해내 휴식 시간에 해방지구의 복구건설을 거드는가 하면 인민들과의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도 한다. 전선과 후방의 강한 유대는 바로 집단주의 정신의 원천 중 하나이다. 주인공 철주와 호걸이 부상당했을 때 이들이 무사히 연대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후방의 인민인 ‘어머니’의 구원 덕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부대가 미군 탱크부대를 만났을 때, 어린 소년의 시체를 안고 우는 여인의 형상을 떠올리면서 끓어오르는 복수심과 증오심은 투쟁과 승리의 당위성이 된다.

인민군대의 승리는 개인적 승리가 아니라, 중대와 연대에 이은 집단주의의 승리이며, 조국의 광활한 자연과 축원이 모두 융합된 애국주의의 승리로 그려지고 있다. 결국 전쟁에서의 승리는 전선의 인민군과 후방의 인민들이 모두 단결한 집단주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북한의 논리이다. 김일성은 인민군대의 영웅성은 몇몇 병사들의 영웅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대중적 영웅주의에 있다고 언급한다. 전투에서 발휘한 영웅성과 용감성은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성스러운 의무’를 철저히 자각하여 빛나게 수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회주의 국가 재건에 있어 가장 필요한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으로 제시한다.⁴⁰⁾

시는 전쟁 영웅들, 탱크 밑에 폭약을 안고 뛰어든 용사들, 그들의 신념의 힘이 무엇에 뿌리박고 있는가를 말한다. 그것은 곧 ‘당’이다. 부상당해 참기 어려운 역경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던 호걸이도, “피끓는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은 영웅”도 “당의 충직한 아들”이다. 철주는 당원 심사에서 이들의 용맹성과 승리에 대한 신념이 당에서 나오는 것을 깨닫는다.

39) 소련과학 아카데미 편, 「마르크스 레닌주의 미학의 기초이론 I」, 신승엽 외 역, 일월서각, 1988, pp. 282-284.

40) 강능수, 「시대와 문학」(평양: 문예출판사), 1991, p. 111.

그리도 마름이 없이 어디서 솟는가 / 고난이 첩첩할수록 오히려 드세여지는
/ 그대의 힘, 그대의 투지는, [...중략...] 조선 로동당원 이들을 가리켜 / 우
리는 불사조라 부르자, [...중략...] 「나도 그러하리라 / 더 보람 있게 살아야
한다 / 당의 아들답게, 투사답게 / 나는 영원히 자랑하리라 / 당의 위업에
바치는 / 나의 생명과 청춘을!

— 신상호, 「런대의 기수」에서

당원은 불사조이다. 그들의 신념과 힘과 투지에는 당에 대한 충실성이 있다. 이들의 전사로서의 품성은 당에 대한 충성, 당을 영도하는 수령에 대한 충성에 잇닿아 있다. 입당이 결정되자 기뻐하며 철주는 당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은 김일성과 당의 영도 하에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낙원이 펼쳐지리라는 약속에 대한 신념이다. 이는 새 것과 낡은 것의 투쟁에서 언제나 새 것이 이기리라는 것이며, 과거와 미래를 포함한 현재의 대비에서 미래의 승리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에서 사상교양사업의 중점을 우선적으로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알라는 것에 두었다. 이를 위해 북한과 남한을 대조적으로 그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비교하고, 그리하여 북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어, 북한 주민들 스스로 소수 착취자들만 잘 먹고 잘 입으며 대다수 인민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떠는 자본주의 제도가 좋은가, 모든 사람이 다 일하고 다 잘살 수 있는 사회주의제도가 좋은지를 판단하게 하라는 것이다.

영웅적인 인민군에 비해 미군을 비롯해 미군과 결탁한 ‘괴뢰군’으로서의 국군이나, 미군에 협조하는 ‘경찰’은 도덕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⁴¹⁾ 허우연의 「노래는 철쇄로 묶을 수 없다」(1963)의 주인공은 8남매의 어머니이다. 남편과 자식들 모두를 원쑤에게 잃고 처음에는 원쑤에 대한 증오심으로 전선원호에 나섰다가 혁명 여전사로 발전하게 된다.

41) 1990년대 중반에 나온 시에 묘사된 남한 경찰 혹은 국군은 미군에 대한 야유 및 조롱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매우 열등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엄성도 망각한 존재들이다. 주적으로 묘사되는 미국과 더불어 남한 위정자들이나 권력 그룹에 속한 세력들은 미국과 마찬가지로의 방법으로 그려지고 있다. 북한의 대남 대미적 시각은 표면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제시되는 양상이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으로 쫓겨갔던 반동의 무리 / 지주, 자본가의 족속들이며 / 인민을 등쳐먹는 협잡배들 / 살인방화에 이끌이 난 / 깡패들의 서식장—면경찰지서 // 네놈들이 아니었더냐 / 상처입고 쓰러진 유격대 소대장을 / 산채로 소나무에 묶어놓고 / 군견을 풀어 물어뜯게 한 / 인간백정 악한의 무리들 / 네놈들이 아니었더냐 / 유격대간호원의 시체를 / 옷을 벗겨 바위우에 올려놓고 / 까마귀가 쪼아먹게 보초를 서며 / 히히덕거리던 야만의 무리들 [...중략...] 미국놈의 개가 되어 / 조국과 인민을 반역한 죄를 / 그 어이 용서할수 있단 말이나 - 리범수의「들국화」(1996)에서”

이 시에서 미군은 혐오스럽게 묘사되고 있다. ‘뱀 아가리’, ‘구미호 같은 눈’, ‘노랑 불개미’의 모습을 지닌 미군은 그 행동 양상이 탐욕스럽고 비열하게 그려지고 있다. 도덕적으로 열등한 모습으로 풍자하고 야유·조소하는 것은 ‘풍자시’라는 이름으로 백인준의 「벌거벗은 아메리카」(1961) 이래 1990년대까지 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제투쟁에 있어 미국은 언제나 적대적 관계에서 ‘원썩’로서 그려지며, ‘원썩’에 대한 인식은 사실상 반제투쟁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사회·역사적 원인에서 찾기보다 복수심과 증오의 감정 고취에 두고 있다.

혁명역사 세우기는 결국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선전하여 전국민을 단결시켜 국가를 재건하는 일과 맞물린다. 노동자 농민 출신의 평범한 인민이 일제의 억압과 지주의 약탈에 목숨걸고 투쟁하는 것은 반제투쟁과 조국해방을 내세운 김일성이 구심점이 되며, 인민군과 후방의 여성들이 혁명전사로 변모하는 것은 조국을 또다시 해방하려는 역사적 당위성으로 심화된다. 평범한 인물들 특히 여성들이 혁명적 각성을 통해 거듭나는 배후에는 김일성에 대한 충성이 근원에 있다. 연약한 여성들이 혁명전사로 변모할 수 있는 양상을 대비시켜 전후복구건설에서 인민들의 힘을 최대한 추동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정치적으로 반종파투쟁이 마무리되고 김일성을 핵심권력으로 하는 유일체제가 수립되는 것과 동시에 도시와 농촌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로 개조된 이후 인민들의 도덕적 풍모의 공산주의적 개조는 여러 모로 정권을 고수하고, 남한과의 군사적 대치 속에서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기 위해 혁명역사를 지속적으로 인민들에게 알리는 과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여전히 사유재산과 토지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소유자적 근성을 뿌리뽑고 노동에 대한 집단적이며 공산주의적인 태도를 형성시키는 과정에서 혁명역사 쓰기는 당에 무한히 충실한 공산주의적 인간들을 양성하는 당면과제였던 것이다.

김일성은 혁명전통 형상화를 통해 당에 대한 충실성의 정신을 교양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당성이란 당의 정책과 결정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모든 힘, 필요하다면 생명까지 바쳐 싸우려는, 당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성을 다하려는 그러한 전투정신을 가리켜 말하는 것으로 주장한다.⁴²⁾

이와 같은 주인공의 유형들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번째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여성 혁명가들—홍순철의 「어머니」의 어머니, 박팔양의 「눈보라 만리」의 정아 어머니, 「봄우리」의 봉녀 등—은 모두 지극히 평범하고 순박한 혁명가의 아내 혹은 어머니였던 존재들이다. 이들은 일제의 압제에도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남편과 가족 내지는 동지들의 투옥과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와 같은 상황을 계기로 혁명적 각성에

42) 김일성,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 p. 267.

이르게 되며 남편과 대등한 입장에서 혁명가로 변모하여, 남편이나 남편의 동지들은 곧 여주인공의 동지들이 된다. 이들은 모두 김일성이 있는 유격근거지를 지향하며, 김일성에 의한 민족해방에 대한 믿음으로 충실하다. 두번째 조국해방 전쟁시기의 여성 투사들—허우연의 「노래는 철쇄로 묶을 수 없다」의 어머니, 김정길의 「군자마을사람들」의 윤심, 리범수의 「들국화」의 순희—은 남편의 죽음으로 항일혁명투쟁에 나선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조국해방 전선에 나서서 싸우는 형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여기에서 김정길의 「군자마을사람들」의 윤심은 남편을 대신하여 기대를 운전하며 대포를 생산하는 것을 통해 후방의 전선원호에 대해 그리고 있다. 그 밖에 김태경의 「해녀의 노래」(1965)는 일제시대에 보리공출의 부당성에 항거했다는 이유로 북해도 탄광에 끌려간 남편이 생매장당했다는 소식에 소심하고 순박한 해녀인 영순이 지주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아들 인수를 김일성에 충성하는 혁명가로 키워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세번째 조국해방전쟁 시기의 인민군 전사들—신상호의 「련대의 기수」의 철주, 리범수의 「조국과 청춘」의 리수복 등—의 영웅적인 위훈이나 승리에는 수렁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조국에 대한 애국주의적 정신으로 점철되어 있다.

세부적인 이야기 구조와 에피소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유사하게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야기 구조에 스테레오형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스테레오형은 다양한 지배상황을 합법화하는 도구로 나타난다. 남한 및 자본주의 체제에 속한 인물들이 열등하고 몰락하는 이미지로 그려지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 고수하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 “한 사회에서 우월성-열등성의 이미지가 공표되는 것은 지배집단이 자신들의 위치를 유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 중의 하나”⁴³⁾로서 인민들의 순종을 정당화하기에 알맞은 이미지를 야기시켜 권력을 장악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2. 사회주의 낙원의 담론—천리마기수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전반에 이르는 시기는 사회주의의 본격적인 건설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 소련과의 관계 변화로 대내외적 긴장 속에서 정치적인 자립은 자립적인 민족경제 건설에 의해 세워질 수 있다는 주체사상이 대두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주체사상과 더불어 김일성 숭배가 고조되고, 전 사회의 군사화 경향이 가속화되었으며 전 인민에 대한 사상교양이 더욱 중

43) Sherif M. and Sherif C. W., *Social Psychology*(New York, Harper-Inter ed.. 1969), p. 277; Amossy, R., Pierrot, A. Herschberg, *Stéréotypes et Clichés: Longe, Discourse, Société*, pp. 70-71.

요시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민족자립경제 건설과 공산주의적 사상교양을 병행시킨 군중운동으로 천리마운동이 있다. 천리마운동이라는 대규모 군중운동을 통해 집단주의 원칙이 사상교양의 규범으로 확고히 자리잡아 가면서 집단이익을 우선시하고 당을 중심으로 주체사상과 유일체제를 확립해 갔다. 거기에 경제관리방법으로서의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 등을 실천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휴전 직후인 1953년 8월 5일 열린 당중앙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 보고문인 “모든 것을 전후 인민경제 복구건설을 위하여”가 채택되고, 이에 따라 토지를 국유화하는 농업협동조합 추진 및 사회주의적 개조사업들이 본격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복구돌격대운동 등이 전개되었지만, 군중들의 의식과 행동지표로 나타난 것은 천리마운동·천리마작업반 운동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노동이란 단순한 노력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개조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활용되기 시작한다.⁴⁴⁾ 즉 1956년 12월 당 전원회의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 속에서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고 개조하여 당주위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재능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⁴⁵⁾한데 천리마운동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전후 복구 건설이라는 정책방향은 노력동원을 통한 ‘최대한의 생산증대’와 이를 추진할 혁명적 정신으로서의 사상교양이 동시에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당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관철할 사상적 토대를 바탕으로 인민들의 노동력을 최대한 발현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구호가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이다. “물질적 부의 생산영역에서만 아니라 비생산부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을 포괄하여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 등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을 포괄”⁴⁶⁾할 만큼 전 분야에서 영향을 끼치게 된다. 1972년 사회주의 헌법에서 국가는 군중노선을 구현하며 청산리정신과 청산리 방법을 구현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김정일 시대에는 천리마운동을 계승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으로 대체된다.

천리마대고조 시기에 북한 주민들의 노동력을 최대한 발현시키고, 그들의 정치사상 교양을 통해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으로 고무시키기 위해 문학은 자신의 혁명적 무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그 중에서 서사시는 천리마기수들을 이 시대의 전형으로 채택하여 생산현장에서 위훈을 세운 노동

44) 김경웅, 「북한정치사회화론」, pp. 113-114.

45) 「김일성저작선집」, 3권, p. 101;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p. 1110 재인용.

46) 「철학사전」, pp. 548-549.

자들을 영웅으로 형상화하고, 그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 교양감화되도록 인민들에게 제시되었다. 천리마기수들은 1960년대 이후에도 따라 배워야 할 노동자들의 전형으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 왔다.

천리마 기수들은 빨치산으로 항일혁명투쟁을 한 전력이 있거나, 조국해방전쟁 시기 위훈을 세운 제대군인들로서 애국주의 정신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공산주의 사상을 선취한 인물들이다. 여기에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임무 앞에 모범을 보이는 이들은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건설되는 사회주의 국가는 희망과 낙관에 찬 유토피아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어떤 난관,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는 불굴의 존재들이다.

양키들을 때려 눕힌 것처럼 복구 건설에서도 / 조선 사람의 본때를 보여 줍시다! — / 오직 이 하나 / 그 이의 신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 우리는 이렇듯 첫 쇠물을 뽑지 않았더니!

— 손승태, 「불타는 용해장」 중에서

—100 년이 걸려도 / 조선은 다시 / 일어 서지 못 할 것이다 / 이것은 미국의 전쟁 상인들이 / 패배의 쓴잔을 나누며 / 마지막으로 찾은 위안의 말이였다. [...중략...] 해방 후 복잡한 시국 하에서 / 오직 김 일성 장군님을 믿고 / 그 분이 이끄시는 공산당을 따르며 / 건국 사업에 자기 한 몸 바칠 것을 다짐한 사람들

— 오영재, 「아메리카를 녹이라」 중에서

손승태의 「불타는 용해장」(1964)과 전동우의 「인간의 노래」(1964), 오영재의 「아메리카를 녹이라」(1966)에 나오는 노동자들은 모두 전쟁에 복무했던 제대군인들이다.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전후복구건설에서도 승리적으로 자신의 모든 노동력을 다 바치는 전사들로 표현되고 있다. 일체가 패망하면서 산업 기반 시설들을 모두 파괴해놓았을 때에도 제 힘으로 재건했듯이, 전후의 폐허에서도 여전히 인민의 힘으로 복구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가득차 있다. 이들의 신념과 불굴의 투지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에서 비롯된다.

그 누구의 지시도, 시킴도 아니언만 / 당의 부름에, 수령의 가르침에 / 제 할 일을 제 스스로들 찾아 / 서로 앞다투어 나서는 저들! / 사람이란 정녕, 어려운 고비에서 / 그 참빛을 나타내는 것인가?!... [...중략...] ...강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 / 이것이 없으면 쌀도, 비료도, 집도 세울 수 없소 / 사회주의 건설도, 조국 통일도 할 수 없소... / 그래서 강철 고지는 언제나 1211고지요 / 나는 당의 가장 믿음직한 전사들인 당신들이 / 반드시 이 고지를 지켜 내리라고 민소!... / / 조국에 더 많은 강철을! / 그 이의 심증을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었기에 / 하나 같이 그 이게 맹세 드린 것은 /

국가 계획 37만 톤 아닌 40만 톤!

— 손승태, 「불타는 용해장」 중에서

‘강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라는 구호는 김일성의 중공업우선정책을 나타낸다. 중공업우선정책은 “미래의 풍요와 자립을 위해서 오늘의 배고픔을 참아야 한다”는 식의 고통스러운 인내를 요구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⁴⁷⁾ 김일성은 1953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였고, <전후복구3개년계획>(1954-1956)에는 정책방향을 중공업우선과 농업·경공업 병진발전론을 제기하였다. 최창익은 중공업 중심의 전후복구건설 노선이 북한경제발전에 난관을 초래한다고 비판하고 인민 경제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의 확대생산을 위해 경제계획을 개편할 것을 주장하였다. 김일성은 반김일성 연대로까지 조성된 이들을 숙청하고 당정책으로 관철시켰다. 그리고 시에서는 당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들은 당을 영도하는 김일성에 대한 충성스런 모습을 지닌 천리마 시대의 영웅들이 된다.

침체와 주저를 알지 못하는 / 청춘의 일터여! 로동 계급의 집이여! / 너는
날에 날마다 이 땅 사람들에게 / 네가 만들어 보내는 그 제품보다도 / 얼마
나 더 크나 큰 것을 주고 있느냐!

— 전동우, 「인간의 노래」 중에서

천리마 시대의 영웅은 생산력 증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난관이 닥치더라도 주저하거나 침체에 빠지지 않는 전진하는 노동자들이다. 구체적인 생활의 육체적 고통은 목표달성 앞에서 힘을 잃는다. 전동우의 서사시 「인간의 노래」(1964)는 화자인 외과의사 ‘강성호’를 통해 노동자 ‘김영철’을 이야기한다. ‘김영철’은 기대 기사로서, 원인을 알지 못하는 합병증 때문에 다리를 절단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 결국 대퇴부에 박혀있는 “원추의 파편”이 원인으로 밝혀진다. 김영철은 노동자 신분 이전에 영웅적인 전사였던 것이다. ‘조국해방전쟁시기’의 부상으로 정상적인 노동자 생활을 하기 힘들었지만, 산업일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를 철저히 숨겼던 것이다. 여기에 감동받고 고무된 동료 노동자들과 의료진들은 모두 “가슴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된다. 그러나 김영철은 파편을 제거했음에도 정상적인 기대 기사로서의 이후 생활을 보장받기 곤란할 정도로 그 후유증이 심각한 편이었다. 김영철은 자신이 아직 회복 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호원과 주치의의 눈을 피해 가며, 자동화기계 설계도면을 몰래 작성하고 있었다. 이를 알아챈 군의관 출신인 외과의 강성호는 의

47)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p. 75.

사들과 간호원들이 자신들의 다리뼈를 조금씩 잘라서 김영철에게 이식하기로 한다. 뼈 이식의 개연성이나 합리성의 여부를 떠나 중요한 것은 어떤 육체적인 아픔에도 불구하고 조국에 충실한 노동자가 위대한 과업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이며 인테리 계급은 거기에 보조를 맞추도록 초점화되어 있는 것이다.

내 여기서 만난 이러한 영웅들 / 백이라 천이라 / 오, 우리의 속도 / 우리의
기적 / 그것은 우리가 / 백두 밀립의 행군로와 / 3천리의 모든 전호마다에서
떨친 / 영웅성과 대담성의 계속이래오, [...중략...] 그대 나의 인민이여 / 조
국 없으면 / 우리에게 청춘도 사랑도 없거니 / 이 때문 아니라 / 오직 그것
위해서만 / 우리 목숨 바꿀 수 있는 것은 // 조국 위해 다하는 / 우리의 진
심과 양심 / 꿰어 넘치는 충성으로 하여 / 그 어떤 침략자도 조선의 뉘을
정복 못 하리라

— 리백, 「하나의 길우에서」 중에서

리백의 「하나의 길우에서」(1965)는 시인이 열차 기행을 하면서 만나는 천리마 시대의 영웅적인 기적들을 읊고 있다. 과거와 비교할 때 새로운 낙원으로 그려지는 천리마 시대 북한의 모습은 그 재건의 힘이 바로 인민들에게 있으며, 인민들이 이룩해 낸 속도와 기적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위업과 기적은 모두 조국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며, 노동자의 애국주의에서 나오는 진실과 양심, 그리고 수령에 대한 충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천리마운동’은 소련의 ‘스타하노프 운동’과 중국의 ‘대약진운동’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 건설기에 벌어졌던 대중동원운동이라는 공통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소련과 소련의 대중운동이 지속성을 갖고 제도화되기보다 실패 또는 일시적 현상으로 귀결된 반면에 북한의 경우는 북한 인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생산과 정치에 귀속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⁴⁸⁾

천리마 시대의 노동자들은 어떤 난관이 닥쳐와도 오직 김일성만을 믿고 따르는 충성스런 인민들이다. 전후복구건설이나 천리마기수들은 모두 중공업 노동자들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들의 입을 통해 김일성의 중공업우선정책이 당위적으로 선언되고 있다. 오영재의 서사시 「아메리카를 녹이라」(1966)는 강선제강소에서 3명의 당원들의 영웅적인 전후복구 투쟁을 그리고 있다. 이들은 목숨으로 기계를 지키며 개인적인 비극에도 불구하고 전후복구에 혼신을 다한다. 반면에 경공업을 주장한 종파주의자들의 견해는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재석 아바이 오해하지 마시오 / 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요 / 우리가 전쟁

48) 류길재,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경제건설”, 「북한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3), pp. 44-45.

에서 이긴 것도 / 무장의 기술적 우세가 아니었소 / 사람에게 대한 배려— 이것은 / 조선 로동당의 가장 기본적 특징이요 / 우리에게겐 지금 용광로나 전기로보다 / 식량과 주택과 의복과 / 어린이들에게엔 신발과 연필이 더 필요하오
— 오영재, 「아메리카를 녹이라」 중에서

주인공 재석에게 ‘로동안전원’이자 ‘암해분자’인 태수가 건네는 말이다. 용광로를 복구하는 것보다 사실은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의식주가 우선이 아니냐는 의견을 슬며시 내놓는다. 우여곡절 끝에 전기로를 완성하여 화입식을 앞둔 시점에서 냉각 파이프에 슝장갑을 틀어막아 방해공작을 펴는 태수가 발각된다. 태수의 암해책동은 김일성의 중공업우선정책과 반중과주의자들의 경공업우선의 대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원과 아이들까지 건설현장에 동원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수의 ‘의식주해결 우선’에 시는 합리적인 대안점을 찾지 못한다. 중공업 우선 논리는 수령의 교시이기에 관철시켜야 할 뿐이다. 태수 또한 경공업의 중요성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관철시키기 보다 “암해책동”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부정성을 나타낸다. 결국 당정책으로 제시된 수령의 논리대로 주인공들은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중공업 중흥의 첫발을 내디딘다.

어제날까지 보습을 잡던 이 나라 순진한 농민들, / 어제날까지 기대를 다루던 로동하는 이 나라 사람들, / 그들의 소리 없는 분노 앞에서 / 그들의 불타는 심장 앞에서 / 3백년 침략의 력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패배를 맞본 / 녹슨 아메리카를 여기에 던진다. // 원쑤에 대하여 못다 갚은 피 맺힌 보복을 다짐하는 마음들이여! / 여기로 오라, / 썩어져 가는 아메리카의 조각들을 / 더 높이 무지라 / 불타는 하늘이 영원한 투쟁의 기폭처럼 비낀 / 조선의 하늘 높이 / 무저 올리라

— 오영재, 「아메리카를 녹이라」 중에서

전후복구 건설에 노동자들의 힘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미군의 깨진 탱크와 대포 잔해들, U.S가 찍힌 철갑모와 같은 파철 더미들을 용광로에 집어넣는 행위를 ‘복수’로 그리고 있다. 전후복구의 위대성을 미국에 대한 승리의 행위로 일컫는 것이다. 사실 전쟁에서 진정으로 승리하였다면, ‘못다 갚은 피 맺힌 보복’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전쟁 피해에 대한 대리만족 내지는 기묘한 자기합리화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곧 중공업 노동자들의 노동은 전쟁에서 전사의 승리와 같은 것이며, 가장 아름다운 행위이다. 여성의 모습을 묘사한 대목에서 평상복 차림의 여성이 그저 ‘평범’한 모습이라면, 작업복을 입고 기계앞에 있는 여성의 모습은 그 어떤 차림보다 늠름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

기름 뺀 작업복을 입은 그 품이 / 병원에서 처음 보던 그 때보다도 / 한결 더 의젓하고 림름하구나.

— 전동우, 「인간의 노래」 중에서

거리에서 만나거나 / 지어는 결혼식 들러리차림으로 나선것을 보아도 / 그렇게 돋보이지 않던 처녀애들과 / 별치 않던 녀인들도 / 기대앞에 선것만 보면 웬일인가 / 어느 한 곳 흠잡을데 없이 모두가 하나같이 / 다 그렇듯 곱고, 아름답고, 림름하고 / 머리 숙일 정도로 숭고해보임은. [...중략...] 그렇듯 로동이란 사람들을 / 순결하고 깨끗한것으로 만드는것인가! / 저도 모를 아름다움과 / 위대한 창조의 힘이 깃들어있음을 / 인간에게 깨우쳐주는 로동의 힘이여!

— 정문향, 「새 세대의 노래」 중에서

이들 여성 노동자들의 아름다움은 노동에서 비롯되며, 노동은 사람들을 순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자신도 모르는 아름다움과 창조의 위대한 힘을 자아내게 하는 근원이다. 이러한 노동의 힘과 아름다움은 또한 수령의 품속에서 태어나 수령이 영도하는 곳에서 땀흘린 새 세대의 아름다움이 된다. “생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것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강조되어야 “한들의 탁월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백만 근로자들의 투쟁”에 의한 대중적 영웅주의로 나타나야 한다. 천리마기수들은 “쾌활하고 락천적이며 난관앞에 굴할줄 모르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매우 강한 전형적인 새 인간”으로서 “헌신적 로동의 시련을 거쳐 마침내 성공”⁴⁹⁾해야 한다. 정문향의 「새 세대의 노래」(1970)의 주인공 ‘강철림’은 한국전쟁 때 기대 기사 아버지의 전사로 김일성의 은혜로 혁명유자녀학원을 졸업한 다음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아버지가 일하던 기대공으로 공장에 남기로 하면서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으로 제시된다.

위대한 수령의 전사들—항일혁명투사들은 / 한오리의 쇠줄과 한조박의 파철도 / 목숨과 바꾸어야 얻을수 있던 엄혹한 그날에 / 맨손으로 작탄과 총탄을 만들어 / 일제의 백만대군에게 죽음과 공포를 안기지 않았던가! // 위대한 수령의 사상이 심장마다 깃든 이 나라, / 자력갱생의 그 정신속에서 / 솟아나고 태어난 조선의 힘이여!

— 정문향, 「새 세대의 노래」(1970) 중에서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은 천리마 기수들이면서 이들은 곧 항일혁명투쟁 시기의 빨치산으로 소급되어 올라가는 공산주의자들이다. 북한의 혁명역사 만들기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모든 사회·역사적 근원은 항일 빨치산들이다. 노동

49) 김일성,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pp. 5-6.

자들은 항일 빨치산들의 정신을 따라 배우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낙관성으로 무장해야 한다. ‘인테리들은 로동계급으로부터 혁명정신과 조직성과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배우고, 로동계급은 인테리들에게서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수령의 교시를 관철한 결과 2년 걸리는 일을 4개월로 단축 완수한 임무는 바로 노동자들의 혁명이며 전투이며 충성이다.

기계-이것은 공업화의 기초! / 기계-이것은 사회주의건설의 밑천! [...중략...] 조선이여, 너는 더없이 행복한 나라여라. / 위대한 수령의 그 손길로 하여 / 너는 강대한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하였고, / 너는 순간의 세월속에 / 수백수천년을 뛰어넘었구나. // 아직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새 병진노선을 펼쳐들고 / 너는 장엄한 진군의 발구름소리로 / 지금 온 세계를 울리고있다.

— 정문향, 「새 세대의 노래」(1970) 중에서

김일성이 영도한 중공업우선정책으로 인하여 ‘강대한 사회주의 조국’이 되었음을 칭송하고, 경제와 국방의 병진노선으로 온 세계를 장엄하게 울리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1960년대 북한의 대외·대남 관계는 긴장이 고조되었다. 소련과 중국과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월남전의 미국 개입과 5.16군사쿠데타를 계기로 남한은 미국과 일본과 새로운 정치·경제·군사적 협력체제를 모색하게 되었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정치적 외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주노선을 천명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경제력과 군사력이 부족했다. 자주성을 유지하려면 인민들이 잘사는 것보다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김일성은 ‘4대군사노선’을 발표하여 전신체제에 돌입한다.⁵⁰⁾ 이 당시에 나온 것이 경제와 국방의 병진노선이었으나 사실상 군사 부분에 치중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지체현상이 가속화되었다. 곧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한 가운데 1967년 북한은 김일성 중심의 유일체제를 추구하면서 개인숭배가 극대화되는 주체사상의 시대로 돌입한다.

그러나 모든 당정책들은 인민들이 무조건적으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것으로 문학에서 형상화된다. 경제와 국방 병진노선으로 인한 경제적 폐해와 인민생활경제 기반의 지체현상은 문학에서 전혀 구체성을 얻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당정책과 수령의 교시 관철을 얼마나 열성적으로 혁명적 사상과 충성심으로 완수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당정책이 최대한 성공했을 때의 미래적 낙관만이 인민들에게 제시되었던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생산도 수령의 교시를 관철하려는 ‘새 세대’의 의지를

50)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서울: 을유문화사), 2000, p. 115.

꺾지 못한다. 주인공은 수령이 과업을 주기 전에 먼저 수령의 교시에 비추어 자신의 할 일을 생각하고 찾아내어 수령의 생각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미더운 수령의 전사로 그려지고 있다. 수령에 대한 혁명사상과 충성으로 무장한 ‘새 세대’의 ‘천리마 기수’들은 공산주의적 새 인간이며 성과적인 결과를 창출한다. 이들은 수령의 영도따라 ‘사회주의 낙원’을 건설하는 주체들로 제시되는 것이다.

김철의 「조국의 북변에서」(1960)에서 그려지는 한 협동농장원의 부엌은 “가지각색 사발과 접시들”과 “크고 작은 쌀독 장독이며 간장독”들로 채워져 소박하지만 의식주 모두에 있어 풍족하고 넉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수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조국에서 가능한 것으로, 주인공은 수령에 대한 흠모와 은혜로움으로 엄숙해진다. 미래의 풍요롭고 아름다운 유토피아는 ‘인민의 대가정’ 즉 수령과 당과 인민이 하나의 가족처럼 모두 단결되어야만 수립되는 낙원이다.

수령의 말씀 속에 싹이 트이고 / 아지를 치며 무성하게 꽃 피는 / 우리의
래일, 행복의 화폭이… // 아! 관곡의 초원에 뛰노는 말떼, / 백하의 동산에
무리짓는 돼지들, / 웅상에 구름처럼 흐르는 면양의 무리, / 부포에 떠도는
오리떼의 물결, [...중략...] 사람들은 서로 더욱 가까워지고 / 인민의 대가정
화목하리라! / 너와 나는 다 같이 모두를 위해… / 전체는 언제나 너와 나를
보살펴…

— 김철, 「조국의 북변에서」 중에서

곧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의 시적 변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김일성 체제 하에서 김일성과 당에 무한히 충직하도록 교육되는 전후 세대들의 미래가 ‘하늘 높이 솟은 궁전’이다. 그러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게 된 전후 세대의 미래는 ‘하늘의 별들도 부러워 할’ 희망찬 미래는 반복적으로 제시되면서 미래적 낙원을 당위성으로 인식하게끔 유도한다.

오늘은 토굴에서 너를 낳았지마는 / 래일은 하늘 높이 솟은 궁전이 / 너의
몸을 두둥실 받들어 올리리라 [...중략...] 복 받은 나라에 / 태여 난 내 아기
야 / 하늘의 별들도 부러워할 / 미래의 동산에서 너는 오래 살리라.

— 오영재, 「아메리카를 녹이라」 중에서

북한은 체제가 지향하는 정책들을 인민들 자신의 실천 담론으로 신념화시키게끔 미래의 공산주의적 낙원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한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담론적 실천을 통해서 당과 수령에 충실한 노동자로서의 역할에 돌입하게 되도록 중용되는 것이다. 그것은 현실적 바탕이 아니라 사상에 바탕하고, 개개

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전망 제시들의 효과가 문학 안에서 반복적으로 서술되기 때문이다. 문학적 반복은 독자의 고유한 판단을 대신하여 승인된 의견, 공유된 이미지에 동화되는 집단으로 유도한다. 이는 서사시 주인공인 천리마기수를 인민들 자신과 동일화시켜 내면의 실천담론으로 신념화시키도록 은연중에 요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개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으로 구현된 천리마기수가 집단의 단결력을 보장하면서 구성원들 대부분이 지배적인 스테레오형에 동조하게 되는 원리가 들어 있다.

“광명한 미래를 향한 근로자들의 아름다운 꿈, 근로자들의 노력적 위훈과 천리마의 대약진으로 힘차게 불러일으키고 있는 꿈, 김일성 원수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위원회의 현명한 정책과 정당한 령도가 천리마의 기수들의 가슴속에 안겨준 그 꿈이 더욱 진실하게 재현될 것을 요구”⁵¹⁾받은 서사시는 이와 같은 담론적 구조들이 체제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문학 안에서 형태를 부여받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정체성을 체제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신념의 체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게 된다. 문학을 통한 대중참여와 대중통제의 이중적 행사는 ‘인간개조’의 성과를 불러오고, 대외적 외풍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밥에 고기국, / 명주 옷에 기와집, / 자, 이제 우리는 모두다 부자, / 모두다 백만 장자 부럽지 않은 거요. //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해지면 / 인심도 그 만큼 너그러운 법, / 거기 인민의 원수들만 아주 없어진다면 / 그것은 틀림 없는 지상 낙원이지요! [...중략...] 그 분이 주신 말씀 하나 하나를 / 어서 이룩하고 아되는 것이 / 그 분께도 또 우리에게도 / 가장 긴요하고 보람찬 일이거니,

— 김철, 「조국의 북변에서」 중에서

김일성의 전언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 이 시에서 북한의 경제가 낙후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드러난다. ‘이밥에 고기국, 명주 옷에 기와집’을 갖게 되면 모두가 부자가 되어 백만 장자 부럽지 않은 낙원이 건설된다는 김일성의 경제 인식은 인민들의 의식주 해결에 머무르고 있다. 의식주 해결로 자립경제가 달성되었다는 인식은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 낙후의 결과를 초래했다. 천리마 시대의 동원체제들은 경제조직의 전문성보다 사상의 혁명성에 기반하였으며, 노동에 대한 실무적 보상보다는 명예나 신념 등의 강조에 의존하였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강

51) 한중모, “공산주의 교양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 창작 실천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p. 118.

도가 높아지는 노동에도 불구하고 생활 전반에는 나아지는 것이 없었고 결국에는 경제지체라는 현상이 도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3. 수령중심의 유일체제 담론—주체적 공산주의자

1970년대는 김정일에 의해 주체사상을 하나의 보편적인 원리로 제시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김정일은 1974년 2월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의 위원이 되면서 후계자로 공인되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이라는 익명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로 구체화되는 것은 김정일이 1980년대 당내 3대 권력 기구인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비서,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이후이다. 이 때부터 김정일 우상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북한은 1972년 1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으로 명명하면서 주체사상 체계에 입각해서 국가권력구조를 개편하여 김일성의 권력을 법적으로 더욱 확고히 다졌다. 1970년대 전체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해 김일성이 제기한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이후 김정일에 의해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으로 구체화된다.

3대혁명은 1975년 3월 3일 공업열성자회의 때 행한 김일성의 연설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치라」에서 체계화되었다. 3대혁명은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된 다음부터 공산주의 사회가 건설될 때까지 부단히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 1972년 사회주의헌법이 천리마운동을 강조했다면, 1992년과 1998년 수정헌법은 이를 삭제하고 3대혁명과 붉은기쟁취운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 시대가 개막됨에 따른 대중운동 형태와 방법의 변경을 뜻하는 것이다.⁵²⁾

3대혁명 수행의 원칙은 사상혁명을 앞세우면서 사상·기술·문화혁명을 통일적으로 밀고 나가는데 있다. 천리마 운동과 마찬가지로 인민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상혁명을 우선하는 것은 사회주의 교육전반과 언론·문예활동의 문화적 영역을 모두 포함하여 전 인민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해서이다. 대내외적 어려움에 봉착할수록 사상교양은 북한 체제를 존속시키는 문제와 직결되면서 더욱 강화되는 측면으로 나아간다.

1970년대 북한 문학은 주체사상을 기치로 내걸면서 수령에 대한 우상화가 극대화되던 시기이다. 수령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영도의 현명성’과 ‘위대한 품모’를 만들어나가 수령의 유일체제를 문학적으로 제시하던 시기였던 것이다.

52) 김정웅, 「북한정치사회화론」, p. 125.

1970년대 서사시는 거의가 수령형상창조를 중점으로 형상화되고 있으며, 그 외의 인물들은 서사를 이끌어 가는 주동인물이 아니라 수령의 위대성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다. 문학이 교조적이고 도식적으로 흐르면서 1980년대에는 김일성과 김정숙, 김정일 그리고 김일성의 부모에 이르는 ‘혁명가족’ 이상화로 확대된다.

1980년대 후반 동구와 소련의 사회주의 붕괴는 북한 체제유지 문제가 절박한 역사적 과제로 등장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좌절의 근본원인이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이해하지 못한데로부터 사회주의건설에서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기본으로 틀어지고 나가지 못한”⁵³⁾것으로 주장한다. 사상의 동요에서 비롯된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은 북한에서 사상혁명을 강조하게 된다. 사회주의 체제를 끝까지 고수하기 위해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일관성있게 견지”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사회는 사상이 생명”이기에, “사상혁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생명선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상혁명은 인간개조사업의 기본이다.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이며 인민대중의 의사를 체현한 최고뇌수”로서 “수령과 대중과의 관계는 혁명사상과 동지적 사랑으로 결합된 사회정치적 생명체 안에서의 혈연적 관계”로 규정된다. 사상교양의 기본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바탕으로 하는 혁명적 도덕관으로서, 김일성 한 개인에게 집중되는 방향지시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김정일이 내놓은 ‘조선민족제일주의’는 권력승계교양으로 직결되고 있다.

3대혁명소조는 “사상·기술·문화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풀 수 있도록 당,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과 근로단체일군들, 과학기술일군들과 청년인테리들을 망라한 큰 규모의 지도력량”⁵⁴⁾으로서, 주체시대 이후에 인민들에게 요구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으로 제시된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점차 행정기관, 문화단체, 각급 학교로 활동영역을 넓혀갔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키우는데 필요한 긍정적 덕목들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혁명적 도덕관 교양으로 귀착되고 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는 혁명적 도덕관으로 무장된 수령에 무한히 충실한 인물들이다. 서사시에는 이러한 위업들을 달성하는 ‘영웅’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들 영웅은 3대혁명소조원들이며, 대외적 외풍에서 북한 체제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친위대들이다. 이들은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소유자이면서 ‘혁명적 양심’을 지

53)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월 3일”, 「김정일선집 1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277.

54)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에 기초한 3대혁명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 74.

닌 존재들이다. 결국 정치사상 교양은 흔들림없는 체제유지 고수의 중요 방패로 작용하면서 긍정적 모범으로 인민들에게 제시된다.

오영재의 「대동강」(1985)과 장건식의 「지평선」(1986)은 모두 간석지개간을 비롯한 자연개조 사업과 관련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가 등장한다. 오영재의 「대동강」은 시인이 대동강을 편담하면서 인간의 자연개조의 위업을 노래하고 있다. 금성언제에서 남포갑문건설현장에 이르기까지 대동강을 인간에게 복종시키도록 개조한 현장들과 김일성의 사적지를 찾아가면서 인간의 자연개조 및 사회·사상개조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3대혁명의 실천덕목들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대동강! 대동강! / 너는 우리 수령님의 강 / 그이의 사랑처럼 끝없고 풍만한
강 / 하늘에 빌어도 못주던 물을 / 우리 수령님 주시었으니 / 그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하늘 / 강이여, 너는 그 하늘이 준 생명수

— 오영재, 「대동강」 중에서

인간에게 이롭게 개조된 대동강은 수령의 위대성과 중첩된다. 하늘도 못주던 물을 준 수령은 바로 하늘이 되며, 대동강은 ‘수령=하늘’이 준 ‘생명수’로 예찬된다. 대동강의 자연개조 성과와 수령의 위대성은 대동강과 관련된 과거와 대조되어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으로 연결된다.

서울의 한강도 / 여기 대동강과 / 한나라 한강토의 강인데 / 어찌하여 서울의
우리 혈육들은 / 큰물의 재난을 오늘도 겪어야 하나요 [...중략...] 서울에
홍수가 났다는 / 보도를 들을 때마다 /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해요 [...중략...]
내가 살던 도화동거리를 비치고 있었기에 / 집을 잃고 헤매는 / 파파늬는
할머니가 / 마치도 내 어머니 모습만 같았고 / 무너진 집에서 서까래를 뽑고
있는 젊은이가 / 그날에 두살자리 내 동생만 같았어요

— 오영재, 「대동강」 중에서

연풍관개관리소 지배인으로 있는 시인의 옛 전우의 부인은 서울에서 입대한 꼬마간호원 출신이다. 그녀를 통해 남한의 대홍수에 대한 북한의 물관리 시스템의 우월성과 통일의 논리를 펼치게 된다. 기행서사시의 형태를 보이는 이 시는 리택의 「하나의 길 위에서」(1965)처럼 시인의 행적에 따라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첨가된다. 「대동강」은 대동강과 관련된 자연개조와 수령의 위대성으로 초점화되면서, 통일에 대한 의지나 반일·반미·반제 등은 겉가지 이야기로 삼입되고 있다. 「하나의 길 위에서」가 유니버스식으로 특별한 서사줄거리 없이 시인의 시선에 포착된 이야기가 중심이 된다면, 「대동강」은 리택의 편담식 이야기에 수육과

명훈의 서사적 줄거리를 교직시켜 서사적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대동강」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대동강처녀’ 리수옥과 명훈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리수옥과 명훈이 서로 엇갈리게 되는 것은 명훈이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 혹은 ‘개인적 영웅주의’라고 할 수 있다.

대동강상류에 / 웅장한 언제를 우리는 세웠습니다 / 누가 세웠습니까 / 우리의 로동계급—건설자집단이 세웠지요 / 여기서 개별적인 타입공, 운전수, 신호공들... / 그들의 노력은 개별적으로 의의없는것 / 다만 로동계급의 위훈이라는 / 집단적의의속에 포함되고말지요 / 그러나 그것을 설계한 사람 / 그것을 책임지고 시공한 사람은 / 우리 나라 건설사에 그 이름이 남지요 / 그들은 개인적으로 의의를 가진 존재들이니까요 / 생각해보십시오, 그 누구든 / 사회앞에서 개인적으로 의의있는 존재가 되고싶은 / 그런 욕망이 없겠는가를 / 또 그 욕망을 누가 나무랄수 있겠는가를

— 오영재, 「대동강」 중에서

수옥과 명훈의 갈등은, 사실 북한 주민들과 체제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 물질적 토대와 사회적 토대에 있어 집단주의가 위기를 겪는 1980년대를 엿볼 수 있다. 서사시는 명훈이 수옥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인민들도 체제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도록 요구한다. 북한에서 개인의 욕망은 사회와 집단의 거대한 틀 속에서 의미를 지닐 수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 명훈이 생각하는 삶의 질은 건설 현장에서의 고된 노동보다 도시의 시간 많고 깨끗한 직장에 있다.

우리 나라는 로동계급의 나라 / 우리의 사회는 / 로동계급의 도덕으로 지배되는 사회 / 동무가 지향하는 우리의 이상적인 가정이 / 로동에 대한 회피로 하여 얻어진것이라면 / 우리 로동계급에 대한 모독이고 / 우리는 사회도덕의 위반자로 될거예요 // 한생을 그 자책속에서 / 나는 살수 없어요 / 비뿌리고 바람부는 이 건설장에서 / 신성한 로동속에 자기를 바치며 / 내 한생의 앞길을 / 깨끗하고 성실하게 / 내 힘으로 열어가고싶어요

— 오영재, 「대동강」 중에서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동물의 사회라면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북한이라는 사회는 ‘참다운 인간의 사회’임을 끊임없이 ‘수옥’의 언술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노동의 참다운 기쁨과 노동계급의 도덕성에 대한 수옥의 역설은 북한 체제가 인민들에게 요구하는 관념화된 의식이다.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줄이려는 북한의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도·농간의 격차는 날이 지날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인민의 구체적인 생활에서 농촌 출신 배우자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났고, 북한은 「도시처녀 시

집와요』와 같은 가요를 통해 농촌이 도시처럼 살기 좋은 곳이라고 선전하기까지 한다. 현장에서 고된 노동에 복무해야 하는 노동자와 농촌에서 일하기를 꺼려하는 젊은이들에게 북한이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체계로서 물질적 보상이라기 보다 ‘도덕’과 같은 이념성으로 채무장하게끔 독려한다. 천리마 시대까지는 혁명적 이념성과 사상성으로 개인적 결핍을 보상할 수 있었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이념성이 개인의 현실적 욕망 제어에 어느 정도 곤란해지지 않았나 보여진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갈등은 장건식의 「지평선」(1986)에서도 중요한 갈등선 중 하나로 작용한다. 간석지를 개간하기 위해 사자섬에 온 제대군인인 세 젊은이는 당이 바라는 초소, 어렵고 힘든 일터로 가는 것이 청춘을 값있게 사는 길이라고 믿고 간석지로 왔다. 이 중에서 세림이는 놀기 좋아하고, 편한일을 찾으려 하면서 어머니의 독촉과 지배인으로 일하는 아버지를 구실로 도시에 갈 궁리를 한다. 세림의 개인주의는 다른 주인공들에게 ‘역겨움’을 자아낸다. 거기에 도시에서 교원으로 있는 진호의 애인 ‘은희’는 진호의 권유로 섬에 왔으나 견디지 못하고 도시로 떠난다. 그러나 진호는 흔들리지 않고 자연의 폭압 앞에 무력한 인간의 힘과 지혜를 무한대로 끌어올려 제방건설의 혁신안들을 내놓는다.

간석지 개간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진호에게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쌀은 곧 공산주의다”라는 수령의 ‘위대한 구상’을 성취하는 일이다. “인간들의련애는 반드시 혁명위업의 숭고한 목적에 복종되어야 하며 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⁵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령의 교시는 곧 자신의 과업으로 내면화시켜 실천하는 젊은이들이다. 개인주의자 세림 외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는 직장장의 보수적 태도 또한 시에서 부정성으로 형성된다. 3대 혁명 중 기술혁명은 근로자들의 머리 속에 남아 있는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를 없애고 사회주의적 노동규율을 지키고 집단주의 정신을 키우는데 영향을 준다고 한다. 기술혁명은 과학기술 수준을 높여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뿌리뽑고 모든 사업에서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견지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⁵⁶⁾ 진호의 혁신안에 부정적인 보수적인 직장장이나 개인주의자 세림은 지칠줄 모르는 노동에 대한 열정과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기술 혁신안 개발에 나서는 긍정적 주인공 진호에게 감화되어 변모한다.

그 어떤 힘이 저들에게 / 열번 실패하면 / 백번다시 일어서는 / 저 역센 의

55) 김일성,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 p. 7.

56)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에 기초한 3대혁명리론」, p. 151.

지를 키워주었던가 // 당이 바라는 일이라면 / 불속에도 / 물속에도 뛰어드는
청춘들 / 조국의 광활한 지평선을 향해 / 락망을 모르는 청년건설자들
— 장건식, 「지평선」 중에서

주인공은 어떤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억센 의지의 소유자들이다.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좌절도 낙망도 모르고 뛰어드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이다. 이들의 힘과 의지의 근원은 수령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향한 이들의 충성심은 자연개조에 임하는 노동자들의 힘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의지의 근원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 바로 동무들과 같은 / 청년건설자들을 믿었
기때문에 /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을 / 확신성있게 결심했다고 치하해주시
였소!》 […중략…] 아, 은혜로운 그 품 / 그토록 힘을 주고 / 지혜를 주고 /
등을 밀어 높이 떠안아 세워주고도 / 그 영광 고스란히 안겨주는구나 […중
략…] 주체시대가 펼쳐놓은 새땅과 함께 / 새세대 새 인간들이 태어난 지평
선 / 당을 따라 / 끝까지 걸어갈 /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로 뭉쳐진 / 충성의
대오가 태어난 지평선이여!

— 장건식, 「지평선」 중에서

1980년대 서사시에서는 김정일이 김일성 대신 ‘실무지도’를 하거나, 수령 대신 ‘전화’를 걸어 노동자들을 치하한다. 수령-김정일의 치하는 힘든 노동에 대한 보상이며, 자신들의 충성심에 대한 ‘은혜’이다. 오영재의 「대동강」에서는 대동강 본류의 중요 도시 중 하나인 순천의 리수복 영웅 생가와 김정일의 일화가 등장하여 김정일의 인민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풀어놓는다. 1980년대 김정일이 인민 속으로 지도자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문학으로 편입되는 과정은 서사구조에서도 김정일이 결정적인 클라이맥스 부분을 장식한다거나, 어려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식으로 형상화된다. 김정일이 ■■주체문학론■■에서 수령과 대등한 위치에서 후계자를 그려야 된다는 ‘수령형상창조’에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

5천년을 기다려 / 나라가 처음 맞은 위대한 수령님 / 그렇게 위대한 또 한
분을 / 반세기도 못 이르러 다시 모셨으니 / 조선은 한 하늘에 / 해와 별 함
께 빛나고 / 우리는 한 세대에 / 영명한 두분의 령도자를 모신 인민 / 강이
여, 너의 흐름도 / 이 영광을 가득 안고 출렁이는가

— 오영재, 「대동강」 중에서

대동강을 돌아 다시 평양에 돌아온 시인은 당중앙청사를 바라보면서 생각해 되는 “당중앙의 집무실”, 거기에 “조국의 어제와 오늘 무궁한 래일을 한몸에

다 안고”있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가 있음을 감격스럽게 노래한다. 노동계급의 집단의 힘으로 건설된 대동강 언제와 갑문들, 인민의 위대한 힘이 사회의 기반이며, 창조의 원동력, 역사의 큰 줄기임을 시는 말하고 있다. 대동강의 개조는 또한 수령의 위대성의 구현이다. 해방 이후 수령의 ‘위대한 예지’로 대동강 언제 건설 지역을 미리 구상한 수령의 뜻은 김정일이 10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는 ‘지도력’으로 실현된다. 곧 대동강은 수령의 위대성이며 김정일의 수령에 대한 충성과 위대성으로 결과되고 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갈등이나 도시와 농촌의 갈등은 문학 안에서 이상적으로 해결된다. 강립석의 「땅의 노래」(1991)는 김일성의 ‘사회주의 농촌테제’ 이후 도시 이상으로 살기 좋아진 농촌을 이야기하고 있다. 주인공이자 시인인 석민은 고향 친구 만준에게서 농장에 세울 수령 헌시비에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귀향한다. 시인은 예전과 달리 놀랍게 변한 고향의 모습에 감격한다. 빨간기와집들과 하얀 벽체들, 뒷동산의 과일나무 능선들이 풍요롭게 늘어서 있고, 과거 일제시대 자신이 살던 “...닭도 강아지도 / 마구 넘나들던 수수깡울바자 / 땅에 닿은 추녀 / 깨진 물동이 엮어놓은 굴뚝 / 아궁으로 쥐구멍으로 쏟아나오는 난내 / 눈물범벅이 된 어머니 /부지깡이 두드리던 그 집”은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농촌이 크게 전변된 이유는 김일성의 ‘농촌테제’덕분임이 드러난다.

김일성이 제기한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첫째원칙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수행하는 것, 둘째원칙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도와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및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 셋째원칙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연계” 등으로 시에서 그대로 요약되고 있으며, 테제를 받들고 그대로 하면 농촌이 사회주의완전승리로 가는 길임을 선언하고 있다. 농촌테제는 수령의 농촌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등장인물들은 수령의 교시를 절대적인 당위성으로 수행한 결과 현재의 농촌의 변모가 이뤄졌다고 입을 모은다. 거기다 농장의 말썽꾼이자 이기주의자인 ‘동네오촌’이 사상혁명을 거쳐 집단주의자로 돌아와 인간개조가 이루어졌음을 말한다.

아니야, 지금은 사람이 달라졌어 / 농장 30년에 사람이 달라졌다니까 / 리기주의도 안하고 난봉도 안피우고... / 사상혁명이 뭔고했더니 / 탄사람을 만들어놓았다니까... [...중략...] 그것이 바로 테제가 요구한것 아닌가? / 기술혁명 문화혁명에 / 앞서야 했던 사상혁명 / 우리의 농민들을 / 노동계급의 모양으로 개조하는 사상혁명 // 그 누가 / 낡은 사상의 울타리에 얽매었던 / 어제날의 우리 동네오촌을 / 사회주의의 밝은 대지로 끌어냈는가

— 강립석, 「땅의 노래」 중에서

시는 반복적으로 농촌에서의 3대혁명이 어떻게 완수되고 있는가를 말한다. 농촌의 집집마다 신문잡지 들어가게 하고, 농민들이 보는 책은 문장도 쉽게 쓰고 활자도 크게 하라는 수령의 지시로 농민들이 당당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성장한것을 말하면서, 농민의 사상혁명은 몇 만 톤의 알곡에도 비길 수 없는 크나큰 것으로 표현한다. 3대혁명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며 선차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 사상혁명이다. 시는 ‘동네오촌’을 통해 사상혁명이 이루어졌고, 이기주의에서 집단주의자가 되어 주체형의 혁명가로 성장하였음을 말한다. 북한의 언어정책은 철저하게 인민성에 기초하고 있다. 권력이 장악한 언어를 통제하여, 체제가 요구하는 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는 인민의 눈높이에서 언어를 활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북한은 정권수립 이래 자연·사회·인간 개조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중에서 인간개조사업을 가장 중시해 왔다. “인간개조사업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지 않고서는 자연개조사업과 인간개조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높은 속도로 전진시킬 수 없다”⁵⁷⁾는 김정일의 지적은 ‘인간개조’ 즉 사상개조를 통해 공산주의적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사상혁명과 마찬가지로 농촌에서의 기술혁명은 트랙또르를 비롯한 기계식 농장경영으로 말해지고, 문화혁명은 농촌에서의 ‘수도’설계로 설정되고 있다. 부엌까지 수도가 들어온 것은 또한 수령의 사랑때문이다. 그리고 시는 새로운 사업 ‘분수식발판개’ 사업이 완수되어 농촌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노래한다. 3대기술혁명의 성과적 수행은 인민경제의 지도적 부문으로서 공업, 특히 중공업의 기술혁명을 우선적으로 수행한 다음 농촌기술혁명을 실현하여 농업의 공업화와 현대화를 이룩하는 것으로 꼽고 있다.⁵⁸⁾

수령님 구상하신 바로 그대로 / 수령인 령도하신 바로 그대로 / 땅도 풍만한 가슴을 헤치고 / 씨앗마다 행복의 열매를 무르익히는 / 우리의 농촌! // 당이 하라는대로 하면 / 안되는 일이 없다는 / 참된 진리의 금언을 / 생활의 철학으로 삼고사는 우리 고향 // 당도 우리의 당이 제일이고 / 사회주의도 우리의 사회주의가 제일이라는 / 허물수 없는 긍지와 자부름 / 생활의 신조로 삼고사는 우리의 고향!

— 강립석, 「땅의 노래」 중에서

수령이 영도하는 그대로 인민이 절대적으로 관철시키면 ‘씨앗마다 행복의 열매’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당-수령의 명령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이기

57) 강운빈, 「인간개조리론」(「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6」,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1-2.

58)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에 기초한 3대혁명리론」, p. 149.

에, ‘우리 당이 제일’이고 ‘우리 사회주의가 제일’이라는 ‘조선민족제일주의’로 연결된다. 사회주의권의 붕괴 앞에서 북한이 내놓은 체제유지 방법은 ‘우리식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견지와 망한 나라의 사회주의와 다르다는 우월성이 동시에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다.⁵⁹⁾ ‘우리식’은 또한 북한 전반의 사소한 생활규범과 행동양식 및 체제문제를 규정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다.

노동자, 농민들의 혁명적 수령관에 입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거듭나는 동안, 과학자들과 같은 인텔리들은 ‘과학자의 혁명적 양심’을 가지고 애국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한원희의 「삶은 어디에」(1991)는 그러한 과학자의 양심을 그리고 있다. 이 시에서는 본격적으로 김정일 형상이 나오면서 모든 위기 상황에 돌파구를 열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정일이 부여한 과제를 성공했지만, 주인공은 최종시험공정에 생겨났던 유독성 가스와 폐설물에 마음이 쓰인다.

아니다, 이것은 빛나는 성공의 열매 / 나라에 주는 리익이 백이라면 / 그 해
로움은 하나에 불과한것 // 허나 맑은 양심에 / 하나의 티라도 없어야 하듯
/ 우리 당에 드리는 기쁨은 / 순결무구한것으로 되어야 하리

— 한원희, 「삶은 어디에」 중에서

주인공 최민철 지배인은 결과가 아무리 성공적일지라도 국가에 유해한 결함은 곧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 왜냐하면 당 정책을 관철하는 것은 결과 자체가 아니라 순결무구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시에 등장하는 인텔리들은 자신의 과학자적 양심을 고수한다. 보수주의자와 관료주의자, 개인주의자 등이 등장해 주인공의 양심 지키기와 갈등을 유발하지만, 결과적으로 과학자의 혁명적 양심은 당과 수령의 보호로 지켜지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조국에 대한 깨끗한 양심없이는 / 그 누구든 과학을 탐구하지 말라 / 그것
없이는 작은 난관앞에서도 무릎꿇고 / 설사 그 어떤 성공을 보았대도 / 그
것은 조국의 영광우에 / 자신의 공명을 올려놓는것이니 // 조국에 보탬을 주
는 창조만이 / 과학자의 양심이고 애국심 / 나에게 그것이 있는가 / 그대의
가슴에 그것이 고동치는가 / 서로 묻듯 서로 마주보는 눈빛들 // 그러자 그
눈빛들은 빛난다 / 나는 조국을 사랑한다고! / 조국의 미래를 사랑한다고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뜻을 안고 / 우리는 그것을 기어이 완성하리라고!

— 한원희, 「삶은 어디에」 중에서

과학자의 양심은 조국에 대한 양심이며 애국심이다. 그것은 곧 수령에 대한 충성이며, 지도자동지의 뜻을 받들어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이다. 1990년대를 전

59)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정일선집 1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40-80.

후해서 체제 이완을 불식시키고 혁명적 수령관으로 무장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를 배태시키기 위해 인민들의 양심과 혁명적 의리로 체제를 고수하기 위한 의도이다. 김정일 시대로 일컫는 1990년대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더불어 북한 체제 위기가 심각하게 대두된 상황에서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가 출범했다는 특징이 있다. 구세대인 혁명세대가 퇴장하고 신세대가 전면에 등장하는 이 시기는 1994년 김일성과 사망과 함께 정치사회적 위기와 경제적 위기가 더욱 심화되었다. 1990년대를 전후해서 김정일의 혁명역사를 서사시로 형상화한 「향도의 해발을 우러러」가 총서형식으로 대량 출간되었으며, 항일혁명투쟁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의 혁명투사들은 ‘혁명적 양심’과 ‘혁명적 지조’를 어떻게 지켜 자신의 공산주의적 신념을 고수했느냐가 서사시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수령에 대한 충성심은 곧 어떤 난관과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자신의 공산주의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린다. 이들 혁명투사들은 리범수의 「조국과 청춘」(1989)에서 1211고지를 목숨으로 사수한 리수복에 대한 서사시적 재조명과 「들국화」(1996)에서 김정숙의 넋을 본받아 혁명가의 지조를 지켜내고자 한 여성투사 순희의 이야기, 한때 북한에서 ‘리인모 영웅 닮기’ 운동의 주인공을 형상화한 리호근의 「뜨락에 딸기 무르익을 때」(1994) 등을 통해 신념을 지키는 양심과 지조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

리범수의 「조국과 청춘」(1989)은 북한에서 1956년에 연극 「리수복영웅」이 만들어진 이후 리수복이 목숨으로 사수했다는 ‘1211고지’는 유화와 반경화 등으로 제작되는 등 리수복의 영웅적 위훈을 충성과 조국애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사시 「조국과 청춘」은 그런 리수복의 용맹스런 위훈을 동창생이자 군의관인 유정아와의 애정선과 ‘화선시인’ 리수복의 낭만적인 정서로 펼쳐고 있다. 주인공 리수복은 조국이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1211고지에 가지고 온 ‘솔나무’는 언제 어디서나 수령만을 생각하는 충정의 상징이다. 1947년 마을에서 있었던 선거장을 방문했던 수령이 자신이 만들었던 선거장 솔대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것으로 하여, 수복은 소나무를 보면서 언제나 ‘장군님’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곧 소나무는 수령으로서, 리수복의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표상하는 것이며, 충성의 절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리수복은 또한 시에서 개인적인 공명심이나 영예가 아니라 집단주의적 정신을 지닌 ‘인민군’의 전형으로 등장하고 있다.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지 않고 공명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리수복은 전투에 임함에 있어 한치의 양보도 없다.

정아도 <백두산>을 읽었지? / 철호와 꽃분이를 알지? / 우리도 그들처럼 싸우자구! // 나는 <철호>처럼 / 정아는 <꽃분이>처럼 / 그래서 장군님 찾

아주신 / 아름다운 금강산을 지켜 / 아름다운 이 조국을 지켜 / 우리의 청춘을
바치자구! [...중략...] 이젠 내 할일을 알았습니다 / 1211고지를 넘려하시
는 / 장군님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그 길에 / 나의 청춘을 바치렵니다 / 그
길에 청춘의 행복과 희망이 있고 / 그 길에 청춘의 이상이 꽃피고 / 그 길
에 청춘의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 리범수, 「조국과 청춘」 중에서

리수복은 조기천의 서사시 「백두산」에 등장하는 철호와 꽃분이처럼, 조국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는 것이 조국 앞에 자신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조국을 지키는 것은 곧 수령의 근심을 덜어주는 것이며, 이는 자신의 충성심의 표현이다. 그리고 자신의 청춘의 행복과 희망과 이상과 보람 그 모든 것이 조국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선 조국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1211고지를 지키기 위해 돌격조로 나선 수복은 자신의 몸을 던져 ‘원췌의 화구’를 막아내 1211고지를 사수한다. 개인적 공명을 앞세우기 보다 겸손하게 집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보다 조국을 우선시하는 리수복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이 인민들에게 요구했던 방향성을 표지하고 있다. 혁명적 수령관으로 무장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는 수령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들의 신념은 ‘혁명적 양심’과 ‘의리’로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 표출된다.

리범수의 「들국화」(1996)는 한국전쟁 당시 혁명가 남편의 전사로 유격대의 여전사가 된 순희가 ‘영생의 언덕에 꽃처럼 피어/아름다운 향기 풍기는/렬사’로서 영생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오직 김일성에 대한 충성과 김정숙처럼 혁명가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순희는 김정숙이 준 ‘들국화 비단 이불보’를 상징처럼 잘라서 몸에 두르고 다닌다. 들국화 이불보는 김정숙과 순희의 혁명가적 양심과 신념을 잇는 고리가 되고 있다. 반면에 예전에 함께 활동했던 동지 영란은 오히려 경찰국의 사찰과장의 후처가 되어 혁명가의 신념을 버리고 향락과 퇴폐에 물들어 살고 있어, 이 둘의 삶의 양상을 대조시키고 있다.

내 비록 목숨은 버리어도 / 장군님 뜻으로 날을 버리고 / 너사의 사랑으로
빛을 뿌리는 / 내 운명의 보호자 / 내 신념의 이 보검만은 / 꺾이지 않으리
라 맹세다지며... [...중략...] 들국화 만발한 언덕을 걸으시며 / 생각에 잠기
셨던 김정숙녀사 / 순희에게 뜨겁게 말씀하셔라 / 《나는 순희동무도 / 깨끗
하고 소박하면서도 / 언제나 싱싱한 들국화처럼 / 역세계 피기를 바래요 /
혁명가의 지조를 지킬줄 아는 /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래요!》

— 리범수, 「들국화」 중에서

유격대 활동 중 잡힌 순희는 혁명가의 양심과 신념을 지켜 미래적 전망과 ‘영생’이 보장된 반면, 자신의 신념을 버린 영란은 몰락하고 파멸하고 만다. 혁

평가적 양심과 신념은 순희가 들국화 이불보를 잘라 자신의 딸에게 남기는 ‘꽃리봉’처럼 대를 이은 충성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순희는 손가락을 깨물어 “김일성장군 만세”를 벽에 쓰고 자살한다. 세월이 흘러 순희의 자녀들이 김일성의 배려로 혁명유자녀학원에서 장성하여 자신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김일성을 방문하자, 김일성의 입을 통해 대를 이어 충성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오늘도 영광스러운 시대이지만 / 김정일동지가 이끄는 / 래일은 더욱 찬란하고 / 끝없이 룡성변혁하는 시대로 / 길이 빛나라 온 누리에 / 길이 빛나라 세기를 넘고넘으며... // 최고사령관동지를 잘 받들어 / 조국통일위업에 앞장서라고 /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해야 한다고 / 뜨겁게 이르는 그이의 당부

— 리범수, 「들국화」 중에서

목숨으로 지켜낸 순희의 혁명적 신념은 곧 그 자녀들에 의해 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수령에 대한 충성은 수령의 후계자인 김정일에 의한 내일로 ‘대를 이어 충성’해서 ‘조국통일위업’과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해야 한다고 이르고 있다. 김정일의 후계 체제는 김일성의 유훈처럼 제시되어 모든 인민은 김정일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 리호근의 「뜨락에 딸기 무르익을 때」(1994)는 공산주의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비전향 장기수에 대해 그리고 있다. 1993년 3월 19일 북한으로 간 이인모는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11부에서 13부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민족과 운명」은 남한에서 출생하여 살아온 사람들의 친북 성향 및 월북 사실을 그리면서 남한 사회현실을 비방, 풍자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김정일은 이 영화가 주제적 문예사상과 주제적 인간학을 훌륭하게 구현한 작품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김정일이 직접 명명하였던 가요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영화 첫머리에 쓰도록 한 것으로 보아, 「민족과 운명」 시리즈는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표방하고 있다.⁶⁰⁾

북한 주민들을 긍정적 모범으로 감화시키기 위한 ‘숨은 영웅 따라배우기’는 다양한 분야에서 영웅을 설정한 다음 그들을 따라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긍정적 모범으로 감화시키는 것은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에게 참된 투쟁과 생활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귀감”⁶¹⁾이라고 강조되고 있다. 북한은 “리수복 영웅을 본받자”라던가,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 등을 통해 전

60) 이명재 편, 「북한문학사전」(서울: 국학자료원), 1995, pp. 452-453.

61) 김일성,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1977년 9월 5일 발표”, 「사회주의 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8, p. 48.

사회적으로 ‘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를 조장한 바 있다. 「민족과 운명」시리즈 영화감상회를 비롯해 독서회와 같은 ‘영화실효모임’을 통해 “이인모 동지와 나”, “이인모 동지처럼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식의 교양사업을 펼쳤다.⁶²⁾

리인모로 말하면 34년 동안이나 / 옥중에서 조국을 위해 싸운 전사이다. / 아무리 정세가 긴장하고 / 준전시상태라고 하여도 / 리인모를 데려와야 우리가 / 혁명동지에 대한 / 의리를 지키는 것으로 된다. [...중략...] 혁명가들에게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 / 혁명가들에게서 의리는 /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 리호근, 「뜨락에 딸기 무르익을 때」 중에서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를 북한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말하는 김정일의 말에는 “사상이 생명”이며, “사상혁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생명선을 놓치는 것”⁶³⁾으로서, 3대 혁명 가운데 사상혁명의 중요성을 체제 위기 앞에서 다시 천명하는 것과 연결된다. 북한 사회는 자연적 생명이 아니라 수령이 주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더 중요시하여 대내외적으로 변모하는 흐름에서 인민이 부유하지 않게끔 견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유교적인 천륜 관계를 가부장적 이념에 잇닿아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인 수령과 인민의 관계는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결합으로 강조된다.⁶⁴⁾ 결국 변화하는 대외적 정세 속에서 수령이라는 개인숭배 양식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는 세계변화와 북한 주민들의 이완되기 시작한 의식의 틈새를 완전히 메꾸기는 힘들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3.4. 북한 문학의 통일담론

북한은 해방 이후부터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침략적 군사기지이다. 미제는 남조선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완전히 예속시켰다”⁶⁵⁾고 규정해 오고 있다. 북한은 또한 미제와 결탁한 지주·예속자본가·반동관료배들을 한편으로 하고 노동자·농민·도시부르주아 및 민족자본가들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둘 사이의 모순이 남한 사회의 기본 모순이라고 설정하면서, 거기에 민족적 모순과 계급적 모순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한의 통치기구는

62) 김경웅, 「북한정치사회화론」, p. 129.

63)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월 3일”, 「김정일선집 12」, p. 291.

64) 신인철, 「북한주체철학 연구」(서울: 나남출판), 1993, pp. 289-290.

65) 「정치사전」, p. 211.

“미제의 식민통치를 가리우기 위한 병풍”이며, “괴뢰정권”은 “지주, 대판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반인민적 정권”⁶⁶⁾으로서, 북한에 의한 민족해방과 혁명을 통한 남한에서의 공산정권 수립을 목표로 추구해 왔다.

해방 이후 대두된 초기의 ‘민주기지론’ 이후 1964년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3대혁명역량 강화’가 채택된 이후 1970년 제5차 로동당대회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 공식채택되었다. 단계적인 지역혁명론을 내세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은 한국전쟁 이후 분단이 장기화됨으로써 무력을 앞세운 적화통일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1960년대 북한은 ‘4대군사노선’을 통해 준전시체제에 들어가 국방비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가시켜 사실상 경제지체현상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북한이 내세운 ‘민족대단결론’은 1972년에 채택한 남북공동성명에서 처음 거론되었다가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 김일성이 ‘조국통일 5대방침’에서 다시 거론된 것이다.

정책적으로 북한이 통일노선의 명칭을 바꿔오긴 했으나, 민족적·계급적 모순과 대립을 해소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주적으로 규정되는 미국과 남한 사회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지속성을 지니는 면이 있다. 민족자주와 10대강령, 그리고 민족대단결 5대방침 등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통일과 단합’이다. 게다가 북한이 민족적 동질성을 내세우면서 반미와 남한의 반정부투쟁을 선동하는 이중성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하나의 평양이 있듯이 / 우리에게겐 하나의 조국이 있을 뿐 [...중략...] 쪽박
 차고 쫓기여 가던 / 눈물의 고향길 우에 / 얼마나 오랜 세월 / 우리 저마다
 뽀뽀이 헤여져서 / 돌아 올 수 없었던가 [...중략...] 오, 우리의 이 길 끝나
 지 않았다 / 잡초 우거진 길 저 쪽에선 / 오늘도 피가 흐르고 / 눈물이 흐른
 다 // 자유와 / 해방 / 통일과 / 독립 / 가자 북으로! / 오라 남으로! [...중
 략...] 남으로! / 남으로!

— 리백, 「하나의 길 위에서」(1965) 중에서

‘잡초 우거진 길 저 쪽’으로 형상화되는 남한은 오늘도 ‘피가 흐르고’, ‘눈물이 흐르’는 곳이다. 반면에 시인이 기행에서 만나는 북한은 자유와 해방이 있는 곳이다. 실제적으로 북한 정권이 인민들에게 통일전략으로 제시하는 이미지들은 감정에 기반하고 있다. 통일노선을 방해하는 주적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정권’에 향하고 있으면서, 그 아래 억압으로 신음하는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동정을

66)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 37.

통해 혈육의 정이나 분노와 적개심, 복수심으로 점철되는 적대감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북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동시에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적화통일애의 정당성을 이미지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휴전 이후 전후복구건설에 치중했던 북한이 통일문제에 다시 눈을 돌리는 1960년대는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한 때이다. 경제건설의 성과에 따른 자신감과 남한의 1960년대 초 정치적 격변에 자극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에 쓰여진 서사시가 심해진의 「4월의 아들」(1966)이다.

「4월의 아들」은 4.19에 참여했던 대학생 남훈이 감옥에서 만난 사형수에 의해 공산주의자로 각성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시에서 풍자적으로 묘사되는 남훈의 모습은 북한의 대인민 선전전략으로서 혁명과 조국통일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1년 열 두 달 피땀을 흘린 후 / 부모 처자 거느리고 공손히 내여 민 / 기름
 때가 배이고... 돌밭에 닳아진 / 삭정이 같은 그들의 손'바닥 우에 / 이 <조
 국>은 없어 주었소 / 칩뿌리와 나무 껍질과... 꿀꿀이 죽만을... / 그리고 씌
 워 주었소 낮은 판자 지붕들을 // 그러나 그들의 피땀을 짜서 놓고 먹는 무
 리들은 / 비 새는 지붕 아래서 자식들을 데리고 / 백성들이 칩뿌리를 씹고
 있을 때 / 자기네 번견(番犬)에게 쇠고기를 주고 / 그 꼴을 참지 못해 일어
 나는 대중을 / 꿈쩍하지 못 하게 <국가>를 앓히고 / 권력 구조들을 안배하
 였소

— 심해진, 「4월의 아들」 중에서

민족적 모순으로 규정되는 미제와 남조선 인민들 사이의 대립과 계급적 모순으로 규정되는 자본가와 노동자, 지주와 농민, 지주·예속자본가들과 피착취·피압박근로인민들 사이의 대립구도는 시에서 권력층과 미국을 조롱·야유·풍자하면서 적대적으로 형상화하고, 노동자·농민과 같은 피지배층들의 참혹한 참상을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한은 언제나 사회주의 체제 북한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묘사되어 북한 체제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대조적으로 선전하면서, 북한 중심의 통일논리를 합리화시키는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겪는 이 비극, 이 불행을 / 누가 씻어 주겠소? / 그것은 우리 조선
 사람 밖엔 없소! / 우리를 가르쳐 주고 인도해 주던 그 분의 말씀대로 / 우
 리 조선 사람 외에 또 누가 있겠소? / 우리 조국을 평화롭게 민주적으로 /
 통일시킬 사람은 우리 밖엔 없소!

— 심해진, 「4월의 아들」 중에서

민족의 비극을 해소할 ‘통일’은 ‘민족자주’노선에 의해야 하며, 그것은 ‘조선사

람'의 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것은 곧 북한의 김일성의 영도에 의해 북한식으로 '평화롭게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이다. 1960년대 전 국토를 요새화하고 전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장비의 현대화에 따른 4대군사노선의 '무장전선'과 대비해 볼 때 이중적인 선전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이중노선은 1970년대 남북대화를 추진하면서 이면적으로 남조선혁명 투쟁을 지속하는 전략추구에서도 볼 수 있다. 1972년의 남북대화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듯 하였다. 닉슨독트린에 따라 미군이 한반도를 포함한 아태지역에서 철수하기 시작하고, 월남이 패망하자 북한은 강경노선으로 선회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대남도발로 국제여론이 악화되자 북한은 다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와 교류에 호응해 나서기 시작한다.

락동강 락동강 / 버림받은 이 나라의 강 [...중략...] 그 물결을 보태고있는것
 은 / 학정아래 신음하는 / 형제들의 고통과 눈물 / 민주와 자유를 원하는 사
 람들의 / 가슴에서 쏟은 애국의 더운 피 [...중략...] 《언제까지 우리는 / 분
 련된 조국의 아픔과 / 갈라진 혈육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 이렇게 괴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나요 [...중략...] 시대와 력사가 용납치 않을거예
 요 / 선량한 사람들의 가슴을 이렇게 괴롭히는것을 / 생리별 당한 혈육들이
 / 꿈마다 그리며 잠못드는 그 밤바다에 / 베개잇을 적시는 그 깨끗한 눈물
 을 / 악의 축배로 마시는 원수들을 / 우리의 눈물은 불이 되어 태워버릴거
 예요

— 오영재, 「대동강」(1985) 중에서

1980년대 서사시 안에 에피소드 형식으로 도입된 이 부분은 북한의 대남의 식이 여전히 1950년대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국을 분열시킨 주적은 여전히 '미제'이며, 남한 정권은 그러한 미제의 '괴뢰'이다. 조국통일의 당위성은 북한 인민들에겐 여전히 '혈육'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이산가족의 아픔과 눈물, 고통은 순결하고 깨끗한 인민의 것으로 반드시 치유되어야 하는 당위성으로 논의된다. 북한의 통일노선은 1990년대 이후에는 사회주의 국가 몰락과 독일통일실현 등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 형태를 취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우세해지기 시작한 남한의 대정부 관계는 여전히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민간기업과의 선별적인 경제협력과 지원을 시도하게 된다.

박산운의 「내 고향을 가다」(1990)에서는 남한을 고향으로 둔 시인이 통일에 의 의지를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념성이 약화되는 반면에 서정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이 이 시의 특징적인 면모이다.

가물거리는 호롱불밑에서 / 할머니가 짠 무명천에선 / 밤깊도록 나죽나죽 부르던 / 시름겨운 물레노래와 함께 / 풀벌레소리가 났다 // 아버지는 그것을 두르고 / 한뼉 땅을 뚜졌고 / 나는 그것을 두르고 / 먼 려로에 올랐다 // 고향길이 막힌지 40여년— / 깊어가는 가을밤과 함께 / 지금도 내 몸에서 피줄에서 / 구슬픈 물레노래와 함께 / 풀벌레소리가 나고 있다

— 박산운, 「내 고향을 가다」 중에서

그러나 서정적으로 남한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읊는 반면, 통일을 가로막는 것은 여전히 미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적대적인 대미적 시각은 고수되고 있다. “보라, 저것이 통일의 원쑤 미국 병정이다!”고 외치는 시인은 반미적 정서를 예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어제는 일제식민지”로 “녀자정신대로 끌려가던 동구앞을” “오늘은 미국의 령지”로 “허가받은 양공주들이 가고” 있으며, 일제로부터 해방은 되었으나 다시 식민상황에 처해 있어서 “산속으로 들어간” “머슴애들”은 빨치산이 되고, “눈도 코도 없는 두역시니들”은 그들을 찾아 마을을 사정없이 불태우는 상황과 “총을 쥔 검정개 누렁개들”의 만행을 통해 북한식 논리로 남한의 상황을 그린다. 그리고 4.19를 겪은 남한은 38선 넘어 “우리의 태양” 김일성이 있는 “넓고 자유로운 평양”을 지향한다.

남한의 상황을 “미군강점”으로 명시한 이 시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남·대미 시각이 1950년대 이후 그다지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서정성이 강하게 노출되긴 했어도, 북한에서 출판되는 문학생산물은 엄격하게 당의 심의와 검열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의 노선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

통일된 조국에서 태여날 / 내 고향 아이들이 나에게 묻노라 / —너는 90년대를 어떻게 살았느냐? / —너는 통일을 위해 어떻게 싸웠느냐? [...중략...] 기어이 분단을 끝장내야 할 / 위대한 년대 위대한 목표가 / 나를 지켜본다 나를 재촉한다

— 박산운, 「내 고향을 가다」 중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민족의 분단을 끝내고 통일을 이룩해야 하는 당위성은 북한이 주장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시는 끝맺고 있다. 그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있는 평양중심으로서, 해방 이후의 민주기지론의 연장선상에서의 북한중심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나의 곁에서 눈동자 빛내이며 듣고있는 아들이 / 얼마나 복된 일이나 [...중략...] 고향을 잃은 아버지 대신 네가 / 영광스런 우리 당 중앙이 있는 수도 /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원수님이 계시는 / 평양을 너의 고향으로 가지게 되었음이—

— 정문향, 「내 고향을 가다」 중에서

시인은 남한이라는 고향을 잃은 아버지 대신 평양에서 태어난 아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되묻고 있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잃지 않은 것보다, 그 고향이 김일성과 김정일이 있는 평양이기에 더욱 영광스럽다는 시의 논리는 결과적으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문학에 나타나고 있는 수령중심논리이며, 통일담론에 있어 한치의 양보도 없는 북한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 시대로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전선은 ‘민족대단결’을 표방하고 있다. 민족대단결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는 남북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던 2000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가진 남북정상회담과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의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15남북공동선언은 북한 문학에 있어서 어느 정도 주제적 측면의 변화를 담아내는 계기가 되었다.

리호근의 기행시집 「통일금강산」(2002)과 시집 「우리는 하나」(2002)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북한문학이 민족대단결의 차원에서 동질성 회복의 문제를 거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행시집으로 명시된 「통일금강산」은 2001년 6월 15일에 금강산에서 개최된 “남북민족통일대토론회”에 참가한 시적 화자가 남한인사들과의 회합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통일에 대한 남북의 의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토론회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기행시집의 성격을 지닌 「우리는 하나」는 2002년 서울에서 개최된 “8.15민족통일대회”를 그리고 있다. 이들은 기행시집의 성격이기 때문에 본고의 장르적 범주인 서사시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북한의 통일담론이 적대적 관계를 고수하던 입장에서 어느 정도 화해 분위기로 변모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라고 보여진다.

모습들도 갖가지 나이들도 다르건만 / 한결같이 반가운 기색 숨기지 못하는
/ 남녘땅 내 혈친들이 모두모두 왔구나! // 아는 이 모르는 이 다 같이 그저
반가워 / 줄레줄레 줄져 오는 그네들의 손 / 농침 없이 빠짐없이 뜨겁게 잡아
흔들때 / 네 눈시울도 붉어지고 / 내 목소리도 젖어만 지는데

— 리호근, 「드디어 만났다」 중에서(「통일금강산」)

서로 모습도 나이도, 살아온 환경도 체제도 다르지만 금강산에서 만난 남북인사들은 서로 반가운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눈시울 붉어지는 감격에 젖으며 한민족임을 확인하는 시인은 통일이 곧 멀지 않았음을 감격적으로 노래하고 있

다.시인은 남측이 차린 간편한 식사를 보며 곧 “그대로 우리 조선의 음식 / 내 입에도 맞는 찬들”로서, 조상대대로 이어온 같은 식성을 지닌 한 민족이 분단된 체로 50년을 남이 되어 살아온 것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느낀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에게라면 / 그가 무슨 직업인이든 / 또 그가 남에 사람이든 북에 사람이든 / 상관없이, 전혀 관계없이 / 한숨결로 숨쉬게 해주는 통일!”이라고 감격적으로 노래하는 시인의 입장은 북한 체제의 옹호에 놓여져 있다. 기행시집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실’이 ‘사실대로’ 그려지기보다 북한 체제에 유리하게 윤색되는 내용도 보이고 있다. 가령, 금강산에 온 남한 인사들이 “6.15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 미국에 대한 혐오도 숨기지 않았다”라고 서술한 것이나, “서울 을지로에서 왔다는 / 고회를 넘어 선 로인”이 “꿈같은 오늘의 이 마당 안겨 주신 /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이 그저 고맙”다고 토로하는 장면, 전주에서 온 남한 시인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성씨본인 전주에서 산다는 남다른 긍지를 언제나 가슴에 안고 산다는 등의 언술들은 남한에 대한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체제적 우월성을 여전히 고수하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결론—체제지배 담론의 이중성

정치와 문화, 사회와 경제 각 분야가 전일적인 체제로 긴밀한 연계를 형성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내재적 북한 문학 고찰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시장 원리에 입각한 자본주의적 매커니즘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통제되고 관리되는 문학생산 시스템은 국가의 정책과 이데올로기적 전략이 결합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북한은 남한과 이념적 대치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전후복구건설 시기 이후 체제지배 담론을 북한 주민들에게 내면화시켜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 고수하는데 주력해야 했다. 여기에 ‘사상의 기수’이자 ‘혁명의 나팔수’ 역할로 문학이 복무하게 되고, 작가는 사상성과 혁명성으로 무장하여 대중들을 선동하고 통제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서사시는 사건과 인물을 중심축으로 작가의 사상성과 정서를 융합시키는 장르이기에 체제지배 담론이 소설과 달리 웅장하고 거시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을 중시하는 북한 문학의 입장에서 인물의 전형성 형상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학적 과제로 제시된다. 북한은 전형적 인물의 구현을 통해 체제가 지향하는 방향성을 담지하도록 하며, 당면 과제에 따라 전형적인 인물의 유형은 변모해 왔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1953년 전후복구건설시기부터 1990년대 김정일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서사시를 네 가지 범주에서 고찰하면서 체제지배 담론의 형성을 고찰하였다. 첫 번째 ‘사회주의 국가 건국의 담론’은 북한의 국가적 정체성 세우기에 해당한다. 사회주의 체제 국가의 정체성은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이 건국의 시초로 편입되면서 북한의 역사쓰기와 기원이 김일성으로 초점화되는 양상으로 형성된다. 사회주의 국가 건국의 담론은 인민이 김일성을 구심점으로 하여 어떻게 항일무장투쟁의 시련을 거쳐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하게 되었는가가 관건이다. 여기에서 사회주의 국가는 미래적 지향과 전망을 담고 김일성에 의해 당위적 역사로서 제시된다. 인민은 그러한 역사적 필연성에 따라 항일혁명의 간고한 투쟁기를 거쳐 건국에 이르게 되며, 김일성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는 바로 낙원으로 향상화된다. 낙원은 다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제2의 건국을 통해 다시 재수립되어야 하는 과제로 제시된다. 항일혁명투쟁시기와 한국전쟁시기는 결국 북한 건국 역사를 필연성으로 규정하는 시련기이며, 이 시련기를 ‘승리’로 이끈 김일성과 김일성에 무한대로 충성하는 혁명가들은 건국의 영웅들이 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것의 특질, 공산주의의 특질이 확실하고도 다양하게 드러나 있는 인물들은 공산주의적 영웅이다. 영웅의 이야기는 서사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민 대중의 이야기이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방대한 시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영웅으로 표상되는 인물들은 공산주의 이상을 체현한 전형들이다. 이들이 겪은 사건은 역사적인 서사로 편입된다.

두 번째 사회주의 국가 건국 이후에 도래하는 것은 김일성에 의해 마련될 ‘사회주의 낙원’이다. 그러나 낙원은 전후복구 이후에 가능한 것이다. 폐허를 재건하는 사업은 인민의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해야 하는 문제와 북한 주민의 체제 이탈을 막는 동시에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굳건히 하기 위한 사상교양의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었다. 이 모두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북한이 인민들에게 제시한 것이 천리마운동이다. 천리마운동은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앞당기는 경제동원운동이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전 인민을 교육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운동이다. 여기에 북한이 인민들에게 서사시에서 제시하는 전형적 인물은 ‘천리마기수’들이다. 천리마기수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미래에 대한 낙관을 가지고 투쟁하는 인물들이다. 사회적 정체성으로 제시된 천리마기수들은 국가 건국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선취한 항일혁명투사나 인민군 출신들이 담당하면서 1970년대에 이르면 김일성에 의한 사회주의 교육과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새 세대’들이 담당하게 된다. 유도피아로 제시되는 미래를 위해 현재의 고통

과 꺾어진 삶을 이겨내도록 사상과 혁명성 교양은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세 번째 수령중심의 유일체제 담론은 주체사상 이후 수령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며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주체적 공산주의의 전형으로 제시된다. 1970년대와 80년대, 그리고 1990년대에 이르면서 주체적 공산주의자는 혁명적 수령관으로 무장하여 수령을 옹호보위한다. 이들은 1980년대 말 사회주의 체제 위기가 닥쳤을 때는 체제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사람들이다. 서사시에서 주체적 공산주의자는 1980년대 3대혁명소조원들로 형상화되면서 1990년대로 들어가면서 체제 위기와 맞물려 혁명적 양심과 의리 및 동지애로 구현된다. 또한 이 시기는 김정일 후계체제가 공식화되면서 김정일의 지도력이 문학 안에서 부상하여 우상화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중심의 통일담론에서 북한의 대남·대미 시각 및 통일 지향성을 살펴보았다. 주적으로 규정되는 미국과 괴뢰정권으로 형상화되는 남한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1950년대 이후 명명된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지속되고 있다. 통일은 남한을 해방하는 북한의 논리가 재생산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통일의 당위성이 미국과 남한 정권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고취 차원에서 감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제시되고 있다. 북한의 통일정책은 시대에 따라 대내외적 상황과 맞물려 변화해 왔다. 서사시에 나타난 통일담론은 미국을 제외한 한반도를 주체로 설정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북한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은 북한 문학에 있어 통일담론의 내용적 변모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적대적인 차원이 아니라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민족의 단결을 통한 통일에의 의지가 북한 문학의 주요 내용으로 담론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전히 북한 체제를 옹호고수하는 입장에서 쓰여지고 있는 문학이지만,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이 조심스럽지만 어느 정도 완화되어 정서적으로 남한과의 민족적 친밀성과 교류 증대에 우호적인 입장이 문학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서사시에 나타나는 체제지배 담론은 당정책의 결과들로서, 언제나 시대의 모든 이슈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문학에 수용된 당정책이나 체제지향성은 인민들이 내면화시켜 실천할 수 있는 신념의 문제와 결부된다. 북한은 당정책 채택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나 이견이 있었던 것은 철저히 인민들에게 배제시킨다. 작가가 ‘써야 될 것’과 ‘쓰지 말아야 할 것’에서 북한 인민들에게는 언제나 ‘써야 될 것’만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는 언어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권한이 국가권력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제원칙’은 철저히 관철된다. 결국 북한 체제지배 담론은 언제나 이중성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 시에서 관용구로 반복제시

되는 당대의 지배담론들 -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기계는 공업의 왕” “쌀은 곧 공산주의다” “모든 것은 전후복구건설에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속도전 앞으로”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등-과 김일성의 교시는 체제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방향을 설정하여 인민들의 지향성과 동일화시키고자 하는 전략이다. 그리하여 서사시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긍정적인 형태로 결과를 도출시키고, 인민들에게 따라 배우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현실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반작용들은 철저히 은폐되며, 반체제 지향적인 인민은 절대로 문학 내에서 생존할 수 없다. 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신념화시켜 자신의 실천담론으로 내면화시키도록 짜여있는 문학 시스템은 지향하는 이상을 명백한 사실처럼 정당화한다.

푸코가 권력을 누수시키는 것이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규정했다면, 북한에서 지식인의 역할은 권력의 누수를 최대한 막는 데 있다. 문학에 구현된 체제지향성의 담론들은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집단주의적 영웅성을 결합시켜 개인의 신체와 욕망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된다. 현실을 사실주의로 그리는 문학이 아니라 미래적 지향을 그리는 북한 문학은 현실적 조건을 철저히 외면한 허위의식에 닿아 있다. 그러나 체제에 종속되어 지배이데올로기 안에서는 이 허위성을 비판할 수가 없다. 그것은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1. 북한문헌

(1) 기초자료

「문학예술」

「조선문학」

강립석, 「땅의 노래」, 문예출판사, 1991

김정길, 「군자마을 사람들」, 문예출판사, 1988.

리 맥, 「푸른하늘 아래서」, 문예출판사, 1983.

리범수, 「조국과 청춘」, 문예출판사, 1989.

_____, 「들국화」,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6.

리호근, 「뜨락에 딸기 무르익을 때」, 평양출판사, 1994.

_____, 「우리는 하나」, 평양출판사, 2002.

_____, 「통일금강산」, 평양출판사, 2002.

민병균, 「조선의 노래」,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박산운, 「내 고향을 가다」, 평양출판사, 1990.

신상호, 「련대의 기수」,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박팔양, 「눈보라 만리」,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1.

오영재, 「대동강」, 문예출판사, 1985.

장건식, 「지평선」, 문예출판사, 1986.

전동우·손승태, 「인간의 노래·불타는 용해장」,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4.

정문향, 「새 세대의 노래」, 문예출판사, 1970.

최승철, 「창조의 영웅」, 평양출판사, 1992.

한원희, 「삶은 어디에」, 문예출판사, 1991.

(2) 사전류

「문예상식」,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문학예술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2.

「백과전서」,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정치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3.

「정치용어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0.

「조선대백과사전」, 백과사전출판사, 2000.

「철학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85.

「현대조선말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3) 논저 및 저서

강능수, 「시대와 문학」, 문예출판사, 1991.

강운빈, 「인간개조리론」(「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6」), 사회과학출판사, 1985.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공산주의 교양과 우리 문학」, 과학원출판사, 1959.

국립출판사 편, 「문학 예술과 계급성」, 국립출판사, 1955.

김일성, 「사회주의 교육체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 으키자」, 조선로동당출판사, 1978.

_____,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_____, 「김일성저작선집 2」,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_____,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_____, 「조국통일3대헌장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2003.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_____, 「김정일선집 11」,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_____, 「김정일선집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_____,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중국: 료녕민족출판사, 2001.

박종식·현중호·리상태, 「문학개론」, 학우서방, 1964.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에 기초한 3대혁명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우리 당의 언어정책」, 사회과학출판사, 1976.

장 석, 「김정일장군 조국통일론 연구」, 평양출판사, 2002.

장용남, 「서정과 시창작」, 문예출판사, 1990.

전금진,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정성무, 「시대와 문학예술형태」, 사회과학출판사, 1987.

한중모, 「주체의 인간학」, 사회과학출판사, 1987.

허중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2. 국내문헌

김경웅, 「북한정치사회화론」, 박영사, 1995.

김재용, 「분단구조와 북한문학」, 소명출판, 2000.

- 남 혁, 「조국통일론」, 사회과학사, 1977.
- 박인기, 「한국현대사의 모더니즘 연구」, 단대출판부, 1988.
- _____, 「한국문학의 현대적 전개」, 지식산업사, 1999.
- _____, 「한국 현대문학론」, 국학자료원, 2004.
- _____, 편역, 「작가란 무엇인가」, 지식산업사, 1997.
- _____, 편역, 「현대시론의 전개」, 지식산업사, 2001.
- 박대상, 「북한의 문화와 예술」, 깊은샘, 2004.
-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 을유문화사, 2000.
- 신인철, 「북한주체철학 연구」, 나남출판, 1993.
- 신형기·오성호, 「북한문학사」, 평민사, 2000.
- 양호민 외, 「북한사회의 재인식 I」, 한울, 1987.
- 이명재 편, 「북한문학사전」, 국학자료원, 1995.
-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전인영 편, 「북한의 정치」, 을유문화사, 1990.
- 전영선, 「북한의 문학예술 운영체제와 문예이론」, 역락, 2002.
- 최완규 외, 「북한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3.

3. 외국문헌

- 소련과학 아카데미 편, 「마르크스 레닌주의 미학의 기초이론」, 신승엽 외 역, 일월서각, 1988.
- Althusser, Louis, 「아미앵에서의 주장」, 김동수 역, 숲, 1991.
- Amossy, R., Pierrot, A. Herschberg, *Stéréotypes et Clichés: Longue, Discourse, Société*, 「상투어」, 조성애 역, 동문선, 2001.
- Easthope, Antony, *Poetry as Discourse*, 「시와 담론」, 박인기 역, 지식산업사, 1994.
- Fairclough, Norman, *Discourse and Social Change*, Polity, London, 1992.
- Foucault, Michel, *Histoire de la Folie à L'Age Classique*(1961), 김부용 역, 인간사랑, 1991.
- _____, *L'Archéologie du Savoir*(1969), 「지식의 고고학」, 이정우 역, 민음사, 2000.
- _____, 「담론의 질서」, 이정우 역,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8.
- Macdomell, Diane, *Theories of Discourse*(1986), 「담론이란 무엇인가」, 임상훈 역, 한울, 2002중판.

- Mills, Sara, *Discourse*, 「담론」, 김부용 역, 인간사랑, 2001.
- Moscovici, Serge, *L'Age Des Foules*, 이상률 역, 문예출판사, 1996.
- Pêcheux, Michel, *Language, Semantics and Ideology: Stating the Obvious* (1975), trans. Harbans Nagpal, London: Macmillan, Basingstoke, 1982.
- Reboul, Olivier, *Langage et Idéologie*, 「언어와 이데올로기」, 홍재성·권오룡 역, 역사비평사, 2003.
- Todolov, Tzvetan, *The Poetics of Prose*(1971), 「산문의 시학」, 신동욱 역, 문예출판사, 1992.
- _____, *Les Genres du Discours*(1978), 송덕호·조명원 역, 예림기획, 2004.
- Vološhinov, V.N., *Marxism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1929), trans. Matejka, L. and Titunik, I. L.,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 기무라 미쓰히코, 「북한의 경제」, 김현숙 역, 해안, 2001.

종교를 통한 남북대화의 접착점 연구

主體思想과 解體神學의 지평융합



최 병 학

(경성대 강사)

목 차

【 요약 문 】	297
1. 서론	299
2. 남북대화의 접착점으로서 종교	301
3.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	310
4. 테일러의 해체주의 신학	319
5. 해체신학과 주체사상의 지평융합	337
6. 결론: 종교를 통한 남북대화의 접착점 모색	341
【 참고문헌 】	346

【 요약 문 】

연구자는 남북간 대화의 접촉점을 종교를 통해서 모색하려고 하며 특히 북한의 사상적 기틀인 주체사상과 현대 포스트모던 사상의 사조 속에 신학의 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해체주의 신학을 대화시키고자 한다. 특별히 포스트모던 시대에 대두되고 있는 신학계의 해체주의 신학 경향은 기존 근대성의 신 개념을 해체한 새로운 신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간 이해에 있어서도 자아의 소멸을 통한 흔적(trace)을 말하고 있다. 반면 주체사상은 인간 이해에 있어서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의 사유로 인간중심의 사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체신학은 그 대화의 파트너로써 주체사상을 만나 더욱 풍성한 신학적 함의를 드러낼 것이며, 주체사상 역시 자신의 오류를 해체신학을 통해 보완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한 남북간의 대화를 종교를 통하여 그 접촉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상만을 이야기하는 협의의 주체사상, 그 인간중심적인 사유를 모던적 신을 해체한 해체신학에서 차용하고, 주체사상은 생물학적 속성과는 대비되는 사회적 속성에만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속성으로의 개방을 통하여 서로간에 지평융합을 해나간다면, 즉 이러한 바탕 위에 대화의 접촉점이 이루어진다면, 남북간 문화적 차원의 대화 물꼬는 트일 것이다. 그리고 이 접촉점의 근저에는 생명이 생명답게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회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종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대두될 것이며 종교를 통한 비판적 만남을 남북대화의 접촉점 모색으로까지 나아간다면 인간의 '생명이 생명답게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회구하는 것으로 두 사상과 신학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간 대화의 접착점을 종교를 통해서 모색하려는 것이며 특히 북한의 사상적 기틀인 주체사상과 현대 포스트모던 사상의 사조 속에 신학의 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해체주의 신학을 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년 2월 19일 발효),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년 2월 19일 발효),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등의 성과로 남과 북은 바야흐로 대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비록 북핵 문제라는 변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전 시대의 냉전적 사유는 설자리가 없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간 대화의 접착점 모색은 군사, 정치, 경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 전반에 걸쳐 중요한 사항이다.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며 문화의 형식은 종교”라는 폴 틸리히(P. Tillich)의 말을 언급하지 않아도, 화이트헤드(A. Whitehead)가 말한 것처럼 과학과 함께 인류 문명의 발달에 중요하고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종교이다.¹⁾ 따라서 이미 문화의 요체(要諦)로서 종교는 문화 형성에 막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사실 남한의 대다수 사람들이 무교로부터 불교, 유교, 기독교와 여타 종교의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역시 북한도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화된 유사종교인 ‘김일성교’라는 종교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남북대화의 창구에 있어서 문화 전반적인 사유의 핵심인 종교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다.²⁾

특히 포스트모던 시대에 대두되고 있는 신학계의 해체주의 신학의 경향은 기존 근대성의 신(神) 개념을 해체한 새로운 신관(神觀)을 제시하고 있으며³⁾ 인간 이해에 있어서도 자아(self)⁴⁾의 소멸을 통한 흔적(trace)을 말하고 있다.⁵⁾ 따

1) 20세기의 과학과 철학의 심오한 저작들을 배출한 화이트헤드는 종교의 영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Alfred N. Whitehead, *Religion in the Making*, New York: Macmillan Co., 1926, pp. 20-36.

2) 유사종교인 김일성교의 주체사상을 종교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문화의 실체로서의 사상적 기능은 다른아닌 종교의 문화적 의미를 가져오기에 주체사상을 북한 종교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이라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3) 현재 한국 신학계에서 포스트모던 입장에 선 해체신학은 아직 충분히 이해되지도, 또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배타성으로 그 사상의 꽃을 피우고 있지 못하다. 편협한 교리 중심의 종교이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4) 여기서 자아(self)는 근대적 주체의 다른 이름이며, 주체사상의 주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물론 의식적 주체라는 관점에서 이 둘은 만날 수 있으나, 그 속성에 있어서 근대적

라서 해체신학은 그 대화의 파트너로서 주체사상을 만나 더욱 풍성한 신학적 함의를 드러낼 것이며, 주체사상 역시 자신의 오류를 해체신학을 통해 보완하게 될 것이다.⁶⁾ 나아가 남북간의 대화에 있어서 종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접촉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교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주체사상과 解體신학의 만남을 통해 남북대화의 준거틀로서 종교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한에서의 主體思想을 특별히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1932년 3월 31일)라는 논문⁷⁾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그 내용을 주체사상의 종교학적 함의인 자주성의 존재로서 인간, 창조성으로서 종교문화, 의식성으로서 종교성으로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포스트모던적 사유 방식을 통한 마크 테일러의 ‘주체의 소멸’이라는 해체주의 신학의 맥락에서 主體思想과 解體神學을 창조적으로 지평융합시킬 것이다. 가령, 자주성으로서의 신의 죽음, 창조성으로서의 흔적(trace), 의식성으로서의 방황(erring) 등은 해체신학과 주체사상의 창조적 만남의 결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만남은 서로간의 비판적 극복을 전제한 것이다.

1.2 연구범위

주체사상과의 대화를 위해 개별적인 종교 모두를 다루는 것은 연구자의 역량을 벗어나며 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개신교에 초점을 맞추며 특별히 개신교 신학 가운데 현재 그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포스트모던 사조 가운데 하나인 해체주의 신학과 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주체사상의 핵심적인 내용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에 관한 고찰과 해체신학, 특별히 마크 테일러(M. Taylor)의 해체신학을 통해 주체사상과의 대화 접촉점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의 개념 등으로 한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을 통해 차후 제기될 남북통일에 있어서 문화적 격차의 핵심인 종교적

주체의 자기중심주의적인 자아개념과 주체사상의 인간중심주의적인 주체의 개념은 차이가 있다.

- 5) 흔적에 관한 사유는 다음을 참조하라. 최병학, “흔적의 윤리-밟힘과 밝힘”, 「철학연구」, 제90집, 대구: 대한철학회, 2004; 최병학, “A→E로가는 해체의 흔적, 혹은 흔적의 윤리”, 「대동철학」, 제26집, 부산: 대동철학회, 2004.
- 6) 이는 인식론적 기초가 다른 유물론과 관념론의 대화이다.
- 7)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70돛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31일. 원출처는 「조선중앙년감」(1983), pp. 124-159이며 필자가 참고한 것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자료집 김정일저작선」, 1991이다. 이하 ‘주체’로 약호표시하고 페이지 수는 극동문제연구소 판을 따른다.

차이를 대화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1.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연구의 특성상 문헌연구가 중심이 될 것이다. 특히 주체사상에 관한 철학적 편견이 없는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것이며⁸⁾ 해체주의 신학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상가인 마크 테일러의 사상⁹⁾을 관련된 부분만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화의 시도는 철학적인 기초가 다른¹⁰⁾ 두 사상을 접목시키는 것이라 오류가 많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 연구의 방법론은 주체사상을 김정일의 논문을 중심으로 원리를 분석하고 해체신학 또한 테일러를 통하여 시대적 맥락을 고찰하여 두 생각의 기본 틀거리가 만나는 지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후 서로간의 지평융합의 과정들을 문헌적으로 비교 분석하며 남북대화의 접촉점으로 가능한 방향을 모색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2. 남북대화의 접촉점으로서 종교

앞서 언급한 대로 남북간 대화의 접촉점 모색은 군사, 정치, 경제 부분만이

-
- 8) 이는 주체사상의 철학원리로 이루어진 북한사회의 정치적 상황이나 문화적 상황과는 별도의 문제이다. 이론이 실천을 따라 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주체사상이 일당 독재와 이상화로 나아가는 면은 철학적 원리에 있어서 비약인 것이다. 따라서 사상만을 이야기하는 협의의 주체사상으로써 김정일의 논문을 가감없이 인용할 것이다.
- 9) 테일러의 해체주의 신학 관련 저술은 다음과 같다. Mark Taylor, *Altari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Deconstructing Theology*, Chicago: The Crossroad Publishing Co. & Scholar Press, 1982; *Erring: A Postmodern A/the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Journey to selfhood: Hegel and Kierkegaard*,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Tears*,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0; "The End(s) of Theology", *Theology at the End of Modernity*, Sheila Greeve Davaney et., Trinity Press, 1991; ed. *Deconstruction in Context: Literature and Philosoph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 이하 각 도서명은 약자로 표기한다. AT, ER 등
- 10) 인식론의 측면에서 주체사상은 유물론에 기초하며 해체신학은 종교의 속성상 관념론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수령론을 통한 유사관념론으로 흐르는 주체사상의 흐름이 해체신학의 해체의 흐름과 서로 극한점에서 다가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인간중심', '생명중심'이 아닌가를 모색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이해의 기본인 물질적 작용과 의식적 작용 이 두가지의 새로운 인식이다.

아니라, 우리 문화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이다. 특별히 이러한 문화와 종교의 관계를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며 문화의 형식은 종교”라고 말했던 티리히의 언급 종교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에 관한 접촉점 모색은 통일 관련 자료들에 있어서 그리 많은 분량과 성과가 있지 못한 실정이다. 북한종교에 관한 글들은 1970년대 말까지 불과 10여 편에 불과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한 해에 10여 편 정도의 논문들이 발표되었으며, 1980년대 말부터 해마다 수십 편씩 발표되었다.¹¹⁾

기독교계 내에서의 연구에 있어서도 보수적 기독교인들의 경우 선교 지향적인 배타적인 연구성과들이 많았으나, 진보적 기독교인들은 북한 선교의 차원보다는 통일이나 분단의 극복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980년대 초에 김동길¹²⁾, 김용복¹³⁾, 주재용¹⁴⁾ 등의 글들, 중반 이후에 민족통일을 기독교 신학적으로 관심을 갖는 김득중¹⁵⁾, 박종화¹⁶⁾, 손규태¹⁷⁾ 등의 글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분기점은 1995년을 남북분단 50년을 맞이하는 해로 ‘통일회년’을 선포한 시점을 중심으로 이제 북한 종교에 관한 왜곡 없는 연구가 가능하였고. 그때부터 주체사상과 기독교 신학의 입장을 비교한 글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¹⁸⁾ 그러나 기독교 신학 내에서도 그 급진성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 해체신학의 경우 그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사실 북한의 주체사상이 그 기틀로 삼고 있는 칼 맑스와 맑스주의의 사상은 서구 기독교, 혹은 서구 문화의 맥락에서 등장하였지만, 동시에 이 맥락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등장하였다. 즉 맑스주의는 직접적으로는 서구의 사회, 경제 체제에 대립해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 정신사적으로는 서구의 기독교와 문화의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다.¹⁹⁾

-
- 11) 더욱이 통일부의 신진연구자 연구과제의 경우 교육, 홍보, 정치, 경제, 사회교육, 법, 통일 정책, 북한 실태 등의 분야로 나누어 2001년 24편, 2002년 25편, 2003년 16편의 논문 성과가 있으나 이 가운데 북한 종교에 관한 연구 성과는 단 한편도 없음을 많은 통일관련 연구자들이 문화의 실체인 종교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거나, 혹은 종교는 북한 관련 연구에 있어서 그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함을 잘 반영한다.
 - 12) 김동길, “통일문제는 한국기독교에 부과된 지상과제”, 『기독교사상』, 제264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 13) 김용복, “분단상황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사회선교의 과제”, 『성별』, 108호, 1982.
 - 14) 주재용, “통일은 기독교인의 선교과제”, 『한국YMCA』, 178호, 1982.
 - 15) 김득중, “통일의 복음: 민족통일과 기독교”, 『기독교사상』, 324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 16) 박종화, “분단극복과 교회의 역할”, 『교회와 세계』, 54호, 1986.
 - 17) 손규태, “분단 42주년을 맞는 한반도에서의 정의와 평화”, 『교회와 세계』, 63호, 1987.
 - 18) 또한 통일연구원에서 주체사상과 기독교와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 몇편이 있으며, 북한은 90년대 초반 기독교와의 유사성을 주장한 내용의 논문을 출판한바 있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해체주의 신학과의 대화이므로 그 내용은 전무하다.

따라서 서구 기독교와 문화에 대한 맑스주의의 핵심적 비판은 그 비판이 역사와 현재에 있어서 사회의 특권층 혹은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로서 역할을 해왔음에 대한 비판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기독교에 대한 맑스의 비판은 타당하다. 그리고 맑스의 이러한 비판으로 유럽의 현대신학의 지형도는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성서적인 신앙과 역사적인 기독교의 문제는 일치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맑스를 비롯하여 엥겔스와 레닌은 간과했으며, 맑스주의의 북한 상황의 토착화인 주체사상 역시 기독교의 본질적인 정신을 왜곡한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맑스주의의 북한 토착화인 주체사상과 기독교 정신과의 대화이다. 따라서 주체사상과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해체주의 신학은 그 만남만으로도 최고의 정점에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북한 종교에 있어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통한 ‘김일성 우상화’라는 일련의 작업들을 우리는 ‘김일성교’, 혹은 ‘유사종교’라 부르면서, 그에 대한 비판만을 앞세우고 있어 객관적인 종교학적인 고찰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주체사상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더불어 특히나 현대 신학에 있어서 포스트모던 사상의 흐름을 수용한 해체주의 신학과와의 대화는 분명 필요한 과제이다.

기존의 북한 종교 관련 논문들은 첫째, 북한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관점에서 북한 종교를 연구하는 것, 둘째, 선교와 포교, 교화 등 종교적 목적을 위해 북한 종교를 연구한 것, 셋째, 통일을 지향하는 북한 종교 연구의 경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⁰⁾

그러나 북한에는 종교가 없다고 말하며 허울뿐인 정치적 도구로서의 북한 종교의 이해나, 선교와 포교, 교화 등의 종교적 목적을 위해 북한 종교를 연구하여 북한의 체제나 문화를 무시한 일방적이고 제국주의적 선교의 자세로 일관하기에 학문적 결실로 맺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군다나 통일을 지향하는 종교나 종단, 교파의 연구 성과물²¹⁾들은 각각의 교리나 사상에 근거하여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이루어가기에는 부족한 실

19) 사실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공동생활은 맑스도 인정했듯이 원시공산제를 표방한다. 또한 신약 성서의 많은 부분들은 인간의 평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 나아가 강원돈의 ‘물(物)의 신학’등의 입장들은 다시금 맑스주의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고대유물론과 르네상스 시대의 기계적 유물론, 나아가 맑스가 사회현상에 적용한 유물론 등은 이러한 고대 관념론과 중세 기독교 철학과 양립하는 면을 보인다.

20) 류성민, 「북한종교 연구」, 북한연구학회 엮음, ■■■분단 반세기 북한 연구사■■■(서울:한울 아카데미), 1999, pp. 437-438.

21) 가령 개신교 신학에서의 ‘통일신학’, 가톨릭 신학의 ‘통일사목신학’, 불교계의 통일논의 등

정이다. 특히 통일만을 지향하는 종교계의 북한종교 연구는 극히 진보적인 종교인에 의해 진행됨으로 북한의 통일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남한의 공식적 통일 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서술된다.

따라서 남북대화에서 주체사상과의 대화의 접촉점으로 종교를 설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선노동당과 국가활동의 유일적 지도지침이라 할 수 있는 주체사상이 북한의 종교정책과 현실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2.1. 종교의 의미

우리 사회에서의 종교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A. Toinbee)도 말했듯이 역사가들이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우주선이나 컴퓨터, 공산주의의 흥망 등이 아니라 ‘기독교와 불교의 만남’이라고 말할 정도로 종교의 만남, 나아가 종교 자체의 의미는 인류사의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종교의 역할을 그리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다.²²⁾

북한의 종교관은 철저히 맑스-레닌주의 사상에 입각해 있다.²³⁾ 따라서 먼저 레닌의 종교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레닌은 1905년 「사회주의와 종교」라는 글에서

“일생 동안 일하고도 굶주리는 자에게 종교는 땅 위에서의 삶에 있어서 겸손과 인내를 가르치고, 그를 하늘의 보상에 내맡겨버린다. 이 세상에서 타인의 손 아래서 노동하고 생존하는 자를 종교는 이 세상에서 선행하는 자라고 가르친다. 종교는 그에게 그의 수익에 대하여 값싼 정당화를 제공하고 값싼 대가로 하늘의 축복에 이르는 입장권을 판다. 종교는 인민을 위한 아편이다. 종교는 정신적인 값싼 브랜디술의 일종, 현존에 대한 요구를 증도에 가라앉혀 버리는 술의 일종이다.”²⁴⁾

22) 가령 북한 문헌들에서 종교를 설명하는 정식화된 방식이 있는데, 김일성의 종교 관련 발언을 인용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대다수이다. 물론 내용에 있어서도 종교의 본질, 역사적 전개과정, 종교의 현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90년대 이후의 문헌에서 좀 더 객관성을 띠려고 하고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

23) 맑스와 엥겔스의 종교 비판 관련은 *Die Frühschriften*(Stuttgart, 1953); *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Berlin, 1952); *Capital, The Communist Manifesto, and Other Writings*, Max Eastman, ed., *The Modern Library*(New York, 1932); *Karl Mark, Frederick Engels: Collected Works*. trans. Richard Dixon(New York: International, 1975-1995);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ed. Frederick Engels. trans. Samuel Moore and Edward Aveling(New York: Kerr, 1906); *The German Ideology*, trans. S. Ryazanskaya(Moscow: Progress Publishers, 1968) 등을 참조하라.

고 말한 바 있으며 나아가 신에 관한 종교적 이념을 다른 부분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혐오할 만한 것, 민주적 부르조아지에 의해서 특별한 관용으로서 전수해 받은 바 혐오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신의 이념은 가장 위험스러운 것, 혐오할 만한 것, 가장 적대적인 전염병인 것이다. 수많은 죄악, 비열, 수많은 육체적인 폭행, 전염병의 만연은 화려한 의상으로 장식된 섬세한 정신화된 사랑의 신에 관한 이념보다 훨씬 더 쉽게 대다수에 의하여 인지되며 따라서 훨씬 덜 위험하다. 신이란 특히 이념들의 복합체이며, 이 이념들은 자연을 통하여 또 계급억압을 통하여 결과된 것, 인간억압에 의하여 창출된 것이며 이러한 억압을 영속적인 현상으로 만드는 계급투쟁을 잠재우는 이념들의 복합체”²⁵⁾

라고 말한다. 그러나 김일성은 종교에 대한 좀더 관용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종교를 아편이라고 한 맑스의 명제를 극단적으로, 일면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 명제는 종교적 환상에 유혹당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지 종교인 일반을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다.”²⁶⁾

이 말은 맑스주의 종교관의 역사적 제한성을 언급한 것이며 주체사상은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무튼 종교관련 김일성의 언급을 인용하여 본다면,

“예수교의 전도사들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허위를 가지고 진리라고 하며 비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기만함에도 불구하고 각이한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럴 듯 하게 설교하기 때문에 일부 지식층까지도 거기에 매혹되어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불고 있습니다.”²⁷⁾

종교는 허위와 비과학적인 것이며 나아가

“인간이 만일 자기 힘을 계발시키지 않고 천지만물의 창조자라고 하는 어떤 신이나 하느님의 은총만을 믿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아직도 구석기 시대에서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²⁸⁾

종교는 인간의 창조성을 말살하는 것이다. 이런 종교는 삶의 실천적인 문제에

24) W. I. Lenin, “Sozialismus und Religion”, in *Nowaja Schisn*, Nr. 28, 1905년 3월 12일.

25) W. I. Lenin, *Über die Religion*, Moskau O.J., 1954, p. 48.

26)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제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 349.

27) 김일성, 「김일성 전집」(제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179. **이하 전집과 권으로 표기하고()에 년도를 표기함.**

28) 전집, 제3권, 1994, p. 287.

당면하면 그 허상이 드러난다.

“우리가 그 전에 청년운동을 하던 초기에 미신을 타파하기 위한 운동을 한 일이 있는데, 그때 어떤 학생들은 레배당에 모여 하느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루 종일 빌다가 맥만 빼고 배가 고프다고 할 때 그들에게 하느님에게 아무리 빌어야 대답이 없고 배만 더 고프다, 우리 모두 밖에 나가 먹을 것을 구하자고 하면서 밭에 데리고 나가 낱알 이삭을 주어 빵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음식을 해먹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를 풀어 나갔습니다.”²⁹⁾

아무튼 이러한 종교에 관한 견해³⁰⁾가 종교를 전파한 미국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간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종교의 간판을 든 선교사들을 우리 나라에 파견하여 각지에 레배당을 짓고 기독교와 숭미 사상을 퍼뜨렸으며 장차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수십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조선 사람들을 동정하고 있는 듯이 가장하여 종교의 탈을 쓰고 자기의 세력을 조선에 부식하기 위한 음흉한 책동이었습니다.”³¹⁾

이런 미국의 음흉한 책동으로서의 종교의 허상은 종교 자체의 의미를 떠나 미국 사람들의 만행으로 규탄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주체사상의 장점을 부각시키게 된다.

“미국 사람들이 레배당도 파괴하고 교인들도 죽이었다. 하느님은 그러한 만행을 제어하지 못했다. 우리의 종교 신자들은 하느님 앞에서 천당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릴 필요를 더는 느끼지 않았다. 종교가 인간의 운명 개척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신자들은 스스로 신앙을 버리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원리, 사람이 이 세계의 창조자이며 지배자라는 원리에 기초한 주체사상의 신봉자가 되었다.”³²⁾

나아가,

“미국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인도주의> 간판을 들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야수적인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습니다. 그전에 순안에 있던 미국선교사놈은 조선의 어린이가 과수밭에서 떨어진 사과를 한

29) 전집, 제36권, 2001, p. 436.

30) 여기서는 특별히 기독교

31) 전집, 제7권, 1993, p. 116.

32)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제5권), p. 366.

알 주었다고 하여 그의 이마에 청강수(염산)으로 <도적>이라고 새겨 놓는
친추에 용납 못할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³³⁾

즉 주체사상의 종교관은 종교를 환상이며 객관적 세계의 왜곡이라는 측면을 부각, 종교는 미신과 비과학적인 것이며 ‘교양 사업’을 통해서만 종교가 극복될 수 있다고 말한다. 교양사업의 예로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

“우리가 대동강물을 리용하여 강서 일대까지 관개공사를 다 해 놓았기 때문에 평안남도 농민들이 이제는 <하느님>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농민들 속에서 <하느님>만이 농사지를 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던 낡은 관념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잘 하여야 하겠습니까.”³⁴⁾

2.2. 종교비판으로서 무신론

종교, 혹은 신의 죽음과 파멸에 관한 선언은 형이상학의 죽음, 혹은 부친 살해, 민중의 아편, 인격화된 사회 등의 의미로 기술된다. 간략하게나마 이러한 종교비판으로서의 무신론을 니체, 뒤르켁, 프로이트³⁵⁾ 등의 사상을 통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기존 전통 기독교와 맥락을 달리하는 해체신학은 오히려 이러한 무신론을 더 과격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후에 문화의 준거틀로써 종교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고자 한다.

사실 니체의 신 죽음의 선언은 종교적 진리 즉 기독교 진리의 종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종말 선포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의 죽음은 전통적인 모든 도덕규범들의 기반을 제거하는 것이 된다. 더 나아가 도덕에 대한 합리적인 기반을 가진 철학자들까지도 비판한다.³⁶⁾

33) 전집, 제12권, 1995, pp. 32-33. 이 내용은 북한의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린적이 있었다.

34) 전집, 제9권, 1994, p. 408. 이러한 교시는 전집의 여러군데에 있다. 제22권, 1996, p. 127; 제28권, 1999, p. 70; 제32권, 2000, pp. 113-114, p. 181 등.

35) 참조로 이들의 종교관련, 혹은 종교비판 저서를 인용하자면, 니체의 경우 종교관련 서적은 「들어라 위대한 인간의 조용한 외침을」, 서울: 靑河, 1982; 「善惡의 彼岸」, 서울: 正音社, 1977; 「悲劇의 誕生」, 서울: 正音社, 1976; 「이 사람을 보라」, 서울: 正音社, 1976; 「運命의 별이 빛날때」, 서울: 微文出版社, 1974;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서울: 三省社, 1976. 등이 있으며 뒤르켁의 경우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trans. George Simpson, Glencoe, IL: Free Press, 1960;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trans. Joseph Ward Swain, New York: Free Press, 1965, 프로이트의 경우 대표적인 종교 비판 저서로는 *Totem and Taboo*. trans. James Strache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0 등이 있다.

36) Alistair Kee, *Nietzsche Against the Crucified*, SCM Press, 1999, p. 50.

따라서 기독교나 도덕은 약자나 실패한 사람들의 분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럼으로 허구적인 이러한 도덕과 종교에 해매는 이들을 대신하여 초인(Übermensch)³⁷⁾을 제안하여 인간이 따라야할 하나의 이상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³⁸⁾

그러나 니체는 종교성이라 말할 수 있는 영성(spirituality)이라는 문제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니체가 관심한 영성이 기독교적인 영성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이 세상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영성을 이해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열망과 욕구는 죄의 근거라고 말하는 기독교의 교리를 비판한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감각과 본능은 순수한 것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이기에 짜라투스트라에서 ‘감각의 무죄성’(innocence of senses)³⁹⁾을 선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각의 무죄성에 근거한 인간 긍정의 선언은 그의 이상적인 도덕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의 의지’(will to power)를 바탕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종교인들처럼 피조물적인 성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즉 주인의 도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⁴⁰⁾

이러한 주인의 도덕으로 살아가는 삶은 성서의 그리스도의 삶 대신 희랍신화의 디오니소스의 삶이다. 기독교의 병약하고 잘못된 선택 대신 디오니소스의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강력한 삶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⁴¹⁾

이러한 니체의 종교비판은 다름 아닌 유럽의 전통 속에서 형성된 기독교의 비본래적인 모습이다. 비본래적인 것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사람들을 질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말년의 니체의 자서전(*Ecce Homo*)에서는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신비스럽고 고상한 신(noble God)을 동경하는 여운을 남기고 떠났음은 또 하나의 아이러니이다.

이러한 니체와 달리 뒤르켐은 신을 사회적 산물로 본다. 따라서 종교는 사회적으로 자생(gui generis)한 것이다. 물론 자신의 종교사회학의 세 가지 목표⁴²⁾

37) 니체는 초인의 반대는 말인(末人: der letzte Mensch)을 대립시킨다.

38) F. Nietzsche, *The Philosophy of Nietzsche*, New York: The Modern Librart, 1954, pp. 111-112

39) F. Nietzsche, *Thus Spoke Zarathustra*, trans. with intro. R. J. Hollingdale,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1, part 13, p. 166.

40) F. Nietzsche, *Beyond God and Evil*, trans. with intro. R. J. Hollingdale,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2 참조.

41) F. Nietzsche, *The Anti-Christ*, trans. with intro. R. J. Hollingdale,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8, p. 117.

42) 곧 첫째, 종교의 기초적인 요소들은 무엇인가? 둘째, 시간·공간과 같은 근본적인 사상적 혹은 범주적 개념의 자리는 무엇인가? 셋째, 토테미즘을 분석하여 사회적 관계 속에서

를 통해 분석한 사회학의 범주에 종교가 들어가기에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니체 혹은 맑스와는 달리 종교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즉 종교는 기초적이고 실제적인 항구성을 표현하면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⁴³⁾

따라서 뒤르켐은 토템의 원리를 분석하여 씨족이 섬기는 토템, 곧 신은 씨족 자체가 상상적으로 인격화시킨 동식물을 만들어 토템으로 섬기는 것으로 분석한다. 곧 신은 ‘인격화된 사회’(society hypostasized)인 것이다.⁴⁴⁾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대상인 신을 뒤르켐의 말처럼 단지 사회적 융화나 질서를 위해서 형성된 상징 시스템, 혹은 인격화된 사회라고 말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신은 인간 실존에서 주관적 진리로 경험할 수 있는 초월적인 창조자이기 때문이다.⁴⁵⁾

뒤르켐과 달리 프로이트의 경우 종교는 어떤 증거나 이성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오랫동안 바라던 것이나 필사적으로 필요하거나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wish-fulfillment)을 이루는 환상이라고 한다.⁴⁶⁾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을 바로 인식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현실이며 만지고 냄새맡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현실로 인식되면 환상적인 허구의 종교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정신분석(psychoanalysis)의 도구를 통해 치료를 받게 되면 세상을 정상적으로 대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때는 종교의 ‘사기적인 도움’(fraudulent aid)은 필요 없게 될 것이다.⁴⁷⁾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인 것은 프로이트는 인생을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말하며 인간이 행복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로 인간의 몸이 질병에 걸린다는 사실, 둘째 인간이 다룰 수 없는 외적 세계의 독립적인 힘, 셋째로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인간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한바 있다.⁴⁸⁾ 그렇다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이러한 인간의 제한성

종교의 보편적인 본질과 기능을 정리하려는 것 등이다. Bryan S. Turner, *Religion and Social Theory*, 2nd.,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1991, pp. 45-46 참조.

43) “이 세상에 틀린 종교는 없으며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옳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 존재의 주어진 조건하에서 다양한 답을 제공하는 종교는 따라서 나름대로 옳은 것이다.” Ibid., p. 15에서 재인용.

44) Ibid., p. 231.

45) 이것은 나아가 윤리적인 삶이 정지된 상태 곧, 키에르케고르도 언급한바, ‘윤리적인 것에 대한 목적론적 정지’(teleological suspension of the ethical)의 영역이다.

46) Sigmund Freud, *The Future of an Illusion*, vol., 21, revised ed., London: SCM Press, 1962, p. 26.

47) D. W. D. Shaw, *The Dissuaders*, London: SCM Press, 1978, pp. 17-18.

48) Sigmund Freud, *Civilization and Discontents*, trans. James Strachey, New York: W.

을 승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종교성을 단지 사기적인 도움, 혹은 환상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

3.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

3.1. 주체사상의 이론 및 방법체계

주체사상은 사상, 이론, 방법으로 이루어진 광의의 주체사상과 사상만을 이야기하는 협의의 주체사상으로 나누어져 있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의 완성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후자의 입장에 중점을 두며 좀 더 세분하자면 후자의 철학적 원리를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면 주체사상은 인간학적 선언이다. ‘사람⁴⁹⁾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입각한 주체사상을 북한의 사상가들은 철학사상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에 대해 완벽하게 해명한 사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기본 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밝혔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운명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⁵⁰⁾

이러한 주체사상의 이론 및 방법 체계를 정리하여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 페이지의 <표 1>과 같으며 주체사상의 철학적 기초를 놓았다고 말하는 황장엽은 주체사상의 사상적 측면을 세 가지 정도로 말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 통치자들이 선전하고 있는 주체사상은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핵을 이루는 것은 전체주의와 계급주의, 봉건주의를 결합시킨 수령절대주의 사상이며 다른 하나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계승한 혼적인데 여기서 기본이 되는 것은 계급투쟁과 무산계급독재이론이다. 그리고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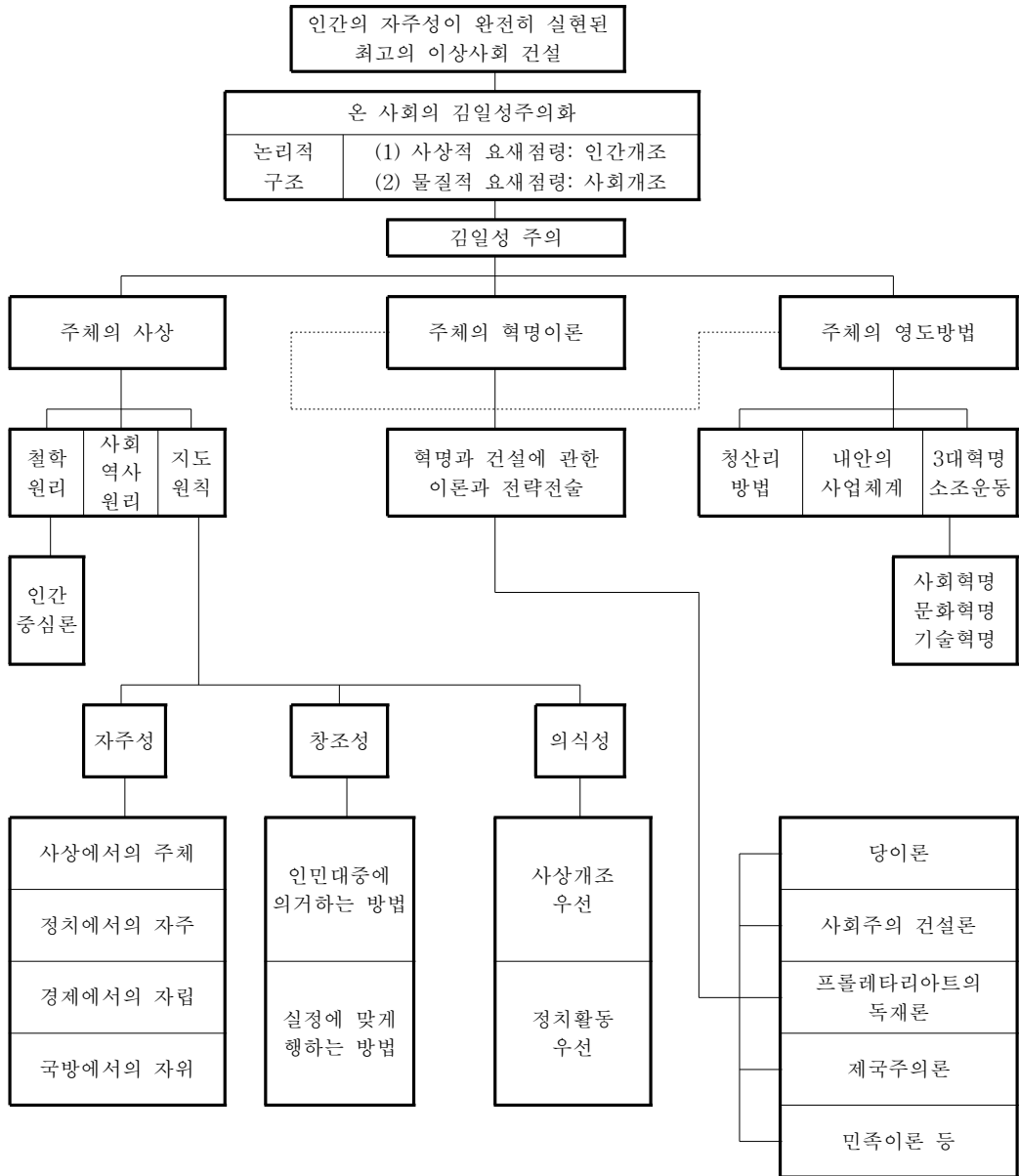
W. Norton, 1961 참조.

49) 좀 더 분명히 말하자면 ‘인간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50) 주체, 71.

른 한 가지 면은 우리가 개척한 인간중심사상을 왜곡한 부분이다. 이 세 가지 면이 이론적으로는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또 통일될 수도 없지만, 인간중심사상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수령절대주의 사상에 억지로 복종시키고 있다.”⁵¹⁾

<표 0> 주체사상의 이론 및 방법 체계



51)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한울, 1999, p. 374.

주체철학의 체계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전 조선로동당 국제담당비서 황 장엽의 위의 말은 주체사상의 지적기원 및 성격의 문제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물론, 인간과 인류에 충실한 인본주의자로 전환한 그가

“계급적 이익을 사회공동의 이익, 인류 공동의 이익 위에 내세우는 계급주의는 계급이기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계급이기주의는 지도자의 이기주의로 이어지게 마련이며, 그것은 다시 지도자에 대한 개인숭배와 개인독재로 집약될 수밖에 없다”⁵²⁾

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결국 주체사상은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당의 독재로 환치시켜버린 레닌주의와 당독재를 수령독재로 바꾸어버린 스탈린주의의 논리에 ‘인간중심철학’과 인민대중이 사회역사의 주체라는 사회역사원리를 종속시키고 있는 것이다.⁵³⁾

아무튼 주체사상의 주요 구성요소인 수령론에 관한 사항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에 자세히 나와있는데, 원칙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아래에 원칙만을 인용하여 본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7.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따라 배워 공산주의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8.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9.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일적 령도 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⁵⁴⁾

52) Ibid., p. 156.

53) 정성장,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와 성격”, 『북한연구학회보』, 제3권, 제2호, 1999, p. 258.

54) 김영주,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참조.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에서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본질적 속성으로 지적되고 있는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사회역사원리’와 ‘지도적 원칙’의 구성체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철학적 원리의 자주성은 사회역사원리에 적용되어 ‘인류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는 원리로, 창조성은 ‘사회력사적 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이라는 원리 그리고 ‘의식성’은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는 원리로 나타나고 있다.

역시 지도적 원칙에 적용되어 자주성은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창조성은 ‘창조적 방법을 구현하여야 한다’는 원칙, 의식성은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체사상은 수령님의 심오하고 다방면적인 사상리론활동의 고귀한 결실이며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것은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합니다.⁵⁵⁾

이러한 주체사상의 창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인민대중 속에 들어가 대중에게 의거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의 길을 걸으시였으며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야 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진리를 밝히시였습니다. 이것이 주체사상의 출발점의 하나입니다.…수령님께서서는 이러한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후과로부터 심각한 교훈을 찾으시고 혁명은 그 누구의 승인이나 자시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의하여 자기가 책임지고 하여야 하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진리를 밝히시였습니다. 이것이 주체사상의 다른 하나의 출발점입니다.”⁵⁶⁾

일찍이 초기혁명활동시기에 맑스-레닌주의에 정통하였으며 이를 조선혁명의 실천에 적용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확고한 주체적 입장에서 혁명리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고 말한다.⁵⁷⁾ 이러한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를 다음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55) 주체, 66.

56) 주체, 69.

57) 주체, 70.

3.2. 자주성의 존재로서 인간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⁵⁸⁾이라고 천명한 후 김정일은 사람의 속성을 “수령님께서서는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밝히시였”⁵⁹⁾다고 말하며 이 세가지 속성을 풀이하고 있다. 먼저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입니다. 자주성으로 하여 사람은 자연의 구속을 극복하고 사회의 온갖 예측을 반대하며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만들어냅니다. 사회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 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집니다. 육체적 생명이 생물 유기체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면 사회 정치적 생명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입니다.”⁶⁰⁾

즉 주체사상의 ‘자주성’ 강조는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최초의 정식화에 기초하며 이를 위하여 철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인류사회의 발전력사는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역사라는 것을 좀 더 분명히 하는데,

“인류역사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사람들은 사회적 예측과 자연의 구속에서 자신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여왔습니다.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고 인간을 개조하는 모든 투쟁은 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은 인민대중이 계급적 및 민족적 예측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정치적 조건을 마련하는 투쟁입니다.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살며 활동하려면 자주성을 짓밟고 억누르는 낡은 사회제도를 때려부셔야 합니다. 낡은 사회 제도는 없애고 사람들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사회제도를 세워야 인민대중은 사회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 수 있고 자주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⁶¹⁾

중요한 것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선차적인 문제를 ‘사회정치적으로 자주성을 실현’⁶²⁾하는 것이다.

58) 주체, 71.

59) 주체, 71.

60) 주체, 72.

61) 주체, 78.

“사람은 사회적 존재인것만큼 우선 사회정치적으로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회정치적으로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은 사람이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데서나 사상문화적발전을 이룩하는데서 열쇠로 됩니다. 인민대중이 사회정치적으로 예속되어있는 조건에서는 생산력을 발전시켜도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으며 반동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⁶³⁾

이를 위해 자본주의제도의 청산이 필요하며 새로운 사회주의 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발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한다.

“오늘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은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주성을 억압하는 제국주의세력이 국제적으로 연합되어있는 것만큼 제국주의의 지배와 억압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 역시 국제적인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과 인민들은 반제자주의 혁명적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공동으로 투쟁해나가야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불평등하고 모순에 찬 세계질서를 마사버릴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과 평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관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⁶⁴⁾

더 나아가 자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을 반대할뿐아니라 남의 자주성을 짓밟고 억누르는것도 반대하여야 진정 자주성을 옹호하는 참다운 입장에 섰다고 말할수 있다는 것인데,

“자주성을 짓밟는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끊임없이 강화발전되고 있습니다. 자주성을 요구하며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력사발전의 흐름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뿐아니라 미래의 력사적 시대도 전적으로 자주성을 위하여 싸워나가는 인민들에게 속합니다.”⁶⁵⁾

3.3. 창조성의 존재로서 인간

창조성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회

62) 주체, 79.

63) 주체, 79.

64) 주체, 80-81.

65) 주체, 83.

적 인간의 속성”⁶⁶⁾이며

“창조성으로 하여 사람은 낡은 것을 변혁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서 자연과 사회를 자기에게 더욱더 쓸모있고 리로운 것으로 개변시켜 나갑니다. 창조성은 자주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이룹니다. 자주성이 주로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로 표현된다면 창조성은 주로 세계의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역할로 표현됩니다.”⁶⁷⁾

나아가 사회력사적운동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 된다. “자주적인 생활을 위한 인민대중의 활동은 창조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활상요구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실현하여나가는 것입니다.”⁶⁸⁾

이러한 창조적 활동의 대상은 자연과 사회이다. 사람은 이러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물질적, 문화적 제도와 생활을 창조하는 것이다. 좀 더 인용하여 보자.

“인류의 역사는 인민대중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민대중은 창조적으로동으로 자연을 정복하고 자기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재부를 만들어 왔으며 낡은 것을 변혁하는 창조적 활동으로 사회적진보를 이룩하여 왔습니다. ...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적 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은 투쟁을 동반합니다. ... 특히 낡은 사회제도를 새로운 사회제도로 바꾸고 인민대중의 사회적 해방을 이룩하여나가는 과정은 치열한 계급투쟁의 과정입니다. 혁명은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납니다. ... 결국 인류가 전력사에 걸쳐 이룩한 모든 진보와 변혁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투쟁의 열매인 것입니다.”⁶⁹⁾

창조적 투쟁과정은 인민대중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것이다. 즉 ‘사회생산력의 발전력사는 자연을 정복하는 사람들의 창조적 힘이 장성하여온 역사이며 사회혁명의 역사는 사회를 변혁하는 인민대중의 혁명적 능력이 강화되어온 역사’⁷⁰⁾인 것이다.

인민대중의 창조적 능력이 장성하는데 따라 사회력사적운동은 더욱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로동계급에 의하여 조직전개되는 공산주의 운동이야말로 인류력사에 있어 가장 높은 형태의 창조적 운동이라는 것이다.

66) 주체, 72.

67) 주체, 72.

68) 주체, 83.

69) 주체, 83-84.

70) 주체, 84.

“공산주의 운동은 력사에 이미 있었던 모든 계급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른 인류의 최고리상사회,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운동입니다. 인민대중의 창조력도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에서 가장 높이 발양됩니다. 적대계급사회의 전기간 지배계급에 의하여 창조적 활동을 억제당하여온 근로 인민대중은 로동계급의 혁명운동, 공산주의 운동에 의하여 비로소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며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여나가는 력사의 참다운 창조자로 됩니다.”⁷¹⁾

이러한 창조성에 도식적인 관점과 교조적인 사고방식은 단연 창발성을 억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구체적인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고 모든 것을 창조적으로 대하는 입장을 지켜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옳은 방도를 찾아내고 그것을 능숙하게 구현하여나갈 수 있습니다. 창조적 입장은 교조적 태도를 버리고 독자적인 사고로 현실을 생동하게 구체적으로 파악하며 모든 것을 그에 맞게 풀어나가는 방법입니다.”⁷²⁾

즉 창조적 입장은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혁명운동이 심화발전된 우리 시대의 요구를 가장 훌륭히 실현할 수 있게 하는 혁명적 방법인 것이다.

3.4. 의식성으로서 종교성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⁷³⁾이다.

“의식성으로 하여 사람은 세계와 그 운동 발전의 합법칙성을 파악하며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발전시켜나갑니다. 의식성에 의하여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이 담보되며 그 합목적적인 인식활동, 실천활동이 보장됩니다.”⁷⁴⁾

원래 의식성은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존재로 되게 하는 가장 고급한 속성이다. 의식은 사람의 육체적 기관 가운데 가장 발전된 뇌수의 고급한 기능이다. 뇌수는 사람의 생명활동에서 중추의 역할을 하며 뇌수의 기능인 의식은 사람의 모든 행동을 지휘한다.⁷⁵⁾ 따라서 사람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

71) 주체, 84.

72) 주체, 85.

73) 주체, 72.

74) 주체, 72-73.

재로 되자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이며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입니다. 사람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져야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의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자주성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나갈 수 있습니다. 세계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조하여나가는 사람들의 활동은 다름아닌 그들의 의식성의 발현이며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투쟁에서 노는 사람들의 역할은 결국 그들의 사상의식의 역할인 것입니다.”⁷⁶⁾

아울러 혁명운동에서 발휘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투쟁력도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의지와 힘을 발휘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사상문제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만이 혁명투쟁에서 견결한 립장과 태도를 취할 수 있으며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투쟁할 수 있다”⁷⁷⁾

는 것이다. 사실 대중의 혁명적 능력은 무궁무진하지만 사상적으로 각성되지 못할 때는 높이 고양될 수 없다. 따라서 혁명운동의 가장 높은 단계인 공산주의 운동은 그 자체의 본질로부터 사람들의 높은 의식성을 요구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인민대중에 의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창조되는 사회입니다.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에서 사상의식의 역할은 비할바 없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기아와 몽둥이의 규률에 의거하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람들의 높은 자각성에 의거합니다.”⁷⁸⁾

이 부분에서 자본주의의 피해를 좀 더 분명히 지적하며 혁명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까지도 황금의 부속물로 만들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민대중을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하며 따라서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킬 수 있게 합니다.”⁷⁹⁾

75) 주체, 86.

76) 주체, 86.

77) 주체, 87.

78) 주체, 87.

이러한 사상적 측면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높여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적 방법이다.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의식화하여 그들이 스스로 투쟁에 떨쳐나서게 함으로써 혁명에서 승리하며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수행합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전체 인민을 각성시키고 발동시킬 수 있는 강유력한 사상적 무기가 있습니다. 자본가계급도 자기의 사상을 펴뜨리려고 애쓰지만 자본주의 사상은 인민대중의 리익과 근본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대중의 사상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로동계급의 사상만이 전체 인민에게 접수될 수 있고 온 사회를 유일적으로 지배할 수 있습니다.”⁸⁰⁾

결국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 하여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존재가 되며 이 세계에서 숙명이 아니라 혁명적으로, 수동성이 아닌 능동성으로, 또한 세계를 맹목적으로가 아닌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하게 된다는 것이다.⁸¹⁾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체사상에 등장하는 인간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 그리고 사회정치적 생명은 오로지 수령에 의해서만 올바르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개인 스스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이고 의식적인 존재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수령의 영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주체사상에서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은 오직 수령에 의해서만 보장을 받는다. 해체신학의 해체가 주체사상에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4. 테일러의 해체주의 신학

수령의 영도이든, 신의 섭리든 인간을 옴아매는 모든 권위와 권력으로부터의 탈주를 외치는 해체신학은 사실 니체어로 그 본원을 찾을 수 있다. 언어의 의미는 맥락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지적(willful) 견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 니체의 사상은 주체사상의 세 가지 모토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 가운데 의식성과 대화 가능하며 테일러에 이르면 이러한 의식은 방황(erring)하며 유목(nomad)하는 소멸된 자아로서의 의식성이다.

79) 주체, 88.

80) 주체, 89.

81) 주체, 73.

또한 니체가 제시한 초인(der Übermensch)은 인간의 초월적 가능성을 보고 전통적으로 인간의 삶을 저지하는 언어나 종교적인 것을 거부한바, 주체사상의 자주성과 대화 가능하며 테일러의 해체신학에서 새로운 신에 대한 글쓰기로 가능할 것이다.

사실 니체가 주장하고 있는 신의 죽음에 대한 선포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해되기는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에 대한 선언이라는 해석이 팽배하다. 즉 인간을 제한하고 기만하는 종교, 역사, 정치, 도덕 텍스트의 권위에 대해서 종말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껏 권위에 얽매어 있던 인간은 모든 정치, 도덕, 역사, 종교의 권위에서 새로운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준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은 테일러의 해체신학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신죽음의 시대에 신학의 새로운 가능성인 것이다. 이번 장은 이러한 테일러의 사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4.1. 포스트모던적 사유 방식

20세기 말 건축에서 시작되어 인문학 전반에 울려 퍼진 포스트모던의 음성은 기존 신학에도 새 시대를 예비하는 세레 요한의 음성처럼 구시대의 종말을 고하였다.

“21세기의 신학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일은 어렵다 못해 아예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서구 사회에서 비롯된 포스트모던 문화 충격이 전세계에 걸쳐 점점 더 일상화되어가는 오늘날의 이른바 후기 산업-후기 식민주의 시대에서 신학적 상황은 날로 혼탁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역사의 종말, 철학의 종말, 소유의 종말, 이성의 종말, 주체의 종말 등 전통 근대가 자랑하던 거의 모든 주제들 앞에 ‘post’라는 수식어가 차압딱지처럼 붙여지고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이 시점에서 ‘신학의 종말’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충격적이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듯하다.”⁸²⁾

더 나아가 유전자 조작과 로봇 공학을 통하여 사이보그 등 이른바 포스트휴먼(post-human)이라는 새로운 종이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듯하다.⁸³⁾ 이른바 이러한 포스트모던, 포스트휴먼 시대가 ‘기독교-이후’(post-

82) 배국원, “경계를 넘어 해체하자” 강봉균·박여성·이진우 외, 『越境하는 지식의 모험자들』, 서울: 한길사, 2003, p. 304.

83) 더 많은 논의는 사이버 현실과 사이보그 존재론을 거주 개념의 인식론적 확장으로 다나 해러웨이를 소개한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손수정·최병학, “사이버 거주개념의 인식

Christianity) 시대를 앞당기는가? 2천년 기독교의 전통은 몰락하고 사망하였는가?

놀라운 속도로 변화해 가는 오늘날의 문화 상황 속에서 많은 신학자들은 후기자유주의 신학, 종교다원주의 신학, 반기초주의 신학, 해체신학, 급진정통신학, 후기 보수주의 신학 등 다양한 신학을 선보이면서 전통적인 신앙을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신의 죽음과 신학의 종말을 최초로 예견했던 헤겔을 본받아 테일러는 문화철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근본적으로 ‘종교성이 문화 전반에 걸쳐 숨어있다’는 확신 때문이다.⁸⁴⁾ 사실 테일러의 「종교에 관하여」(About Religion)는 문화의 모든 것은 종교에 관한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테일러는 지구 재정 네트워크(global financial networks)에서 라스베가스의 카지노까지, 컴퓨터 단말 장치의 이미지의 사라짐에서 퍼포먼스의 쇠퇴까지, 예상 못한 신의 흔적을 찾는다. 영화 <Wall Street>를 통하여 멜빌의 「협잡꾼」(Confidence Man)을 읽으며 헤겔과 칸트를 통하여 사이버 공간과 라스베가스에 접근하며 문화 속에 신학적 자취를 찾고, 동시대 문화에 있어서 신앙은 불가피한 만큼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⁸⁵⁾

특이한 점은 테일러가 주목하는 장소가 바로 포스트모던 문화의 상징으로 등장한 환락과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라는 점이다. ‘라스베가스는 신의 죽음이 이 지상에서 신의 왕국으로 장엄하게 연출되는 장소’라고 테일러는 말하는데, 예수가 선포했던 천국은 훗날 저 세상에 완성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미 시작된 천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찌면 더 이상 높음과 낮음, 고상함과 천박함을 구별하지 않는 포스트모던 문화야말로 예수가 말했던 ‘근심하지 말라’는 기쁜 소식에 가장 충실한 문화일지 모른다. 그래서 라스베가스는 모든 차별이 해체되고 융화된 천국, 성서에 나오는 ‘사자와 양이 같이 뛰노는’ 왕국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상징이 된다는 것이다.⁸⁶⁾ 이 책의 인터넷 리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론적 접근: 사이보그 정체성의 페미니즘적 확장”, 「여성학 연구」, 제13권, 제1호, 부산: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03].

84) 배국원, op. cit., p. 309.

85) Mark Taylor, *Altari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참조. 관련 인터넷 자료는 다음을 참조. <http://www.frontlist.com/detail/0226791629> 이하 Taylor의 저서는 약어표시로 표기함. AT: *Altari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DT: *Deconstructing Theology*, The Crossroad Publishing Co. & Scholar Press, 1982; ER: *Erring: A Postmodern A/the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TE: *Tears*,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0.

86) 배국원, op. cit., p. 310.

“테일러에 의하면 종교의 의미와 힘은 쉽게 잡히는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종교에 바로 접근하기는 어려워서 테일러는 몇 가지 예상 못할 자료를 추구한다. 저 종교가 분명치는 않더라도 가장 흥미롭다고 주장하며 중요성을 탐구한다. 지구 재정 네트워크, 쇠조각, 라스베가스의 카지노, 그리고 컴퓨터 스크린의 이미지 소멸 등 우리 동시대의 다양한 관점을 탐구한다. 테일러의 신성이 21세기 문화에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해는 몇몇의 19세기 사상가인 헤겔, 멜빌과 칸트같은 이들에 의해 영향받는다. 테일러의 이러한 독창성과 허세적인(bravado) 특성으로 다시 한번 종교와 문화에 있어서 가장 저항하기 힘든 사상가 중의 한 명으로 입증된다.”⁸⁷⁾

포스트모던 문화의 다양한 측면들을 넘나들며 약간 허세가 있는 독창성으로 문화의 다양한 면을 종교적인 측면으로 읽어나가는 테일러는 이러한 실제 현실만이 아니라, 가상현실(VR)까지 가로지르기 한다. 그리고 사실 현란한 가상현실 테크놀로지로 장식될 라스베거스는 테일러에 의하면 심지어 신의 죽음과 신의 현존 사이의 차별도 극복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다.⁸⁸⁾

이러한 테일러의 광범위한 포스트모던 사유병식에서 다음장부터 해체신학의 관점에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4.2. 마크 테일러의 ‘주체의 소멸’

하버마스는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⁸⁹⁾에서 헤겔 이후 유럽 철학계에서 주체 문제를 다룬 철학자들의 계보를 작성하고 자기 자신의 ‘의사 소통적 주체 이론’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서들은 거의 미셸 푸코나 자크 데리다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해체주의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진 이들 주체 해체는 사실 데카르트 이후 강력한 힘을 가져온 ‘코기토’에 대한 반성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성은 프랑스의 사르트르와 같은 실존주의자들이 관념론적 전통의 옷은 이미 벗어버렸으나, 여전히 휴머니즘의 틀 속에 사유된 주체를 강조한 것으로 나타나곤 하였지만, 정작 독일 철학이야 말로 ‘주체의 절대화’를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체의 해체에 관한 논의가 발생할 수 있는 자리는 독일이라고 할

87) <http://www.frontlist.com/detail/0226791629>.

88) AT, 200-201.

13) Jürgen Habermas, *Der philosophische Diskurs der Moderne*, Frankfurt a.M.: Suhrkamp, 1985; 하버마스·이진우 역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서울: 문예 출판사, 1994 참조.

수 있는데 독일 철학은 칸트와 피히테, 셸링, 헤겔의 독일 고전 철학에서 주체의 절대화를 볼 수 있으며, 또한 자연주의와 역사주의를 비판하면서 초월적 주체를 내세운 훗설에게서 주체의 절대화를 살펴볼 수 있다.⁹⁰⁾

그럼으로 주체의 비판은 이 두 철학의 비판으로 시작되는데, 관념론 전통에서 거의 절대화된 주체를 포이에르 바하, 맑스, 키에르케고르, 그리고 니체까지가 독일 전통에서 일어난 최초의 주체 비판이다.⁹¹⁾

그리고 훗설 현상학의 초월적 주체를 해체한 하이데거의 비판적 작업이 두 번째의 주체 비판인데, 푸코나 데리다의 주체 비판이 훗설에 한정되지 않고, 데카르트 이후의 철학 전통, 아니 플라톤 이후의 형이상학 전통 자체를 문제 삼는 하이데거에 의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⁹²⁾

그러나 플라톤 이후 서구 형이상학에서 칸트, 헤겔, 훗설에 이르기까지 그 기본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사상의 가닥은 우리의 논의를 한정하기 위해 데카르트로 설정하여 본다. 기실 데카르트의 주체 이해는 새로운 시대의 전령이었다.

봉건제 속에서는 그 존재를 인정 받을 수 없었던 개념인 ‘코기토’를 봉건제에서 자본제로 이행하는 역사의 모퉁이에서 출현시킨 데카르트는 자신의 철학을 당시의 사상의 역사가 선택하는 ‘역사적 선택’의 순간을 갖게 된다.

이것은 봉건 사회를 유지하던 신중심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면 대결이며, 회의의 결과인 ‘생각하는 나’의 힘은 신분적 지배 원리를 무너뜨림으로써 탈봉건의 주체가 된 자본주의 사회의 시민의 기본 이념이 된다.⁹³⁾

“유럽의 근대는 신과 전통의 왕국에서 인간을 해방, 인간이 역사의 주체로서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을 성취함으로써 신에게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인간이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이성을 독립시켜 인간의 이성이 힘을 키워가는 과정”⁹⁴⁾

이며 또한,

“탈봉건의 출발점에서 ‘이성’의 이름은 시민을 억압해온 ‘전통에 대한 결별’, 인간을 해방시키는 ‘새것에 대한 감수성’(보를레르)과도 관계했지만, 이 이성이 인간을 주체로 내세워 서구 자본주의를 옹호하면서 이성의 왕국을 꿈꾸게 되는 상황에 다다랐을 때는 과학과 기술을 무기로 세계를 경제시장으로

90) 강연안, ■■■주체는 죽었는가■■■, 서울: 문예출판사, 1996, pp. 10-11.

91) Ibid., p. 11.

92) Ibid., p. 11.

93) 이주향, ‘포스트주의와 주체’ 이정우·김성기 외 ■■■프랑스 철학과 우리-현대 프랑스 철학을 보는 눈■■■, 서울: 당대, 1997, pp. 151-152.

94) Ibid., p. 154.

통합, 제 3세계 인간을 여전히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⁹⁵⁾

95) Ibid., pp. 154-155.

즉, 신분적 지배원리를 무너뜨렸던 ‘주체’가 제국주의적 지배 원리를 옹호하는 이론이 된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 주체는 해체되어야 한다. 이것은 주체 사상 비판에도 해당된다. 인간중심의 주체철학의 원리가 수령을 통한 지배논리로 변질될 때 그것은 해체의 대상이 될 것이다. 테일러는 주체의 자기 동일성을 신죽음의 미학, 지배의 심리학과 정복의 경제학, 그리고 나르시즘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다음장에서 좀 더 분명히 살펴보도록 하자.

4.3. 신죽음의 미학

전통적으로 인간은 세계와 인간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해오던 신의 죽음을 인간의 이름 아래 선포한다. 즉 전통 ‘신-학’을 ‘인간-학’으로 대치하는 ‘신학의 인간학적 전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포이에르바하의 말대로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신이며”(homo homini deus), 그래서 신학은 인간학인 것이다.⁹⁶⁾

그런데 이러한 휴머니즘적 무신론도 그것이 거부하였던 유신론적 신 개념과 마찬가지로 타자에 대한 “지배와 정복의 심리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휴머니즘적 무신론도 신의 이름으로 다른 타자를 부정하였던 유신론과 마찬가지로, 타자인 신을 부정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주체성을 주장하고 자신의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신을 부정하는 허무주의적인 타자 부정은 인간의 나르시즘적인 자기 주장으로 모습을 바꾸어서 부활하며 바로 여기에 극복의 대상으로써 모더니즘의 본질이 있다. 그러므로 완전한 전술적 해체주의는 신 죽음의 모티브가 철저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나르시즘적인 자기 주장의 주체인 자기마저 해체되어야 한다.⁹⁷⁾

신죽음의 미학으로써 해체의 미학은

“...서구 사상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신-자기-역사-책’을 해체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체 행위는 이들 연쇄고리가 의존하고 있는 로고스 중심주의를 근원에서부터 뒤흔드는 미학이다. 이렇듯 해체 작업의 뇌관은 바로 로고스 중심주의이므로 이 ‘로고스’, ‘중심주의’를 해체하는 일이 관건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로고스에 의해서 뒷전으로 밀려난 비(非)로고스의 회복이며, 중심주의에서 변방으로 밀려난 타(他)로서의 변두리의 복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심주의의 구심적인 획일화가 아니라, 변두리를 향해서 원심적으로 해체되어 변두리들의 차이를 존재의 범주로 삼는 다원주의의 미학을 신죽음의 미학의 완성으로 볼 수 있는

96) 김승철, “무주와 방황-즉비의 논리와 해체의 신학-”, ■■■종교신학 연구■■■, 8집, 서울: 서강대 종교신학 연구소, 1995, p. 183.

97) Ibid., p. 183.

것이다. 한마디로 그것은 로고스 중심주의가 빚어낸 대립 도식들 -이성과 반이성, 중심과 변두리, 동일성과 차이성, 현전과 부재, 초월과 내재, 거룩과 속세, 신과 세계, 인간과 세계, 역사와 자연 등등- 의 경계를 문질러 버리는 것이다. 그 경계를 문질러 버리기 위해서 해체의 미학은 모든 이분법의 경계를 따라가면서 일일이 지워버린다.”⁹⁸⁾

서구 사상사에서 신죽음의 논의는 단순히 지나가는 한 우연한 에피소드로써 잊어버릴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지난 200년 동안 유럽 역사 안에서 일어난 정신사적인 사건이요, 서양 문화사 의식의 발전이며, 그리스도교 전통을 전제로 하고 일어난 문제”⁹⁹⁾이다.

즉, 신죽음의 논의는 그리스도교적 토대 위에서 그리스도교의 신에 대한 항거, 고민, 또는 변증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계속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종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서구 정신사를 품고 있는 사고들의 문제이다.

1799년 피히테의 무신론 논쟁¹⁰⁰⁾이래, 하나님은 자연에 있어서 최고의 존재(summon)와 초월적 존재로 보는 전통적인 신개념(유신론)의 객관화와 신인동형론(anthropomorphism)으로써는 하나님의 무한성의 주장과 일치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관념론이 절대정신으로 그것을 대신했을 때, 포이에르바하는 그것을 상상의 하늘에 던진 인간의 본질의 상징적인 투사라고 했고, 니체는 이 비판을 ‘신의 죽음’이라는 말로 종합했다. 니체에 있어서 물론 신의 죽음은 2000년의 서양 역사의 운명인 형이상학의 종말을 의미했지만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교 하나님의 죽음을 의미한 것임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 즉 ‘신의 죽음’의 과정은 곧 현대화의 과정이요, 현대화의 과정 또한 ‘세속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신죽음의 선언은, 인간의 성숙의 과정의 성취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대에 있어서 신의 죽음은 인간의 적극적인 활동의 결과였다. 사실 신의 죽음은 인간에 의한 살해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원히 거주할 장소, 발디덤터를 잃어버렸다. 신을 살해한 니체의 미친 사람의 말대로 우리는 이제 무한한 허무 속을 방황(irren wir nicht)하는 것이다.¹⁰¹⁾

98) Ibid., p. 185.

99) H. Gollwitzer, *Von der Stellvertretung Gottes*, Zum Gespräche mit Dorothee Sölle, chr., Kaiser Verlag, 1968, S.133.

100) 피히테에 있어서 무신론 논쟁에 관한 그의 책들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Werke*, Vol.III(ed. Medicus), pp. 151-415, 특히 “Über den Grund unseres Glaubens an eine göttliche Weltregierung”, pp. 119-33을 참고 ; Hans Küng, *Does God Exist?* p. 137.

101) *ER.*, 19

그러나 테일러의 해체주의는 니체의 이 방황(irren)의 선포에서 새로운 시대가 동터움을 보는 동시에 방황이 참된 방황이 되기 위해서는 니체가 미완의 것으로 남겨놓았던 신 살해의 모티브를 철저히 진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로고스 중심주의에 대한 거부로서 해체주의는 더욱 철저한 ‘신죽음의 미학’으로 이어짐으로 미학적 차원을 갖게 된다.¹⁰²⁾

테일러는 해체신학을 “신 죽음의 해석학이고 신의 죽음은 해체의 무/신학이다.”¹⁰³⁾고 이야기하며, ■■■방황■■■(Erring)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해체주의는 신 죽음의 해석학이다. 이것은 포스트모던적인 무/신학을 위한 출발점을 마련해 준다.”¹⁰⁴⁾ 이러한 테일러의 ‘방황’¹⁰⁵⁾으로써 신죽음의 미학은 신죽음의 모티브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는 포스트모던의 새로운 양태이다.

“실수하는 사유(방황)는 신학적인 것도 비신학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유신론적이거나 무신론적인 것도 아니며 종교적인 것도 세속적인 것도 아니고, 신앙적인 것도 비신앙적인 것도 아니다.”¹⁰⁶⁾

주체사상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신죽음의 미학에서 자기 독자적인 해체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대화의 접촉점은 여기서 만난다. 또한 ■■■해체신학■■■(Deconstruction Theology)이라는 책에서 테일러는 포스트모던 신학의 무신론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신론임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은 종교적이며, 이러한 무신론적 종교성은 진정한 포스트모던 신학을 위한 출발점을 제공해 준다.”¹⁰⁷⁾

무/신학은 전통적인 유신론의 출발점인 신이나 무신론의 출발점인 인간을 모두 뛰어 넘어 제 3의 것을 추구한다. 그렇다고 해서 제 3의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직 발음되지 않지만 쓰여지는 “ / ”로써만 존재한다. “ / ”는 신학과 무신학을 한숨에 발음하고 붙잡으면서 동시에 신학과 무신학 양자 모두를 전도시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무/신학의 근거인 “ / ”은 신학과 무신학 양자의 근거를 모두 박탈하는 근거 아닌 근거이다.¹⁰⁸⁾

102) 김승철, “무주와 방황-즉비의 논리와 해체의 신학-”, p.181.

103) DT., x ix

104) ER., 6.

105) cf. 장 보들리아드에 의하면 방황의 장(場)은 사막이다. 왜냐하면 방황은 역사의 종언, 길의 종언이기에 역사가 끝나는 곳인 사막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추상화된 지도 위에서 영토가 썩는 것과는 달리 사막에서는 일체가 썩지 않는다. 지도가 없기 때문이다. Jean Baudrillard, *simulation*, 하태환 역, ■■■시뮬라시옹■■■, 서울: 민음사, 1992, p. 13.

106) ER., 11.

107) DT., x x.

테일러는 “/”을 “비변증법적 삼항”(nondialectical third), “불가사의한 삼항”(missing third)¹⁰⁹⁾ 등으로 부르면서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신학이 사유하는데 실패했던 유신성과 무신성의 “중”(between)의 사유¹¹⁰⁾를 찾아 나선다. 데리다는 이것을 “비근원적 근원”(nonoriginal origin)이라고 불렀는데, 테일러는 이러한 데리다의 철학적 작업을 주시하며 자신의 통찰을 얻고자 한다.

즉 데리다가 헤겔의 객관적 변증법과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적·주체적 변증법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로부터 통찰을 얻고자 한 것이다.¹¹¹⁾

결론적으로 이들의 작업은 둘다 헤겔이 말하는 ‘절대지’ 너머에 있는 ‘차이’와 ‘타자성’을 키에르케고르적인 통찰을 통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추구한 것이다.¹¹²⁾

4.4. 지배의 심리학(Psychology of Mastery)

테일러는 이러한 근대적 형태의 휴머니즘적 무신론을 지배의 심리학으로 이해하며 이를 비판하면서 그의 신죽음의 미학을 좀더 철저화 시키고 있다.

“근대적 형태의 신의 죽음은 휴머니즘적 무신론으로 나타났던 반면 포스트모던적 형태는 포스트휴머니즘적 무-신학(posthumanistic a/theology)을 지향한다. 인간의 이름으로 신을 부인함으로 휴머니즘적 무신론(humanistic atheism)은 창조자/피조물의 관계를 역전시켰으며 신학을 인간학으로 대치시켰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포스트휴머니즘적 무-신학은 이 전복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한다.”¹¹³⁾

왜냐하면 휴머니즘적 무신론자는 신의 죽음이 동시에 인간 자신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두 견해는 같은 방향을 취하고 있다. 그럼으로 완전하게 수행되어진다면 휴머니즘적 무신론은 자신을 부정하고 포스트휴머니즘적 무/신학으로 진행될 것이다.¹¹⁴⁾

108) 김승철, “무주와 방황-즉비의 논리와 해체의 신학-”, p. 182.

109) *TE.*, 79-81. 참조.

110) *TE.*, p.78.

111) *TE.*, p. 75. ; *AT.*, x x x. 참조.

112) *AT.*, x x vii.

113) *ER.*, 20.

114) *ER.*, p. 20.

테일러의 이러한 사고는 철저히 포스트모던적 사유방식과 데리다의 해체에 도움을 받고 있다. 그는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가 해체의 신학에 대해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을 더욱 철저한 해체의 미학의 정의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되돌릴 수 없는 상실과 치유 불가능한 방향에 대한 감정과 더불어 시작된다. 이 상처는 죽음-이 죽음은 신의 죽음에서 ‘시작’해서 우리들 자신의 죽음으로 ‘끝나’는데-에 대한 치명적인 자각에 의해서 입혀진 것이다. 우리들은 아무런 장소도 아닌 장소와 시간 사이에 있다. 여기에서 우리들의 사유는 ‘시작하여야’ 한다.”¹¹⁵⁾

테일러에게 있어서 이전의 신죽음의 신학은 초월과 내재의 이분법에 기초한 것이라고 한다. 즉 알타이저가 선언한 신죽음은 바르트가 선포한 초월적 신의 죽음인데, 사실 바르트는 초월적 신에 대해 급진적으로 긍정함으로써 서구 신학이 남긴 유산을 부정한다. 그러나 알타이저는 바르트의 부정을 부정함으로써 초월의 모든 흔적이 삭제된 급진적 내재를 긍정한다.¹¹⁶⁾ 그러나 알타이저는 신의 죽음을 선언할 때 현존으로 이해된 전통적인 존재 이해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알타이저를 테일러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알타이저의 논지는 바르트의 입장도 그 하나의 변이에 불과한 전통적인 유신론의 오해에 기초하고 있다. 전통적 유신론은 참된 존재(true Being)의 위치가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대해 내재적이기 보다는 초월적인 것으로 정의한다. 그러므로 알타이저의 시각에서 성육신을 통한 신의 전적인 현존은 타자의 죽음을 표시하며 현재 안에서 현존을 향유하는 바로 그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신의 죽음을 통해, 초월적 현존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전적으로 현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의 동일성이 인간의 동일성으로 완전히 나타나면, 차이와 화해되지 않은 타자성이 극복된다.”¹¹⁷⁾

신의 죽음으로 절정에 이른 모더니즘은 서구 사상의 전통적인 지배구조의 전복을 의미한다. 즉, 신의 지배 대신 인간의 지배를 택한 것이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러한 지배구조의 전복 대신 지배구조 자체의 해체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를 뛰어넘는다.

신의 지배 대신 인간의 지배를 대치시킨 근대정신의 핵인 휴머니즘적 무신

115) *ER.*, p. 6.

116) Mark C. Taylor, “The End(s) of Theology”, *Theology at the End of Modernity*, Sheila Greeve Davaney et., Philadelphia: Trinity Press, 1991, p. 239.

117) *Ibid.*, pp. 239-240.

론은 데카르트에 기초한다. 그의 작업은 이후 서양 철학의 흐름을 인식론 중심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근대의 인식론의 공통된 특징은 일종의 토대주의(foundationalism)로서, 철학의 제 1차적 목적이 지식의 확실한 기초를 제공하는데 있다는 생각이며, 그런 의미에서 인식에 있어 흔들리지 않는 ‘아르키메데스의 점’을 찾고자 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¹¹⁸⁾

근-현대 서양 철학사에서 지배적인 흐름이었던 이 같은 시도의 원류는 진리의 토대가 본질계에 존재하는 영원불변의 이데아들에 있다는 플라톤의 주장에까지 소급될 수 있으나, 고대 희랍의 사유와 구별되는 근대 인식론의 특징은,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으나 생각하는 나의 존재는 의심할 수 없다는 데카르트의 실체적 주체관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명증한 의식을 지니고 자연이나 실재를 반영-구성하는 주체는 인식의 원점이며 가장 중요한 자표라는 주체관은 데카르트의 ‘마음’을 시작으로 칸트의 ‘선험적 주관성’, 훗설의 ‘초월적 주관성’, 쉘러의 ‘대자 존재’ 등으로 조금씩 변용되지만 크게 보아 근대적 의식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¹⁹⁾

이러한 데카르트의 정초된 확실성으로서의 진리와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의 도화선이 되었던 ‘우리를 위한 하나님’(deus pro nobis), 그리고 자연을 자연 자체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물음에 대답된 합리적 자연으로서 자연을 다룬 자연과학의 등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즉 실재는 인간밖에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물음과 사유에 노정된 한에서만 존재한다. 그래서 데카르트에게 있어서는 신도 인간의 사유의 명증성과 확실성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진리의 인간학적 환원의 기초를 놓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근대 정신과 계몽주의 정신이 살해한 신은 초월적인 기독교의 창조자였다. 테일러는 자기원인(causa sui)이며, 제일 원인(prima causa), 또는 부동의 동자(the unmoved mover)인 신을 “자기성의 완전한 실현과 근원적인 근거로서 전적인 타자이고, 절대적인 타자(alterity)”¹²⁰⁾라고 말한다. 그러나 전적 타자로서의 신에 대한 표상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전적 타자인 비존재로서의 죽음에 대한 표상이다. 따라서 테일러는 데리다의 다음의 말을 인용한다.

“신은 그러므로 우리들로부터 우리들의 본성과 우리들 자신의 출생을 빼앗

118) 윤평중, ‘탈현대와 철학적 지평의 확대’, ■■■철학과 현실■■■ 가을호(서울: 철학문화연구소, 1990), p.225.

119) Ibid., p. 225.

120) ER., 23.

아가는 것에 대한 적합한 이름이다. 결과적으로 신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서 몰래 말한다. 그는 나 자신과 죽음으로서의 나 자신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은근히 심어주는 차이이다.”¹²¹⁾

그러므로 신의 죽음은 신이 당하는 죽음뿐만 아니라 신 자신의(God's) 죽음, 또는 신인 바의(God is) 죽음을 의미한다. 신은 죽음이고 죽음은 절대적인 지배자이다.¹²²⁾ 계속해서 테일러는,

“타자를 꿰뚫어 보는 눈은 부적합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동일성을 파괴시키기 때문이다. 자기와 타자의 거울 유희에서 자기는 타자에게서 반영된 자지 자신을 본다. 이 복제가 자기-소외를 야기 시킨다. 타자로서의 타자와의 직면은 타자로서의 자기와의 만남으로 이어진다. 권능자와 직면해서 자기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림을 깨닫는다. 왜냐하면 자기는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다.”¹²³⁾

라고 하는데, 이것은 근대 무신론적 휴머니즘의 신죽음이 절대 타자에 대한 부정이며, 인간 존재의 죽음에 대한 부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외를 극복하고 자기-소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노예는 주인을 거역하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반항한다.¹²⁴⁾ 왜냐하면 노예의 목적은 주인을 정복하는 것(mastery of the master)이고, 아들의 목적은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복을 위한 투쟁은 긍정과 부정을 결합시킨다. 자기(The self)는 타자를 부정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데 자기는 이것을 철저히 부정적인 용어로 여기게 된다. 결과적으로 반항하는 주체는 부정의 형태를 구체화하는데, 이 부정 안에서 동일성은 차이를 배제함으로써 자기를 확보한다. 정복의 ‘논리’를 밑에서부터 뒤집는 대신에 이러한 부정적인 활동은 단순히 그 끝을 반전시킬 뿐이다. 자기는 단순 부정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것은 비모순적인 동일성의 논리(noncontradictory logic of identity)에 묶여있게 된다. 이것이 논리의 비모순적인 동일성을 정착시킨다.”¹²⁵⁾

그리고 이러한 비모순적 동일성의 논리는 “타자 안에서 자기를 자각함으로써 자기는 타자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다. 주체는 타자를 본질적인 존재로 보지 못하고 타자 안에서 자기 자신만을 볼 뿐이다.”¹²⁶⁾

121) Jacques Derrida, *Writing and Difference*, trans. by Alan Bas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p. 181.

122) *ER.*, 23.

123) *ER.*, 23.

124) *ER.*, 23.

125) *ER.*, 24.

즉, 타자에게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공격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니체의 신 살해의 서곡이라고 할 수 있다. “노예는 주인을 자기 자신의 반대 급부로서 보지 않고, 주인을 독립적이고 완전한 자기로 인식한다. 그리고 그것은 노예 자신이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다.”¹²⁷⁾

독립적이고 완전한 자기 동일성인 주인을 살해함으로 노예는 주인의 완전성과 독립성을 찾으려 한다. 즉, 근대 신죽음의 수행은 인간의 자기 신성화인 것이다.

테일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인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려는 가운데 주체는 주인이 되려한다. 주인이 신이고 노예가 인간이라면 인간의 신 살해는 자기-신성화(self-deification)의 행위이다.”¹²⁸⁾

이런 맥락에서 프로이드의 외디푸스 콤플렉스의 본질은 바로 독립적이고 완전한 자기 동일성이며 자기 원인(causa sui)인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콤플렉스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부친 살해와 신살해, 여기에 신성과 인간성의 자리바꿈을 통해 인간성을 주체로 내세우려는 근대 정신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포이에르바하가 말한 ‘인간이 인간에게 있어서 신이고’(homo homini deus) 신학은 인간학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어적 논리, 비모순적 자기 동일성의 논리를 테일러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신성이라는 술어를 인간이라는 주어로 이동함으로써 휴머니즘적 무신론자들은 억압의 논리(the logic of repression)를 뒤집기는 하였지만(invert), 밑으로부터 철저히 뒤집는(subvert)데에는 실패하였다. 이러한 역전(inversion)에서 주인과 종의 문제는 풀려지기보다는 오히려 재배치되었다. 지배하는 신의 죽음은 이제 지배하는 자기의 탄생으로 변화했을 뿐이다.”¹²⁹⁾

왜냐하면 신의 반영으로서 인간 역시 철저하게 자기 동일성을 자신 안에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특히 근대적인 자율적 인간은 세계를 창조한 신과 마찬가지로 왕성한 ‘구성적 활동’을 통해서 신이 누렸던 저자(Author)의 권위(Authority)를 대신 향유한다는 것이다.¹³⁰⁾

126) *ER.*, 24.

127) *ER.*, 25.

128) *ER.*, p.25.

129) *ER.*, 25.

130) *AT.*, x x ii.

4.5. 정복의 경제학(Economy of Domination)

이렇듯 근대의 신죽음의 저변에는 자기의 탄생이 발생하는데, 신성과 인간성의 자리바꿈을 통해서 인간성을 주체로 내세우는 근대정신의 심리학은 정복의 경제학(economy of domination)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금 유용성(utility)과 소비(consumption)가 덕목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지배의 심리학이나 정복의 경제학은 정치적 식민주의나 전체주의로 변환된다.

왜냐하면 식민주의는 타자에게서 자기를 보는 일차적인 부정의 논리, 즉 타자를 부정해서 자기 안으로 흡수하는 논리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테일러의 다음의 말은 중요하다.

“정복은 차이를 소멸시켜서 동등하지 않은 것을 동일시한다.… 정복, 유용성, 소비, 적합성, 소유재산, 식민주의, 전체주의는 솔기(이음매, seamy)가 있으면서도 솔기없는 그물을 형성한다.”¹³¹⁾

다시 말하면 근대정신인 휴머니즘적 무신론은 신성과 인간성의 자리바꿈을 통해서 인간성을 주체로 내세우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의 확실성으로써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지배의 심리학이며, 정복의 경제학인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식민주의를 양산하고 전체주의적인 시각으로 타자를 지배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서구의 역사는 차이를 동일성으로 환원해 온 역사인 것이다.¹³²⁾

그러나 이러한 억압적인 주인은 자기를 분열시킨다. 따라서 주체의 분열은 자기의 소멸로 나타나고, 신죽음은 결국 인간의 자기 소멸로 귀결된다. 이처럼 더욱 철저한 해체의 미학은 자기 폐쇄적인 자기 동일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던 신의 죽음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신의 죽음은 신의 반영으로서의 인간의 죽음으로 구체화된다고 본다.

따라서 테일러는 “아버지 신의 죽음은 가부장제의 독재를 끝내지 못한다. 신성과 인간성에 대한 휴머니즘적 전도는 세속화된 전능한 아버지의 출현을 야기시킨다”¹³³⁾고 한다.

그리고, “정착되지 않은 타자성이나 성가신 이방인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서 지배하는 주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느낌으로써 이 세상에서 고향처럼 느낀다.”¹³⁴⁾ 수령의 영도가 아닌 주체의 자기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요

131) *ER.*, 28.

132) *AT.*, x x x iii.

133) *ER.*, 28.

원한 것일까?

4.6. 나르시스즘과 허무주의(Narcissism and Nihilism)

테일러는 이러한 지배의 심리학과 정복의 경제학을 나르시스의 서로 다른 얼굴로 표현한다. 왜냐하면 나르시스의 본질은 자기를 소유하려는 욕망이고 이것은 타자 속에서 자기를 봄으로써 타자를 소유하려는 욕망과 상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르시스는 차이를 부정하고 혐오한다. 따라서 지배의 심리학과 정복의 경제학을 기초한 휴머니즘적 무신론의 공격성은 근본적으로 나르시스적이며, 또한 역으로 나르시스주의는 무신론적이다. 그래서 테일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초월적인 자기 원인을 부정함으로써 나르시스적 주체는 자기 원인이 되기를 희망한다. 자기-소유의 목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아버지가 됨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는 죽지 않으면 안된다. 아들이 공격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해서 아버지와 동일시하듯이 휴머니즘적 무신론자들은 신을 죽임으로써 신의 자리를 찬탈하고서 신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물론 자기-신성화는 나르시스즘의 극단적인 표현이다. 이 나르시스즘은 궁극적으로 허무주의적이다.”¹³⁵⁾

따라서 신의 죽음은 철저한 의미에서 인간 자신의 죽음으로 귀결된다. “외부가 언제나 내부이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는 영원히 자기 자신 밖이다.”¹³⁶⁾ 따라서 주체의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간격과 허공은 타자를 소유함으로써 메워지는 간격이 아니다. 그것은 타자에 의해서이건 자기 자신에 의해서이건 자아와 타자에 대한 이분법이 존재하는 한 사라질 수 없는 영원한 간격이다. 그러므로 이 간격은 주체를 분열시킨다.

“억압적인 주인과 매력 있는 악마는 주체를 분열시킨다. ... 내적인 타자에 의해서 부과된 분열과 팽창은 자기 소유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전적인 만족이 불가능함을 드러내준다. 분열된 주체는 자신이 결합하고 분리시키는 극단 사이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 주체의 분열은 자기의 소멸로 귀결된다. 결국 나르시스는 그의 거울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¹³⁷⁾

134) ER., 29.

135) ER., 30.

136) ER., 31.

137) ER., 31-32.

따라서 신의 죽음은 결국 신을 살해한 인간의 자기 소멸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테일러의 말을 들어보자.

“자기 소유에 대한 추구는 타자에 대한 합병의 형태를 취할 뿐만 아니라 동일성으로부터 차이를 제거하려는 자아의 노력 속에서 표현된다. 그의 통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배하는 주체는 타자에 의한 침입과 폭력, 그리고 오염을 막아야 한다고 확신한다. 공격적인 제스추어는 자기가 타자를 부정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방어적인 전략이다. 그러나 이 행동(또는 반작용)은 자기 모순적이다. 타자를 부정함으로써 자기는 스스로를 부정하기 때문이다.”¹³⁸⁾

그러므로 근대 휴머니즘적 무신론은 스스로가 의도하는 바를 철저하게 수행하지 못한 ‘부분적인 허무주의’(partial nihilism)일 뿐이라고 테일러는 비판한다.

“휴머니즘적 무신론자들은 그가 반작용하는 전통적인 가치들을 전복시켰다. ‘신에 대한 사랑’을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바꾸려는 노력에서 휴머니스트들은 ‘피안 적인 진리’를 ‘차안적인 진리’로 변환하기를 희망하였다. 하늘과 땅의 전복은 결과적으로 신적인 것으로부터 인간적인 것으로 가치를 옮겨 놓았다. 중심을 잃어버린 데에서 발생하는 방향상실을 겪는 것과는 반대로 근대의 휴머니스트들은 자기의 지배성에 집착하였다. 가치에 대한 휴머니스트들의 비판은 진리의 기능과 가치의 가치를 묻는 극단적인 점에까지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 근대 휴머니즘적 무신론의 허무주의는 불완전하며 따라서 부적절하다.”¹³⁹⁾

그리고 신죽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테일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늘이 어두워졌을 때, 신이 사라져버렸을 때,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자율적으로 홀로 서 있지 못한다. 오히려 인간은 세상 밖에서 스스로 서기를 그만 두어야 하며, 자율적이고 개별적이기를 그만 두어야 한다... 초월적인 신의 죽음은 자율적인 자아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절대 주권자이며 초월적인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성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¹⁴⁰⁾

또한 테일러는 자신의 논의를 자아의 소멸과 역사의 종말, 그리고 책의 닫힘¹⁴¹⁾으로 이끌기 위해 허무주의를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

138) *ER.*, p. 32.

139) *ER.*, 33.

140) *ER.*, p. 33

141) 이 부분은 우리의 논의를 벗어나기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는다. 그러나 간략하게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테일러는 신의 죽음을 인간의 죽음으로 연결시킨다. 왜냐하면 인간은 주권적인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ER., 33) 인간 자아상의 근거에 초월적인 절대적 자아인 신의 형상이라는 신학적 형상이 잔재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인간적 자아의 근거인 신적인 절대적 자아의 죽음은 모든 자율적 자아의 죽음과 모든 인간성의 죽음을 구현한다. 인간의 자기(self)는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신과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다. 창세기 1:26-27에 의하면 신은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였다. 따라서 인간이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 속에는 인간과 신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신학적 사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자기(self)를 해체하는 것은 신죽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또한 역사라는 개념 역시 신개념과 자아 개념을 갖는다. 기독교 중심인 서구에서 역사란 단지 신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로고스 중심주의적이다.(ER., 53) 로고스의 역사이해는 역사적 사건이 수수께끼적으로 나타나나, 사건의 표면적 혼돈 아래에는 이성과 질서가 있다는 신념이 깔려 있다. 사건들은 우연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이 아니다. 의미 있는 형식을 형성하고 분별 있는 방향을 가진다. “신적 로고스는 처음과 중심과 종말을 연결하여 정합적인 전체(a coherent totality)를 이루는 실(thread)이다.”(ER., 61) 이러한 로고스적 역사이해에 대조하여 테일러는 희랍적 역사 이해를 제시한다. 희랍적 역사이해에 의하면 희랍 신화에 나오는 ‘아리아드네의 밧줄’처럼 역사란 하나의 시학(poetics)이다. 즉, “역사란 자서전처럼 창조적 상상력의 작품으로 나타난다.”(ER., 66) 상상력은 재생산적일 뿐 아니라 생산적이다. 생산적 상상력은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부분들은 하나의 새로운 전체로 형성한다. 따라서 역사가 이야기를 포함하는 만큼 역사는 문자적이 아니라 문학적이다. 아리아드네의 밧줄은 시적인 줄이다. 그리하여 시작, 중간, 끝, 그리고 연결적인 이야기의 줄은 상상적인 언어 양태에 의존하는 시적 구성이다.(ER., 67) 따라서 테일러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그럼으로 로고스적 역사 이해를 비판한다. 역사, 이야기, 서사에서 상상력의 행위를 감안한다면 “로고스는 개시되기보다는 고안되었고, 발견되기보다는 창조되었다.”(ER., 68) 따라서 역사의 종말은 초월적 신의 죽음과 주권적 자아의 소멸을 전제한다. 그래서 테일러는 역사의 무의미성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역사에 로고스적 서술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헤겔이나 어거스틴적 역사에 대한 거대한 서술은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된다.

현대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문학작품은 ‘책의 불가능성에 대한 책’인데, 테일러는 책의 관념을 데리다로부터 빌려온다. “책의 관념은 유한하거나 무한하거나 총체성의 관념, 지시자의 관념이다.”(ER., 77) 책이란 단지 두 표제들(cover)사이의 깃눌린 잎들의 집합이 아니다. 책은 모든 부분이 하나의 유기체의 지체로서 통합되어 연관되는 살아 있는 전체이다. 책은 질서 있는 전체성을 형성한다. 그만큼 책은 역사와 같이 로고스 중심적이다.(ER., 77) 책은 그 자체 속에 닫혀 있는 지시자의 유기적 총체성이다. 책은 그것의 완전한 표현은 ‘백과전서’에서 성취하고 있다. 서구의 신학은 이러한 책의 관념에 의하여 체계화되었다.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책의 중심이 성육신한 로고스이다. 이 전지전능한 로고스는 조직신학자들의 책을 구조화시키는 기초이다. 의미의 고유성은 책의 단음의 기능이다. 단음은 로고스의 현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책중 성공적인 책은 결작인데, 테일러는 “결작은 종결된 전체 또는 완전한 전체가 아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릇되고 불가피하게 열려 종결된다.”(ER., 90) 그러므로 책의 성공은 책의 실패이다. 여기서 테일러는 데리다를 따라서 책의 관념에 대한 철학적 해독의 기술 원리로서 텍스트 개념을 제시한다. 텍스트는 책과 전혀 다른 지대에 속한다. 텍스트에는 고정되어 있는 현실적 중심이 없다. 또한 텍스트 안에서는 어떤 고정된 중심이 없다. 그러므로 중심의 부재는 주체의 부재, 저자의 부재이다. 책을 텍스트로 볼 때 모든 중심은 사라진다. 여백이나 간격을 중요시 한다. 따라서 전통적 철학적 해석이 팽개쳐 놓은 각주나 또는 행간 같은 여백에 책의 공식적인 검은 글씨의 장엄한 의미를 해

“허무주의는 약함의 징표이거나 강함의 표지이다. 손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근대 휴머니즘적 무신론의 허무주의는 약함의 징표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박는 것을 괴로워하는 글쓰는 이에게 있어서 허무주의는 십자가의 표지이다. 끌고다에서는 신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역시 사라져 버린다.”¹⁴²⁾

이 경지가 진정 주체의 완전한 해체가 아닐까? 따라서 주체의 소멸은 자기의 죽음, 자아의 소멸이며 그 때만이 주체의 새로운 위상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때 주체사상의 주체의 이해가 이러한 해체신학의 주체 해체를 만나 자신의 사상을 좀 더 확장 할 때 진정 인간중심의 사상이 되지 않을까!

4.7. 해체신학

마크 테일러의 사상은 전기의 해체주의 사상과 중기의 포스트모던 전반에 나타난 종교의 의미, 그리고 후기의 사이버 스페이스 존재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기가 해켈, 키에르케고르, 데리다 등의 서구 사상가와 용수(龍壽)와 교토(京都) 학파간의 대화를 통해 포스트모던 무/신학(postmodern A/theology)을 드러낸다면 중기의 사상은 문학, 건축, 미술, 예술 등의 문화 전반을 거쳐 사이버 영지주의를 다루며 기존 존재론과 인식론의 영역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그리고 후기에 와서는 복잡성의 원리를 통해 카오스의 사유를 모색하는 듯 하다. 그러나 전기와 중기, 그리고 후기를 계속해서 잇고 있는 사상의 틀 거리는 혼적이다.

“방황은 끝없다”¹⁴³⁾는 테일러의 말처럼 해체주의는 헤어나올 수 없는 미로 속에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경계를 넘는 해체의 가로지르기의 사유이다. 존재의 한계를 철폐시키고, 타자로의 끊임없는 연기 사슬 속으로 끊임없이 방황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의 죽음, 자아의 소멸, 역사의 종말, 책의 단힘의 결론은 신은 글로 써, 자아는 혼적으로, 역사는 방황으로 책은 텍스트로 대체되는 것이다. 이러한 해체주의 신학은 전통 신학의 개념들을 하나의 의미론적 현상으로 환원시키고 있으며 이 하나의 의미론적 현상도 일의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애매하며 끊임없이 표류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모든 목적과 구원은 기대할 수 없으며 디오니소스가 그

체한다. 즉, 해체주의는 완결된 정체성을 요구하는 책의 종결을 선언하고 무한한 산종과 해석을 가능케 하는 텍스트로의 개방을 선언한다.

142) ER., 33.

143) ER., 184.

리스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디오니소스적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산중을 통해 단어의 구현, 즉 글쓰기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글이란 신의 길이다. 신의 길이란 반복적인 단어의 무한한 유포이며 여기서 인격적 신은 하나의 해체론적 의미의 현상으로 환원된다.

이러한 해체론적 의미의 현상으로 환원된 후 드러나는 흔적, 그 관계망 속의 흔적은 하나의 의미의 고정된 주체성을 넘어 상호 텍스트성인 연기의 관계망 속에 새로운 관계론이 성립하며 해체주의 윤리학이 드러나는 것이다.

니체에 의하면 세계는 예술작품이며 신의 죽음에 따른 위기의 결과로 스스로 태어난 작품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작품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모험적 글쓰기이다. 사실 ‘짜라투스트라’로 대표되는 창조적 인간은 글쓰기라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언어자체가 됨으로 해서 일종의 음악적인 세계와도 같은 디오니소스성을 경험한다는 것이다.¹⁴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하나의 틀 속에서 사고하기를 강요하는 철학의 갑갑함에서 예술적 탈출구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주체사상의 차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의 이해는 이렇듯 맥락에 따라 해방운동을 지향하지만, 방편으로써의 차이, 혹은 그 종착점은 스톱의 영도라는 외부적 요인 때문에 이렇듯 다른 것이다.

5. 해체신학과 주체사상의 지평융합

이번 장에서는 해체신학과 주체사상을 지평융합시키기 위한 몇가지 논점을 살펴볼 것이다. 앞서 주체사상과 해체신학을 소개하며 나름대로의 접촉 가능성들을 제기하였지만 이 장에서 분명히 드러낼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두 사상과 신학의 인간이해, 나아가 생명이해에 관한 것이 대화 가능성으로 제기될 것이다.

주체사상과 해체신학은 모두 포스트모던 시대에, 신죽음의 시대에 인간 이해의 새로운 가능성으로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사람을 사회적 관계에서 보며 동시에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사람의 본질적 특성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확립한 주체사상은 인간 이해에 있어서 사회역사성을 부각시킨 점에 있어서는 탁월한 평가를 받을 만하다.¹⁴⁵⁾

144) 앨런 메길, 정일준·조형준 역, 『극단의 예언자들: 니체, 하이데거, 푸코, 데리다』, 서울: 새물결, 1996, pp. 177-178.

145) 중요한 것은 본 논문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관점이 아닌 주체사상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학문적 성과를 토대로 한 것이기에 사상적 차원의 대화는 그 어떤

해체신학 역시 근대성의 문제를 그 시점으로 나름대로 새로운 인간이해, 신이해를 우리들에게 던져준다. 거기에는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성육신의 원리, 즉 신의 위(位)를 해체하고, 나아가 인간의 위(位)까지 해체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해체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는 창세기를 통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기독교의 성육신은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인간학적 선언’이며¹⁴⁶⁾, 이는 동시에 인간중심주의적이며 주체적인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창세기의 창조설화가 당시 세계관에서 성서의 중심사상인 인간학적 전환을 잘 말해주고 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두 가지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창 1:1-2:4 상반절 까지이다. 여기서는 신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세상이 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설명한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았고 아무 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창1:2)

신은 온통 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나타나 그의 창조 행위를 시작하신다. 첫 번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인간에게 마른땅을 내어주기 위해서 물을 제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느님께서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하시자 그대로 되었다”(둘째날 창조).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있는 물이 한곳으로 모여, 마른땅이 드러나거라’하시자 그대로 되었다”(셋째날 창조). 이렇게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신은 인간의 삶을 위하여 물을 제거하고 마른땅을 내어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반면 두 번째 창조 이야기(창세기 2장 4절b 이하)는 창조전의 세상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야훼 하느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였다. 땅에는 아직 아무 나무도 없었고, 풀도 돋아나지 않았다. 야훼 하느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신은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메마른 황야에 나타나신다. 그의 창조 행위는 마른땅에 물이 솟구치게 하고, 에덴에서 강 하나가 흘러 나와 그 동산을 적신 다음 네 줄기의 강으로 갈라져 온 땅을 적시게 하는 것이다.(창세기 2장

이념의 장벽을 넘어선다.

146) 요한 복음서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ὁ λόγος ἐγένετο σὰρξ, 1장 14절a)라는 선언은 신적 로고스의 인간학적 선언이다. 즉 ‘육신’은 구체적인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번역 성서」는 육(肉)대신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다.

6-14절) 신의 창조 행위는 마른땅에 물을 솟구치게 하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역할이다.

이렇듯 두 가지 창조 이야기가 다른 이유가 있다. 처음의 창조 이야기는¹⁴⁷⁾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 강가에 잡혀와 포로 생활을 할 때 형성된 창조 이야기이다. 이들이 거주하던 곳은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하류의 범람지역으로 홍수가 나면 그들이 애써 가꾸어 놓은 온갖 삶의 터전이 폐허가 되고 물바다가 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인간에게 마른땅을 내어 안락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으로 신을 고백한 것이다.

반면,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¹⁴⁸⁾ 메마른 가나안 지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가나안 땅은 사막 지대로 물이 귀한 땅이다. 드물게 있는 샘과 오아시스는 그들의 삶의 귀한 젖줄이었다. 여기서의 신의 창조는 반대로 샘이 솟게 하고 강이 흐르게 하신다. 신은 역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해주시며 인간의 삶에 적합한 자연 환경을 창조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분으로 고백된다.

이러한 인간학적인 선언이 서구신학에서는 인간중심주의로 빠져 서구 신학은 자연을 배제한 채, 신과 인간의 양자 사이의 관계 속에서만 “하느님의 구원”을 보아 왔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도 신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거나 죄의 기원과 인간의 타락, 여기에 대비한 신의 구원계획 등에 주목하여 왔다.

그러나 철학적 사변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서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창조신앙은 인간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신의 구원 행위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의 창조역사는 계속된다. 성서의 창조 이야기는 자연을 배제한 채 인간의 구원을 말하는 것을 거부한다. 성서는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사 고했던 대로 신-자연-인간의 삼자의 관계 속에서 신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¹⁴⁹⁾

서구신학은 “땅을 정복하고 부리라”는 말을 착취와 정복의 뜻으로 해석하여 자연을 철저하게 이용할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근대에 와서 서구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식민지 침략을 정당화시키는 데 이 말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서

147) 오경을 구성하는 자료 층의 하나로 바빌론 포로기 시대에 사제계 저자들에 의해 쓰여진 문서라는 점에서 Priestly Writing의 앞 철자를 따서 P자료라고 부른다.

148) 야훼 문서에 속하는 자료인데, 야훼 문서는 다윗과 솔로몬 때, 통일왕국을 형성한 후에 이스라엘의 전통과 역사적 우수성을 밝히기 위해서 모은 것으로 후에 오경의 주요 자료 중 하나이며, 야훼 또는 야훼주의자(jahweh/jahwist)의 독일어 첫 철자를 따서 J자료라고 부른다.

149) 맥락은 다르지만 ‘자연이 훼손되고 오염된 상태에서는 인간의 구원이 성립될 수 없다’는 생태신학 역시 주체사상과의 대화를 통해 주체사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중심은 곧 지구 중심, 생명중심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구인들이 자연을 남용하는 신학적 근거로 삼아 온 “땅을 정복하고 부리라”는 말에는 본래 ‘정복하다’(kabash), ‘부리라’(radah)란 동사가 쓰인다.

그러나 이 동사의 본래의 뜻은 “조화로운 통치를 상징하는 왕권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을 ‘하느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말이다. 착취와 남용, 파괴의 오용이 아니라 번성하도록 능력껏 잘 돌보아 주고 지켜 줄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것은 선한 왕으로서 다스리라는 말이지 폭군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절단하고 마음대로 변조하라는 말이 아니다.

브루그만(W. Brueggemann)은 창세기 1:28의 5개의 짧은 형식의 명령어는 바빌론의 포로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한다.¹⁵⁰⁾ 이 명령어들은 전승자가 겪은 가난과 패배와 절망의 포로 생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각각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반대적 논박으로 표현될 때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고 한다.

자식을 낳는다 - 더 이상 자손이 부족하지 않음
 번성하다 - 더 이상 황폐하지 않음
 온 땅에 퍼지다 - 더 이상 땅에서 유리되지 아니함
 정복하다 - 더 이상 종속되지 아니함
 부리다 - 더 이상 지배받지 아니함

이러한 선포는 가정을 잃고 뿌리를 잃었으며 나라와 전통으로부터 유리된 포로 상태의 백성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 것이었다. 이 다섯 가지 동사는 희망을 상실한 역사적 상황에 대한 놀라운 도전이며, 하느님의 근본적인 의도가 복지와 번영을 증진시키는 것임을 주장하고, 하느님은 인류의 창조를 완성하며,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분이심을 투쟁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철저히 인간학적인 선언에 기초하는 것이다.¹⁵¹⁾

아무튼 주체사상의 인간 이해의 핵심인 자주성이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으로서 세계와 자기 운명의 지배자로서의 지위를 규정하는 속성이라면, 따라서 사람에게 자주성은 생명이라는 견해에 동의한다면, 신학에 있어서 자주성은 신의 형상을 수여 받은 인간으로써 자주적인 존재임을 이야기한다. 동시에 생명을 주신 신의 의미는 ‘인민에게 아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수여자로 기록될 것이다.

150) 한국신학연구소 성서교재위원회, 「함께 읽는 구약성서」,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1, pp. 26-27 참조.

151) ‘인간학적 선언’과 ‘인간중심주의’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모두 인간에 관점을 두나, ‘다른 것을 배제하지 않고 인간을 위하는 것’과 ‘모든 것을 배제한 인간 중심’, 그런 차이를 나타낸다.

사실 근대신학의 인간의 자주성은 중세의 신의 영역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자긍심을 세웠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긍심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와서 근대의 병폐를 이끌어 온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데, 자주성이 신 앞에서 자주성이 될 때 그것은 참다운 자주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신학은 이러한 인간 이해를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창조성은 목적 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으로서 세계의 개조자, 자기 운명의 개척자로서의 인간의 역할을 규정하는 속성이다. 이것은 해체신학에 있어서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이름짓기’¹⁵²⁾가 신의 목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기에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창조성은 내면의 외면에 대한 관계로 흔적을 사유할 수밖에 없다.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회적 속성으로서 인간은 이러한 흔적으로써의 신과의 영적인 관계적 사유 속에 한계 지어져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속성으로서, 의식성으로 말미암아 자주성과 창조성이 담보되고 그 합목적적인 인식, 실천활동도 보장된다. 따라서 인간의 자의식은 모던적 신의 해체 이후 포스트모던 시대의 새로운 신적 의식으로 고양될 때, 진정한 자아 실현이 되리라는 것이 해체신학의 본래의 목적이다. 여기에 주체사상의 역할이 기대되는 것이다.

6. 결론: 종교를 통한 남북대화의 접촉점 모색

종교를 통한 남북대화의 접촉점은 인간이해, 나아가 생명이해에 있어서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이다. 그리고 이것은 더욱 확장하면 평화의 개념으로까지 나아간다. 평화의 개념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등의 세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구약성서에 나오는 히브리어 샬롬(shalom)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가 제거된 상태로 심리적이고 긴장이 없고 마음이 평온한 상태,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갈등과 분쟁이 없이 안정된 상태, 정치적 폭압이 없고, 인생의 보람과 살맛을 느끼며 창조적인 자기의 삶을 영유하는 상태로 대단히 포괄적이고 생동적인 의미를 갖는다.¹⁵³⁾

152) 창세기의 아담을 통한 천지만물의 이름짓기

헬라어의 에이레네(eirene)는 고대 희랍 사회의 배경을 둔 평화 개념이다. 희랍의 도시 국가들은 서로 경쟁 대립 상태에 처해 있었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쟁과 싸움 사이에서 아직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중간 시기에 유지되는 평온, 이 시기에 향유하는 인간의 행복을 에이레네라고 말한다. 즉 평화라고 하지만 불완전한 평화인 것이다.¹⁵⁴⁾

라틴어의 평화인 팍스(pax) 개념은 제국주의의 평화개념이다. 이것은 살롬과 대단히 거리가 먼 개념인데, 로마 당시의 평화개념을 대변하는 ‘팍스 로마나’(Pax Romana)가 이 개념을 잘 설명한다. 즉 글자 그대로 ‘로마 제국의 평화’를 의미하는데, 로마 사람들은 당시 주변 국가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흥망성쇠가 난무하는 정치, 군사적 세력들에 의하여 시달려야 했다. 강력한 황제가 나타난 주변 세력을 정복하여 승리하고 제압하여, 전쟁을 평정하고 평온을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을 안정되게 함으로 로마 시민들은 제왕 덕분에 평화를 향유할 수 있었다.

팍스와 에이레네를 넘어선 살롬의 평화, 생명이 생명답게 존중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남과 북의 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주체사상이 평화를 기반으로 하는 인간 중심의 사상이 될 때 그 대화는 온전히 이뤄질 것이며 해체신학의 모든 권위와 제도에 대한 저항과 만나야 할 것이다.

사실 1998년 북한의 개정헌법 서문은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 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 령도하시어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시었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시하였다”¹⁵⁵⁾

이는 김정일 시대에도 유효한 통치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수많은 북한의 주민들이 이러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의식화되어 살아가고 있기에 그 문제점을 외부의 시각으로 평가하기란 성급한 결론을 도출할 염려가 있다. 다만 주체사상의 수령론이 독재이론으로 변질될 요소를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아래의 인용할 것인데, 수령의 령도 문제로, 물론 ‘당-수령-인민’의 삼위일체적인 연관성을 전제한다면¹⁵⁶⁾ 자본주의 체제하의 우리들의 인식과는 다를 수 있지만...

153) J. Galtugn,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들녘, 2000. 갈통은 평화를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차원의 네가지로 분류하고, 평화개념이 문화적 차원에까지 이를 때에 진정한 의미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154) 휴전과 정전 상태에서 우리는 평화가 이에 해당된다.

15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로동신문」, 1998년 9월 6일자.

“혁명운동, 공산주의 운동에서 지도문제는 다름아닌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문제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최고령도자입니다. 인민대중이 어떻게 혁명적으로 의식화, 조직화되는가, 어떻게 자기의 혁명임무와 력사적 사명을 수행하는가 하는 것은 당과 수령의 올바른 령도를 받는다 못하느냐 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올바른 령도를 받아야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심각한 복잡한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려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으며 그를 옹호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¹⁵⁷⁾

이는 황장엽도 언급한바 ‘전체주의와 봉건주의를 결합시킨 수령절대주의’가 주체사상의 진수라는 것이다.

“수령절대주의는 아무리 좋은 말로 미화해도 군주제도를 절대화한 것 밖의 다른 것이 될 수 없으며 이 점에서 봉건전제주의의 변종이라고 볼 수 있다. 봉건주의가 과학적 분석과 논리를 부정하고 무조건적인 신봉과 지지를 요구한 것처럼 수령절대주의는 보편적 진리에 의한 과학적 분석을 거부하고 수령을 무조건 숭배하고 수령에게 무조건 충성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¹⁵⁸⁾

계급독재와 수령독재를 정당화하는 부분에 관하여 황장엽도 언급한바,

“북한 통치자들에게 있어서 계급적 입장을 버리는 것은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적 입장을 버리는 것이며 노동계급의 당의 수령의 절대적 지위를 버리는 것으로 되어 그들의 사활적인 이익과 대치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북한 통치자들은 사회적 운동의 주체가 인민대중이라는 명제를 계급주의와 수령절대주의에 맞게 왜곡했다. 그들은 인민대중의 이익은 노동계급의 입장이며, 노동계급의 참다운 이익을 옹호하는 입장은 곧 노동계급의 당의 입장이며, 노동계급의 당의 이익을 이상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은 곧 수령의 입장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북한 통치자들은 ‘사회적 운동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다’라는 명제를 ‘사회적 운동의 주체는 노동계급이며 노동계급의 당이며, 노동계급의 수령이다’라는 명제로 바꾸어 놓았으며 ‘인민대중의 입장이 곧 수령의 입장’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¹⁵⁹⁾

156) 이런식으로 기독교와 주체사상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것은 표피적이다. 김일성의 외할아버지 강돈육이 교회 장로였고 어머니 강반석의 반석이 베드로를 의미한다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157) 주체, 77.

158) 황장엽, p. 374.

159) 황장엽, op. cit., p. 376.

이는 주체사상이 수령론으로 변색되며 독재권력¹⁶⁰)으로 흐르는 면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만 주의한다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의 주체사상의 인간이해의 특성은 종교의 중요한 접촉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좀 더 확장하면 평화라는 화두로 묶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리하자면, 본 연구를 통한 기대 효과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1) 우선 남북대화의 접촉점으로 종교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며, 많은 남한 사람들이 종교적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동시에 북한의 사람들 역시 유사종교이긴 하나, 종교적인 이데올로기에 사로 잡혀 있다. 따라서 남한의 대표적인 종교인 개신교와 북한의 주체사상과의 종교적인 대화는 남북대화에 있어서 당면한 과제인 남북협력의 차원에서 더 한층 풍요로운 만남을 가져다 줄 것이다.
- (2) 둘째로 북한의 체제를 이루고 있는 주체사상의 사상적 기본 개념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과 기독교 신학인 해체주의 신학의 주체의 소멸, 신죽음의 미학 등을 비교 연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상과 신학과의 대화로 학문적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포스트모던 신학이 시기상조라는 남한의 신학계에 이를 넘어 주체사상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무모한 시도일지는 모른다. 그러나 대화는 과거의 지평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미래에 열어두고 대화하는 것이라면,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 신학계의 주요한 이슈인 해체주의 신학의 역할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 의한 해석학적 대화의 성과는 남북대화에 있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 (3) 셋째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이제까지의 북한 종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배제하고 동시에 선교적인 측면에서 정복해야 할 대상, 혹은 교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북한 체제, 혹은 북한의 종교를 보는 것에서 북한 종교의 사상적 측면을 기독교 신학의 틀로 이해하는 새로운 접근이 될 것이다. 이는 지평융합의 차원으로 승화되어 차후 통일 이후의 종교적인 혼돈이나, 사상적인 혼란 속에 새로운 만남의 가능성을 종교사상적인 차원에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논문의 결론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생명이 생명답게 존중받는 평화의 나라’ 그런 하느님 나라, 그런 인간

160) 기독교의 메시아론과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있으나, 이는 바르트(K. Barth)를 따르는 신정통주의의 입장에서는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나아가 레닌의 지도자론은 지도자라할지라도 대중의 비판을 받을 수 있으나 주체사상의 수령론의 경우 수령의 지도성에 절대성을 부여하여 의식의 절대성, 나아가 유사관료론에 빠져 맑스레닌주의의 본류에서 벗어난다.

해방의 사회가 될 것이다.¹⁶¹⁾

이러한 주체사상의 이론 및 방법체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자. 해체신학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의 사유를 주체사상에서 벌여와 자신의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해나간다면 주체사상은 생물학적 속성과는 대비되는 사회적 속성에만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속성으로의 개방을 통하여 서로간에 지평융합을 해나간다면 즉 이러한 바탕 위에 대화의 접촉점이 이루어진다면, 남북간의 문화적 대화의 물꼬는 트일 것이며, 또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종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종교를 통한 비판적 만남으로 남북대화의 접촉점을 모색한다면 主體思想과 解體神學이 창조적 지평을 획득할 것이며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써 종교적 의미가 명증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후 이러한 만남은 남북대화의 방식에 있어서 생명이 생명답게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회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민족인 남과 북이 다시 만나도, 문화적 형식에 있어서 차이로 드러날지라도 그 의식성에 있어서는 동일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61) 과제로 남긴다면 주체사상은 봉건체제를 그 준거틀로 하고 해체신학은 포스트모던(탈현대)을 근거로 하기에 봉건체제와 탈현대를 비교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좀 더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북한문헌

-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 _____, 「김일성 전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김영주, 「당의 유일상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70돐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31일; 「조선중앙년감」, 1983, pp. 124-159;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자료집 김정일 저작선」, 1991.
- ____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로동신문」, 1998년 9월 6일자.

2. Mark Taylor 관련 문헌

- Mark Taylor, *Altaari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 _____, *Deconstructing Theology*, Chicago: The Crossroad Publishing Co. & Scholar Press, 1982.
- _____, *Erring: A Postmodern A/the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 _____, *Journey to selfhood: Hegel and Kierkegaard*,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 _____, *Tears*,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0.
- _____, The End(s) of Theology, *Theology at the End of Modernity*, Sheila Greeve Davaney et., Trinity press, 1991.
- _____, ed. *Deconstruction in Context: Literature and Philosoph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
- _____, *Über die Religion*, Moskau O.J., 1954.

3. 국내문헌

- 장연안, 「주체는 죽었는가」, 서울: 문예출판사, 1996.

- 김동길, “통일문제는 한국기독교에 부과된 지상과제”, 『기독교사상』, 제264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 김득중, “통일의 복음: 민족통일과 기독교”, 『기독교사상』, 324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 김승철, “무주와 방황-즉비의 논리와 해체의 신학-”, 『종교신학 연구』, 8집, 서울: 서강대 종교신학 연구소, 1995.
- 김용복, “분단상황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사회선교의 과제”, 『성별』, 108호, 1982.
- 김형효, 『데리다의 해체철학』, 서울: 민음사, 2001 1판8쇄.
- 류성민, 『북한종교 연구』, 북한연구학회 엮음, 『분단 반세기 북한 연구사』, 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9.
- 박순경,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미래』,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 박종화, “분단극복과 교회의 역할”, 『교회와 세계』, 54호, 1986.
- 배국원, “경계를 넘어 해체하자” 강봉균·박여성·이진우 외, 『越境하는 지식의 모험자들』, 서울: 한길사, 2003.
- 손규태, “분단 42주년을 맞는 한반도에서의 정의와 평화”, 『교회와 세계』, 63호, 1987.
- 손수정·최병학, “사이버 거주개념의 인식론적 접근: 사이보그 정체성의 페미니즘적 확장”, 『여성학 연구』, 제13권, 제1호, 부산: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03.
- 윤평중, “탈현대와 철학적 지평의 확대”, 『철학과 현실』, 가을호, 서울: 철학문화연구소, 1990.
- 이정우, 『접힘과 펼쳐짐』, 서울: 거름, 2000.
- 이주향, “포스트주의와 주체” 이정우·김성기 외, 『프랑스 철학과 우리-현대 프랑스 철학을 보는 눈』, 서울: 당대, 1997.
- 정성장,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와 성격”, 『북한연구학회보』, 제3권, 제2호, 1999.
- 주재용, “통일은 기독교인의 선교과제”, 『한국YMCA』, 178호, 1982.
- 최병학, “對位倫理의 모색(Point·Nonpoint·Counterpoint)”, 『倫理教育 研究』, 제2輯, 진주: 경상대학교, 2002.
- _____, “흔적의 윤리-밟힘과 밟힘”, 『철학연구』, 제90집, 대구: 대한철학회, 2004.
- _____, “A→E로가는 해체의 흔적, 혹은 흔적의 윤리”, 『대동철학』, 제26집, 부산: 대동철학회, 2004.

- 프리드리히 니체, 「들어라 위대한 인간의 조용한 외침을」, 서울: 靑河, 1982.
 _____, 「善惡의 彼岸」, 서울: 正音社, 1977.
 _____, 「悲劇의 誕生」, 서울: 正音社, 1976.
 _____, 「이 사람을 보라」, 서울: 正音社, 1976.
 _____, 「運命의 별이 빛날때」, 서울: 微文出版社, 1974.
 _____,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서울: 三省社, 1976.
 한국신학연구소 성서교재위원회, 「함께 읽는 구약성서」,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1.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한울, 1999.
 Norman W. H. Blaikie, 이기홍·최대용 역, 「사회이론과 방법론에 다가서기」, 서울: 한울, 2000.
 Leitch, Vincent B, *Deconstructive criticism: A Advanced Introduction*, 권택영 역, 「해체비평이란 무엇인가」, 서울: 문예출판사, 1993.

4. 외국문헌

- Alfred N. Whitehead, *Religion in the Making*, New York: Macmillan Co., 1926.
 Alistair Kee, *Nietzsche Against the Crucified*, SCM Press, 1999.
 Bryan S. Turner, *Religion and Social Theory*, 2nd.,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1991.
 D. W. D. Shaw, *The Dissuaders*, London: SCM Press, 1978.
 E. Durkheim,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trans. George Simpson, Glencoe, IL: Free Press, 1960.
 _____,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trans. Joseph Ward Swain, New York: Free Press, 1965.
 F. Nietzsche, *Beyond God and Evil*, trans. with intro. R. J. Hollingdale,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2.
 _____, *The Anti-Christ*, trans. with intro. R. J. Hollingdale,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8.
 _____, *The Philosophy of Nietzsche*, New York: The Modern Librart, 1954.
 _____, *Thus Spoke Zarathustra*, trans. with intro. R. J. Hollingdale,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1.

- H. Gollwitzer, *Von der Stellvertretung Gottes*, Zum Gespräche mit Dorothee Sölle, chr., Kaiser Verlag, 1968
- J. Derrida, *La Dissémination*, Paris: Seuil, 1972.
- _____, *Writing and Difference*, trans. by Alan Bas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 Jean Baudrillard, simulation, 하태환 역, ■■■시물라시옹■■■, 서울: 민음사, 1992.
- Julia Kristeva, *Semeiotikè: Recherches pour une sèmanalyse*, Paris: Seuil, 1969.
- Jürgen Habermas, *Der philosophische Diskurs der Moderne*, Frankfurt a.M.: Suhrkamp, 1985; 하버마스 · 이진우 역,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서울: 문예 출판사, 1994.
- Karl Mark,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ed. Frederick Engels. trans. Samuel Moore and Edwaed Aveling, New York: Kerr, 1906.
- _____, Capital, The Communist Manifesto, and Other Writings, Max Eastman, ed., *The Modern Library*, New York, 1932.
- _____, *der politischen Ökonomie*, Berlin, 1952.
- _____, *Karl Mark, Frederick Engels: Collected Works*. trans. Richard Dixon, New York: International, 1975-1995.
- _____, *The German Ideology*, trans. S. Ryazanskaya,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68.
- _____, *Zur Kritik Die Frühschriften*, Stuttgart, 1953.
- Sigmund Freud, *The Future of an Illusion*, Vol.21, revised ed., London: SCM Press, 1962.
- _____, *Totem and Taboo*. trans. James Strache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0.
- _____, *Civilization and Discontents*, trans. James Strachey, New York: W. W. Norton, 1961).
- W. I. Lenin, “Sozialismus und Religion”, in *Nowaja Schisn*, Nr. 28, 1905년 3월 12일.

5. 기타

<http://www.frontlist.com/detail/0226791629>.